

연구보고서 2017-15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박종서 · 이삼식 · 유삼현 · 전광희 · 염지혜 · 성명재 · 손일선 · 이희연
서지영 · 최효진 · Noriko Tsuya · Marie-Thérèse Letablie
Norbert F. Schneider · Maria M. Bellinger

【책임연구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여성노동-출산 및 양유행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연구보고서 2017-15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박종서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가격 12,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67-1 93330

[집필진]

주제	연구진
총괄	박종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교수(한양대학교) 유삼현 교수(공주대학교) 최효진 전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시나리오별 가구추계 및 분석	이삼식 교수(한양대학교) 외
제4차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	전광희 교수(충남대학교)
가구 변화와 돌봄 서비스 욕구	염지혜 교수(중원대학교)
가구 변화와 소득 불균등도	성명재 교수(홍익대학교)
가구 변화와 소비와 유통	손일신 특별연구원(동경대학교)
가구 변화와 도시·농촌의 공간 구조 변화	이희연 교수(서울대학교)
고령화, 가구 변화, 기술 개발 이슈	서지영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가구 변동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	이삼식 교수(한양대학교)
일본의 가족 변화와 가족정책 사례	Noriko Tsuya (Keio University)
프랑스의 가족 변화와 가족정책 사례	Marie-Thérèse Letablie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France)
독일의 가족 변화와 가족정책 사례	Norbert F. Schneider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Germany) Maria M. Bellinger (Federal Foreign Office, Germany)

발간사 <<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인 현상은 그 자체로 미래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기본적인 터전으로서 가족 내지 가구라는 단위(unit)를 매개로 여러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가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환경 변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현상의 변화에 따른 가구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 제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인구와 가족 및 관련 제 분야에서의 학술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인구 및 가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본원의 변수정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15
제3절 연구 방법	18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들	23
제1절 인구 변천과 가구의 변화	25
제2절 가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27
제3절 연구 분석들	31

2부 미래 가구 변화 전망

제3장 저출산·고령화 시나리오별 가구추계 및 분석	37
제1절 가구추계 방법 및 가정	39
제2절 장래 가구 변동	56
제3절 미래 가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함의	107

제4장 제4차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 113

제1절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의 역사 116

제2절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가구 변동 122

3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가구 변화와 돌봄 서비스 욕구 135

제1절 노인 가구 변화 138

제2절 노인 1인 가구의 돌봄 욕구 141

제3절 노인 1인 가구 증가 대비 돌봄 서비스 공급 방안 148

제6장 가구 변화와 소득 불균등도 153

제1절 배경 155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161

제3절 실증 분석 171

제4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 불균등도 전망 196

제5절 소결 203

제7장 가구 변화와 소비유통 205

제1절 배경 207

제2절 일본 사례 분석 208

제3절 한국과 일본 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243

제8장 가구 변화와 도시·농촌의 공간 구조 변화	249
제1절 미래 도시와 농촌의 가구 변화 특성 비교	253
제2절 가구의 변화가 도시·농촌의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	267
제3절 미래의 도시·농촌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295
제9장 고령화, 가구 변화, 기술 개발 이슈	309
제1절 배경	311
제2절 노인 가구 증가 관련 기술 개발 사례	314
제3절 연구개발 정책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	330
제4절 소결	349
제10장 미래 가구 변동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	357
제1절 필요성	359
제2절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국내외 사례	361
제3절 미래 가구 변동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 과제	366
4부 결론부	
제11장 결론	377
제1절 미래 가구 변화 전망의 함의	379
제2절 가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381
제3절 향후 정책 방안	383

참고문헌 387

부록 401

1. 외국의 가족정책 사례 401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 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423

표 목차

〈표 3-1〉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구추계 시나리오	40
〈표 3-2〉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이동 가정, 2015~2065년	44
〈표 3-3〉 가구추계에 도입된 가정	54
〈표 3-4〉 시나리오별 총 가구 전망	58
〈표 3-5〉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M)	61
〈표 3-6〉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L)	64
〈표 3-7〉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M)	67
〈표 3-8〉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L)	69
〈표 3-9〉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M)	72
〈표 3-10〉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L)	75
〈표 3-11〉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 변동 전망	77
〈표 3-12〉 시나리오별 부부+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80
〈표 3-13〉 시나리오별 부+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82
〈표 3-14〉 시나리오별 모+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84
〈표 3-15〉 시나리오별 부부+부/모 가구 변동 전망	86
〈표 3-16〉 시나리오별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변동 전망	88
〈표 3-17〉 시나리오별 3세대 이상 가구 변동 전망	90
〈표 3-18〉 시나리오별 비친족 가구 변동 전망	92
〈표 3-19〉 시나리오별 1인 가구 변동 전망	94
〈표 3-20〉 시나리오별 1인 가구(남자) 변동 전망	96
〈표 3-21〉 시나리오별 1인 가구(여자) 변동 전망	98
〈표 3-22〉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변동 전망	100
〈표 3-23〉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80세 이상) 변동 전망	102
〈표 3-24〉 시나리오별 노인 1인 가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104
〈표 3-25〉 시나리오별 후기노인1인가구(80세 이상) 변동 전망	106

〈표 4-1〉 가구 변동에 대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동의 비율 (전적 동의+대체로 동의)	129
〈표 5-1〉 국가별 1인 가구 비중, 노인 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 비중 전망	138
〈표 5-2〉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 유형, 2015~2045	139
〈표 5-3〉 성별 노인 1인 가구의 변동 전망, 2015~2045	140
〈표 5-4〉 연령별 노인 1인 가구의 변동 전망, 2015~2045	141
〈표 5-5〉 공식 및 비공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1인 가구 규모 추계	147
〈표 6-1〉 가계동향조사 자료 주요 기술 통계(2014년 기준)	163
〈표 6-2〉 소득 계층별 시장소득 분포	174
〈표 6-3〉 소득세후 소득의 상대 소득 격차 기여도 비중(Shorrocks 분해)	181
〈표 6-4〉 회귀분석 결과	184
〈표 6-5〉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1(연령그룹 기준)	192
〈표 6-6〉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2(연령그룹 기준)	193
〈표 6-7〉 인구 고령화의 소득 불균등도 영향 모의실험 결과	201
〈표 7-1〉 2020년까지 해야 할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과 정책 내용	211
〈표 7-2〉 조사 기관별 세대의 정의	212
〈표 7-3〉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 설계	219
〈표 7-4〉 소비 가치관의 변화	225
〈표 7-5〉 신흥경제국 서비스업의 GDP 비율과 경제 성장률	227
〈표 7-6〉 신선식품 점포까지 500미터 이상의 거주지 인구추계(2010년)	230
〈표 7-7〉 아이치현의 쇼핑 약자 추계(2012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230
〈표 7-8〉 중앙 부처의 쇼핑 약자 관련 사업	232
〈표 7-9〉 쇼핑 약자에 대한 관련 정부 대책	233
〈표 7-10〉 고령자를 위한 편의점 택배 서비스	237
〈표 7-11〉 고령자와 1인 가구 고객을 위한 고급식	238
〈표 7-12〉 드럭스토어 5사의 경영 업적	240
〈표 7-13〉 세키약품의 판매 제품	241
〈표 7-14〉 이온 시니어 대상 점포의 서비스	242

〈표 8-1〉 가구 증가율 및 평균 가구원 수, 2000~2045	254
〈표 8-2〉 등부읍면부의 가구 수 변화 추세와 가구 수 증감(2015~2045년)	256
〈표 8-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 수 변화 추세와 가구 수 증가(2015~2045년)	257
〈표 8-4〉 가구 유형별 가구의 변화, 2015~2045	257
〈표 8-5〉 1인 가구의 연령층별 비중 변화, 2015~2045	259
〈표 8-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용도 지역별 면적 비교, 2015년	269
〈표 8-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과 주거 지역의 가구 밀도 변화, 2015~2045	270
〈표 8-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토지 소비 면적 변화, 2015~2045년	271
〈표 8-9〉 도시와 농촌의 도시 지역주거 지역의 가구 밀도 변화, 2015~2045년	272
〈표 8-10〉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토지 소비 면적의 변화, 2015~2045년	273
〈표 8-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교	275
〈표 8-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교	275
〈표 8-1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교	276
〈표 8-14〉 도시와 농촌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과 가구당 노후 건축물 비교	277
〈표 8-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 동 수의 경과 연수별 분포	279
〈표 8-1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동)의 경과 연수별 멸실률	279
〈표 8-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의 경과 연수별 멸실에 따른 존치 건축물 비교	280
〈표 8-18〉 가구당 주택 수의 지역별 비교	284
〈표 8-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84
〈표 8-20〉 도시와 농촌의 고령 가구 비중 변화, 2015~2045	285
〈표 8-21〉 도시와 농촌의 1인 가구 비중 변화, 2015~2045	286
〈표 8-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 가구와 1인 가구 비중 변화, 2015~2045년	287
〈표 9-1〉 주요 생활 영역에 따른 기술 적용	316
〈표 9-2〉 일본 “고령화 과제 일람” 중 주체에 따른 과제 목록 - 지역	338
〈표 9-3〉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 주제	347

부표 목차

〈부표 1〉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대한 인식	423
〈부표 2〉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에 대한 인식(중복 응답)	423
〈부표 3〉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인구학적 동인에 대한 인식(중복 응답)	424
〈부표 4〉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직업 분야에서 소득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425
〈부표 5〉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직업 분야에서 성 평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인식	426
〈부표 6〉 제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 가구/가족 변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의견	427

그림 목차

[그림 2-1] 기본 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34
[그림 3-1] 시나리오별 총인구 전망, 2015~2065	45
[그림 3-2] 시나리오별 일반 가구원 전망	46
[그림 3-3] 가구추계 기법 분류	47
[그림 3-4]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추정치(남자), 2016	49
[그림 3-5]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추정치(여자), 2016	50
[그림 3-6]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변동 남자 예시: 30~34세, 50~54세, 65~69세	51
[그림 3-7]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변동 여자 예시: 30~34세, 50~54세, 65~69세	52
[그림 3-8] 가구추계 흐름도	55
[그림 3-9] 시나리오별 전체 가구 규모 변동 전망	58
[그림 3-10]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M)	61
[그림 3-11]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L)	63
[그림 3-12]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M)	66
[그림 3-13]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L)	69
[그림 3-14]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M)	72
[그림 3-15]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L)	74
[그림 3-16]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 변동 전망	77
[그림 3-17] 시나리오별 부부+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79
[그림 3-18] 시나리오별 부+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81
[그림 3-19] 시나리오별 모+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83
[그림 3-20] 시나리오별 부부+부/모 가구 변동 전망	85
[그림 3-21] 시나리오별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변동 전망	87
[그림 3-22] 시나리오별 3세대 이상 가구 변동 전망	89
[그림 3-23] 시나리오별 비친족 가구 변동 전망	91
[그림 3-24] 시나리오별 1인 가구 변동 전망	93
[그림 3-25] 시나리오별 1인 가구(남자) 변동 전망	95

[그림 3-26] 시나리오별 1인 가구(여자) 변동 전망	97
[그림 3-27]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변동 전망	100
[그림 3-28]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80세 이상) 변동 전망	102
[그림 3-29] 시나리오별 노인 1인 가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104
[그림 3-30] 시나리오별 후기노인1인가구(80세 이상) 전망	106
[그림 5-1] 노인 1인 가구의 가족과의 교류 빈도	142
[그림 5-2] 노인 1인 가구의 이웃 및 친구와의 교류 빈도	143
[그림 5-3] 노인 1인 가구의 사회단체 참여 실태	144
[그림 5-4] 연령별 거동 상태	145
[그림 6-1] 추계인구 기준 연령별 인구 분포	155
[그림 6-2]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추계가구	157
[그림 6-3]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비중 변화 추이	160
[그림 6-4]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의 변천	173
[그림 6-5] 소득 1분위 계층의 시장소득 변천(가구 평균 기준)	174
[그림 6-6]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177
[그림 6-7]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요소별 상대비 변화 추이(1982년=1)	193
[그림 6-8] 인구 고령화의 소득 불균등도 영향 모의실험 결과	195
[그림 6-9] 주요 가구주 연령대별 추계가구 수 비중 추이 및 전망	197
[그림 6-10] 회귀분석을 이용한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망치	199
[그림 7-1] 일본 연령별 인구의 추이	209
[그림 7-2] 3대 도시권 및 도쿄권의 인구 비율 추이와 전망	210
[그림 7-3] 1인 가구 비율 추이	213
[그림 7-4] 세대 구성의 장래 예측	214
[그림 7-5] 일본 소매업 매출액 및 사업소 수	215
[그림 7-6] 일본 편의점 매출액과 점포 수	235
[그림 7-7] 세븐일레븐의 내방객 연령 구성비	236
[그림 7-8] 세븐라쿠라쿠	237
[그림 7-9] 세븐안심배달; 이동 판매	237

[그림 7-10] 단지 내 편의점 서비스	239
[그림 7-11] 시니어 중심 점포 이벤트 행사	242
[그림 8-1] 총 가구 및 가구 증가율, 2000~2045	254
[그림 8-2] 동부읍부면부의 총 가구 수 변화, 2015~2045	255
[그림 8-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와 가구 수 변화, 2015~2045	256
[그림 8-4]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2015~2045	258
[그림 8-5] 성연령별 1인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260
[그림 8-6] 동부읍부면부별 1인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260
[그림 8-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261
[그림 8-8] 고령자 가구 수 증가와 구성비 변화, 2015~2045	262
[그림 8-9] 고령자 가구의 가구 유형의 변화 2015~2045	263
[그림 8-10] 동부읍부면부의 고령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264
[그림 8-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 가구와 고령 가구 비율 변화, 2015~2045	265
[그림 8-12] 성연령별 가구주 변화, 2015, 2045년	266
[그림 8-13] 전체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경과 연도별 분포	274
[그림 8-14] 전체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동 수의 경과 연도별 분포	274
[그림 8-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 동 수의 경과 연수별 분포	278
[그림 8-16] 구시군별 빈집 수의 분포 변화, 2010~2015	282
[그림 8-17] 도시와 농촌의 고령 가구 비중의 변화 추세, 2015~2045	285
[그림 8-18] 도시와 농촌의 1인 가구 비중의 변화 추세, 2015~2045	286
[그림 8-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 가구와 1인 가구 비중 변화 추세, 2015~2045	287
[그림 8-20] 주택 수요 추정 방법들	289
[그림 8-21] 가구 수와 주택 보급률의 변화 추세, 2015~2050	291
[그림 8-22] 빈집 수의 변화 추세, 2030~2050	292
[그림 8-23] 2040년 우리나라 인구 밀도 분포와 무거주 지역 분포	297
[그림 9-1] CAMI 프로젝트 개념도와 로봇 디자인	317
[그림 9-2] iToilet 활용 예상도	318
[그림 9-3] Home4Dem 프로젝트 개념도	319

[그림 9-4] ACTIVE@HOME 쌍방향 비디오 게임 활용 예상도	320
[그림 9-5] CiM 프로젝트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화면	321
[그림 9-6] CoME 프로젝트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화면	322
[그림 9-7] 고령 운전자의 이용 목적(복수 선택)	324
[그림 9-8] ANIMATE 플랫폼 홈페이지 화면	326
[그림 9-9] 3S 어시스트의 개념에 따른 경로화 기술	329
[그림 9-10] 고령화 관련 전체 R&D 네트워크	332
[그림 9-11] “재활” 연구개발 사업 하위 네트워크 맵	333
[그림 9-12] “일상생활 편의 증진(요양)” 연구개발 사업 하위 네트워크 맵	334
[그림 9-13] “인지 장애” 연구개발 사업 하위 네트워크 맵	336
[그림 9-14] 고령사회 지원 기술의 3개 분야와 세부 기능	340
[그림 9-15] 전반적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	344
[그림 9-16] 융합 연구개발 플랫폼 구조	350
[그림 9-17] 사회실증실험 풍경	352
[그림 9-18] 전동 카트를 이용한 고령자 모빌리티 실증실험	354
[그림 9-19] ActiveAdvice 프로젝트 개념도	355

Abstract <<

The Socioeconomic Impact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on Family Structure

Project Head · Park, Jongseo

With its fertility rate falling from 6.0 in 1960 to 1.17 in 2016, Korea's population is aging more rapidly than the populatio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uch a dramatic demographic shift is likely to impact the structure of families in Korea in the coming years and bring about changes in its various socio-economic spheres, an outlook deserving more research attention than it has received.

This study, as a response to such need, looks at family-level structural changes that are likely to occur due to the ongoing demographic changes, and further examines what these changes may mean in the long-term in terms of welfare services, income inequality, urban-rural spat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rom its finding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Co-Researchers: Lee, Samsik · Yoo, Sam Hyun · Jun, Kwang-Hee · Yeom, Jihye · Sung, Myung Jae · Son, Ilsun · Lee, Hee Yeon · Suh, Jiyoung · Choi, Hyojin · Noriko Tsuya · Marie-Thérèse Letablie · Norbert F. Schneider · Maria M. Bellinge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와 같은 가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환경 변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구 현상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변화 등을 예측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구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 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구 변화가 복지 욕구, 소득 불평등, 소비 행태, 지역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 발전 및 지역사회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가족 및 관련 제 분야에서의 학술 연구에 기여하고, 미래 인구 및 가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동 가정에 따라 가구추계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래 우리나라 가구는 가구 규모의 지속적 증가, 가구 크기의 소규모화, 가구 구성의 고령화 등 크게 3가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가구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구 자체의 변동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미래 가구 변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노인 1인 가구, 특히 중후기 고령 인구로 구성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가구의 소규모화와 고령화가 동반하여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가구의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 구성의 고령화는 사회 전체적인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가구의 증가는 시장소득이 낮아지는 은퇴 가구 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이들 가구는 저소득층의 주류 가구로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소득 불균등도 확대에는 계층 이동성의 저하 현상, 산업 및 직종 간 격차 확대, 임금 격차 고착화, 기술 편향 발전 경향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 요인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도 확대의 주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 및 가구 변화는 소비 행태 및 유통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수명 상승에 따른 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는 쇼핑 약자의 빠른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혹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의 개별화와 식생활의 개인화 등 가구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소비 성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유통업이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으며, 접근성 제고를 위해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 등 소규모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품 판매의 본연적 기능 외에 각종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조 및 가구 유형 변화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비수도권이나 농촌에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고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매우 낮거나 무거주 지역이 많아 민간이나 공공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들의 경우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구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따라 미래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 욕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심리적 고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노인 가구의 성별과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이동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거주자에게는 세대 공존 돌봄 커뮤니티를 구축하도록 한다.

노인 가구의 경우, 은퇴 이후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의 소득 격차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은 효과가 한계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

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비 시장 축소에 따른 유통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 가구의 증가로 인한 쇼핑 약자의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량 구매 증가, 인구의 도심 회귀 및 행동반 경이 좁은 고령 가구의 증가 등으로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 등 소규모 유통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화되는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간 토지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방 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 전략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수급을 전망하여 빈집 발생 문제를 줄이고, 기존의 유휴 공간들을 활 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래 노인 가구의 욕구는 현재 이들 가구의 욕구와는 상이하고, 라이프 스타일 및 추구하는 가치도 상이할 것이다. 이들 가구가 독립적 주체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의존적·수동적 존재로 간 주하고 시혜·보호 위주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위 한 기술(Quality of Life Technologies)”을 활용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접근에서 벗어나 신체 및 정신 건강, 이동성, 사회적 유대감, 안전, 일상생활 및 레저 등의 생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로 파생되는 각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는 미래 가구의 변화, 즉 가구의 분화, 소규모화, 고령화 등에 따라 욕구도 보다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보다 높아져 공공의 노력만으로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지역사회-개별 가구 등 여러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십은 지역 통합적, 성 통합적, 연령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미래 가구 변화, 사회경제적 영향

제 **1** 부

도입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지난 약 35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더불어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상승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는 인구 고령화(ageing)가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통계청(2016a)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2062만 명으로 2016년 대비 약 54.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16년 676만 명에서 2049년에는 1882만 명(2016년 대비 2.8배)까지 증가한 후 2065년 182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3.2%에서 2040년 32.8% 그리고 2065년 42.5%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화 수준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5년 후인 2040년에는 2.5배 그리고 약 50년 후인 2065년에는 3.2배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2060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42.5%)은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47.9%)에 아주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거의 1:1이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를 25~74세 그리고 노인 인구를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생산가능인구(25~74세)와 노인 인구(75세 이상)는 1:0.5가 될 전망

이다. 그만큼 미래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돌봄 인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돌봄 부담 등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현상은 필연적으로 가구의 변화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가구의 변화는 규모(가구 수), 크기(가구원 수), 구조(가구 유형) 등의 변화로 측정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가구 변화는 출생, 사망(평균 수명 증가), 국내외 인구 이동 등 인구학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혼화와 독신 경향 증가 그리고 이혼 증가 등의 혼인 상태의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며, 무자녀 경향 증가는 부부 가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평균 수명의 상승과 더불어 자녀 세대의 독립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지만, 남녀 간 평균 수명의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부부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교육과 취업의 목적으로 또는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잦아지면서 홀로 사는 가구가 증가하여 가족 형성(family forma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컨대,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자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가구의 변화를 유도하여 경제, 복지, 주거 등 사회·경제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가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환경 변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로 결혼 가치관 변화에 따른 만혼 및 비혼 경향 증가는 젊은 층의 1인 가구 증가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가구 구조의 변화는 소비 행태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보건과 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욕구를 유발하여 정책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인구-가

구 간 연관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현상 변화에 따른 가구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저출산 등 인구 현상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변화 등을 예측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현상의 변화에 따른 가구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 제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인구와 가족 및 관련 제 분야에서 학술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인구 및 가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문은 도입부에 해당된다. 우선 서론으로서 연구 목적,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연구 진행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전제이자 근거로서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기본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가구 변동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구추계를 실시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전개에 따른 가구 변동을 진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정들을 적용하여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들을 기준으로 인구추계와 가구추계를 실시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가구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의 변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 장들에서 진행되는 각 영역별 연구의 방향성 설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 가구 변동의 경제사회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혁명은 가구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구추계에 반영하지 못한 점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인해 변화할 미래 가구 모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미래 가구 변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측정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미래 가구 변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세부 영역들로 복지 서비스 욕구 변화, 가구 소득 불균등도, 소비 행태 변화, 도시·농촌의 공간 구조 변화 등을 다루었다. 또한, 미래 가구 변동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 개발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가구 변화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더 나아가 이들 노인 1인 가구의 고령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였다. 즉, 미래 가구 변화로 인하여 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더욱 증가하며,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미래 가구 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 욕구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러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구 변화가 가구 소득 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이 낮아지는 은퇴 가구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최저소득층의 주류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 추세가 계속 진전되는 경우 소득 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분석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 정부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가구 변화에 따른 소득 불균등도를 측정 및 분해하고, 이를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영향력 분석 결과를 미래 가구 변화에 적용하여 장래 가구 변화에 따른 불균등도를 전망하였다.

가족 변화가 소비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우리보다 고령화 수준이 앞서 실생활에서 이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일본의 시장 동향과 더불어 사례들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여러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미래 가구 변화에 따른 ‘쇼핑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유통 체계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구 변화가 도시와 농촌의 공간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가구 규모와 가구 유형의 변화가 주택 수를 비롯한 토지 이용과 기반 시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 변화 추세에 따라 지역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하여 지역별 가구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구 변화와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구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요 생활 영역과 이를 위한 기술 적용 분야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적 생활 지원 R&D 사례, 헬스케어에 위한 R&D 사례, 이동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R&D 사례, 고령자의 사회 참여 및 안전한 노동을 위한 R&D 사례 등을 고찰하였다.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로 외국 사례 고찰에 한정하였다. 한편,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내 정책 동향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외

국의 정책 동향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미래 가구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다양한 자원 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들을 고찰해 보고, 향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문에서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미래 가구 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진단하고, 가구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적합한 여러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장에서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관련 이론들을 고찰하고, 국내 및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구 변동을 전망하기 위하여 인구추계와 가구추계를 실시하였다. 일반 가구원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가정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는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가구 변동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특성법에 의하여 성 및 연령별 가구원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을 추정하여,

가구추계를 실시하였다. 가구지위 전환 확률의 장래 변화 속도는 인구추계 가정(출산율, 사망률)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가구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사회과학 분야 100인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가구 변화가 소득 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방법, 미시모의실험 방법, 소득 불균등도(지니계수) 분해 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과 모의실험 방법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소득 불균등도(지니계수)를 전망할 때에도 함께 사용된다. 회귀분석의 기본 목적은 향후 시점에서 인구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는 경우 그로 인해 예상되는 소득 불균등도의 변화, 즉 가구 소득 분포 구조의 변화를 예측·전망하는 것이다. 모의실험 방법은 소득 불균등도(예: 지니계수)를 추정할 때 사용한 미시서베이 자료(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공하여 미래 시점의 상대 소득 불균등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소득 불균등도의 그룹별 분해 방법은 인구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소득 불균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연령그룹 간 경쟁·대체 등에 의한 결과인지 또는 연령그룹 내의 구조 변화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를 상대적 비중 크기의 비율로 구분하여 보여 준다. 소득 불균등도 변화의 원천을 살펴볼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소득 불균등도의 분해(decomposition)는 크게 소득 구성 요소별(by income components) 또는 그룹별(by sub-groups) 분해로 구별된다. 전자는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종류별로 소득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 구성 요소별로 분리하여 각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Shorrocks 분해(Shorrocks, 1982), Lerman & Yitzhaki 분해(Lerman & Yitzhaki, 1985) 등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Pyatt 분해(Pyatt, 1976), Yitzhaki 분해(Yitzhaki & Lerman, 1991)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 가구 변화가 소비 또는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20~30년 앞서 유사한 인구 및 가구 변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에 덧붙여 현장 관찰 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즉, 실제 일본의 유통 현장에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유통 업체인 종합슈퍼, 편의점, 드럭스토어,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 변화가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통계청(2017)에서 2045년까지 추계한 장래가구추계 자료와 통계청(2012)에서 2035년까지 추계한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하여 도시(洞)와 농촌(邑과 面),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를 추계하였다. 전자는 통계청의 2045년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 시기 동안 동, 읍, 면의 가구통계 자료를 토대로 과거추세연장 보간법을 통해 2045년까지 5년 간격으로 가구 수를 추계하였다. 다양한 함수를 통해 미래 가구 수를 추계하는 보간법의 경우 어느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들이 있다. 보간법의 5가지 함수를 활용하여 가구 수를 각각 추계한 후,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결과를 채택하여 2045년 시점까지의 동, 읍, 면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로 활용하였다. 후자는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35년 시점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가구 비율을 산출한 후, 통계청의 2045년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맞추어 2040년과 2045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래 가구 수를 보간법을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가구 변화와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보

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동향 분석 자료 DB인 shapingtomorrow.com을 활용하여, 주요 칼럼, 기사, 아티클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foresight’, ‘disruptive technology’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술 동향 및 각국의 정책 자료들인데, 그중에서 2016년과 2017년(4월까지) 발간된 17개의 보고서를 핵심 자료로서 채택하였고, 원문 전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서 우선 관련 보고서 전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들의 언어적 표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핵심어와 행렬을 중심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인 Gephi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가시화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회의를 전체 연구 과정에 걸쳐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의견들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제1절 인구 변천과 가구의 변화

제2절 가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연구 분석틀

2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

제1절 인구 변천과 가구의 변화

가구는 센서스나 여타 통계 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주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공식 통계 특히 센서스의 가구 개념은 식료(食料)와 다른 생필품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거처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며, 가구원은 혼인, 출산, 입양에 의하여 친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다(Burch, Wachter, & Bongaarts, 1987; United Nations, 2015; Hoffmeyer-Zlotni & Warner, 2008).

인구학적 변화나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구 구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다산다사에서 소산소사로의 인구학적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개선되면서 부부가 자녀 수를 2~3명으로 제한하였다(오치아이 에미코, 2012). 마이클 앤더슨(1983)에 의하면, 평균 수명의 개선으로 결혼한 부부가 오랜 시간 한 명의 배우자와 해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성인의 사망률이 개선되면서 삶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가족생활에 대한 동질성이 높아지면서 근대 가족이 보편화되었다(오치아이 에미코, 2012). 근대 가족의 대중화는 이들 가족이 양적으로만 확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변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가족이 기초 단위가 된 사회가 이때에 비로소 성립된 것이다(오치아이 에미코, 2012).

그러나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혼인 감소,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이혼

증가 등의 또 다른 인구학적 변화는 가족 혹은 가구 구성에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현상의 징후로서 미혼 혹은 독신으로 지내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혹은 집단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2.7%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27.9%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a).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전 세계에 걸친 역사적 문화 변동으로 이를 에밀 뒤르켐은 “개인주의 예찬”이라고 표현하였다. 특히, 여성의 지위 상승, 통신 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의 거대한 사회적 변동은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한 것이다(에릭 클라이넨버그, 2013, p. 29). 통계청(2017b)의 가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1인 가구이나, 2019년부터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전망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1인 가구의 연령대는 2015년 기준으로 30대(18.5%)와 20대(17.2%)의 비중이 높으나, 2045년에는 70대가 전체 1인 가구의 21.5%를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의 인구학적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도 출산율이 회복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수명은 빠르게 개선되어 고령화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저성장으로 경제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 저출산의 반영구성, 비혼 출산이라는 새로운 출산 행태, 한부모 가족 가구의 증가, 동거 부부 가구의 증가 등 가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나 기술 혁신의 절정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물론 다른 요인, 특히 일자리의 성격 등이 저출산, 혼인 연령의 상승, 기대수명의 신장, 인구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와 맞물려 가구 혹은 가족이 발전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새로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제2절 가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미래 가구의 구성이나 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와 상호 작용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새로운 모습의 미래를 그려 낼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거나 더 나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가구)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미래는 어떤 가족 구조가 기본 형태가 될지 말할 수 없고 유동적일 것이다(이삼식 등, 2015). 그러나 가족(가구)의 형태가 다양화된다고 해도 이들 가족생활 양식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 가치와 문화의 세대 간 전이, 감정적 유대 관계, 갈등 과정들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가족 영역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전영자, 2000).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미래에 가파르게 진행될 인구 고령화는 가구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저출산 현상으로 근본적으로 가구 규모가 축소될 것이며, 청년층의 1인 가구 등이 증가할 것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 부부 가구나 1인 가구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통계청, 2017b). 노인 부부나 노인 1인 가구의 구성원도 현재 전기와 중기 고령자가 대부분이라면, 미래에는 후

기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요컨대, 인구뿐만 아니라 가구 역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이삼식 등, 2015). 이는 돌봄 욕구가 더욱 증가하지만 가족 내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 가구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과학적 연구는 헤겔(Hegel)의 말대로 황혼이 되어야 날개를 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Owl of Minerva)”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해석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장 클라우스 슈바프는 제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의 대변화를 예상하고 있다(Schwab, 2016).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체제나 조직 모형은 제1차 산업혁명과 특히 제2차 산업혁명의 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구시대적인 것이며 자연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인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글로벌리제이션의 초기 단계에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초반부터 대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학은 “기술,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장래의 모든 가능한 사태의 전개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과학적 연구(systematic and critical scientific study of questions of possible future developments)”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구/가족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고령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기대여명 증가로 노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와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노인 가구 중에서도 노인 1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 후기 노인 가구 등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욕구와는 또 다른 욕구가 등장할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욕구는 성이나 거주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이는 남성 노인 1인 가

구가 여성 노인 1인 가구에 비해 가족 간의 교류가 적고(염지혜, 전미애, 2016), 사회단체 참여도도 낮으며, 타인과의 교류도 적은 경향을 보이는 등 가족, 이웃, 지역사회 내에서 다소 소외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가능인구가 유출되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공공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구형수 등, 2016),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동권이 제약된 노인 가구의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인 가구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저소득 가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신체 노화 및 육체적 근로 능력이 저하된 노인 가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 및 복귀가 어려워 소득 이동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구 고령화로 노인 가구의 비중이 상승할수록 소득 계층 간 소득 이동성이 하락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상대 소득 격차가 노년층 이후에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선택(market select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선택이란 생산성이 더 높은 사람이 임금을 또는 수익성이 더 높은 직종이나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빨리 퇴출되거나 잔존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사람보다 임금이나 수익이 낮은 직종·직업에 더 짧은 기간 동안 종사하다 조기에 은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선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screening)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동일 연령그룹 내에서의 상대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비중 증가는 소득 불균등도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가구 변화는 소비 형태 변화를 가져와 유통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예를 들어 베커(Becker, 1965)는 홀벌이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로의 변화는 시간 절약형 내구재 소비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수정, 2013).²⁾ 1인 가구는 소포장, 소용량, 소형, 컨버전스(복합 기능) 특성을 표방한 가전제품, 반조리·완전조리 형태 식품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확대를 예측하게 한다(이경아, 박윤영, 2015). 육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가구는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것이다. 미래 노인 세대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고령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세대는 질병 예방은 기본이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투자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IT 기술이나 제품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고령자의 증가로 이들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김기향, 2015).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는 식생활의 개별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가정식은 감소하고 외식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박현우, 나건, 2015). 특히나 이들은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PC, 통신 기기 등과 관련한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가영, 2014).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규모의 감소는 소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종종 전망되곤 한다. 그러나 가구 유형 변화에 따라 소비 패턴은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 일본에서는 1인 가구를 위축된 소비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한정미, 이용호, 2013).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도시 지역에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인구 감소, 가구 감소 등 인구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화, 소멸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고밀화와

2) 그러나 실증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김수정, 2013).

함께 지역의 인구와 고용 성장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역 쇠퇴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Lee, 2008; 최재현, 윤현위, 2012에서 재인용). 성주인 등(2014)에 의하면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전국에 비해 더욱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고, 특히 면 지역의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2016c)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농림어가는 2010년에 비해 7.9%, 농림어가 인구는 동 기간 1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마을의 과소화와 공동화는 심화되고 있는데, 20호 미만 행정리는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5년 동안 1000개 이상 증가하고(성주인, 채종현, 2012), 읍면당 평균 빈집 수(단독주택으로 12개월 이상 빈집)는 2005년 69.7호에서 2010년 86.1호로 증가하였다(성주인 등, 2014).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인구 양극화’ 현상이 주요 인구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2010~2015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중소 도시,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반면, 도쿄도를 비롯한 3대 대도시권 일부에서는 인구 유입이 발생한 것이다(김준영, 2016). 분석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마스다 리포트(2014)에서 지방 소멸을 경고하기도 하였는데,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는 인구 변동의 지역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창생 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김준영, 2016).

제3절 연구 분석틀

선행연구의 고찰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로 인한 가구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장기간의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몇몇의 관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간의 초저출산 현상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전체 가구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가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을 제고를 통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와는 별개로 복지, 의료, 유통, 공간, 기술, 지역사회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가구의 욕구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가구 변화의 특징을 전망하고,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구 변화 전망은 저출산 및 고령화 진행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구추계는 과거 가구 유형별 비중의 시계열적 추세를 단순하게 미래에 연장하며, 한 가구 내에 여러 가구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가구주의 존·비속을 제외한 다른 가구원들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 특히, 이러한 접근으로는 출산율 증감이나 사망률 감소 등과 연관되는 가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단점들을 보완하여 별도로 가구추계를 실시하여, 저출산·고령화와 연동하여 가구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가구는 단순하게 인구학적 요소, 즉 저출산, 비혼이나 미혼모 등 혼인 형태 등에 의해서만 변화하지 않고,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도 미래의 가구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예측하여 미래 가구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인간의 생활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가 어떠한 형태로 가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는 물론 향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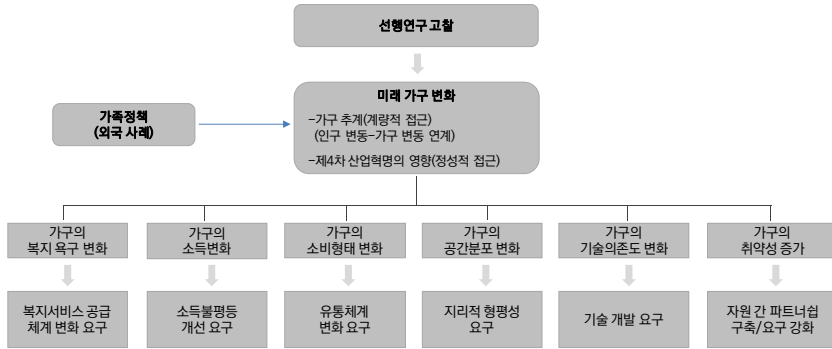
본 연구의 또 다른 측면, 즉 가구 변화가 사회의 여러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된 이유로는 아직 많은 영역들이 가구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할 만큼 이론적인 근거들이 탄탄하지 못하고 자료 역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구 변화의 영향력은 보다 직접적이고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영역들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영역들로는 복지 서비스, 소득, 소비, 지리적 공간, 기술 개발, 지역사회 자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영역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가구의 변화가 취약 가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구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 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역으로 가구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은 연구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였거나(프랑스) 또는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한 국가(독일, 일본)를 대상으로 가족정책 사례들을 고찰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에 입각한 연구 결과는 미래 가구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 그리고 여러 주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그림 2-1] 기본 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제 2 부

미래 가구 변화 전망

제 3 장

저출산·고령화 시나리오별 가구추계 및 분석

제1절 가구추계 방법 및 가정

제2절 장래 가구 변동

제3절 미래 가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함의

3

저출산고령화 시나리오별 << 가구추계 및 분석

제1절 가구추계 방법 및 가정

1. 추계 대상

가구추계 대상은 일반 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군인이나 교도소 등 특별조사구에 수용된 인구나 6인 이상의 집단 가구, 기숙사, 요양원 등 시설 가구, 외국인 가구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계 기간

가구추계 기간은 2015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2016~2065년간의 50년 기간으로 설정한다. 기준 연도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연앙(7월 1일자) 기준으로 추정한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사용한다.

3. 추계 작성 과정

장래가구추계는 장래인구추계의 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장래 인구를 추계한 후, 이들의 가구 내 지위를 추정하여 장래 가

구를 추계하였다. 먼저 장래 인구는 통계청이 2016년에 실시한 장래인구 추계 중 출산력 중위가정-사망력 중위가정-국제인구이동 중위가정의 조합을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출산력 가정 중 ‘중출산’은 통계청의 중위가정에 해당되며, ‘저출산’은 최근의 합계출산율 수준(1.2명)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고출산’은 기존 연구(이삼식 등, 2011)의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로서 1.8명 수준이 2045년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망력 가정 중 ‘중사망’은 통계청의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저사망’은 통계청의 사망력 가정 중 고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장래에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고사망’ 가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제인구이동 가정은 통계청의 중위가정만을 적용한다. 이러한 인구 변동요인별 가정들을 이용하여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즉, 중출산-중사망의 기준 시나리오(M-M), 중출산-저사망 시나리오(M-L), 저출산-저사망 시나리오(L-L), 저출산-중사망 시나리오(L-M), 고출산-저사망 시나리오(H-L), 고출산-중사망 시나리오(H-M)이다.

〈표 3-1〉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구추계 시나리오

시나리오 구분	출산 가정	사망 가정	국제이동 가정
S(M-M)	통계청 중위가정	통계청 중위가정	통계청 중위가정
S(M-L)	통계청 중위가정	통계청 고위가정	통계청 중위가정
S(H-M)	TFR 2045년 1.8 도달	통계청 중위가정	통계청 중위가정
S(H-L)	TFR 2045년 1.8 도달	통계청 고위가정	통계청 중위가정
S(L-M)	TFR 1.2 수준 유지	통계청 중위가정	통계청 중위가정
S(L-L)	TFR 1.2 수준 유지	통계청 고위가정	통계청 중위가정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은 기준 인구(연앙인구로 7월 1일자 인구를 의미)에다가 연도별 인구 변동 요인의 변화, 즉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의 미래 수준을 각각 예측하여 적용하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근간으로 하는 방법이다.

$$P_t = P_{t-1} + B(t-1, t) - D(t-1, t) + M(t-1, t)$$

P_t : t년 인구, $B(t-1, t)$: (t-1, t) 출생아수, $D(t-1, t)$: (t-1, t) 사망자수, $M(t-1, t)$: (t-1, t) 순이동자수

통계청에서 2016년에 인구추계 시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면서 설정하였던 인구 변동 요인별 가정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2016a). 미래 출산율 변화(모의 연령별)를 예측하기 위하여 중위가정은 시계열 모형으로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예측하고, 연령별 출산율은 일반화 로그감마모형(Generalized Log Gamma Distribution)으로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가임 연령(15세)에 처음 진입한 2000년생을 목표 코호트로 설정하고, 2001년생 이후 코호트에 대해선 2000년생의 출산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다. 2000년생의 완결출산율은 1945~1970년생의 완결출산율을 기초로 시계열 예측 방법을 활용하여 추계한다.

$$\text{시계열 모형 } y_t = \beta_0 + \beta_1 \ln(t) + \varepsilon_t \quad (\varepsilon_t = \phi_1 \times \varepsilon_{t-1})$$

y_t : t 시점의 완결출산율, β_0 : 절편, β_1 : 기울기

ε_t : t 시점의 오차(단, 1차 자기회귀오차모형 적용)

2000년생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55~1970년생의 연평균 증가 속도(0.16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평균은 33.1세로 추정된다. 2000년생의 연령별 출산율은 로그감마모형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이후 연령별로 최종 관측된 코호트 출산율과 2000년생 연령별 출산율 가정치

를 연령별로 보간하여 1971~1999년생의 미완결 출산율을 추정한다. 1970~2000년생의 코호트 출산율을 기간 출산율로 전환한다.

일반화 로그감마모형은

$$f(x) = \frac{C|\lambda|}{b\Gamma(1/\lambda^2)} \left(\frac{1}{\lambda^2}\right)^{\lambda^{-2}} \exp\left[\frac{1}{\lambda}\left(\frac{x-u}{b}\right) - \frac{1}{\lambda^2} \exp\left(\lambda\left(\frac{x-u}{b}\right)\right)\right]$$

- $f(x)$: 연령 x 세의 출산율, C : 출산 수준
- u : 평균 출산 연령, b : 평균 출산 연령의 표준편차, λ : 분포 형태

통계청(2016a)에서는 위 방법으로 출산력을 예측하여 중위가정으로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증가 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통계청의 사망력 가정은 중위가정(중사망)과 고위 가정(저사망)이다. 이러한 사망력의 추계 방법으로는 1970~2016년 성 및 연령별 사망률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확률모형인 Li-Lee-Gerland 모형을 적용하여 성·연령별 사망률을 예측한 것이다(Li, Lee, & Gerland, 2013). 고위와 저위는 Li-Lee-Gerland(LLG) 모형의 99%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Li-Lee-Gerland(2013)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된다.

$$\log m_{x,t,i} = a_{x,i} + B_{x,t} K_t + b_{x,i} k_{t,i} + \epsilon_{x,t,i}$$

- $B_{x,t}, K_t$: 전체 집단(남녀 전체) 시점 t 의 연령별 사망률 변화 패턴($B_{x,t}$)과 시간지수(K_t)
- $b_{x,i}, k_{t,i}$: 개별 집단(남녀) 고유(i)의 연령별 사망률 변화 패턴($b_{x,i}$)과 시간지수($k_{t,i}$)

시점 t 의 연령별 사망률 변화 패턴($B_{x,t}$)은 Li-Lee(LL) 모형의 B_x 와

최종 연령별 사망률 변화 패턴 $B_x(u)$ 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였다.

$B_{x,t}$	B_x , $e_0(t) < 80$	$w_t = \frac{e_0(t) - 80}{e_0(u) - 80}$, $e_0(u)$: 연령별 사망률 변화 패턴이 지속되는 최종 기대여명, 102세 $B_x(u)$: 최종 연령별 사망률 변화 패턴
	$(1 - w_t)B_x + w_t B_x(u)$, $e_0(t) \leq 80 < e_0(u)$	
	$B_x(u)$, $e_0(u) \leq e_0(t)$	

이렇게 예측한 중위가정은 기대수명이 2015년 남자 79.0세, 여자 85.2세에서 2065년 남자 88.4세, 여자 91.6세로 증가하고, 고위가정은 2065년 남자 89.2세, 여자 92.6세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통계청에서 설정한 국제이동의 미래 변화에 대한 중위가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이한 이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하여 가정하였다. 내국인의 국제이동은 최근의 안정적인 순이동률 추세를 감안하여, 최근 5년 평균 성별·연령별 순이동률을 적용하였다. 외국인의 국제이동은 이동률 작성 시 분모가 되는 인구를 정의하기 곤란, 외국인 정책이 체류 자격별 쿼터제 등과 같이 규모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이동 규모로 가정하였다. 기간별 순이동 총량을 추계한 후, 성·연령별로 배분하였다. 외국인 순이동자 규모는 외국인 정책 계획이 제시된 2030년 전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는데, 2029년까지 외국인 정책 계획상 체류 외국인 증가 규모 전망 대비 국제순이동(통계청) 실적 수준(2005~2015년 평균 70%)을 중위가정으로 설정하였다. 2030년 이후는 비정주형 외국인의 순유입 효과가 귀환 이동으로 상쇄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세가 안정적인 2011~2015년 정주(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목적 입국자 평균 규모(3만 명)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한 중위가정으로 국제순이동자는 2015년 8만 1000명에서 2020년 6만 4000명, 2030년 3만 3000명으로 감소한 후, 2065년 3만 2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설정한 본 연구를 위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합계출산율 저위가정과 고위가정을 제외한 중위가정, 사망률 가정(중위, 고위), 국제이동 가정(중위가정)은 앞서 설명한 방법에 의거하여 통계청에서 설정한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3-2〉 출산력, 사망률 및 국제이동 가정, 2015~2065년

(단위: 가입 여자 1명당 출생아 수, 세,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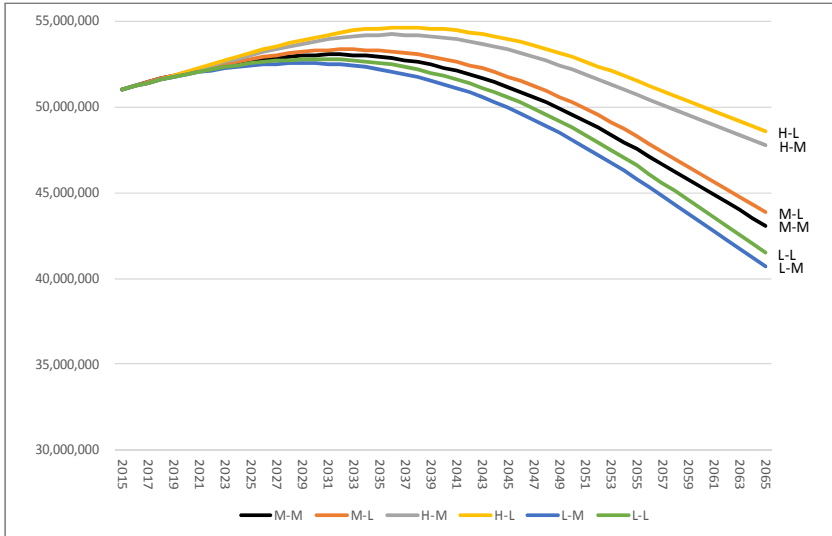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출산율 (합계 출산율)	중위	1.24	1.24	1.28	1.32	1.36	1.38	1.38	1.38	1.38	1.38	1.38
	고위	1.24	1.40	1.53	1.65	1.73	1.76	1.80	1.80	1.80	1.80	1.80
	저위	1.24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사망률 (기대수명)	중위											
	남자	79.0	80.3	81.6	82.7	83.7	84.7	85.5	86.3	87.1	87.8	88.4
	여자	85.2	86.2	87.0	87.8	88.5	89.1	89.7	90.2	90.7	91.2	91.6
	고위											
	남자	79.0	80.9	82.3	83.6	84.7	85.6	86.5	87.2	88.0	88.7	89.2
	여자	85.2	86.7	87.7	88.6	89.4	90.0	90.7	91.2	91.7	92.1	92.6
국제 순이동자 수	중위	81	64	51	33	33	34	34	34	34	33	32
	내국인	2	2	4	3	3	4	4	3	3	3	2
	외국인	79	63	46	30	30	30	30	30	30	30	30

주: 국제순이동자 수 연양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16a).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 12. 8.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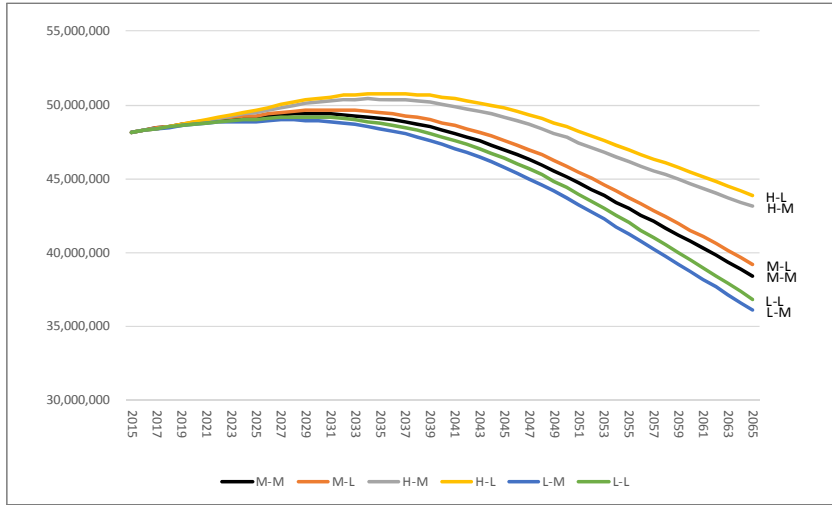
시나리오별로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총량적인 인구 규모는 시나리오 S(H-L), S(H-M), S(M-L), S(M-M), S(L-L), S(L-M)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출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망률이 낮을수록 인구 규모는 총량적이든 연령 집단별이든 많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3-1] 시나리오별 총인구 전망, 2015~2065



시나리오별로 장래 인구가 추계되면, 장래가구추계의 대상이 되는 일반 가구원을 추계한다. 일반 가구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성 및 연령별 인구에서 각각 제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장래에도 변화가 없다는 가정으로 6개 시나리오별로 추정한다. 그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인구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구원의 규모도 시나리오 S(H-L), S(H-M), S(M-L), S(M-M), S(L-L), S(L-M)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즉, 출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망률이 낮을수록 일반 가구원의 규모도 총량적이든 연령 집단별이든 많게 나타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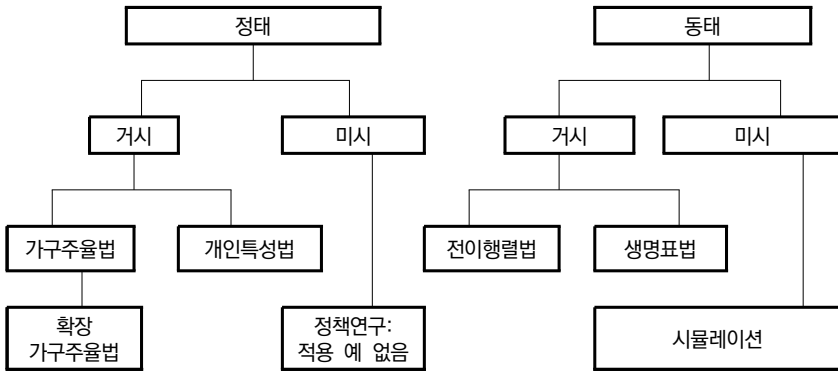
[그림 3-2] 시나리오별 일반 가구원 전망



가구추계 방법은 [그림 3-3]과 같이 구분된다. 통계청에서는 가구추계를 위해 대상 인구 중 가구주가 되는 비율의 미래 변동 수준을 예측한 후 장래추계인구에 적용하는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Method)을 사용하여 장래 가구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외삽법에 내재된 특성상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가정을 가구주율과 통합하지 못하고 (Mason & Racelis 1992; Spicer et al., 1992; Zeng et al., 2013에서 재인용), 가구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Ze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가구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법을 적용하여 가구추계를 실시하고자 한다. 개인특성법은 일반 가구원의 가구지위가 연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을 구한 후 추계인구에 적용하여 가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태적 방법의 미시적 접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구의 형성 및 해체에 바로 반영하여

가구를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가구주 율법이 가구의 형성과 해체를 개인의 혼인 상태 변화에 따른 결과로 분류하는 데서 오는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혼인 상태의 변화가 없이도 개인이 가구를 형성하거나 다시 합가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림 3-3] 가구추계 기법 분류



자료: 김형석. (2002).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권 1호, pp.65-90.

가구원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성 및 연령별로 적용한다. 성과 연령에 따라 한 가구지위에서 다른 가구지위로 전환하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t년도에 가구지위 i를 가진 가구원이 t+1년에 가구지위 j(j=i 포함)로 전이하는 확률(probability of transition)을 가진다. 즉, 성별 연령별 가구지위 전이 확률(P)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적용된다.

$${}_tP_{s,a}^{H_i} \cong {}_{t+1}P_{s,a+1}^{H_j} \quad (i = j, i \neq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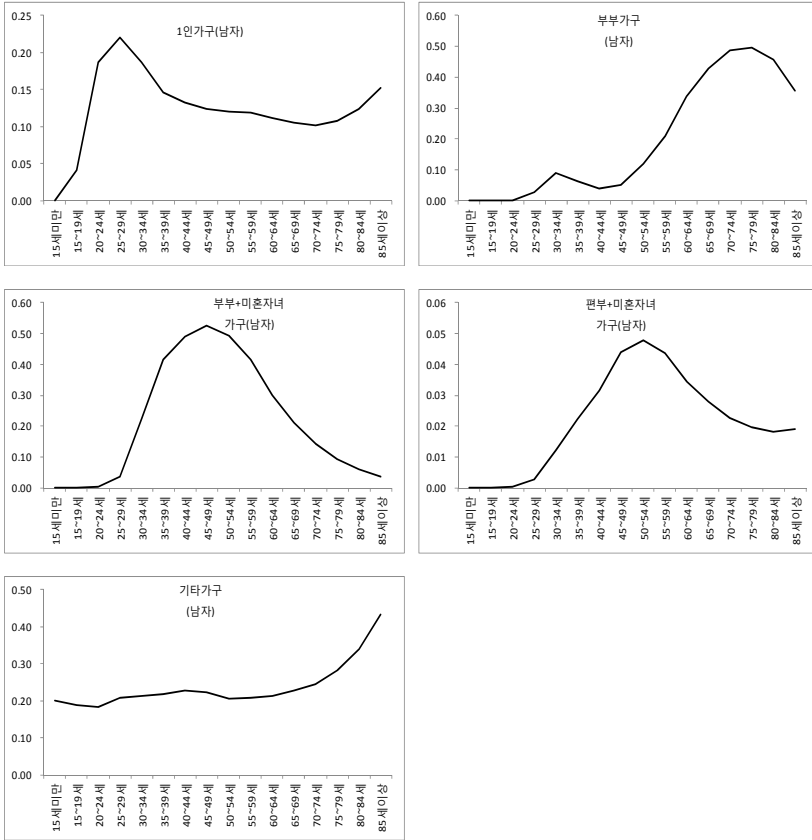
여기에서 P는 전이 확률, t는 연도, Hi는 가구지위, s는 성(남성, 여성), a는 연령이다.

성별 연령별 일반 가구원의 가구지위 전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모든 가구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표본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가구원을 성과 연령별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이 한 가구지위에서 다른 가구지위로의 전환 수준은 대표적인 가구지위 유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출현율이 낮은 가구지위 유형들의 경우에는 전환 사례를 찾기 어렵고,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신뢰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가구지위 유형들로서 부부 가구, 부부+자녀 가구, 부+자녀 가구, 모+자녀 가구, 1인 가구(남자, 여자)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전환 확률을 추정한다. 나머지 가구지위 유형들은 함께 묶어서 ‘기타 가구’로 유형화하여 전환 확률을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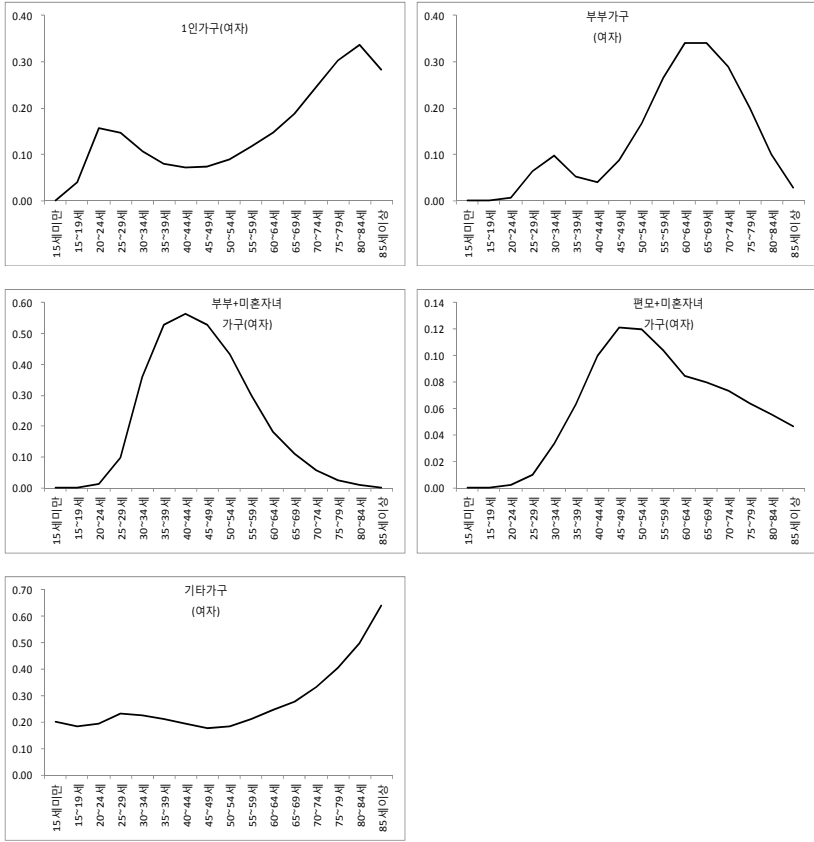
- (1) 부부 가구(Mar0)
- (2) 부부+자녀 가구(Mar+)
- (3) 부와 자녀 가구(H1M)
- (4) 모와 자녀 가구(H1F)
- (5) 남자 1인 가구(SingM)
- (6) 여자 1인 가구(SingF)
- (7) 기타 가구(Other)

이러한 전이 확률은 각종 가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되, 불규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수년간의 추정치를 합산한 후 그 평균치를 이용한다. 이렇게 추정된 일반 가구원의 가구지위별 전이 확률은 2016년 기준으로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추정치(남자), 2016



[그림 3-5]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추정치(여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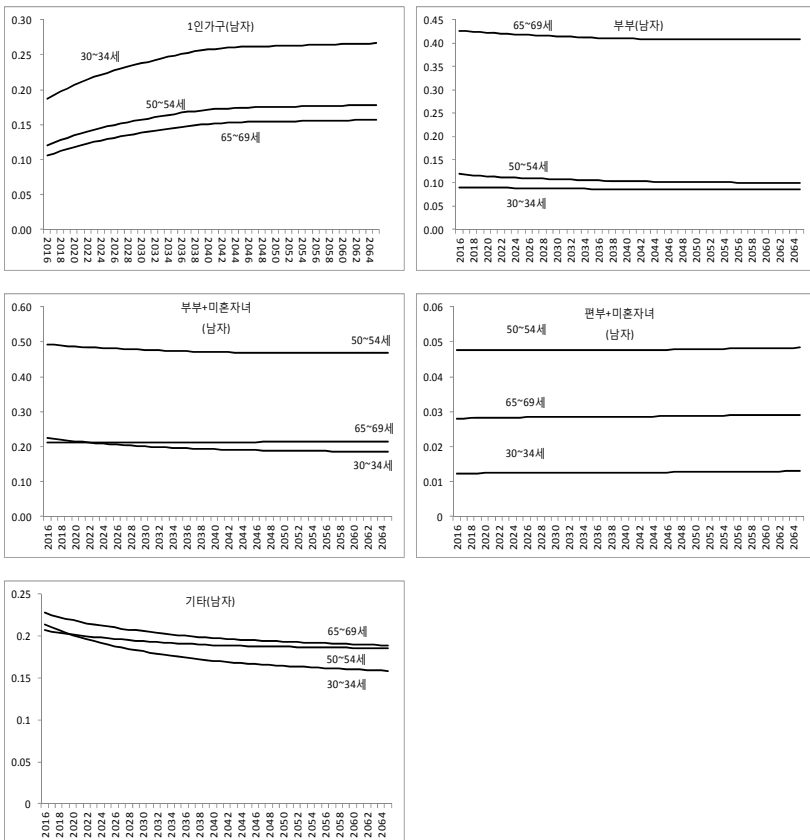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가구지위 전이 확률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기 마련이다. 장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선형로그(Log-linear)에 따라 변화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다. 기타 가구에 대해서는 과거(2000~2015년) 기타 가구 중 성 및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를 이용하여 2016~2065년 기간으로 연장해서 추계한다. 기타 가구를 구성하는 세부 가구는 성 및 연령별로 구분된 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총량만 구성비 변화를 이용하여 추

정한 후, 인구주택총조사의 과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구하여 적용한다.

$$P_i^s = a \times \ln(x)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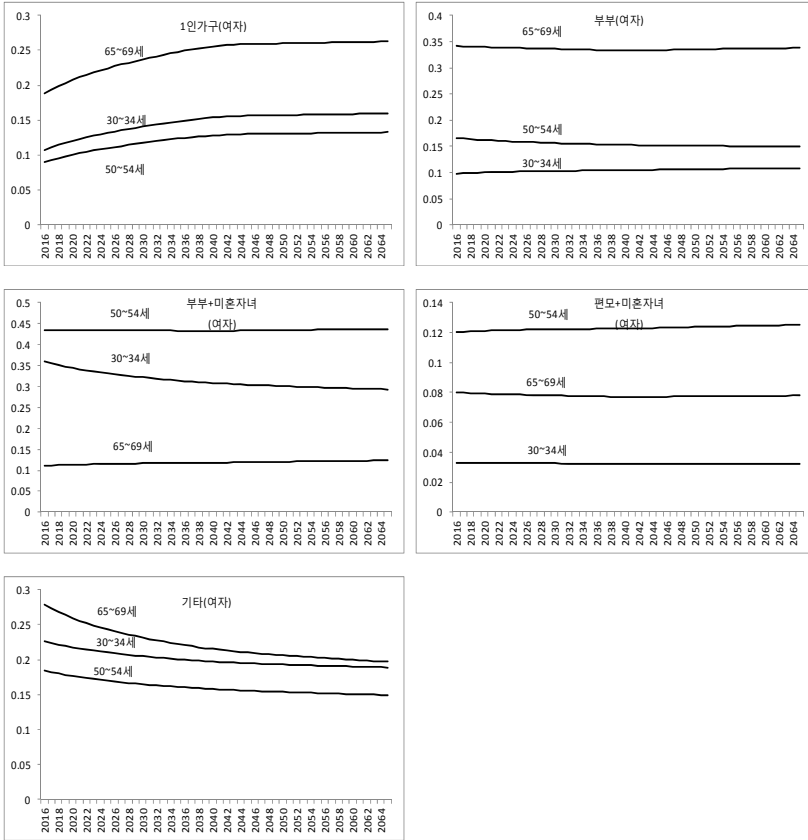
여기에서 P_i^s 는 성 s와 연령 i에서의 가구지위 확률, x는 연도

[그림 3-6]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변동 남자 예시: 30~34세, 50~54세, 65~69세



5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그림 3-7] 가구지위 유형별 전이 확률 변동 여자 예시: 30~34세, 50~54세, 65~69세



한편, 일반 가구원의 성 및 연령별 가구지위 전환 확률의 장래 변화 속도는 인구추계 가정(출산율, 사망률)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저사망'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중사망'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비해 부부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사별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고연령층에서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의 증가 속도를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저사망'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60세 이상 남자

의 경우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이 '중사망'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비해 2045년까지 20%가 감소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은 2045년까지 30%가 감소하는 수준으로 기하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추정한다. 여기에서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향후 사망률 개선 속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장래에 사망률의 개선 속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부부 가구 등에서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보다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고출산'을 적용한 시나리오의 경우 '중출산'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비해 젊은이들이 1인 가구로 전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젊은이들이 만혼이나 비혼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하기보다는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전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45세 남녀 모두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이 '중출산'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비해 2045년까지 20% 감소하는 수준으로 기하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고출산'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이 '중출산' 가정의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결혼 증가로 인해 '부부+자녀' 가구로 전환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즉, 25세 이상 남녀 모두 '부부+자녀' 가구로의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의 시나리오에 비해 2045년까지 20% 증가하는 수준으로 기하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저출산'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중출산' 가정의 시나리오에 비해 만혼 및 비혼이 증가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1인 가구의 발생 확률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며, '저출산' 가정하에서는

20~45세 남녀 모두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의 시나리오에 비해 2045년까지 20% 증가하는 수준으로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고출산' 가정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저출산'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25세 이상 남녀 공히 '부부+자녀 가구'로의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의 시나리오에 비해 2045년까지 20% 증가하는 수준으로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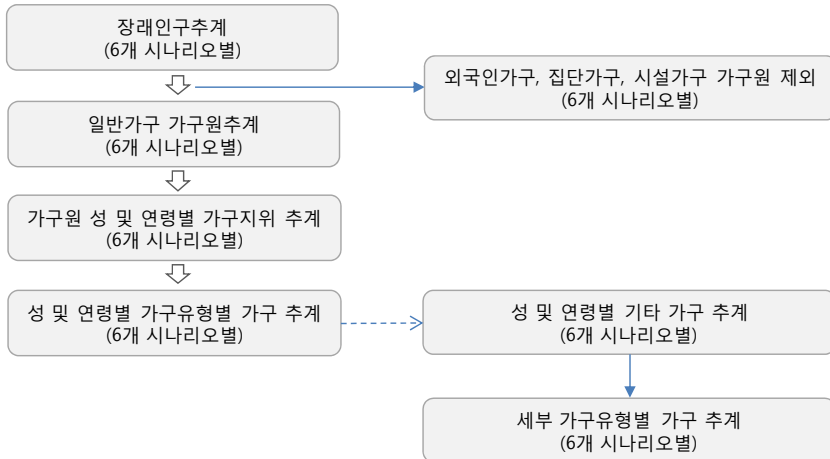
(표 3-3) 가구추계에 도입된 가정

인구추계 시나리오	가구추계 가정	
	1인 가구	'부부+자녀' 가구
저출산-저사망 (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혼/비혼 증가로 20~45세 남녀의 1인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증가 수준으로 기하 증가 부부 기대여명 증가로 60세 이상에서 1인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사망' 가정에 비해 남성의 경우 2045년 기준 20% 감소 수준, 여성의 경우 2045년 기준 30% 감소 수준으로 기하 증가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의 영향으로 25세 이상 남녀의 '부부+자녀'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감소하는 수준으로 기하 증가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저출산-중사망 (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혼/비혼 증가로 인하여 20~45세 남녀의 1인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증가 수준으로 기하 증가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의 영향으로 25세 이상 남녀의 '부부+자녀'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감소하는 수준으로 기하 증가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중출산-저사망 (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여명 증가로 60세 이상에서 1인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사망' 가정에 비해 남성의 경우 2045년 기준 20% 감소 수준, 여성의 경우 30% 감소 수준으로 기하 증가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령층 남녀의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중출산-중사망 (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령층 남녀의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인구추계 시나리오	가구추계 가정	
	1인 가구	'부부+자녀' 가구
고출산-저사망 (H-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증가로 20~45세 남녀의 1인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감소하는 수준으로 기하 증가 ◦ 부부 여명 증가로 60세 이상에서 1인 가구로의 전환 확률은 '중사망' 가정에 비해 남성의 경우 2045년 기준 20%, 여성의 경우 30% 감소 수준으로 기하 증가 ◦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출산의 영향으로 25세 이상 남녀의 '부부+자녀' 가구 전환 확률이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수준으로 기하 증가 ◦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고출산-중사망 (H-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증가로 20~45세 남녀의 1인 가구로의 가구지위 전환 확률은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감소하는 수준으로 기하 증가 ◦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출산의 영향으로 25세 이상 남녀의 '부부+자녀' 가구 전환 확률이 '중출산' 가정에 비해 2045년 기준 20% 수준으로 기하 증가 ◦ 이외 연령층 남녀의 경우 추정 가구지위 전환 확률 그대로 적용

이상의 가구추계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8] 가구추계 흐름도



제2절 장래 가구 변동

1. 가구 규모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시나리오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변동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규모 차이를 살펴보면, 인구추계 시나리오상 사망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출산율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출산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낮을수록 전체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출산율이 높을수록 젊은 가구의 형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사망률이 낮을수록 노인 가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출산율이 가장 낮고 사망률이 높은 시나리오인 S(L-M)의 경우 전체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고, 출산율이 가장 높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인 S(H-L)의 경우 전체 가구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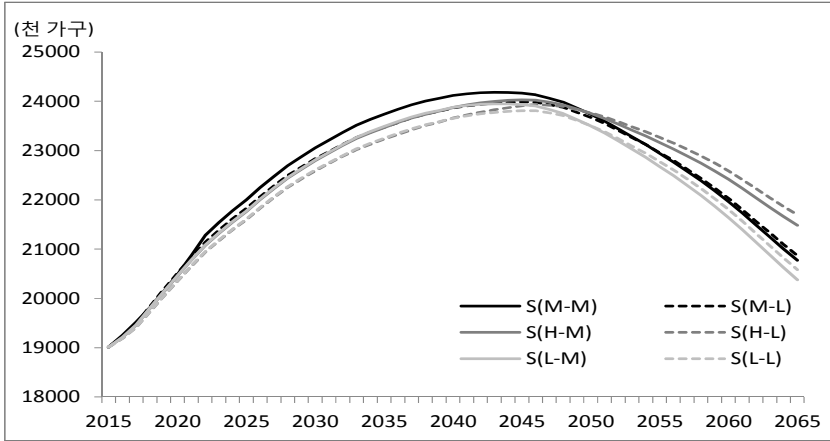
한편, 출산율 변동과 사망률 변동 간의 결합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가구 규모의 순위는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 전체 가구 규모는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H-L) 순으로 많게 나타나며, 2045년에는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L) 순으로 많게 나타난다. 2065년에는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L-M) 순으로 많게 나타난다. 즉, 시나리오 간 출산율 차이가 크지 않은 초기에는 사망률 차이에 따라 또는 젊은 층의 가구 형성보다 노년층의 1인 가구 분화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연도가 경과할수록 시나리오 간 출산율 차이가 커지는 경우

에는 점차적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출산율 변동에 의한 영향이 커지고, 이는 젊은 층의 가구 형성에 의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 변동할 경우에는 높은 출산율과 젊은 층의 가구 형성 증가뿐만 아니라 저사망률에 따른 노년층의 가구 형성의 증가도 가구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S(H-L)의 전체 가구 규모가 2052년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시나리오 S(L-M)의 전체 가구 규모가 2050년부터 가장 적게 나타날 전망이다.

모든 시나리오는 전체 가구 규모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물선 형태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모든 시나리오에서 차이는 있지만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에서 유지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가구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출산율과 사망률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출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망률이 낮을수록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추어지고, 그 당시 전체 가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출산율이 가장 높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 S(H-L)의 경우 전체 가구 규모의 정점 도달 시기가 가장 늦고,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사망률이 높은 시나리오 S(L-M)의 경우 전체 가구 규모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고, 그때 가구 규모도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나타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S(M-M)의 경우 2043년 2418만 3000가구, 시나리오 S(M-L)의 경우 2045년 2398만 7000가구, 시나리오 S(H-M)의 경우 2045년 2402만 8000가구, 시나리오 S(H-L)의 경우 2046년 2393만 8000가구, 시나리오

오 S(L-M)의 경우 2043년 2394만 9000가구, 시나리오 S(L-L)의 경우 2046년 2381만 1000가구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3-9] 시나리오별 전체 가구 규모 변동 전망



<표 3-4> 시나리오별 총 가구 전망

(단위: 천 가구, S(M-M)=100)

	규모(천 가구)						S(M-M)=100				
	S (M-M)	S (M-L)	S (H-M)	S (H-L)	S (L-M)	S (L-L)	S (M-L)	S (H-M)	S (H-L)	S (L-M)	S (L-L)
2015	19,013	19,013	19,013	19,013	19,013	19,013	100	100	100	100	100
2020	20,490	20,514	20,459	20,353	20,465	20,359	100	100	99	100	99
2025	22,003	21,829	21,764	21,599	21,777	21,612	99	99	98	99	98
2030	23,055	22,834	22,796	22,592	22,812	22,607	99	99	98	99	98
2035	23,736	23,472	23,466	23,230	23,491	23,251	99	99	98	99	98
2040	24,118	23,862	23,874	23,659	23,876	23,657	99	99	98	99	98
2045	24,163	23,987	24,028	23,910	23,933	23,810	99	99	99	99	99
2050	23,737	23,672	23,755	23,767	23,501	23,507	100	100	100	99	99
2055	22,945	22,959	23,163	23,269	22,678	22,777	100	101	101	99	99
2060	21,963	22,028	22,415	22,587	21,640	21,805	100	102	103	99	99
2065	20,772	20,870	21,484	21,697	20,377	20,583	100	103	104	98	99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2. 가구 구성

가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출산율과 사망률 변동에 따른 가구 유형별 가구 변동을 전망해 보았다. 우선 시나리오별로 가구 유형별 구성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전망하고, 이어서 각 가구 유형별 변동을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동 가정을 조합해 만든 시나리오들 간에 비교하였다. 아래에서는 여러 가구 유형들 중 1인 가구(남녀별), 부부+미혼자녀 가구, 부+미혼자녀 가구, 모+미혼자녀 가구, 2세대 기타 가구(부부+부모 가구, 조부모+미혼 손자녀 가구 등), 3세대 이상 가구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시나리오별 가구 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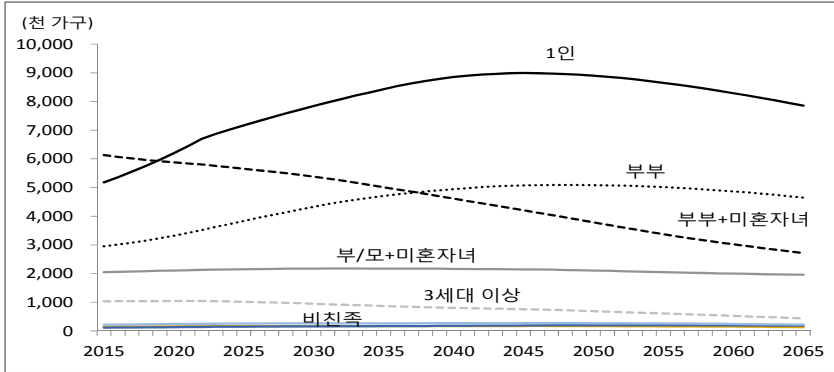
시나리오 S(M-M)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미혼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순으로 많이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2045년 900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2065년 786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613만 가구에서 2065년 271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부 가구’는 2015년 295만 가구에서 2048년 509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65년에 465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205만 가구에서 2032년 217만 가구로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196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200만 가구 내외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 유형의 가구 외에 나머지 가구 유형들은 미래에도 여전히 그 규모

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가구에서 2046년 27만 가구로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22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부부+부/모 가구’는 2015년 14만 가구에서 2046년 정점에 도달한 후 2065년에는 13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조손 가구’는 2015년 11만 가구에서 증가하여 2054년 20만 가구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65년에 18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확대 가구’는 2015년 103만 가구에서 2065년에는 44만 가구로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출산율 및 고령화 변동 추이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도 변화 방향이나 정도가 상이하어, 전체적인 가구 구성이 연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전망이다. 우선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부터 부부 가구를 상회하기 시작하며, 2065년에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에 비해 515만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연도 경과에 따라 두 유형 간 차이가 커지는 이유로는 결혼 및 출산의 감소로 인하여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감소하는 반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 즉 노인 1인 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부 가구’와 ‘부/모+미혼자녀’ 가구와의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저출산 현상과 결부하여 결혼 후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자녀들이 모두 분가한 노인 부부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부부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2038년부터 보편적인 가구 형태인 ‘부부+미혼자녀’ 가구보다 더 많아지는 추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두 유형 간 차이가 장래에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두 가구 유형 간 차이가 408만 가구에서 2065년에는 76만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3-10]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M)



<표 3-5>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M)

(단위: 천 가구, 2015=100)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규모								
2015	2,952	6,132	2,052	144	112	1,034	214	5,180
2020	3,320	5,875	2,106	159	131	1,043	239	6,199
2025	3,833	5,651	2,148	168	146	1,010	255	7,164
2030	4,326	5,380	2,170	171	158	946	263	7,843
2035	4,704	5,009	2,168	170	166	869	265	8,432
2040	4,943	4,613	2,163	170	176	802	267	8,856
2045	5,073	4,206	2,145	172	188	754	273	8,995
2050	5,085	3,788	2,105	169	195	687	270	8,902
2055	5,013	3,373	2,047	159	196	607	258	8,654
2060	4,865	3,021	1,998	147	191	525	241	8,293
2065	4,645	2,714	1,957	131	180	438	216	7,859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12	96	103	110	117	101	112	120
2025	130	92	105	117	131	98	119	138
2030	147	88	106	119	141	91	123	151
2035	159	82	106	119	149	84	124	163
2040	167	75	105	118	157	78	125	171
2045	172	69	105	120	169	73	128	174
2050	172	62	103	117	175	66	126	172
2055	170	55	100	111	175	59	121	167
2060	165	49	97	102	171	51	113	160
2065	157	44	95	91	161	42	101	152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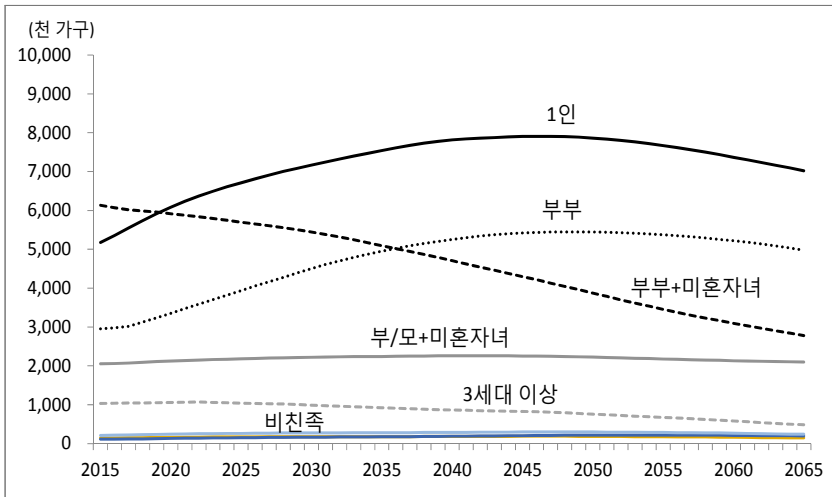
시나리오 S(M-L)에 의거하여 추계한 결과는 앞서 시나리오 S(M-M)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시나리오 S(M-L)는 시나리오 S(M-M)에 비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인 가구 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전망이다. 그 결과, 1인 가구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2046년 791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2065년 702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즉, 시나리오 S(M-M)에 비해 1인 가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1년 늦고, 가구 규모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망률 감소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기간을 늘려,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613만 가구에서 2065년 278만 가구로 감소하고,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205만 가구에서 2042년 226만 가구로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210만 가구에 달하는 등 근소하게나마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부 가구는 2015년 295만 가구에서 2048년 545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65년에 498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나머지 가구 유형들도 시나리오 S(M-M)에서와 같이 거의 유사하게 변동할 전망이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가구에서 2048년 30만 가구로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24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부부+부/모’ 가구는 2015년 14만 가구에서 2046년 19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65년에는 15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조손 가구는 2015년 11만 가구에서 증가하여 2054년 22만 가구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65년에 20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확대 가구는 2015년 103만 가구에서 2065년 49만 가구로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S(M-M)에서와 같이 시나리오 S(M-L)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추이에 따라 가구 유형별 규모가 변화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급격하

게 증가하여 2020년부터 부부 가구를 상회하기 시작하며, 2065년에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에 비해 424만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혼 및 출산의 감소로 인하여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률 감소에 따라 노인 1인 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무자녀 부부들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부부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부부+미혼자녀’ 가구보다 2036년부터 더 많아질 전망이다.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모+미혼자녀’ 가구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3-11]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L)



6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표 3-6〉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M-L)

(단위: 천 가구, 2015=100)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규모								
2015	2,952	6,132	2,052	144	112	1,034	214	5,180
2020	3,355	5,915	2,123	161	133	1,058	242	6,084
2025	3,937	5,696	2,180	173	151	1,042	263	6,709
2030	4,499	5,446	2,223	179	165	991	275	7,170
2035	4,951	5,093	2,244	182	177	926	282	7,538
2040	5,253	4,705	2,259	184	190	868	289	7,814
2045	5,423	4,299	2,257	189	206	826	299	7,906
2050	5,445	3,875	2,227	186	216	759	299	7,865
2055	5,375	3,456	2,178	177	217	674	287	7,669
2060	5,219	3,098	2,134	164	212	583	268	7,368
2065	4,979	2,781	2,096	145	199	486	240	7,023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14	96	103	112	119	102	113	117
2025	133	93	106	120	135	101	123	130
2030	152	89	108	125	148	96	129	138
2035	168	83	109	126	159	90	132	146
2040	178	77	110	128	170	84	135	151
2045	184	70	110	131	185	80	140	153
2050	184	63	109	130	193	73	140	152
2055	182	56	106	123	194	65	134	148
2060	177	51	104	114	190	56	125	142
2065	169	45	102	101	179	47	112	136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시나리오 S(H-M)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1.8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출산율의 증가는 '1인 가구'의 감소나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산율의 증가는 1인 가구나 부

부 가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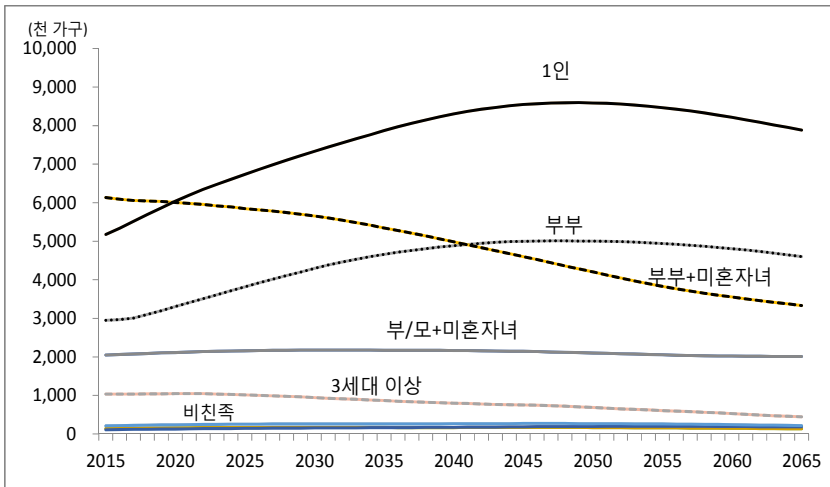
동 시나리오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2049년 859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65년에는 788만 가구에 도달할 전망이다. 1세대 가구인 부부 가구는 2015년 295만 가구에서 2047년 501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여 2065년에는 460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2세대 가구에 해당하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2015년 613만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334만 가구에 도달할 전망이다. ‘부/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2015년 205만 가구에서 2032년 218만 가구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201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들 가구 외 다른 유형의 가구들은 미래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세대 가구 중 ‘부부+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2015년 14만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46년 17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할 전망이다. 2065년 기준 이들 가구는 13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조손 가구’는 2015년 11만 가구에서 2056년 20만(19만 6000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5년 기준 18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가구에서 2046년 2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2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시나리오 S(H-M)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규모 증가를 가져오기보다는 감소세를 둔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인 가구가 이들 가구를 능가하기 시작할 전

망이다. 206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에 비해 455만 가구가 더 많을 전망이다. 한편, 저출산 현상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무자녀 부부나 노인 부부 가구는 증가하여, 이들 가구는 2041년부터 ‘부부+미혼자녀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부/모+미혼자녀’ 가구 등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2]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M)



〈표 3-7〉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M)

(단위: 천 가구, 2015=100)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규모								
2015	2,952	6,132	2,052	144	112	1,034	214	5,180
2020	3,305	6,004	2,115	159	131	1,044	239	6,040
2025	3,815	5,850	2,155	168	147	1,012	256	6,731
2030	4,294	5,654	2,177	171	158	947	263	7,332
2035	4,658	5,346	2,174	170	166	869	265	7,867
2040	4,883	4,986	2,165	170	176	801	266	8,303
2045	5,000	4,602	2,143	172	188	752	272	8,546
2050	5,003	4,205	2,103	169	195	687	270	8,587
2055	4,940	3,832	2,054	160	196	609	259	8,466
2060	4,806	3,553	2,022	148	193	530	243	8,214
2065	4,600	3,335	2,012	133	183	445	220	7,882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12	98	103	111	117	101	112	117
2025	129	95	105	117	131	98	120	130
2030	145	92	106	119	141	92	123	142
2035	158	87	106	119	149	84	124	152
2040	165	81	106	118	157	77	125	160
2045	169	75	104	120	168	73	127	165
2050	169	69	102	117	175	66	126	166
2055	167	62	100	111	176	59	121	163
2060	163	58	99	103	173	51	114	159
2065	156	54	98	92	164	43	103	152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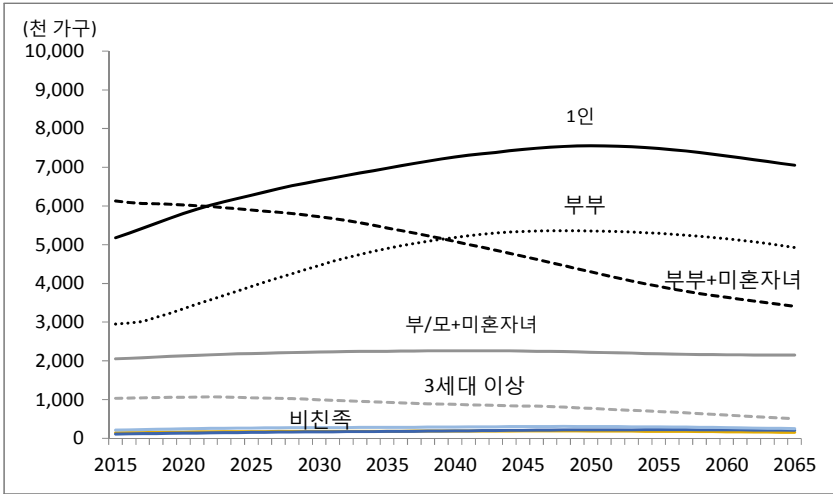
시나리오 S(H-L)의 경우,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 S(H-M)에 비해 사망률이 개선되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755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705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1세대 가구인 부부 가구는 2015년 295만 가구에서 2047년 536만 가구까지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2065년 기준으로 부부 가구는 493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2세대 가구에 해당하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2015년 613만 가구에서 2065년에는 341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부/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2015년 205만 가구에서 2040년 226만 가구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215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들 가구 외에 2세대 가구 중 '부부+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2015년 14만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46년 19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하여 2065년에는 이들 가구의 규모가 15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조손 가구'는 2015년 11만 가구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56년 22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하여 2065년에는 21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가구에서 2048년 31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5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종합하면 출산을 회복과 사망률 개선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동 시나리오에서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1인 가구의 규모가 증가하기는 하나, 시나리오 S(H-M)에 비해서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부부+미혼자녀 가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은 시나리오 S(H-M)에 비해 2년 뒤인 2022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 가구는 2040년부터 '부부+미혼자녀 가구'를 상회하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림 3-13]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L)



<표 3-8>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H-L)

(단위 : 천 가구, 2015=100)

규모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2015	2,952	6,132	2,052	144	112	1,034	214	5,180
2020	3,348	6,025	2,129	162	133	1,061	243	5,806
2025	3,918	5,896	2,188	174	151	1,046	264	6,277
2030	4,465	5,723	2,229	180	166	997	277	6,660
2035	4,900	5,434	2,249	183	178	932	284	6,976
2040	5,187	5,085	2,261	185	192	875	291	7,264
2045	5,343	4,703	2,254	191	209	835	303	7,461
2050	5,355	4,300	2,224	189	219	772	304	7,554
2055	5,293	3,924	2,183	181	222	690	294	7,485
2060	5,152	3,639	2,158	169	219	602	277	7,294
2065	4,926	3,411	2,150	151	208	507	250	7,050

7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13	98	104	112	119	103	114	112
2025	133	96	107	121	136	101	123	121
2030	151	93	109	125	149	96	129	129
2035	166	89	110	127	160	90	133	135
2040	176	83	110	129	172	85	136	140
2045	181	77	110	133	187	81	142	144
2050	181	70	108	132	197	75	142	146
2055	179	64	106	126	199	67	137	145
2060	175	59	105	117	196	58	129	141
2065	167	56	105	105	186	49	117	136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시나리오 S(L-M)는 출산율이 1.2로 저출산 현상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장기 지속은 1인 가구 증가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은 노년기 1인 가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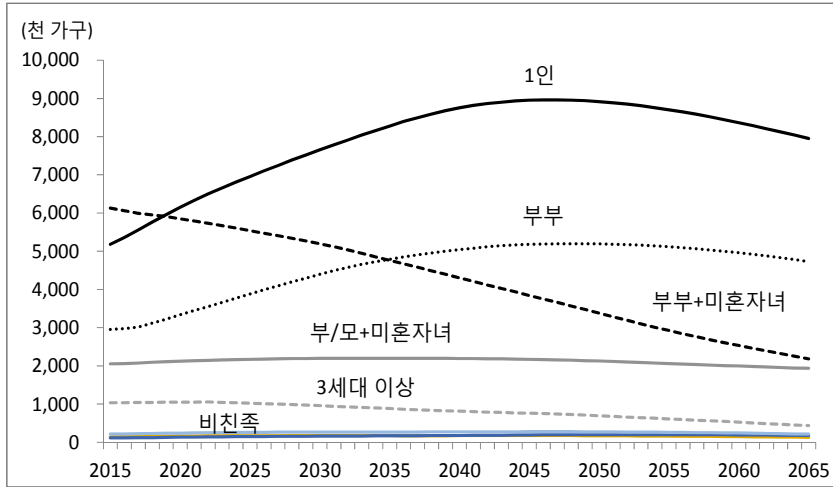
추계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2047년 896만 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795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1세대 가구인 부부 가구는 2015년 295만 가구에서 2048년 520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부부 가구는 2065년 473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2세대 가구인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613만 가구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65년에는 219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205만 가구에서 2037년 220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5년 이들 가구는 193만 가구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 유형 외에 '부부+부/모 가구'는 2015년 14만 가구에서 2046년 1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5년 13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조손 가구'는 2015년 11만 가구에서 2054년 20만 (19만 7000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5년에는 18만 가구에 도달할 전망이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가구에서 2046년 28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2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종합하면 시나리오 S(L-M)의 경우에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 지속으로 청년층 1인 가구나 부부 가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로 노년기 단독 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그 규모 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는 2019년에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그 규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2035년에는 '부부+미혼자녀 가구'보다 '부부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4]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M)



<표 3-9>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M)

(단위 : 천 가구, 2015=100)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규모								
2015	2,952	6,132	2,052	144	112	1,034	214	5,180
2020	3,336	5,848	2,121	160	131	1,049	240	6,152
2025	3,881	5,537	2,167	170	148	1,020	258	6,953
2030	4,395	5,194	2,194	173	160	957	266	7,653
2035	4,791	4,760	2,195	173	169	880	268	8,278
2040	5,041	4,303	2,191	172	178	813	270	8,753
2045	5,179	3,843	2,170	174	190	762	276	8,955
2050	5,192	3,380	2,126	170	197	693	273	8,916
2055	5,116	2,924	2,059	160	196	610	260	8,704
2060	4,959	2,532	1,995	147	191	525	241	8,365
2065	4,727	2,186	1,933	130	179	436	215	7,952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13	95	103	111	118	101	112	119
2025	131	90	106	118	132	99	121	134
2030	149	85	107	120	143	93	124	148
2035	162	78	107	120	151	85	125	160
2040	171	70	107	120	159	79	126	169
2045	175	63	106	121	170	74	129	173
2050	176	55	104	118	176	67	127	172
2055	173	48	100	111	176	59	121	168
2060	168	41	97	102	171	51	113	162
2065	160	36	94	90	160	42	101	154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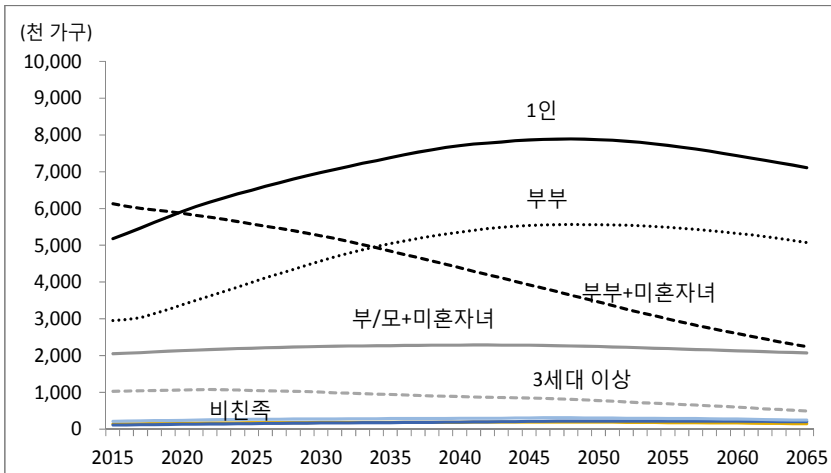
시나리오 S(L-L)의 경우,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 S(L-M)과 동일하게 저출산 현상이 장기 지속되고, 사망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8년 789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하여 2065년에는 711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1세대 가구인 부부 가구는 2015년 295만 가구에서 2048년 556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 507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2세대 가구인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613만 가구에서 2065년 224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205만 가구에서 2041년 229만 가구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65년 207만 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그 외 ‘부부+부/모 가구’는 2015년 14만 가구에서 2046년 19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5년 15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조손 가구’는 2015년 11만 가구에서 2054년 22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5년에는 20만 가구에 도달할 전망이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가구에서 2048년 31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5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요컨대, 사망률의 개선으로 인해 시나리오 S(L-M)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되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부부 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L)



〈표 3-10〉 가구 유형별 변동 전망: 시나리오 S(L-L)

(단위: 천 가구, 2015=100)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부부+ 부/모	조부/모+ 미혼 손자녀	3세대 이상	비친족	1인
규모								
2015	2,952	6,132	2,052	144	112	1,034	214	5,180
2020	3,380	5,868	2,135	162	133	1,066	244	5,918
2025	3,986	5,581	2,200	175	153	1,055	266	6,497
2030	4,571	5,258	2,247	182	168	1,007	280	6,977
2035	5,042	4,839	2,271	185	181	944	287	7,381
2040	5,358	4,388	2,288	188	194	887	295	7,707
2045	5,537	3,928	2,283	193	211	845	306	7,861
2050	5,561	3,457	2,248	191	221	778	306	7,873
2055	5,488	2,996	2,190	181	223	691	294	7,713
2060	5,324	2,598	2,132	168	218	598	275	7,435
2065	5,071	2,242	2,073	149	204	498	246	7,111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14	96	104	113	120	103	114	114
2025	135	91	107	122	137	102	125	125
2030	155	86	110	127	150	97	131	135
2035	171	79	111	129	162	91	134	142
2040	182	72	111	131	174	86	138	149
2045	188	64	111	134	189	82	143	152
2050	188	56	110	133	198	75	143	152
2055	186	49	107	126	199	67	138	149
2060	180	42	104	117	195	58	129	144
2065	172	37	101	103	183	48	115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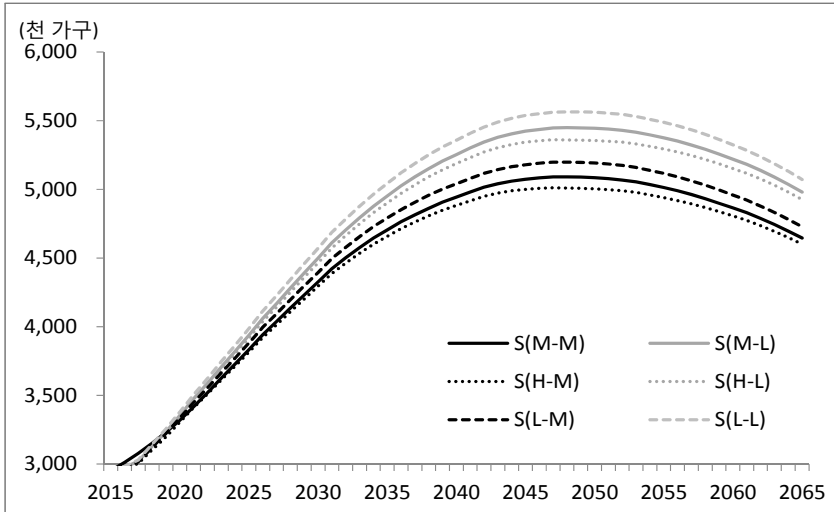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나. 시나리오 간 가구 구성 비교

(1) 부부 가구

1세대 가구인 부부 가구의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변동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즉,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7년 또는 204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가구 규모 면에서는 2065년 기준으로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등의 순으로 규모가 많게 나타날 전망이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시나리오 S(L-L)의 경우 2048년 556만 4000가구, 시나리오 S(M-L)의 경우 2048년 544만 9000가구, 시나리오 S(H-L)의 경우 2047년 536만 가구, 시나리오 S(L-M)의 경우 2048년 519만 8000가구, 시나리오 S(M-M)의 경우 2048년 509만 1000가구, 시나리오 S(H-M)의 경우 2047년 501만 2000가구 등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종합하면, 사망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망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을수록 부부 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다소 늦추어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6]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 변동 전망



<표 3-11>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2,952	2,952	2,952	2,952	2,952	2,952
2020	3,320	3,355	3,305	3,348	3,336	3,380
2025	3,833	3,937	3,815	3,918	3,881	3,986
2030	4,326	4,499	4,294	4,465	4,395	4,571
2035	4,704	4,951	4,658	4,900	4,791	5,042
2040	4,943	5,253	4,883	5,187	5,041	5,358
2045	5,073	5,423	5,000	5,343	5,179	5,537
2050	5,085	5,445	5,003	5,355	5,192	5,561
2055	5,013	5,375	4,940	5,293	5,116	5,488
2060	4,865	5,219	4,806	5,152	4,959	5,324
2065	4,645	4,979	4,600	4,926	4,727	5,071

	S(M-M)	S(M-L)	S(H-M)	S(H-L)	S(L-M)	S(L-L)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1	100	101	100	102
2025	100	103	100	102	101	104
2030	100	104	99	103	102	106
2035	100	105	99	104	102	107
2040	100	106	99	105	102	108
2045	100	107	99	105	102	109
2050	100	107	98	105	102	109
2055	100	107	99	106	102	109
2060	100	107	99	106	102	109
2065	100	107	99	106	102	109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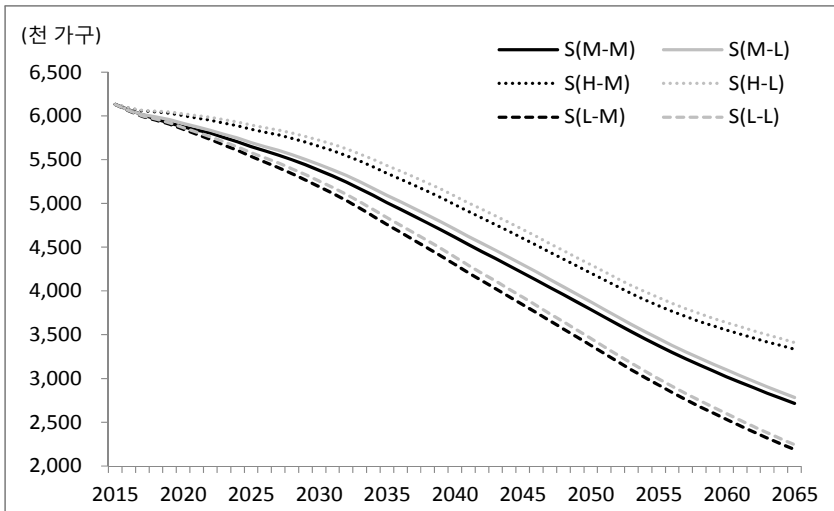
(2) 2세대 가구

2세대 가구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부부+미혼자녀’ 가구, ‘부+미혼자녀’ 가구, ‘모+미혼자녀’ 가구,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부부+부/모’ 가구 등이 있다. 이들 각 가구 유형별로 추계 시나리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준 차이는 있을지언정 변동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규모는 급속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가구 규모는 2065년 기준으로 시나리오 S(H-L) 341만 1000가구, 시나리오 S(H-M) 333만 5000가구, 시나리오 S(M-L) 278만 1000가구, 시나리오 S(M-M) 271만 4000가구, 시나리오 S(L-L) 224만 2000가구, 시나리오 S(L-M) 218만 600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요컨대, 출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출산율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3-1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사망률보다는 출산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50년이 지나서는 출산율과 사망률 변동에 따라 최대 122만 5000가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7] 시나리오별 부부+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표 3-12〉 시나리오별 부부+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6,132	6,132	6,132	6,132	6,132	6,132
2020	5,875	5,915	6,004	6,025	5,848	5,868
2025	5,651	5,696	5,850	5,896	5,537	5,581
2030	5,380	5,446	5,654	5,723	5,194	5,258
2035	5,009	5,093	5,346	5,434	4,760	4,839
2040	4,613	4,705	4,986	5,085	4,303	4,388
2045	4,206	4,299	4,602	4,703	3,843	3,928
2050	3,788	3,875	4,205	4,300	3,380	3,457
2055	3,373	3,456	3,832	3,924	2,924	2,996
2060	3,021	3,098	3,553	3,639	2,532	2,598
2065	2,714	2,781	3,335	3,411	2,186	2,242
.....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1	102	103	100	100
2025	100	101	104	104	98	99
2030	100	101	105	106	97	98
2035	100	102	107	108	95	97
2040	100	102	108	110	93	95
2045	100	102	109	112	91	93
2050	100	102	111	114	89	91
2055	100	102	114	116	87	89
2060	100	103	118	120	84	86
2065	100	102	123	126	81	83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부+미혼자녀’ 가구의 규모도 시나리오에 따라 수준 차이는 있을지언정 변동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부+미혼자녀 가구의 규모는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부+미혼자녀 가구의 규모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시나리오 S(L-L)의 경

〈표 3-13〉 시나리오별 부+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535	535	535	535	535	535
2020	561	567	564	566	572	574
2025	589	596	587	593	602	609
2030	608	618	603	613	625	635
2035	616	631	610	624	637	652
2040	623	641	613	631	646	665
2045	624	645	611	631	648	669
2050	614	636	600	621	638	660
2055	595	618	582	605	616	640
2060	576	600	568	591	592	617
2065	557	581	559	581	566	590
.....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1	100	101	102	102
2025	100	101	100	101	102	103
2030	100	102	99	101	103	105
2035	100	102	99	101	103	106
2040	100	103	98	101	104	107
2045	100	103	98	101	104	107
2050	100	104	98	101	104	108
2055	100	104	98	102	103	107
2060	100	104	99	103	103	107
2065	100	104	100	104	102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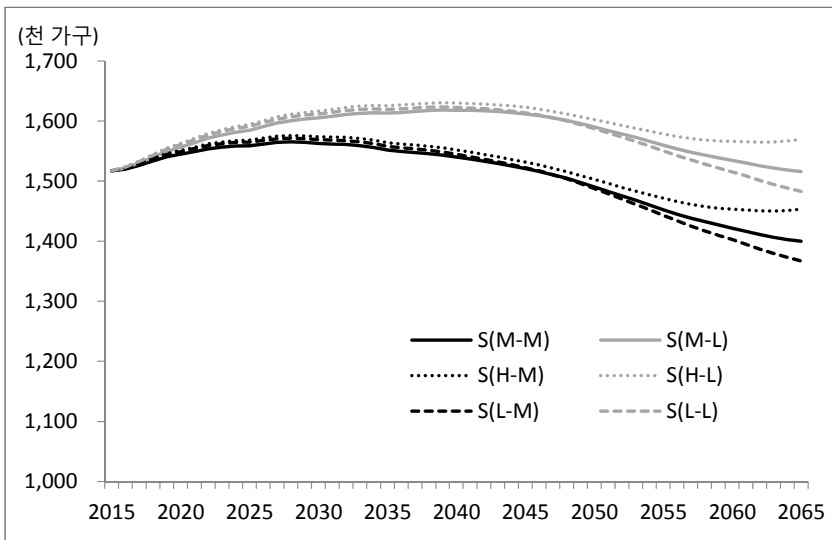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모+미혼자녀’ 가구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는 [그림 3-19]와 같다. 구체적으로 고출산 가정이 포함된 시나리오 S(H-M)과 시나리오 S(H-L)을 제외한 나머지 시나리오에서 ‘모+미혼자녀’ 가구는 일정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S(H-M)과 시나리오 S(H-L)

의 경우, 출산율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규모가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시나리오별 모+미혼자녀 가구의 규모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 및 그 규모를 살펴보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M)들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빠르고 그 규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3가지 시나리오의 경우, 2028년 정점에 도달하고, 그 규모는 156만 5000~157만 6000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L)의 경우에는 2039년 161만 8000~163만 가구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율 변화보다는 사망률 변화에 따라 발생 정도에 더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시나리오별 모+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표 3-14〉 시나리오별 모+미혼자녀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1,517	1,517	1,517	1,517	1,517	1,517
2020	1,545	1,556	1,551	1,563	1,549	1,561
2025	1,559	1,585	1,568	1,594	1,565	1,591
2030	1,563	1,605	1,574	1,616	1,569	1,612
2035	1,552	1,613	1,564	1,625	1,558	1,619
2040	1,540	1,618	1,552	1,630	1,545	1,623
2045	1,521	1,612	1,532	1,623	1,522	1,614
2050	1,491	1,590	1,503	1,603	1,488	1,587
2055	1,452	1,560	1,471	1,579	1,443	1,550
2060	1,422	1,535	1,453	1,566	1,403	1,515
2065	1,400	1,516	1,453	1,569	1,367	1,483
.....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1	100	101	100	101
2025	100	102	101	102	100	102
2030	100	103	101	103	100	103
2035	100	104	101	105	100	104
2040	100	105	101	106	100	105
2045	100	106	101	107	100	106
2050	100	107	101	108	100	107
2055	100	107	101	109	99	107
2060	100	108	102	110	99	107
2065	100	108	104	112	98	106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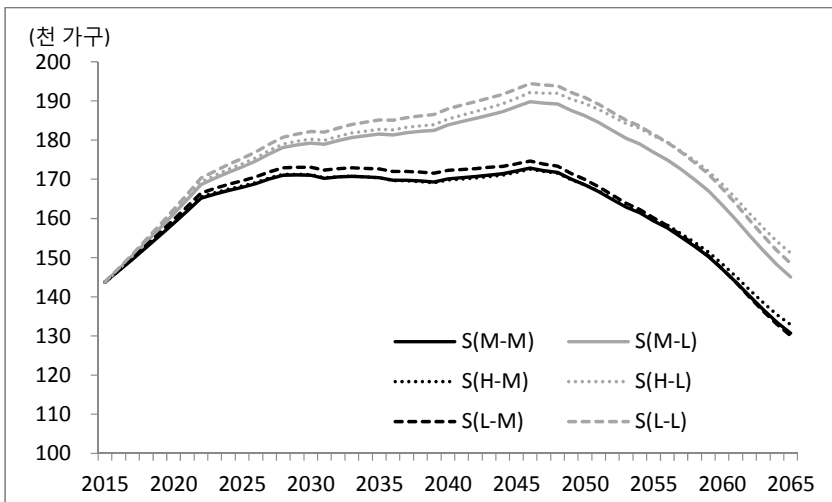
‘부부+부/모 가구’에 대해 추계한 결과는 [그림 3-20]과 같다. 동 가구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그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변화 패턴은 동일하게 전망되고 있다.

시나리오별로 ‘부부+부/모 가구’의 규모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그

규모를 살펴보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L)의 경우 2046년에 19만~19만 4000가구로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M)의 경우에는 2046년에 17만 1000~17만 3000가구 수준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부부+부/모 가구'의 경우 사망률이 개선될 경우, 부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을 연장하게 되기 때문에 가구의 발생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출산율 변동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0] 시나리오별 부부+부/모 가구 변동 전망



〈표 3-15〉 시나리오별 부부+부/모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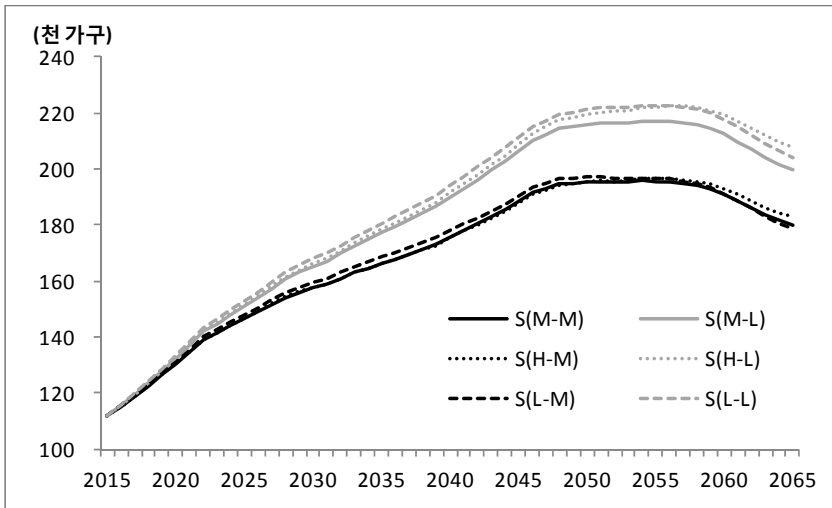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144	144	144	144	144	144
2020	159	161	159	162	160	162
2025	168	173	168	174	170	175
2030	171	179	171	180	173	182
2035	170	182	170	183	173	185
2040	170	184	170	185	172	188
2045	172	189	172	191	174	193
2050	169	186	169	189	170	191
2055	159	177	160	181	160	181
2060	147	164	148	169	147	168
2065	131	145	133	151	130	149
.....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2	100	102	101	102
2025	100	103	100	104	101	104
2030	100	105	100	105	101	107
2035	100	107	100	107	101	109
2040	100	108	100	109	101	111
2045	100	110	100	111	101	112
2050	100	110	100	112	101	113
2055	100	111	100	114	100	114
2060	100	111	101	115	100	114
2065	100	111	102	116	100	114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는 출산율보다는 사망률에 따라 그 규모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는 2050년대 중반에 정점에 도달하여 감소할 전망이나, 시나리오에 따라 그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으로 낮은 시나리오 S(L-L)의 경우 2054년 22만 3000만 가구, 시나리오 S(M-L)의 경우 2054년 21만 7000가구, 시나리오 S(H-L)의 경우에는 2056년 22만 3000가구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난다.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나리오 S(L-M)와 시나리오 S(M-M)는 2054년에 19만 6000~19만 7000가구 수준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시나리오 S(H-M)의 경우에는 2056년에 19만 6000가구 수준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1] 시나리오별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변동 전망



〈표 3-16〉 시나리오별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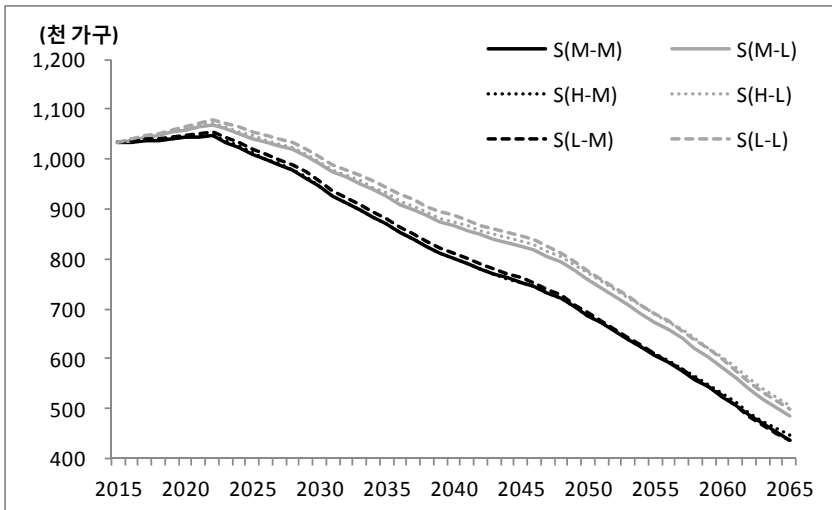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112	112	112	112	112	112
2020	131	133	131	133	131	133
2025	146	151	147	151	148	153
2030	158	165	158	166	160	168
2035	166	177	166	178	169	181
2040	176	190	176	192	178	194
2045	188	206	188	209	190	211
2050	195	216	195	219	197	221
2055	196	217	196	222	196	223
2060	191	212	193	219	191	218
2065	180	199	183	208	179	204
.....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2	100	102	101	102
2025	100	103	100	104	101	104
2030	100	105	100	105	101	107
2035	100	107	100	107	101	109
2040	100	108	100	109	101	111
2045	100	110	100	111	101	112
2050	100	110	100	112	101	113
2055	100	111	100	114	100	114
2060	100	111	101	115	100	114
2065	100	111	102	116	100	114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3) 3세대 이상 가구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2년까지만 상승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에서 가구 규모는 시나리오 S(L-L) 108만 가구, 시나리오 S(H-L) 107만 3000가구, 시나리오 S(M-L) 106만 9000가구, 시나리오 S(L-M) 105만 6000가구, 시나리오 S(H-M) 104만 9000가구, 시나리오 S(M-M) 104만 700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요컨대, 사망률이 개선되는 시나리오들에서 3세대 이상 가구의 출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산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 시나리오별 3세대 이상 가구 변동 전망



9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표 3-17〉 시나리오별 3세대 이상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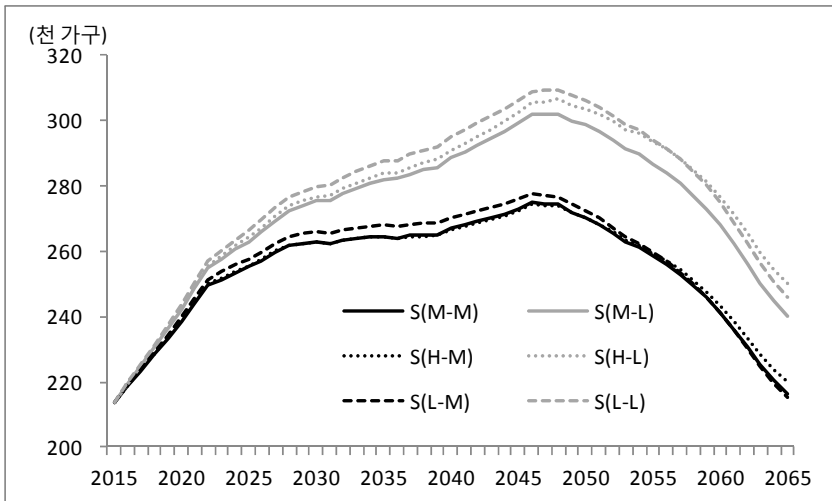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1,034	1,034	1,034	1,034	1,034	1,034
2020	1,043	1,058	1,044	1,061	1,049	1,066
2025	1,010	1,042	1,012	1,046	1,020	1,055
2030	946	991	947	997	957	1,007
2035	869	926	869	932	880	944
2040	802	868	801	875	813	887
2045	754	826	752	835	762	845
2050	687	759	687	772	693	778
2055	607	674	609	690	610	691
2060	525	583	530	602	525	598
2065	438	486	445	507	436	498
.....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2	100	102	101	102
2025	100	103	100	104	101	104
2030	100	105	100	105	101	107
2035	100	107	100	107	101	109
2040	100	108	100	109	101	111
2045	100	110	100	111	101	112
2050	100	110	100	112	101	113
2055	100	111	100	114	100	114
2060	100	111	101	115	100	114
2065	100	111	102	116	100	114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4) 비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의 경우, 2040년대 중반까지 그 규모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시나리오별로 비친족 가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 및 규모를 살펴보면, 사망률이 개선되는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M-L)의 경우 2048년에 정점에 도달하며, 그 규모는 각각 31만 가구, 30만 6000가구, 30만 2000가구로 전망된다. 사망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의 경우에는 2046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그 규모는 각각 27만 8000가구, 27만 5000가구, 27만 4000가구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3-23] 시나리오별 비친족 가구 변동 전망



〈표 3-18〉 시나리오별 비친족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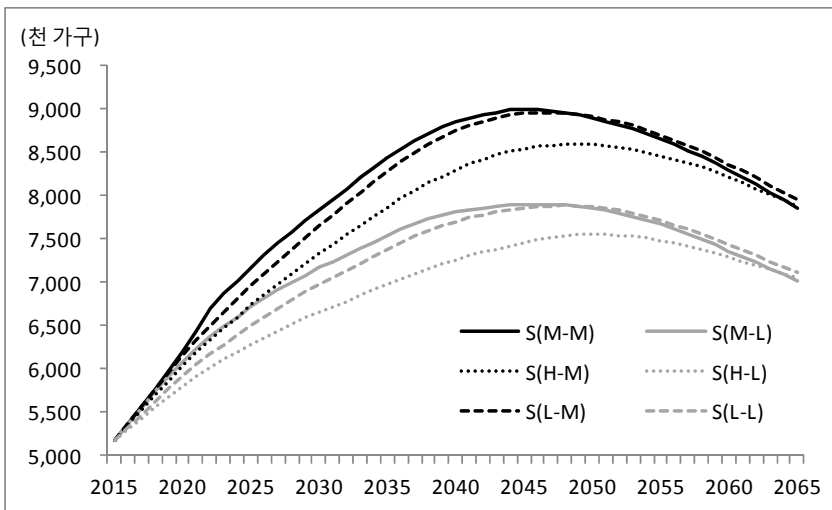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214	214	214	214	214	214
2020	239	242	239	243	240	244
2025	255	263	256	264	258	266
2030	263	275	263	277	266	280
2035	265	282	265	284	268	287
2040	267	289	266	291	270	295
2045	273	299	272	303	276	306
2050	270	299	270	304	273	306
2055	258	287	259	294	260	294
2060	241	268	243	277	241	275
2065	216	240	220	250	215	246
.....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102	100	102	101	102
2025	100	103	100	104	101	104
2030	100	105	100	105	101	107
2035	100	107	100	107	101	109
2040	100	108	100	109	101	111
2045	100	110	100	111	101	112
2050	100	110	100	113	101	113
2055	100	111	100	114	100	114
2060	100	111	101	115	100	114
2065	100	111	102	116	100	114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5)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2040년대 중반까지 그 규모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1인 가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시나리오 S(H-L)의 경우가 2050년으로 가장 늦고, 그다음으로 시나리오 S(H-M) 2049년, 시나리오 S(L-L) 2048년, 시나리오 S(L-M) 2047년, 시나리오 S(M-L) 2046년, 시나리오 S(M-M) 2045년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정점에서의 1인 가구 규모는 시나리오 S(M-M) 899만 5000가구, 시나리오 S(L-M) 896만 2000가구, 시나리오 S(H-M) 859만 5000가구, 시나리오 S(M-L) 790만 7000가구, 시나리오 S(L-L) 788만 8000가구, 시나리오 S(H-L) 755만 400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3-24] 시나리오별 1인 가구 변동 전망



〈표 3-19〉 시나리오별 1인 가구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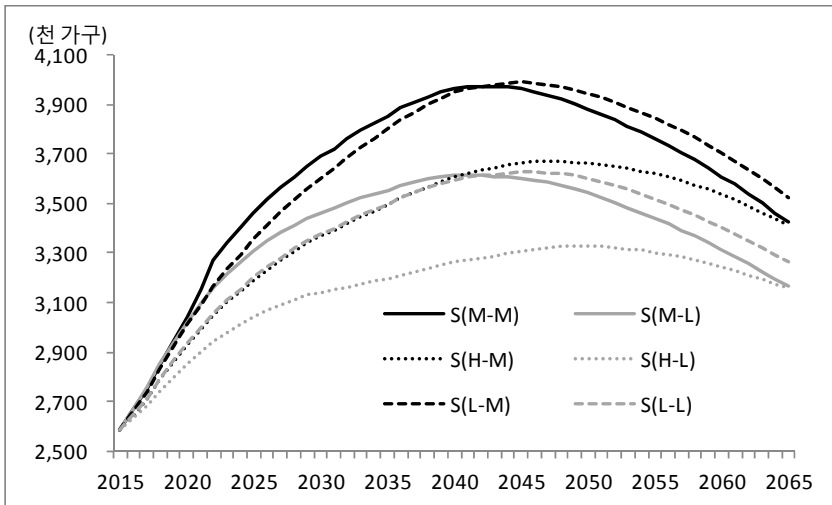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5,180	5,180	5,180	5,180	5,180	5,180
2020	6,199	6,084	6,040	5,806	6,152	5,918
2025	7,164	6,709	6,731	6,277	6,953	6,497
2030	7,843	7,170	7,332	6,660	7,653	6,977
2035	8,432	7,538	7,867	6,976	8,278	7,381
2040	8,856	7,814	8,303	7,264	8,753	7,707
2045	8,995	7,906	8,546	7,461	8,955	7,861
2050	8,902	7,865	8,587	7,554	8,916	7,873
2055	8,654	7,669	8,466	7,485	8,704	7,713
2060	8,293	7,368	8,214	7,294	8,365	7,435
2065	7,859	7,023	7,882	7,050	7,952	7,111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98	97	94	99	95
2025	100	94	94	88	97	91
2030	100	91	93	85	98	89
2035	100	89	93	83	98	88
2040	100	88	94	82	99	87
2045	100	88	95	83	100	87
2050	100	88	96	85	100	88
2055	100	89	98	86	101	89
2060	100	89	99	88	101	90
2065	100	89	100	90	101	90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2040년대 중반까지 그 규모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남성 1인 가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시나리오 S(H-L)의 경우가 2049년으로 가장 늦고, 그다음으로 시나리오 S(H-M) 2047년, 시나리오 S(L-L) 2046년, 시나리오 S(L-M) 2045

년, 시나리오 S(M-M) 2042년, 시나리오 S(M-L) 2041년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의 남성 1인 가구 규모는 시나리오 S(L-M) 398만 9000가구, 시나리오 S(M-M) 397만 가구, 시나리오 S(H-M) 366만 8000가구, 시나리오 S(L-L) 362만 7000가구, 시나리오 S(M-L) 361만 5000가구, 시나리오 S(H-L) 332만 800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3-25] 시나리오별 1인 가구(남자) 변동 전망



〈표 3-20〉 시나리오별 1인 가구(남자)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2,588	2,588	2,588	2,588	2,588	2,588
2020	3,045	3,022	2,930	2,854	3,010	2,934
2025	3,459	3,306	3,191	3,039	3,353	3,199
2030	3,688	3,462	3,366	3,141	3,603	3,375
2035	3,854	3,554	3,496	3,198	3,800	3,496
2040	3,960	3,614	3,606	3,263	3,946	3,596
2045	3,961	3,602	3,663	3,308	3,989	3,626
2050	3,881	3,543	3,661	3,328	3,943	3,601
2055	3,761	3,441	3,618	3,303	3,844	3,519
2060	3,610	3,314	3,536	3,244	3,704	3,402
2065	3,423	3,165	3,413	3,159	3,525	3,262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99	96	94	99	96
2025	100	96	92	88	97	92
2030	100	94	91	85	98	91
2035	100	92	91	83	99	91
2040	100	91	91	82	100	91
2045	100	91	92	84	101	92
2050	100	91	94	86	102	93
2055	100	91	96	88	102	94
2060	100	92	98	90	103	94
2065	100	92	100	92	103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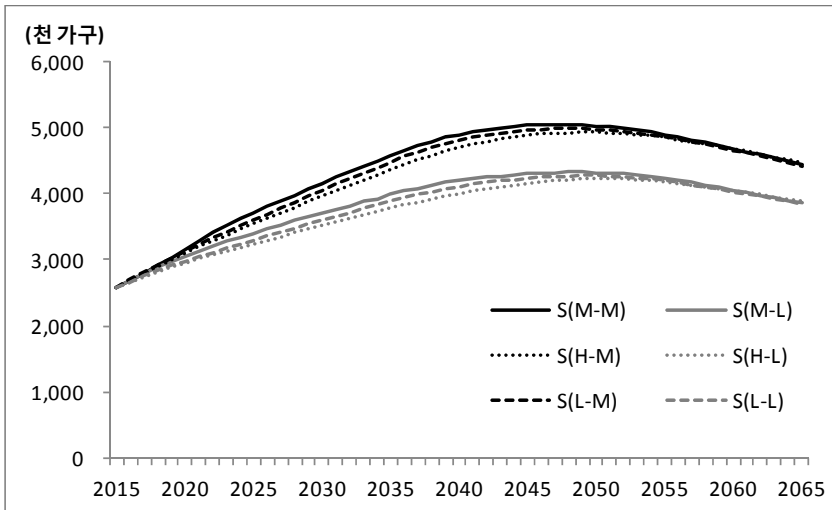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여성 1인 가구 역시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사망률이 개선되는 가정하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성 1인 가구의 출현이 적어지게 될 것이다.

여성 1인 가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시나리오 S(H-L)이 2051년

으로 가장 늦고, 그다음으로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L)의 경우 2049년, 시나리오 S(L-M) 2048년, 시나리오 S(M-M) 2047년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에서 여성 1인 가구 규모는 시나리오 S(M-M) 504만 2000가구, 시나리오 S(L-M) 498만 4000가구, 시나리오 S(H-M) 492만 9000가구, 시나리오 S(M-L) 432만 6000가구, 시나리오 S(L-L) 427만 4000가구, 시나리오 S(H-L) 422만 800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3-26] 시나리오별 1인 가구(여자) 변동 전망



9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표 3-21〉 시나리오별 1인 가구(여자)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2,591	2,591	2,591	2,591	2,591	2,591
2020	3,154	3,062	3,110	2,952	3,142	2,984
2025	3,705	3,403	3,540	3,238	3,601	3,298
2030	4,155	3,708	3,965	3,518	4,050	3,603
2035	4,578	3,984	4,371	3,777	4,478	3,884
2040	4,896	4,200	4,698	4,001	4,807	4,111
2045	5,034	4,304	4,884	4,153	4,966	4,235
2050	5,021	4,321	4,927	4,227	4,972	4,272
2055	4,893	4,228	4,847	4,182	4,859	4,194
2060	4,682	4,054	4,678	4,049	4,661	4,032
2065	4,436	3,858	4,469	3,891	4,427	3,849
S(M-M)=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00	97	99	94	100	95
2025	100	92	96	87	97	89
2030	100	89	95	85	97	87
2035	100	87	95	83	98	85
2040	100	86	96	82	98	84
2045	100	85	97	82	99	84
2050	100	86	98	84	99	85
2055	100	86	99	85	99	86
2060	100	87	100	86	100	86
2065	100	87	101	88	100	87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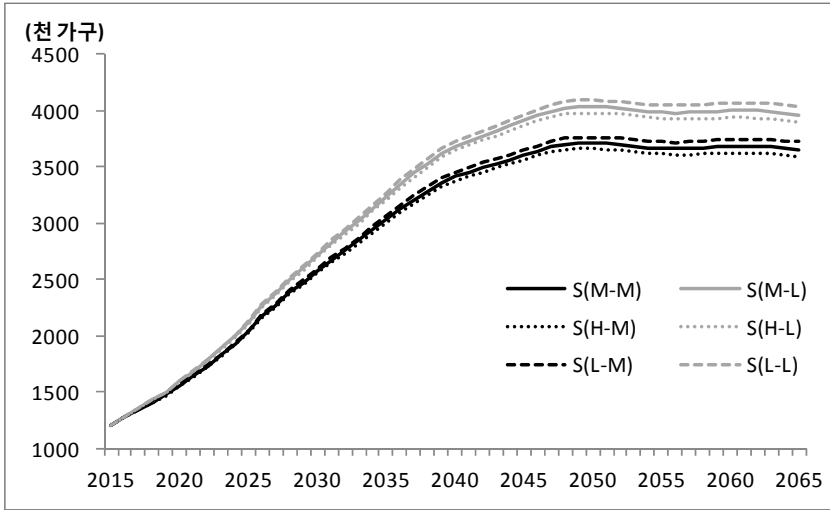
3. 가구주 연령별 가구

모든 가구 유형에서 가구주의 성,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가구주의 성별로 구분되는 '부+미혼자녀' 가구와 '모+미혼자녀' 가구, '여성 1인' 가구 등과 가구주의 연령 특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노인 부부' 가구, '노인 1인' 가구 등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부+미혼자녀' 가구, '모+미혼자녀' 가구, '여성 1인' 가구,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노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부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부부 가구(이하 '노인부부가구'로 칭함)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부가구는 2015년 121만 5000가구에서 2065년에는 시나리오 S(M-M)의 경우 365만 8000가구(2015년 실측치 대비 301%), 시나리오 S(M-L)의 경우 396만 5000가구(326%), 시나리오 S(H-M)의 경우 359만 5000가구(296%), 시나리오 S(H-L)의 경우 389만 5000가구(321%), 시나리오 S(L-M)의 경우 372만 4000가구(307%), 시나리오 S(L-L)의 경우 403만 9000가구(332%) 등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2065년 기준으로 노인 부부가구의 규모는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등의 순으로 많을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부부가구는 주로 사망률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그러한 영향력은 기간 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사망률 수준이 유사한 경우에는 출산율 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부부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부부가구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7]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변동 전망



<표 3-22>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2015=100)

규모	S(M-M)	S(M-L)	S(H-M)	S(H-L)	S(L-M)	S(L-L)
2015	1,215	1,215	1,215	1,215	1,215	1,215
2020	1,566	1,600	1,564	1,596	1,573	1,604
2025	2,048	2,127	2,038	2,117	2,060	2,140
2030	2,573	2,711	2,555	2,692	2,593	2,734
2035	3,032	3,237	3,006	3,208	3,062	3,270
2040	3,414	3,683	3,380	3,644	3,453	3,727
2045	3,603	3,909	3,562	3,863	3,648	3,961
2050	3,710	4,032	3,662	3,979	3,762	4,091
2055	3,667	3,988	3,615	3,931	3,722	4,050
2060	3,682	4,001	3,624	3,936	3,744	4,070
2065	3,658	3,965	3,595	3,895	3,724	4,039

	S(M-M)	S(M-L)	S(H-M)	S(H-L)	S(L-M)	S(L-L)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29	132	129	131	129	132
2025	169	175	168	174	170	176
2030	212	223	210	222	213	225
2035	250	266	247	264	252	269
2040	281	303	278	300	284	307
2045	297	322	293	318	300	326
2050	305	332	301	328	310	337
2055	302	328	298	324	306	333
2060	303	329	298	324	308	335
2065	301	326	296	321	307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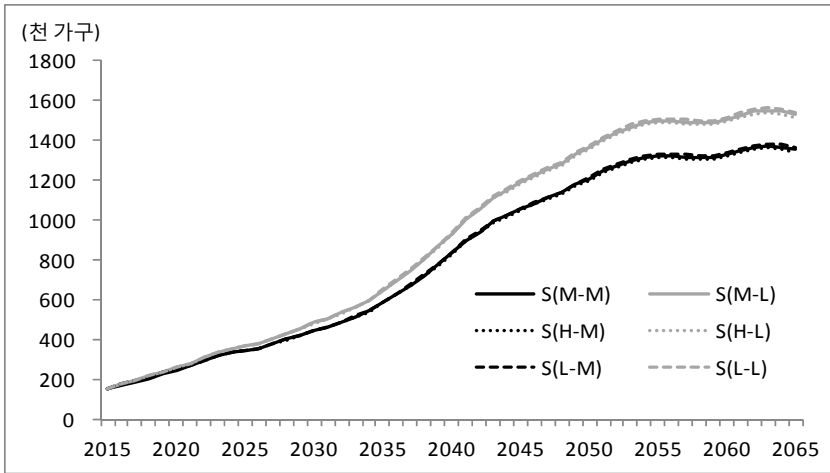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가구의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부부 가구(이하 '후기노인부부가구'로 칭함)를 살펴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기노인부부가구는 2015년 15만 8000가구에서 2065년에는 시나리오 S(M-M)의 경우 135만 2000가구(2015년 실측치 대비 856%), 시나리오 S(M-L)의 경우 152만 9000가구(968%), 시나리오 S(H-M)의 경우 134만 2000가구(850%), 시나리오 S(H-L)의 경우 151만 7000가구(960%), 시나리오 S(L-M)의 경우 136만 3000가구(863%), 시나리오 S(L-L)의 경우 154만 2000가구(976%) 등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2065년 기준으로 후기노인부부가구의 규모는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등의 순으로 많을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기노인부부가구는 거의 전적으로 사망률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그러한 영향력은 기간 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사망률 수준이 유사한 경우에는 출산율 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부부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 부부 가구

역시 증가할 것이나 그 영향력은 고연령층으로 올수록 아주 약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28]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80세 이상) 변동 전망



〈표 3-23〉 시나리오별 부부 가구(가구주 연령 80세 이상)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2015=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158	158	158	158	158	158
2020	249	261	254	261	255	261
2025	349	369	348	368	350	369
2030	447	484	446	483	449	485
2035	588	649	586	647	591	652
2040	836	934	832	930	840	939
2045	1,053	1,187	1,048	1,181	1,059	1,194
2050	1,208	1,366	1,201	1,358	1,216	1,375
2055	1,323	1,497	1,314	1,487	1,332	1,508
2060	1,330	1,507	1,321	1,496	1,340	1,518
2065	1,352	1,529	1,342	1,517	1,363	1,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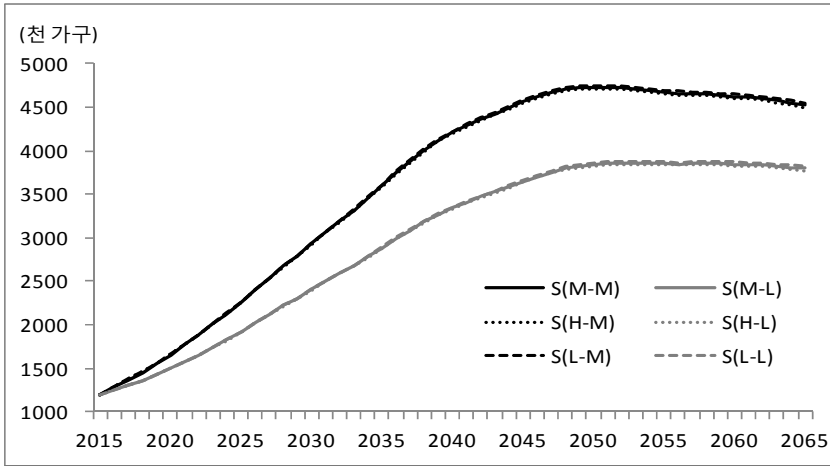
	S(M-M)	S(M-L)	S(H-M)	S(H-L)	S(L-M)	S(L-L)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58	165	161	165	161	166
2025	221	233	221	233	221	234
2030	283	306	282	306	284	307
2035	373	411	371	409	374	413
2040	529	592	527	589	532	595
2045	667	752	663	748	670	756
2050	765	865	761	860	770	871
2055	838	948	832	942	843	955
2060	842	954	836	947	848	961
2065	856	968	850	960	863	976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모든 시나리오에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2015년 120만 3000 가구에서 빠르게 증가한 후, 2050년경부터 다소나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1인 가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규모는 시나리오 S(M-M)의 경우 2050년 473만 1000가구, 시나리오 S(M-L)의 경우 2052년 385만 7000가구, 시나리오 S(H-M)의 경우 2050년 471만 3000가구, 시나리오 S(H-L)의 경우 2052년 384만 1000가구, 시나리오 S(L-M)의 경우 2050년 475만 가구, 시나리오 S(L-L)의 경우 2052년 387만 3000가구로 나타난다. 출산율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미하며, 사망률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65년 기준으로 중사망률인 경우 중출산과 고출산 간에는 2만 4000가구, 중출산과 저출산 간에는 2만 5000가구의 차이가 있으며, 저사망률인 경우에는 중출산과 고출산 간에는 2만 1000가구, 중출산과 저출산 간에는 2만 1000가구의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중사망률과 저사망률 간의 차이는 중출산율인 경우 72만 7000가구, 고출산인 경우 72만 3000가구, 저출산인 경우 73만 가

구로 각각 나타날 전망이다. 요컨대, 노인 1인 가구는 주로 사망률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출산율 변화의 영향력은 극히 미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9] 시나리오별 노인 1인 가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표 3-24> 시나리오별 노인 1인 가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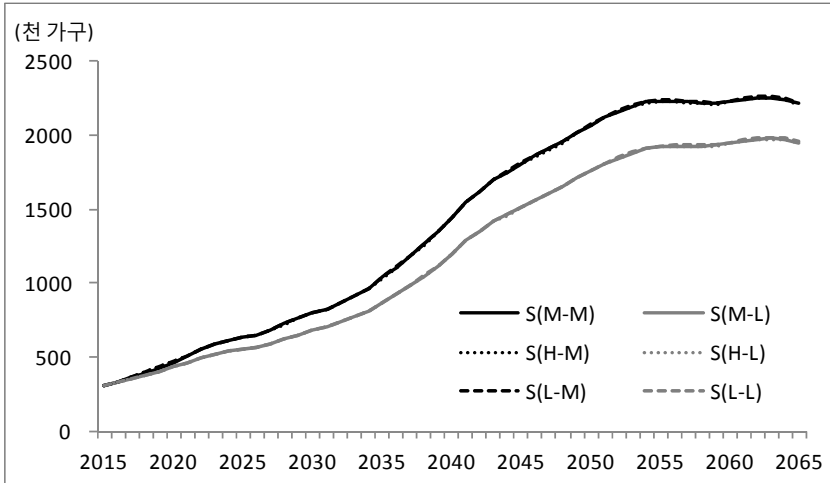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1,203	1,203	1,203	1,203	1,203	1,203
2020	1,656	1,503	1,672	1,502	1,674	1,504
2025	2,261	1,920	2,258	1,917	2,265	1,923
2030	2,927	2,402	2,921	2,397	2,934	2,408
2035	3,600	2,886	3,591	2,878	3,611	2,894
2040	4,211	3,342	4,198	3,332	4,225	3,353
2045	4,557	3,644	4,542	3,632	4,574	3,658
2050	4,731	3,840	4,713	3,826	4,750	3,856
2055	4,675	3,850	4,656	3,834	4,696	3,867
2060	4,625	3,847	4,603	3,828	4,648	3,867
2065	4,520	3,794	4,496	3,773	4,545	3,815

	S(M-M)	S(M-L)	S(H-M)	S(H-L)	S(L-M)	S(L-L)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38	125	139	125	139	125
2025	188	160	188	159	188	160
2030	243	200	243	199	244	200
2035	299	240	299	239	300	241
2040	350	278	349	277	351	279
2045	379	303	378	302	380	304
2050	393	319	392	318	395	321
2055	389	320	387	319	390	321
2060	384	320	383	318	386	321
2065	376	315	374	314	378	317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모든 시나리오에서 8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이하에서는 ‘후기노인1인 가구’로 칭함)는 2015년 30만 4000가구에서 2055년(중사망률인 경우) 또는 2056년(저사망률인 경우)까지 빠르게 증가한 후 다소 감소하다가 2063년에 정점에 도달하는 변동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후기노인1인가구가 2063년 정점에 도달할 시 규모는 시나리오 S(M-M)의 경우 225만 6000가구, 시나리오 S(M-L)의 경우 198만 가구, 시나리오 S(H-M)의 경우 225만 1000가구, 시나리오 S(H-L)의 경우 197만 5000가구, 시나리오 S(L-M)의 경우 226만 1000가구, 시나리오 S(L-L)의 경우 198만 4000가구로 전망된다. 후기노인1인가구는 사망률 수준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출산율 변화의 영향력은 극히 미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0] 시나리오별 후기노인1인가구(80세 이상) 전망



〈표 3-25〉 시나리오별 후기노인1인가구(80세 이상) 변동 전망

(단위 : 천 가구, 2015=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15	304	304	304	304	304	304
2020	463	430	473	430	473	430
2025	633	551	633	551	633	552
2030	798	680	797	679	798	680
2035	1,039	870	1,038	869	1,039	871
2040	1,445	1,200	1,444	1,199	1,447	1,201
2045	1,810	1,515	1,808	1,513	1,813	1,517
2050	2,067	1,758	2,064	1,755	2,070	1,761
2055	2,232	1,924	2,228	1,920	2,236	1,927
2060	2,227	1,944	2,222	1,940	2,231	1,949
2065	2,213	1,951	2,208	1,947	2,218	1,956

	S(M-M)	S(M-L)	S(H-M)	S(H-L)	S(L-M)	S(L-L)
2015=100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2020	152	141	156	141	156	141
2025	208	181	208	181	208	181
2030	262	223	262	223	262	224
2035	342	286	341	286	342	286
2040	475	395	475	394	476	395
2045	595	498	595	497	596	499
2050	680	578	679	577	681	579
2055	734	633	733	631	735	634
2060	732	639	731	638	734	641
2065	728	642	726	640	729	643

자료: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임.

제3절 미래 가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함의

앞서 출산율과 사망률의 미래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별로 인구추계를 실시하고, 시설 가구의 가구원의 변화 추세를 적용하여 일반 가구의 가구원을 추계한 후 가구지위 전환 확률을 적용하여 가구추계를 실시하였다. 가구 유형별로 미래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즉, 가구 규모(총량)의 지속적 증가, 가구 크기의 축소(소규모화), 가구 구성의 고령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2030년경에 정점에 도달한 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규모(총량)는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여 년 늦은 2043~2046년경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심지어 인구 자체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규모가 보다 오랫동안 증가하는 것은 가구의 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의 분화는 가구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가구 크기의 소규모화에 따른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인구 증가율의 변화 수준이나 방향과 다르게 가구 규모의 증가를 가져오는 가구의 분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대표적인 가구 유형으로서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부와 모 간의 이혼을 통해 ‘부 또는 모+미혼자녀’ 가구, 이혼자로 구성된 1인 가구, 미혼자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 ‘조부모+미혼 손자녀’ 가구 등 여러 유형의 가구들로 분화가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노인들로 구성된 가구 유형은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를 들 수 있다. 노인들 중 부부 모두가 생존해 있다면 ‘부부 가구’ 형태로만 살고 있을 것이라는 단정을 내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황혼이혼 등이 증가한다면 노부부는 헤어져 각각 1인 가구를 형성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구 분화는 가구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신체적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가구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작용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크기는 가구원 수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미래에 가구는 더욱 소규모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이혼 등으로 1인 가구,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한 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의 감소는 가구 경제 부담이라든지 생활 단위 축소로 인한 간편성 등의 장점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유하여야 할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돌봄 등을 포함한 부담이 증가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고립될 수 있는 등 여러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요컨대, 가구의 소규모화는 가구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에는 부부 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 상승(사망률 저하) 추세에 따라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들의 연령이 더욱 증가함으로써 가구 자체가 고령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홀로 사는, 부부만이 사는, 또는 노인들만이 사는 집단 가구(이는 6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로 시설 가구와는 다른 유형임)에서 구성원들의 연령이 더욱 증가한다면 경제적, 신체적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거나 서로 돕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요컨대, 가구 구성의 고령화는 가구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가구 형태 변화의 세 가지 측면, 즉 가구 규모의 지속적 증가, 가구 크기의 소규모화, 그리고 가구 구성의 고령화는 상호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구 규모의 증가는 가구의 다양화(세분화)와 분화에 의한 것인데, 이는 가구 크기의 축소 내지 소규모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혼 등 가구의 다양화와 분화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특성은 그 자체로 가구의 취약성을 강화시키며, 그 결과로서 가구 크기의 축소도 돌봄 부담 증가 등 가구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가구 구성의 고령화는 주로 자녀들과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사는 노인 1인 가구 혹은 노인 부부 가구에서 발생하므로, 결국 가구 구성의 고령화는 가구 분화를 통해 가구 규모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가구 크기(가구원 수)를 줄이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구 규모, 가구 크기, 가구 구성(연령별) 등의 변화는 서로 연계되어 미래 가구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가구의 취약성은 가구(가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경제생활 영역에서 보면, 가구의 분화, 가구 구

성의 고령화 등은 소득 감소 등을 가져와 가구의 독립적인 경제생활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1인 가구로서 가구원의 연령이 아주 고령인 경우에는 소득원이 전혀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나 미혼자녀들만으로 구성된 가구, ‘조부(모)+미혼 손자녀’ 가구 등은 소득원의 상실 또는 동일 소득액을 두 가구 이상으로 나눔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구의 소비 생활은 가구 크기나 가구 구성의 고령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하여 핵가족 중심의 소비 패턴에서 개별화 소비 패턴으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량 소비 행태는 지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형 마트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또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형 가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에서는 인근의 소형 가게들을 이용하기 곤란해지고, 그렇다고 대형 마트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구 크기의 소규모화에 따라 겪게 될 소비 생활상 문제들은 특히 가구 구성의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후기노인1인가구나 후기노인부부가구들의 경우에는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으로 인하여 이동성마저 제약을 받아 보다 원거리에 있는 대형 마트들을 이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에서 노인 가구들이 경제적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생필품을 취급하는 소형 마트들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리는 이른바 ‘음식 사막(food desert)’ 등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찬호, 2011).

가구의 취약성 증가 등 변화에 따른 소비 행태상 문제들은 비단 식생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심지어 감소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주택의 수급 균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가구의 분화 등으로 인하여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나 2040년경부터 가구의 규모 역시 감소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의 공급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분포의 측면에서는 인구의 불균형 분포로 인하여 가구들이 유형에 따라 지역 간에 불균형하게 분포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후기 고령 인구들의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 또는 폐가가 증가하고,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수요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중 구조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가구 형태인 ‘부부+미혼자녀’ 가구에 맞추어 주택들이 공급되어 왔으나, 미래에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등의 가구 크기가 작은 형태의 가구들이 보다 보편화될 전망으로 현 주택 공급 체계로는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후기)노인1인가구와 (후기)노인부부가구들이 증가하는 등 가구 구성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 주택 공급 체계로는 거주자의 질이 낮아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요컨대, 미래 가구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은 양적인 측면은 물론 효율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가구의 고령화 등 취약성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과 기술 간의 결합(예로 4차 산업혁명의 응용)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래 가구의 변화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복지로 간주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가구의 분화, 소규모화 및 고령화로 인하여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구원 또는 가족은 없거나 소수로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장기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교

육, 직업,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 가구 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등 정서적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른 (후기)노인1인가구와 (후기)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노화로 인하여 이동성, 활동 등이 제약되어 독립적 생활 자체가 곤란해질 것이다. 농어촌이나 소도시에서는 노인 가구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 분산되어 분포됨으로써 보건·복지, 행정, 안전 등에 관한 서비스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구의 분화, 소규모화,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정부만의 노력으로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구의 분화 및 고령화로 인하여 돌봄 욕구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어, 획일적인 행정 체계에 의해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하여 돌봄 인력 자체를 기존의 시장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가구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제 4 장

제4차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

제1절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의 역사

제2절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가구 변동

4

제4차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 <<

앞의 장에서 다른 미래 가구의 변화에 대한 추계는 출생, 사망 등의 인구학적 요소들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 현상 변화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 가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인구학적인 것들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력 대체, 노인들의 돌봄과 의료 문제 해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래 가구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을 예측하여 미래 가구의 변동에 대한 추계 작업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지대함을 감안할 때 가구추계와 별도로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가구 변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장 클라우스 슈바프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체제나 조직 모형은 제1차 산업혁명과 특히 제2차 산업혁명의 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구시대적인 것으로 자연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인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글로벌리제이션의 초기 단계에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초반부터 대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그는 처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래 경제사회의 대변화를 예상하고 있다(Schwab, 2016).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전개 과정은 종전의 산업혁명 특히 제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장래의 가구 혹은 가족의 모습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

국 사회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가구 증가가 인구 증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제3차 산업혁명의 연속이냐 이탈이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미래 가구 변화는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가구 혹은 가족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거 제1차 산업혁명과 제2차 산업혁명 및 제3차 산업혁명이 가구의 변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이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가구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의 역사

1. 제1차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

제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760년부터 1820~1840년에 이르는 60~80년간 새로운 제조업 공정의 도입으로 일어난 혁명이다. 생산 방식은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화학 제조, 제철 산업 공정, 증기 기관 사용 증대, 공작 도구 도입, 공장제 발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제1차 산업혁명에서 철도에 의한 내륙 수송과 증기선에 의한 글로벌 리제이션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영국에서 제1차 산업혁명은 가구 변천(household transition)의 “결

정적 계기(decisive moment)”가 된 것 같지는 않으며, 오히려 핵가족 가구의 증가를 촉진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Marsh & Arber, 1992; Wall, 1995; Wrigley, 1997). 교회와 정치는 하나라는 “정교일치” 거버넌스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서, 핵가족 가구는 제1차 산업혁명 이전인 17세기부터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산업혁명의 시작과 초기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핵가족 가구는 재정적으로 탄력성이 큰 사회적 단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Wall, 1995; Verdon, 1998; Kertzer, 1991; Kertzer & Barbagli, 2002).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역사인구학자들은 13세기 이후 핵가족 가구가 영국에서는 적어도 일차적 중요성을 지니는 가구 형태였다고 주장한다(Laslett, 1965, 1972; Hartman, 2004). 이것은 흔히들 “서유럽의 혼인 유형(marriage pattern of Western Europe)”으로 명명하기도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젊은 남녀들이 부모의 가족 가구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결혼을 해서도 부모와 공동으로 동거하면서 확대 가족 가구를 형성하는 남유럽, 아시아나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 보는 가구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Hajnal, 1965, 1982). 이들 젊은 핵가족 가구 또는 단순 가구(simple household)는 기회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더욱더 유연하고 사회적 유동성이 큰 가구의 형태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장래를 계획하고 노동과 저축이라는 부르주아적 생활 습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이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 영국이나 유럽의 북서부에서 왜 먼저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여성의 지위, 일과 가정의 양립(Work

and Balance), 나아가 가구/가족의 변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여성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엘리스 클라크는 비판적 관점에서 16세기 영국에는 여성들이 상업과 농업의 주요 영역을 담당하고 농장 관리, 상업 거래, 토지 관리 등의 영역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17세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남성은 집 밖의 공장에서 유급 노동을 그리고 여성은 집 안의 가사 노동에 종사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되고 이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격하되었다고 주장하였다(Clark, 1919).

제1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경우를 보면,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여성 해방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한다(Pinchbeck, 1969). 또 다른 경우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연속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톨리와 스콧은 영국사에서 여성의 지위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Tilly & Scott, 1987). 제1단계인 산업혁명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는 생산은 가사 용도를 위한 것으로, 여성은 가사 목적의 모든 물품을 생산하였다. 제2단계는 초기 산업화 사회의 가족 임금 경제의 시기로, 남편, 부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 가구는 가구원 전부의 집단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근대의 제3단계는 가족 가구는 이제 소비의 장소로서, 기대 수준과 소비 수준의 상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소매업 또는 사무직에서 일자리를 얻기 시작한 시기로 되어 있다.

2. 제2차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부터 1910년, 곧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급격한 산업화의 시기를 가리키는 제국주의 팽창에 의한 글로벌리

제이션의 시대이다. 철도 건설, 철강 생산, 제조업의 기계 사용 확산, 증기력의 이용 확산, 전신의 이용 확산, 석유와 전력의 이용 확산이 제2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1870~1910년의 40년 동안에 걸쳐서 가구와 가족의 변동을 보면, 적어도 1870~1890년의 20년 동안은 인구 증가율이 가구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 가구원 수는 4.5명 수준에서 4.7명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1890년이 되어야 가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기 시작하고, 평균 가구원 수는 4.7명을 정점으로 약간씩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끝난 1930년대 평균 가구원 수는 3.9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제2차 산업혁명의 40년 동안에 출산율은 여성 1인당 4.5명에서 3.5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남녀를 합하여 45세 수준에서 55세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제2차 산업혁명 시기부터 흉년/기근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맬서스의 “덫(trap)”에서 벗어나서, 기대수명은 상승하고 출산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인구 성장이 완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철도 수송의 발전으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많은 지역이 더 큰 시장과 연계되면서 사회 전반은 식량 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하수도 시스템의 개선이나 상수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 통과로 공중 보건이나 위생 시설의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으며, 이것은 감염 질환을 줄이면서 사망력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에서 제2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면서, 영국에서는 흔히들 “Breadwinner Model”로 불리는 가족 가구의 시스템을 표준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19세기 중반부터 임금이 가족 단위 임금이 아니라 개인 단위 임금으로 변하였고, 생활 임금의 지배적인 생계 수준 결정 기준이 가족 집단의 소득에서 성인 남자로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의

임금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인 남자가 받는 임금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데 충분한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숙련 노동자와 중하층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는 전체 가족이 노동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성인 남자가 주부양자가 되는 “Breadwinner Model”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다. 제2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에서는 가족 가구가 소비 경제를 주도하게 되고, 1910년대만 하더라도, 결혼한 여성들은 노동자 계급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노동에 종사하기보다는 가사를 책임지거나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3. 제3차 산업혁명과 가구 변동

제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부터 그 단초를 보이고,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다. 기술적 동인으로는 디지털 전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특히 성능이 향상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킹, 인터넷, 디지털 방송, 2000년대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3G 전화를 포함한 데이터 전달 기술도 중요한 요인이다.

1960년대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회과학도들은 향후 “핵가족” 가구의 표준화를 예상하였지만, 가구와 가족은 대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Cherlin, 2012). 적어도 구조기능주의 학자들이 제시하였던 핵가족 보편화 모형은 큰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³⁾ 제3차

3) 핵가족 가구의 표준화 가설은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곧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산업혁명의 영향을 넘어서, 핵가족 가구의 진전에 1960년대 초기의 가족 사회에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영향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면서,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높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이 도입되고 효과적인 근대적 피임 방법이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해졌다(May, 2012). 한편,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합계출산율이 여자 1명당 2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고전적인 “제1의 인구 변천(First Demographic Transition)”의 가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여성들은 결혼을 연기하고, 가족 형성보다는 학교와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 태도가 형성되었고, 이혼은 손쉽게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자녀들이 한부모 가족 가구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법적 혼인보다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Van de Kaa, 1987; Sweet & Bumpass, 1990; Lesthaeghe, 2010).

현재 가족을 보는 입장은 보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변화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쇠퇴인가 또는 가족의 변화인가를 보는 입장은 정치적 수사와도 관련이 있었다(Van den Berghe, 1979). 보수적 입장의 사람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의 개념은 쇠퇴하고 있으며 그 징후로 혼인 연령 상승이나 미혼/독신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법적 결혼이 아닌 동거혼의 성행, 혼외 출산의 증가를 들고 있으며, 핵가족 가구가 거주 형태로서 제대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지막 기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회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자유주의적 관점(libertarian perspective)의 가족관을 가진 사

있다(Cherlin, 2012).

람들은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사실을 보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다. 1950년대와 같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고,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제2의 인구 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혼외 출산이나 동거혼이 성행하는 것도 1960년대 이전의 가구와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변화의 한 징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Van de Kaa, 1987; Lesthaeghe, 2010; Myrskylä, Kohler, & Billari, 2009).

제2절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가구 변동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세계 경제가 아직도 2007~2008년의 “경제 침체(Great Recession)”의 여파가 남아 있는 2015년에 클라우스 슈바프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들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구적 수준에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에 창조적 파괴가 본격화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기적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제3차 산업혁명과 달리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슈바프는 21세기 중반은 사회 전체가 포스트 자본주의로 변모하여 자본보다 재능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자리 시장이 점점

저숙련/저임금 부문과 고숙련/고임금 부문으로 양극화되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정책이 계급 갈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급 투쟁이 발생하여 “파국적 혁신”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 불평등은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장 클라우스 슈바프가 생각하는 사회적 불안의 핵심 사항이다. 슈바프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술 혁신의 최대 수혜자는 혁신 아이디어 제공자, 주식 보유자, 투자자와 같은 지적 자본과 물질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자본이 생성한 부(富)와 노동이 생성한 부 간의 불평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숙련과 저숙련에 대한 노동력 수요는 있으나 중간 정도의 숙련도에 대한 노동력 수요는 격감하는 일자리 시장이 형성되어, 노동시장의 분절화(分節化)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은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온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광범한 침투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정보 공유의 역학에 의하여 증폭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배우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상적인 경우, 이러한 형태의 상호 작용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결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작용은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무엇이 성공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생성하고 충동질하고, 나아가 극단적인 이념이 확산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과 기술적 동인은 물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Rifkin, 2011, 2017; Guptara, 2017).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양자 컴퓨팅, 나노 기술, 표시 및 연결 기술 등의 테크놀로지나 일차리의 성격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동인들이 가구/가족 구조에 주는 영향이 제3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이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동인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클라우스 슈바프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제3차 혁명의 단순한 연장선이라고 보기에는 속도, 범위, 시스템 영향 등 3가지 면에서 충격이 크다고 강조한다. 슈바프에 의하면, 기술 진보의 현재 속도가 역사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서 그것은 단순 직선이 아니라 지수함수(指數函數)의 형태로 표시되는 속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는 다중적인 지수함수에 의하여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예고하는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생산, 관리, 거버넌스의 전체 시스템의 대변화만이 아니라 본 연구의 주제인 가구/가족의 구조적 장래 변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구 변동에 대한 담론

클라우스 슈바프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장들은 제러미 리프킨이 주장하는 제3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다(Schwab, 2016; Rifkin, 2011, 2017; Guptara, 2017). 또 슈바프가 제4차 산업혁명이 기업, 국가, 개인에 주는 영향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직접 가구/가족이 장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직접 진단한 것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예측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끝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저성장으로 경제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 저출산의 반(半)영구성, 비혼 출산이라는 새로운 출산 행태, 한부모 가족 가구의 증가, 동거 부부 가족 가구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동거 가족과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와 비혼 출산의 증가가 있어 왔다. 남유럽의 경우와 같이 가톨릭의 영향이 큰 경우에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스페인에서 1972년 혼외 출산은 2%에 불과하여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40%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비혼 동거나 동성 결혼을 규제하는 정도에 따라 새로운 가구나 가족의 형태가 국가별로 인정을 받게 되는 데 차이가 있게 될 것임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개되는 가구와 가족의 구조를 “비전형화(非典型化)” 또는 “다양성으로의 수렴(convergence toward divers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환언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미래의 가족이나 가구의 모습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구나 가족의 구조나 행태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자녀들에게 다양한 운명을 만들도록 하면서 빈곤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족과 가구가 조직되고 구조화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예로 생명 연장 기술에 의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삶을 계획하는 방식, 케어에 대한 필요성, 세대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의 가구와 가족을 만드는 새로운 동

인은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한 성 평등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성 평등의 수준이 향상되면 새로운 가족 모델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혼인율은 상승하고, 기존의 가족 해체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도시화의 진전과 사회적 이동성의 활발함은 가족 구성원을 점점 지리적으로 분리시키고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접촉을 해야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구 변동에 대한 국내 시각

이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이나 사회적 동인이 초혼 연령, 만혼과 비혼, 기대수명, 혼인 해체(이혼과 사별), 저출산 등의 가구/가족 변동의 근접요인(近接要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국내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⁴⁾

산업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핵가족” 가구가 보편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2차 산업혁명이 끝나 가는 시점에는 “핵가족” 가구의 표준화가 대세였지만, 제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핵가족 붕괴 또는 가족 가구의 “다양화”와 “개체화”가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 국내 사회과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기술 혁신으로, 또 그것이 인간 중심적이어서 전반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핵가족 가구가 모든 가족 가구나 비(非)가족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 형태로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부의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4) 사회과학 분야 100명의 대학 혹은 연구소에 근무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7. 8. 21.~2017. 9. 11.이다. 조사 문항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구 변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동의 여부를 4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조사표(양식)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심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소득 수준을 향유하지 못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 해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전통적인 핵가족 개념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젊은 연령층이 일자리의 부족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부모와의 동거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확대 가족 가구의 시대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지도 않고 있다. 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가족 가구”로의 복귀의 가능성은 적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수단으로 부모 세대와 동거함으로 해서 확대 가족 가구에 잠정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장래 가구/가족 변동의 대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내 사회과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사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더라도 저출산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 내에서 성 평등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의 성격이 변하고 노동의 유연화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핵가족 가구의 부부가 출산을 지연함으로 해서 무자녀 부부로 남을 개연성이 커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의 각종 성과가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촉진하여도,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프로젝트(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종합보고서가 와일드카드 옵션(Wildcard option)으로 경고하듯이 가족 가구의 핵심 기능인 차세대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경시하거나 포기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OECD, 2011).

세계경제포럼(WEF)은 제4차 산업혁명의 충격으로 핵가족 가구와는 다른 비전형 가구로의 가족 가구의 개체화(individuation)와 다양화

(diversification) 또는 “다양화로의 수렴(convergence toward diversity)”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사회과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실업률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초혼 연령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이나 생활의 편리함은 젊은 연령층에게 가족 형성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신을 선택할 수 있어 결국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의료 기술의 혁신으로 기대수명의 상승과 더불어 남녀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격차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어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직장 내 성 평등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장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 이상, 가구 특히 핵가족 가구의 해체는 빈번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한부모 가족 가구의 비율은 많아질 수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표 4-1〉 가구 변동에 대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동의 비율(전적 동의+대체로 동의)

(단위: %, 명)

	전체	응답자 연령(세)			
		30-39	40-49	50-59	60+
사례 수 (명)	(100)	(10)	(39)	(41)	(10)
1)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이 감소하고 초혼 연령의 상승은 멈출 것이다.	11.0	20.0	10.3	7.3	20.0
2)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혁신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결국 1인 가구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86.0	70.0	79.5	92.7	100.0
3)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의 양극화 심화로 핵가족이 붕괴될 것이다.	64.0	60.0	59.0	70.7	60.0
4)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의료 기술의 혁신으로 기대수명은 상승하나, 기대수명의 남녀 간 격차는 지속되어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54.0	50.0	56.4	43.9	90.0
5)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빈곤을 악화시키지 않아 한부모가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8.0	10.0	7.7	7.5	10.0
6)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직장 내 경쟁 심화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 가족 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68.0	60.0	66.7	70.7	70.0
7)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가정 양립 가능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무자녀 부부가 감소할 것이다.	19.0	20.0	23.1	17.1	10.0
8)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부족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여 확대 가족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7.0	40.0	25.6	29.3	10.0
9)제4차 산업혁명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35.0	60.0	30.8	29.3	50.0
10)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풍요로움을 가져와 핵가족 이외의 특수 가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핵가족 표준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25.0	20.0	23.1	26.8	3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30년대 가족 구조 프로젝트 (Families to 2030 Project)⁵⁾로서 미래 가구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의 안정성과 과학기술 혁신의 채택의

속도에 따라 (1) 황금시대 (2) 지속 가능 성장 (3) 기본 회귀 (4) 혁신적 파편화 사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럽과 북미에 적용되는 장래 가구 변동에 대한 모델은 “황금시대”와 “기본 회귀”로 병합되었다. 이 두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시나리오 기간 중 (1) 완만하지만 보통의 경제 성장률, (2) 소득 불평등의 증대, (3)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4) 정부 재정 압력의 증대, (5) 약간의 출산력 개선, (6) 외국인 인구의 구성비 증가 등이 그것들이다. 이 두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다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성과의 변동성(volatility), 고령의 구조적 실업 지속, 국가의 역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채택, 여성 노동력의 역할, 자녀와 고령자 케어 방식-곧 공식적 방식과 비공식 방식의 균형 관계 등이 그것이다.

앞서 분석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국내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줄 수 있는 한국의 가구의 장래 변동은 유럽이나 북미 선진 지역의 “황금시대” 시나리오나 “지속 가능 성장”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중심적 과학기술 혁신의 채택 속도에 따라 “기본 회귀” 또는 “파국적 혁신사회” 시나리오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기본 회귀 시나리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더라도 저성장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낮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테크놀로지가 완만하게 채택되는 미래의 시나리오이다. 200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 안정성의 결여와 인간 중심적 테크놀로지의 완만한 채택이 서로 결합하게 됨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대단히 부정적

5) OECD 보고서(2011)는 2030년대 가족/가구의 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테크놀로지,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 동향을 2000년대 후반 구미 지역 선진국의 경제 위기(Great Recession)와 관련시켜서, 가족 내 빈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은 구조적 실업과 불평등 증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본다. 기본 회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혼인 연령이 계속해서 늦추어질 수 있지만, 젊은 연령층은 장기간 동거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저출산 사회에서는 새로운 가구/가족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 성장의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전통적 가치로의 복귀 풍조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혼율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한부모 가족 가구의 비율도 그리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기본 회귀 또는 파국적 혁신사회(fragmented but innovative society) 시나리오 모두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경제적 안정성도 높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이들 시나리오에서 공공 부문의 구조적 개혁을 거치지 않으면 직업상의 양극화, 곧 빈부 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장래를 약속하는 모델들이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회 전체는 제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를 원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실업이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이 증대하여, 젊은 연령층의 남녀들은 혼인을 늦추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때로는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직장 내 성평등 중 많은 부분이 실현되고 젊은이들이 1인 가구를 형성하거나 결혼을 한 후에도 높은 이혼율로 한부모 가족 가구는 양산될 수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건강 및 의료 테크놀로지의 혜택으로 기대수명의 신장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신장도 확연해지는 모습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시각과 다른 방식의 황금시대 시나리오의 전개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황금시대 시나리오가 경제 성장의 안정성이 회복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인간 중심적인 테크놀로지가 빠른 속도로

채택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혼란의 시기를 끝내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테크놀로지가 성장 산업에 투자가 계속됨으로 해서 좀 더 강력하고 안정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겠지만, 가족, 사회 전반, 공공 부문은 모두 철저한 구조 개혁을 거치게 되고 소득 양극화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장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숙련이나 기술을 가진 관리자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개선되지만,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지고 삶에 대한 압박이 증대할 수 있으라는 점은 예상이 가능하다.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향후의 30여 년간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과 정치 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가구는 더 이상의 파국 상태로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가구 변화와 돌봄 서비스 욕구

제1절 노인 가구 변화

제2절 노인 1인 가구의 돌봄 욕구

제3절 노인 1인 가구 증가 대비 돌봄 서비스 공급 방안

5

가구 변화와 돌봄 서비스 욕구 <<

인구 고령화는 두 가지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촉진된다. 하나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젊은 층의 감소이며, 또 다른 하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이다. 전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함으로써 후자의 노인 인구 절대 규모의 증가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노인 인구의 고령화(the oldest old)”는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한다. 요컨대, 미래에는 노인 인구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오래 사는 후기 고령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후기 고령 인구는 노화의 심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도 누구에겐가 의존하여야 하는 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하여 가구 내에서 이들 후기 고령 인구를 돌볼 인력은 부족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후기 고령 인구가 홀로 사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돌봄 욕구의 충족 여부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들 노인 특히, 후기 고령 인구가 어떠한 형태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가는 향후 돌봄 욕구의 크기와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들이 될 것이다.

제1절 노인 가구 변화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한국 19.3%, 일본 35.7%, 영국 28.5%로 세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7b). 그러나 2035년에는 한국 39.2%, 일본 40.8%, 영국 37.0%로 한국의 수준이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통계청, 2017b).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은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에 한국 27.2%, 일본 33.3%, 영국 30.3%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2035년에 1인 가구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34.6%로 영국보다 높고, 일본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표 5-1〉 국가별 1인 가구 비중, 노인 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영국	
	2015	2035	2015	2035	2015	2035
1인 가구 구성비	27.2	34.6	33.3	37.2	30.3	30.7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	19.3	39.2	35.7	40.8	28.5	37.0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p. 35, 〈표 3-18〉 재구성 인용.

노인(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2015년 120만 가구에서 2045년에는 372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의 65세 이상 1인 가구 수의 세 배가 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 가구는 2015년 122만 가구에서 2045년 310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친족 가구(부부 가구 제외)는 같은 기간에 123만 가구에서 370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부부 가구(3.1%), 전체 친족 가구(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5-2〉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 유형, 2015~2045

(단위: 만 가구, %)

구분		2015	2025	2035	2045	연평균 증가율 ³⁾
계		366.4	594.4	865.6	1,065.3	3.6
친 족 가 구	계	244.1	391.2	557.9	680.3	3.4
	부부	121.5	189.7	270.5	310.3	3.1
	부부+자녀	36.7	59.6	83.7	98.0	3.3
	부+자녀	5.0	9.3	14.2	17.1	4.1
	모+자녀	15.6	23.2	30.6	33.8	2.6
	3세대 이상 ¹⁾	23.3	28.1	33.7	35.6	1.4
	기타 ²⁾	42.0	81.4	125.2	185.5	5.0
1인 가구		120.3	199.0	300.3	371.9	3.8
비친족 가구		2.1	4.2	7.4	13.1	6.1

주: 1) 부부+미혼자녀+부(모), 3세대이상 기타

2) 가구주+형제자매(기타 친인척), 1세대 기타, 부부+부(모),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2세대 기타

3) 연평균 증가율=LN(2045년 가구 수/2015년 가구 수)/30*100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p. 35, 〈표 3-18〉 재구성 인용.

노인 1인 가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 노인 1인 가구는 2015년 29만 4000가구에서 2045년에 124만 4000가구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2015년 90만 9000가구에서 2045년에 247만 5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으로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남성 노인 1인 가구에 비해 약 3배 더 많았다. 2045년에는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남성 노인 1인 가구에 비해 약 2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204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4.8%로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부부 가구가 증가하며, 그로 인하여 과거에 빠르게 증가하였던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기 때문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반면, 남성 노인 1인 가구의 보다 빠른 증가세는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사별 등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3〉 성별 노인 1인 가구의 변동 전망, 2015~2045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5	2025	2035	2045	연평균 증가율
1인 가구	1,203	1,990	3,003	3,719	3.8
남성	294	585	976	1,244	4.8
여성	909	1,405	2,027	2,475	3.3

주: 연평균 증가율=LN(2045년 가구 수/2015년 가구 수)/30*100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p. 35, 〈표 3-18〉 재구성 인용.

노인 1인 가구의 연령을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고령층인 65~74세 1인 가구는 2015년 61만 6000가구에서 2045년 130만 9000가구로 연평균 2.5%씩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 고령층인 75~84세 1인 가구는 같은 기간에 47만 4000가구에서 173만 1000가구로 연평균 4.3%씩 증가할 전망이다. 후기 고령층인 85세 이상 1인 가구는 같은 기간에 11만 2000가구에서 67만 9000가구로 연평균 6.0%씩 증가할 전망이다. 즉, 인구 고령화에 따라 1인 가구도 빠르게 고령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전체 노인 1인 가구 중 전기 고령층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1.2%의 절반 수준에서 2045년에는 35.2%로 낮아지는 반면, 중기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39.4%에서 46.5%로 높아져 전기 고령층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후기 고

령층 1인 가구의 비중도 같은 기간에 9.3%에서 18.3%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표 5-4〉 연령별 노인 1인 가구의 변동 전망, 2015~2045

(단위: 천 가구, %)

	노인 1인 가구(천 가구)				구성비(%)			
	전체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전체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15	1,203	616	474	112	100.0	51.2	39.4	9.3
2020	1,555	731	634	191	100.0	47.0	40.8	12.3
2025	1,990	966	752	272	100.0	48.5	37.8	13.7
2030	2,489	1,199	940	350	100.0	48.2	37.8	14.1
2035	3,003	1,287	1,300	416	100.0	42.8	43.3	13.9
2040	3,459	1,334	1,612	513	100.0	38.6	46.6	14.8
2045	3,719	1,309	1,731	679	100.0	35.2	46.5	18.3
연평균 증가율	3.8	2.5	4.3	6.0				

주: 연평균 증가율=LN(2045년 가구 수/2015년 가구 수)/3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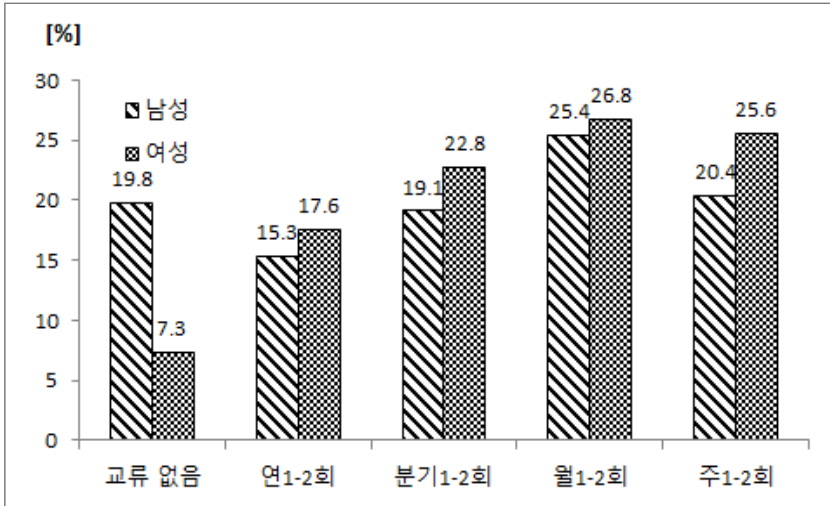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p. 35, 〈표 3-18〉 재구성 인용.

제2절 노인 1인 가구의 돌봄 욕구

1. 정서적 욕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16)의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과의 교류가 없는 경우가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7.3%로 나타났다으며, 남성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9.8%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의 교류 빈도를 보면, 연 1~2회가 남성 15.3%, 여성 17.6% 그리고 분기 1~2회가 남성 19.1%, 여성 22.8%로 나타나, 실제 교류의 정도는 아주 미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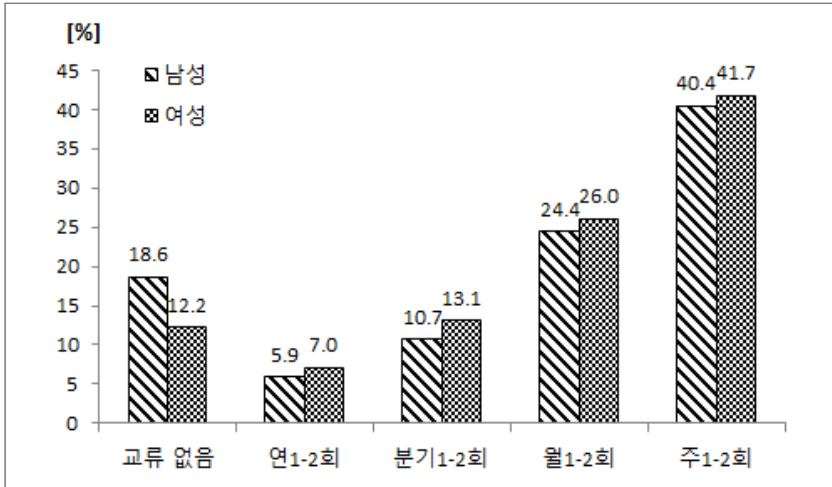
[그림 5-1] 노인 1인 가구의 가족과의 교류 빈도



자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적정 보호인구 추계. p. 29, <표 3-16>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16)의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로서 노인 1인 가구의 친구 혹은 이웃과의 교류 빈도를 보면, 남성의 경우 교류 없음이 18.6%로 비교적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12.2%로 나타났다. 여기에다가 교류 빈도가 적은 연 1~2회와 분기 1~2회를 포함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16.6%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20.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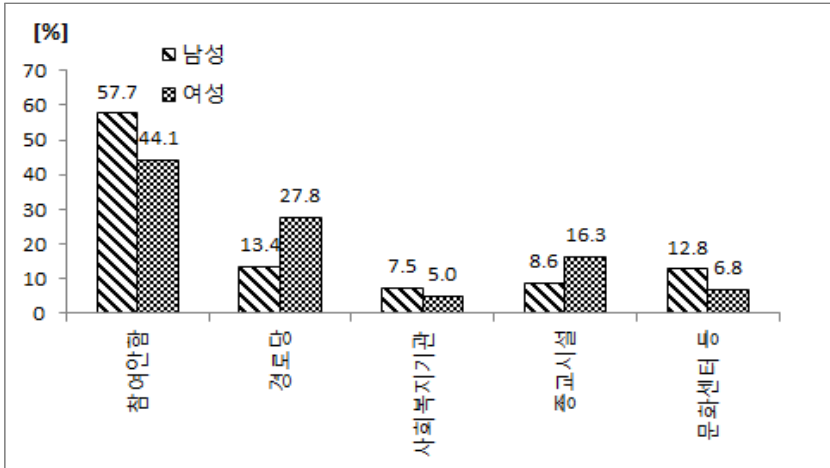
[그림 5-2] 노인 1인 가구의 이웃 및 친구와의 교류 빈도



자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적정 보호인구 추계. p. 30, <표 3-18>를 재구성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16)의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로서 노인 1인 가구의 사회단체 참여 현황을 보면, 남성의 경우 참여 안 함이 57.7%로 아주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도 44.1%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참여 정도가 높은 경로당과 종교 시설만 보아도, 여성의 경우 각각 27.8%, 16.3%, 남성의 경우 각각 13.4%, 8.6%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 1인 가구는 가족뿐만 아니라 단체 참여 및 이웃/친구와의 교류가 적고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3] 노인 1인 가구의 사회단체 참여 실태



자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걱정 보호인구 추계. p. 26, <표 3-12>를 재구성함.

실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16)의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⁶⁾ 1인 가구를 구성하는 노인 중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은 여성 노인 51.7%, 남성 노인 44.3%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은 65~69세 39.5%, 70~74세 45.4%, 75~79세 52.0%, 80~84세 57.2%, 85세 이상 60.8% 등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 신체적(건강) 욕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16)의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 1인 가구 중 신체 질환⁷⁾이 없는 경우는 8.9%에 불과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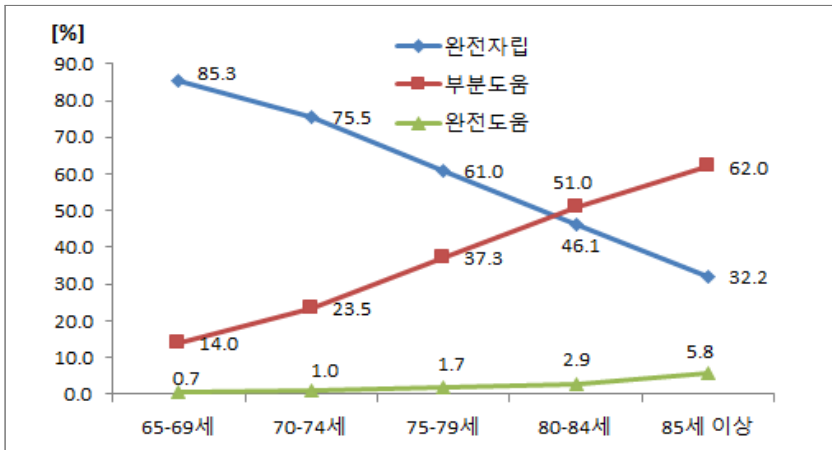
6) “노인우울척도(GDS-5)의 5개 문항 중 지난 2주 이내 2가지 이상의 항목을 경험한 경우에 우울(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p. 40).

7) 악성신생물(암)부터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골절, 이석증에 이르기까지 11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임.

나타났다. 질환 보유 수별로는 1가지 질환 20.8%, 2가지 질환 25.3%, 3가지 질환 19.4%, 4가지 질환 11.3%, 그리고 5가지 이상의 질환 14.4%로 2가지 이상 중복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10명 중 7명으로 매우 높았다.

노인 1인 가구의 자립 생활 정도를 거동 상태로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41.2%(완전도움 필요 2.2% 포함), 남성의 경우 21.9%(완전도움 필요 1.5%)로 각각 나타났다. 노인 1인 가구의 연령별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65~69세 14.7%(완전도움 필요 0.7%), 70~74세 24.5%(완전도움 필요 1.0%), 75~79세 39.0%(완전도움 필요 1.7%), 80~84세 53.9%(완전도움 필요 2.9%), 85세 이상 67.8%(완전도움 필요 5.8%) 등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 연령별 거동 상태



자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적정 보호인구 추계. p. 37, <표 3-31>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3. 노인 1인 가구의 돌봄 수요 전망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적정 보호인구 추계’에서 권중돈은 2016년 독거노인 현황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의 독거노인 중 적정 보호 인구를 추계하였다.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5개의 변인은 사회 활동 참여(참여, 미참여), 사회관계 정도(관계 유지, 관계 단절), 경제적 문제(일반 노인, 저소득 노인, 빈곤 노인), 중증 중복 질환(없음, 있음), 일상생활 동작 능력(ADL)(완전 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이 해당된다. 이들 변인의 각 범주들을 교차시켜 총 72가지의 가능성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들을 5개의 집단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위기 집단’은 사회적 소외, 빈곤 또는 저소득, 주거 등의 열악한 생활 여건, 중증 중복 질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제한, 사회 활동의 미참여 등 모두에 해당하여 생활상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긴급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노인 1인 가구이다. ‘취약집단’은 위 6가지 문제들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문제로 인하여 독립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인 1인 가구이다. ‘관심필요집단’은 위 6가지 문제들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문제로 인하여 독립적 생활에 다소의 어려움이 초래된 노인 1인 가구이다. ‘안전생활집단’은 경제 문제로 인한 생활 제약 등의 문제가 적고, 중증 중복 질환이 없거나 있어도 일상생활의 독자적 영위가 가능하거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는 맺지 않더라도 건강과 일상생활 동작 능력, 경제생활에 문제가 없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 1인 가구이다. ‘자립생활집단’은 위 범주들 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노인 1인 가구를 의미한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p. 52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상기 분류 방식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산출한 5개 집단별 구성 비율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통계청의 가구추계 결과에 적용하였다. 추계 결과, 위기집단은 2025년 10만 3000가구(이하 ‘노인 1인 가구’를 의미)에서 2045년 19만 2000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취약집단은 같은 기간에 13만 9000가구에서 26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심필요집단은 같은 기간에 66만 6000가구에서 124만 5000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공식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집단과 관심필요집단은 합하여 2045년에 169만 6000가구로 2017년의 68만 9000가구에 비해 약 2.5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안전생활집단은 2025년 82만 9000가구에서 2045년 154만 9000가구로 약 70만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자립생활집단 또한 같은 기간에 25만 4000가구에서 47만 4000가구로 약 22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5-5〉 공식 및 비공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1인 가구 규모 추계

(단위: %, 천 가구)

보호 구분		집단 구분	2016년 구성 비율	노인 1인 가구		
			집단 %	2025	2035	2045
공식적 보호	긴급	위기집단	5.16	103	155	192
	우선	취약집단	6.98	139	210	260
	적정	관심필요집단	33.47	666	1,005	1,245
비공식적 보호		안전생활집단	41.65	829	1,251	1,549
		자립생활집단	12.74	254	383	474
계			100.00	1,990	3,003	3,719

주: 2016년 구성 비율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16)의 결과이며, 노인 1인 가구는 통계청(2017b)의 장래가구추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계함.

이와 같이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돌봄 형태 변화가 필

요하고, 더 나아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의 돌봄 비용 투입 증가가 요구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이 노후 준비에 힘쓸 여력이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공식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집단, 취약 집단 및 관심필요집단은 이 연구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돌봄 체계와 제도로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돌봄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3절 노인 1인 가구 증가 대비 돌봄 서비스 공급 방안

1. 성별 접근

남성 노인 1인 가구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여성 노인 1인 가구보다 가족 간의 교류와 이웃 혹은 친구와의 교류가 적으며, 사회단체에의 참여도도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와 이웃, 친구 관계에서도 고립되고 소외된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가족 및 사회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로 살게 될 때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염지혜, 2016a). 남성 노인 1인 가구가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막 사별이나 황혼이혼으로 혼자 살게 된 남성 노인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홀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들을 발굴하여 복지관 및 지자체에 연계된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그 결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리 교실, 텃밭 교실 등의 지원 및 사회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 지원과 생활 능력 향상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다.

남성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개인의 울타리에서 사회로 나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노(老老)케어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미한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노노케어를 통해 우울감이나 고독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 노인 1인 가구에는 동성인 남성 노인 1인 가구 출신의 노노케어 제공자가 배치된다면 낯선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노노케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노노케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취사, 청소 등과 같은 부분에서 독립적인 경향이 있다. 오히려 이제 막 1인 가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여성 노인의 경우 사별이나 황혼이혼 등으로 인한 상실감의 무게가 매우 크다. 이들에게는 심리적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한 데 상담 프로그램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혼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남성 노인과 달리 자녀와의 교류도 활발하고 경로당과 종교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에게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로당이든 종교 시설이든 혹은 삼삼오오 모이는 다른 사적 단체이든, 이들은 모일 수 있는 기회와 공간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려 할 것이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낙상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단기 가사 돌봄을 요구한다든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요청한다든지,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든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이다. 따라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성별을 떠나서 무연고 노인 1인 가구의 경우는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 무연고 노인일 경우 남녀 모두에게서 우울감이 높고 고독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전담 돌보미가 필요하다. 지역의 봉사자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돌봄 커뮤니티를 구성해 무연고 노인의 안부를 묻고, 이들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져 시스템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로봇을 이용한 돌봄이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최경도 혹은 경도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자신이 살아온 주택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 로봇을 이용한 돌봄을 제공받을 날이 머지않았다. 신체 활동을 돕고, 화장실 이용, 옷 입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도농별 접근

도시의 경우 세대가 공존하는 돌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건물 내에 1층은 어린이집과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독거 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3층은 방과 후 학교, 4층은 북 카페나 인터넷 카페 등과 같이 한 시설 내 여가 생활과 거주, 그리고 다른 세대와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커뮤니티 안에 의료 시설도 갖추게 된다면, 건강과 돌봄 서비스가 원스톱(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도시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산어촌의 경우 사별 시 심리적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 치료가 필요한데 이동이 어려우므로 찾아가는 방문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24시간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이동 서비스의 경우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리적 특색에 따라 서비스가 특화되어야 하는데, 도시의 경우 공식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집단, 위기집단, 관심필요집단에 대해 긴급히 이동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경우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대부분이라 모든 독거노인에게 주기적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해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는 적어 독자적인 행정 체계를 갖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다면 여러 권역을 묶어 중심에 하나의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그 안에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시키는 방법이 노인 1인 가구에 돌봄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단순히 기존의 인력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장

가구 변화와 소득 불균등도

제1절 배경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제3절 실증 분석

제4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 불균등도 전망

제5절 소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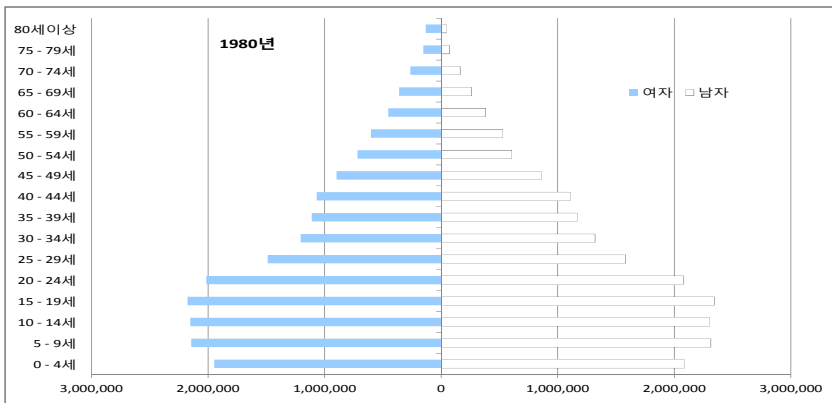
가구 변화와 소득 불균등도 <<

제1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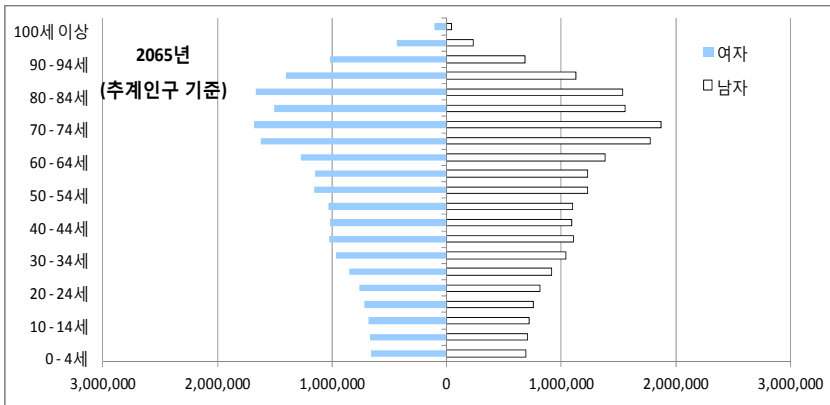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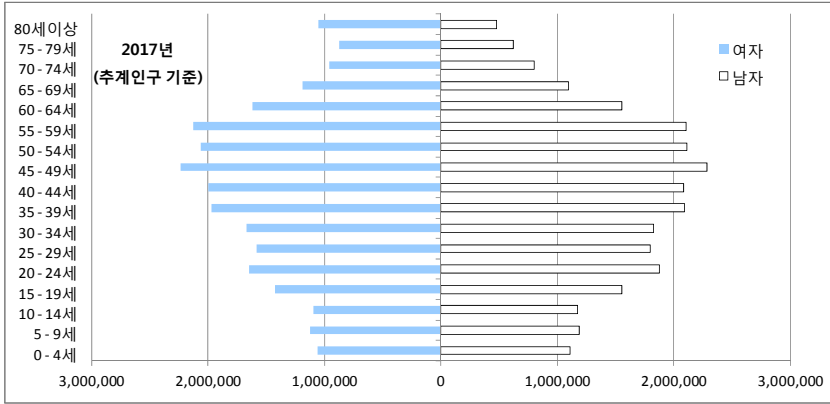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가구 구성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가구 소득 분배 구조 간의 상관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인구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과거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최근에는 청·중년층의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형 구조로 이행하고 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더욱 진전된 2065년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역삼각형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는 가구 분포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삼각형 구조에서 다이아몬드 구조를 거쳐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1] 추계인구 기준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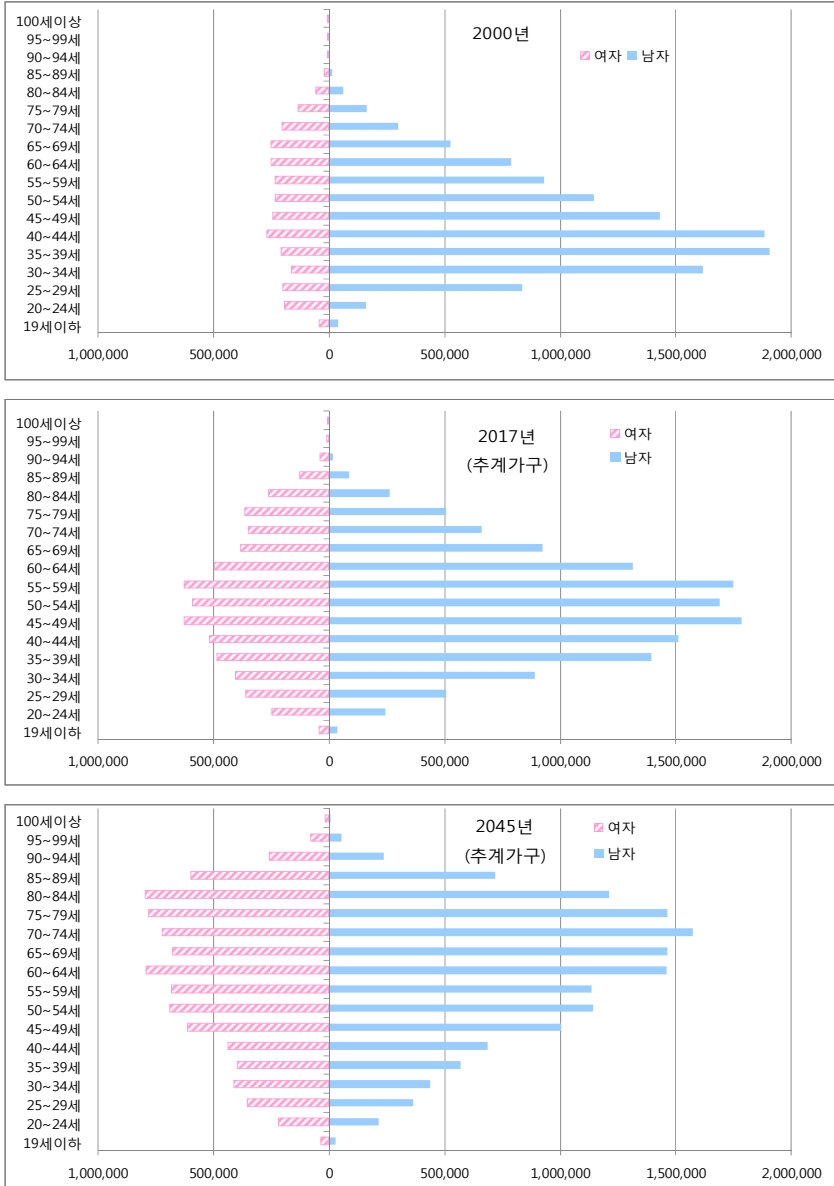
15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주: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그림 6-2]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추계가구

(단위: 가구)



주: 통계청 추계가구를 기준으로 작성.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단순히 연령별 인구 비중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활동연령인구와 노동시장 은퇴기 연령층의 인구 비중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관점에서 소득 계층의 구성 분포와 소득 분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노인 인구가 적었다. 성장기의 청소년 및 유아기 인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구가 16~64세의 경제활동연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명재(2015)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최근에는 노인 가구가 저소득층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 연령대는 생애 주기상 주로 은퇴기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노인 가구(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다. 노인 가구의 경우 상당수가 은퇴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이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은퇴 노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 결과로서 저소득층으로 귀속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노인 가구 비율을 상승시키고, 노인 가구 비율의 상승은 은퇴 가구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은퇴 가구의 증가는 곧 시장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가구가 양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은퇴 가구가 저소득층의 주류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면 노동시장의 연령별 노동 공급 체계의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 인구 고령화가 덜 진전된 경우에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노동 공급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그들의 시장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충분히 진전되면 젊은 노동력의 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이는 곧 노인들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연령별 노동 수급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연령대별 노동 공급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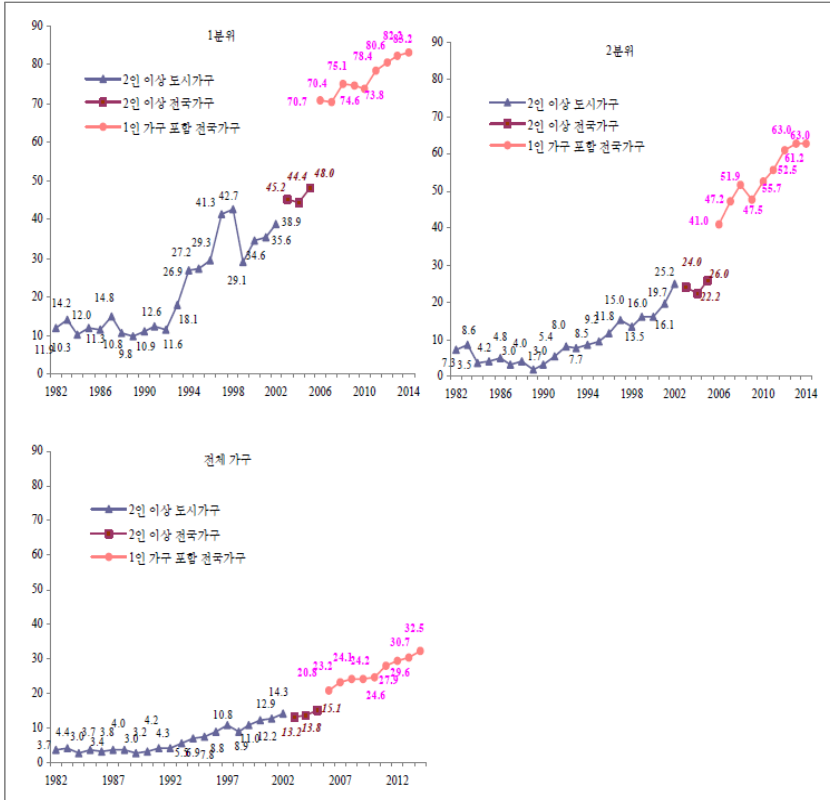
요약하면, 인구 고령화는 은퇴 가구 비중을 증가시켜 시장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중을 상승시킴으로써 상대 소득 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는 위에서 설명한 대체 효과가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기 이전 상태보다 노인 가구의 (실질)시장소득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소득 격차를 축소시키는 반대의 효과도 함께 지닌다.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가 시장소득 분배 구조에 미치는 최종적인 효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어떤지에 의존한다. 전자의 절대 크기가 후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시장소득 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시장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인 가구가 저소득층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은 최근 시점에 가까울수록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3]에서 보듯이, 성명재(2016)는 성명재(2015)의 연구 결과를 2014년 시한까지 연장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저소득 분위에서 노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근과 같이 인구 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성명재(2016, p. 22-23 참조)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림 6-3]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추정치.
 원자료: 성명재, (2015).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의 [그림 2]와 [그림 3]을 발췌, 재인용.
 자료: 성명재, (2016).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와 [그림 4] 인용.

이상에서 보았듯이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은퇴 노인 가구 수와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저소득층의 주류 가구를 형성하면서 소득 계층별 소득 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노인 가구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은퇴 가구의 노동시장 복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어렵다. 노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는 최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시장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점은 다분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구 고령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소득 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인구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연령인구 비중을 감소시킨다.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이 낮아지는 은퇴 가구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최저소득층의 주류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득 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빠르게 증대된다. 만약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소득 불균등도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으로는 소기의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소득 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장차 인구 고령화 추세가 계속 진전되는 경우 소득 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분석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 정부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가 가구 소득 불균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 기간은 1982년부터 2014년까지의 33개 연도다. 이 기간의 원시 자료를 연간화한 자료를 기준으로 시장소득 또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불균등도를 측정한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2002년까지 2인 이상 도시 지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이후 단계적으로 자료 포괄 대상 지역과

가구 유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3~2005년에는 읍·면 지역까지 지리적인 자료 포괄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는 1인 단독 가구도 자료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별로 자료의 지역 및 가구 유형별 포괄 범위의 차이를 무시하고 전 기간에 걸쳐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논의한다. 다만 분석 대상 기간별로 자료의 포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자료 포괄 범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기간별 더미를 추가하여 사용한다.⁸⁾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기술 통계는 <표 6-1>과 같다.

8) 분석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전 기간을 통틀어 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인 이상 도시 지역 거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2인 이상의 가구라는 가구 특성이 고정적인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나 지역 간 균형-불균형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집단 자체의 포괄 범위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도시 가구로 분석 대상을 국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집단이 시계열적으로 서로 동일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제기 변동 등에 따라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종사상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 도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반적인 추세(trend)와 다른 비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t 기와 $t+1$ 기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정 범위를 넘어 크게 나타난다면, 2인 이상 도시 가구라는 점에서는 마치 두 기간 사이에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 연이은 두 기간에 2인 이상 도시 가구가 서로 다른 가구 집단을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6-1〉 가계동향조사 자료 주요 기술 통계(2014년 기준)

(단위: 세, 명, 천 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가구주 연령	52.34	14.03	95	17
가구원 수	2.75	1.26	8	1
취업인 수	1.25	0.88	6	0
시장소득	43,305	31,490	300,868	0
총소득	48,088	30,254	300,354	0
가처분소득	43,858	25,996	289,418	-6,210
소비지출	26,534	16,896	213,639	925
소득세	1,775	3,358	55,607	0
재산세	204	376	5,686	0
사회보장기여금	2,432	2,411	43,561	0
민간이전소득	2,421	8,025	104,824	0
공적이전소득	2,362	6,312	86,653	0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공하여 산출.

자료: 성명재. (2017).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의 〈표 1〉을 발췌, 인용.

2. 분석 방법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출산)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집약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집약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구 소득 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전망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크게 회귀분석 방법, 미시모의실험 방법, 소득 불균등도(지니계수)의 분해 방법의 3가지이다. 회귀분석과 모의실험 방법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소득 불균등도(지니계수)를 전망할 때에도 함께 사용된다. 소득 불균등도의 그룹별 분해 방법은 인구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소득 불균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연령그룹 간 경쟁·대체 등에 의한 결과인지 또는 연령그룹 내의 구조 변화에 의한 것인

지 등의 여부를 상대적 비중 크기의 비율로 구분하여 보여 준다. 소득 불균등도 변화의 원천을 살펴볼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첫째, 회귀분석 방법이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피회귀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시장소득 분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변수(회귀변수)로 주요 연령대별 인구가구 비중(주로 노인 가구인구, 또는 경제활동연령인구가구 등), 1인당 실질 GDP 등을 설정한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지역적 포괄 범위와 가구 규모별 포괄 범위가 기간별로 차이가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자료 축적기간별 더미를 함께 사용한다.⁹⁾

본 장에서 회귀분석의 기본 목적은 향후 시점에서 인구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는 경우 그로 인해 예상되는 소득 불균등도의 변화, 즉 가구 소득 분포 구조의 변화를 예측·전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정요인(determinants)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회귀분석과, 미래 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예측·전망을 위해 수행하는 회귀분석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종속변수(또는 피회귀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요인별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수(parameter)값에 대한 일치추정치(consistent estimates)를 추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회귀방정식의 모수값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식별(identification) 여부와 일치추정 가능성에 대한 것이 회귀분석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주된 목적이 모형의 설명력이 아니라 예측·전망에 있는 경우라면 굳이 결정요인을 직접적인 매개체로 사용하지

9)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1982~2002년의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2003~2005년에는 읍면 단위로 자료의 지역적 포괄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는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않더라도 예측전망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이라고 한다. Goldberger(1991)에 의하면 구조방정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일명 장회귀(long regression)라고 한다. 반면에 구조식의 설명변수 중 일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단회귀(short regression)라고 한다. 구조방정식을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장회귀(long regression)를 하여야 하며, 단회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설명변수의 계수추정치가 본래 설명변수 자신의 계수와 다른 계수를 추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Goldberger(1991)는 단회귀의 모수추정치가 불일치추정치(inconsistent estimates)임을 지적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구조식에 대한 추정이 목적이 아니라 예측전망에 연구 목적이 있다면 비록 단회귀의 경우더라도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일치추정치를 획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미래 전망치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무리 결정요인 분석이 정치하더라도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전망치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설명변수의 예측치를 회귀방정식에 대입할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정요인보다 다소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지더라도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치를 구하기 용이하다면 전망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할 수 있다. 단, 해당 변수가 본래의 결정요인과 직교(orthogonal)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비록 추정 결과의 효율성(efficiency)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종속변수에 대한 일치예측치·전망치(consistent forecasts)를 획득하는 데에는

10) 장회귀, 단회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Goldberger(1991)의 제17장 제2절(Section 17.2)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예를 들면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할 경우, 본 절에서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 구조 요소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업종별·직종별 임금률·취업률·평균 노동 시간, 부문별 수출입 실적, 재고 증감, 가족 상호 간 가상 소득(virtual income)이나 자산 소득 분포 등이 결정요인으로서 보다 적합하다. 물론 이런 변수들은 지니계수를 결정하는 데 매우 긴요한 변수이지만, 해당 변수의 값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미래 시점에 대한 이들 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노인 인구·가구 비율, 1인당 실질 GDP 등은 통상적으로 쉽게 과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시점의 예측치·전망치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상세한 설명변수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미래 시점의 예측치·전망치 획득이 쉬운 인구·가구 정보 등만으로도 충분히 일치예측치·전망치(consistent forecasts)를 획득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상기의 결정요인을 설명변수에서 제외시키고 노인 가구 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노인 가구 비중의 계수는 본래 노인 가구 비중의 계수값이 아닌 다른 값, 보다 정확히는 (본래의 노인 가구 비중에 대한 계수값 + 추가항)의 형태로 회귀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 추가항은 설명변수에서 제외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노인 가구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는 또 다른 회귀방정식의 노인 가구 비중의 계수값에, 결정요인으로서 설명변수에서 제외된 해당 변수가 지니계수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의 참계수값의 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결정요인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노인 가구 비중의 계수 추정치 값은 노인 가구 비중의 계수값에 대한 일치추정량은 아니지만, 종속변수인 지니계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일치성이 유지된다. 물론 설명변수에서 제외된 결정요인들을

모두 설명변수에 포함시킨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보다 추정 결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추정 결과의 일치성은 그대로 보존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효율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 가구 비중 등만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도 일치성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의실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득 불균등도(예: 지니계수)를 추정할 때 사용한 미시서베이 자료(여기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지칭)를 가공하여 미래 시점의 상대 소득 불균등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명재, 박기백(2009)이 채택하였듯이 현재 시점의 자료(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가구주 연령대별 표본 가구의 가중치 값의 합이 미래 시점의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중과 일치하도록 표본 자료의 가중치 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표본가중치를 조정한 상태에서 소득 불균등도를 추정하고 가중치 변화에 따른 소득 불균등도의 변화를 전망해 보는 실험적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구 고령화에 의한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중에 대한 예측치 또는 변화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방법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계산이 매우 용이하고 간단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비단 연령대별 가구 비중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동일 연령대 내의 상대 소득 분포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효과는 앞서 설명한 대체 효과와, 동일 연령 집단 내 (실질)소득 수준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까지 개발된 경제 이론이나 경제 분석 모형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석에 필수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와 이론·실증 연구, 분석 모형이 부족부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기 효과를 포함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다.

셋째, 소득 불균등도 분해 방법(decomposition method for inequality indexes)이다. 본 절에서는 지니계수를 분해 대상 지수로 사용한다.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구성비의 변화와 함께, 각 연령대별 상대 소득 분포 구조(즉, 소득 불균등도)의 변화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가구 유형별(여기서는 가구주 연령대를 기준으로 그룹을 분할(partition))로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분해한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여 비교함으로써 지니계수를 구성하는 각 요소별 비중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인구 고령화가 소득 불균등도에 미친 영향을 요소별로 분해하여 살펴볼 수 있다.

소득 불균등도의 분해(decomposition)는 크게 소득 구성 요소별(by income components) 또는 그룹별(by subgroups) 분해로 구별된다. 전자는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종류별로 소득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 구성 요소별로 분리하여 각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Shorrocks 분해(Shorrocks, 1982), Lerman & Yitzhaki 분해(Lerman & Yitzhaki, 1985) 등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Pyatt 분해(Pyatt, 1976), Yitzhaki 분해(Yitzhaki & Lerman, 1991) 등이 대표적이다.¹¹⁾

소득 불균등도의 분해 방법에 대해서는 성명재(2009)의 제II장에 잘 요약설명되어 있다. 그는 그룹별 지니계수 분해 방법으로 Pyatt 분해와 Yitzhaki 분해 방법, 그리고 소득 구성 요소별 분해 방법으로는 Shorrocks 분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11) 지니계수를 비롯한 소득 불균등도의 기타 다양한 분해 방법에 대해서는 Shorrocks(1984), Silber(1989), Podder(1994), Yitzhaki(199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begin{aligned} \bullet \text{ Pyatt 분해: Gini} &= \sum_{i=1}^N G_i p_i \pi_i + \sum_{i=1}^N \sum_{j>i}^N \left(\frac{y_j - y_i}{y_i} \right) \pi_i p_j + L \\ &= \sum_{i=1}^N G_i p_i \pi_i + \frac{1}{\mu} \sum_{i=1}^N \sum_{j>i}^N (y_j - y_i) \pi_i p_j + L \end{aligned}$$

단, G_i : i 번째 그룹의 지니
 p_i : i 번째 그룹의 비중
 π_i : i 번째 그룹의 소득점유비
 Y_i : i 번째 그룹의 평균 소득
 μ : 전체 소득 평균
 L : 중복도(overlapping)

$$\bullet \text{ Yitzhaki 분해: Gini} = \sum_{i=1}^N G_i \pi_i + \frac{2 \text{Cov}(\bar{y}, \bar{F})}{\mu} + \sum_{i=1}^N \pi_i G_i Q_i (p_i - 1)$$

$$\text{단, } Q_i = \frac{\text{Cov}_i\{(F_i - F_{ni}), y\}}{\text{Cov}_i(F_i, y)}$$

F_i : i 번째 그룹에 속한 소득자의 i 번째 그룹 내에서의 소득위계수
 F_{ni} : i 번째 그룹에 속한 소득자가 전체 표본에서 점유하는 소득위계수
 \bar{Y} : 그룹별 평균 소득
 \bar{F} : 평균 소득위계수
 $\text{Cov}(\bar{Y}, \bar{F})$: 그룹별 소득 평균과 평균 소득위계수의 공분산

● Shorrocks 분해: k -번째 소득 구성 항목(y_k)의 소득 불균등 기여도 = s_k

$$\text{단, } Y = \sum_{k=1}^N y_k: \text{총소득}$$

$$s_k \equiv \frac{S_k}{\text{Var}(Y)}$$

$$\text{Var}(Y) = \sum_{k=1}^N \text{Var}(y_k) + \sum_{k=1}^N \sum_{j \neq k}^N \text{Cov}(y_k, y_j)$$

$$S_k \equiv \text{Var}(y_k) + \sum_{i \neq k} \text{Cov}(y_k, y_i).$$

위의 Yitzhaki 분해에서 지니계수는 3가지 요소, 즉 그룹 간 지니 (between-group Gini coefficient), 그룹내지니(within-group Gini coefficient), 계층화도(degree of stratification)로 구성·분해된다.

그룹 간 지니는 가구주 연령대별 상대 소득 격차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가 연령대별 평균 소득의 상대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룹내지니는 각 연령대 내부의 상대 소득 격차의 변화를 나타낸다. 인구 고령화가 각 연령대별 경쟁을 통한 평균 소득의 상대적 차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시에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소득 분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그런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그룹내지니는 해당 사항을 각 연령대별로 추론하고, 연령대별 가중치의 변화를 거쳐 가중평균값의 변화를 포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계층화도는 그룹 간 지니와 그룹내지니의 두 요소가 서로 겹치는 형태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기의 두 가지 요소가 얼마나 층(stratum)을 형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나머지(residual)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계층화도는 불분명한 부분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Shorrocks 분해는 기본적으로 각 소득 구성 항목별 분산 비율(보다 정확한 총소득과의 공분산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¹²⁾

12) Shorrocks 분해는 소득 요소별 분해 방법(Shorrocks, 1982)과 그룹별 분해 방법(Shorrocks, 1984)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존재한다. 이 가운데 여기서는 후자를 지칭한다.

제3절 실증 분석

본 절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소득 계층별 시장소득 분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가구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시장소득 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정·분석하고, 회귀분석, 요인 분해, 미시모의실험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의 영향 분석을 시행한다. 그럼으로써 인구 고령화의 진전이 상대 소득 분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의 모습과 패턴을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가 장래 시점의 소득 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전망하기 위해 기초 분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1. 인구 고령화와 시장소득 분포의 변화

가.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분포 구조 영향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시장소득 분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득 1분위는 점차 노동시장 영향, 즉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분위의 시장소득은 경기 변동과의 연계성이 낮아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은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과 거리가 먼 은퇴 가구가 1분위 가구의 대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은 2006년 3429만 9000원에서 2010년 3747만 1000원, 2014년 4304만 6000원으로 2006~2014년 동안 25.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소득 1분위의 평균 시장소득은 593만 8000원에서 553만 7000원(2010년)으로 감소하였다가 642만

5000원(2014년)으로 상승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하였다. 2006~2014년 동안 1분위 시장소득은 8.2%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의 증가율 평균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2006~2011년 동안 1분위 시장소득이 거의 정체되었다(이상 표 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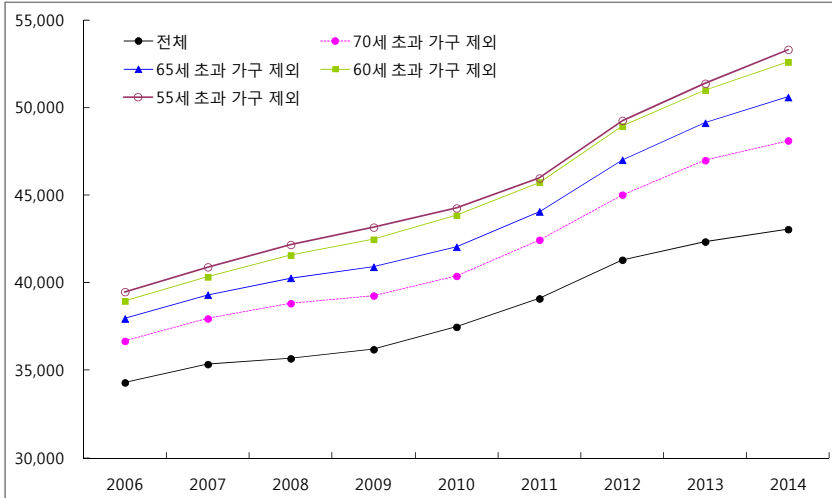
이런 상황은 [그림 6-4]와 [그림 6-5]에서 잘 대비된다.

[그림 6-4]는 2006~2014년 기간 동안 가구당 시장소득 평균값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전체 가구 대상의 가구당 시장소득 평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 수준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평균값이 더 높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 가구의 범위를 넓힐수록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이 증장년층을 넘어 은퇴 연령기를 지나면서 더욱 높아질수록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평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노인 가구를 포괄적으로 더 많이 제외할수록 나머지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값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6-4]를 보면 2012년 이후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방향으로 시장소득 곡선의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졌다. 그렇지만 노인 가구를 제외시킬 경우 동 곡선의 기울기는 조금 더 커졌다. 인구 고령화의 진전이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비록 왕성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젊은 연령층의 소득 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더라도, 인구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은퇴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지기 때문에는 가중평균한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완만하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6-4]가 바로 그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림 6-4]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의 변천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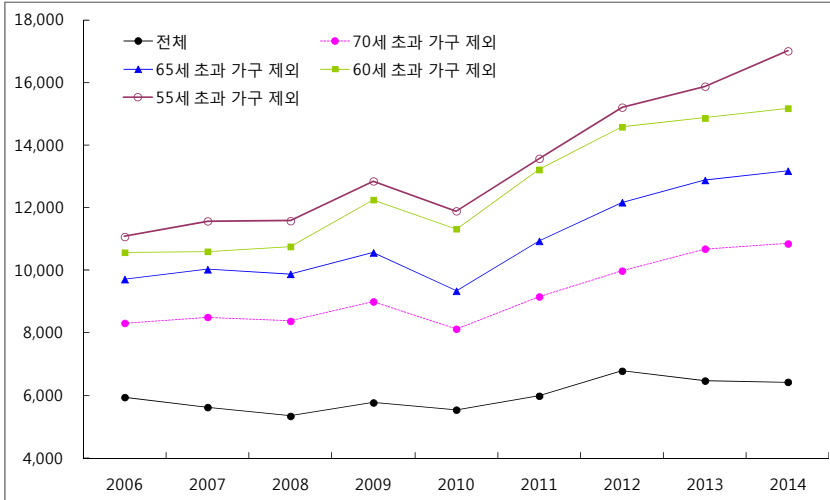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그림 6-5]는 소득 1분위(즉, 최하위 소득 10% 계층)의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 추이를 보여 준다. 가장 아랫부분에 그려진 곡선이 1분위 전체의 시장소득 평균 추이이다. 시간이 경과하여도 평균값의 변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분위의 경우 은퇴 노인 가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1분위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소득을 획득하는 가구가 절대적으로 그 수가 작기 때문이다. 노인 가구를 제외하고 취업 연령대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소득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최저 소득층(예: 1분위)의 시장소득 흐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5] 소득 1분위 계층의 시장소득 변천(가구 평균 기준)

(단위: 천 원)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저자 추정치.

[표 6-2] 소득 계층별 시장소득 분포

(단위: 천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82	1,460	2,032	2,394	2,788	3,139	3,513	4,036	4,772	5,787	8,911	3,883
1983	1,591	2,214	2,627	3,078	3,472	3,892	4,471	5,260	6,384	9,576	4,257
1984	1,757	2,484	3,022	3,403	3,894	4,416	4,945	5,783	7,108	10,572	4,739
1985	1,925	2,677	3,216	3,643	4,034	4,522	5,145	5,929	7,182	11,082	4,935
1986	2,118	3,046	3,650	4,114	4,638	5,287	5,944	6,910	8,446	12,411	5,657
1987	2,525	3,510	4,130	4,801	5,396	6,064	6,906	8,109	9,873	14,971	6,628
1988	3,034	4,312	5,146	5,853	6,541	7,351	8,415	9,608	11,617	17,517	7,938
1989	3,717	5,285	6,242	7,099	7,918	8,878	10,049	11,541	14,018	21,382	9,613
1990	4,742	6,500	7,646	8,711	9,656	10,846	12,066	13,730	16,592	24,008	11,448
1991	5,828	8,089	9,327	10,722	11,998	13,411	14,819	16,873	19,868	27,574	13,850
1992	6,758	9,471	11,114	12,593	14,066	15,539	17,332	19,403	23,021	31,888	16,119
1993	7,203	10,254	12,035	13,543	15,277	16,809	18,768	20,954	24,349	35,624	17,48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4	8,085	11,577	13,589	15,438	17,091	19,143	21,595	24,561	28,612	38,946	19,866
1995	9,067	13,085	15,415	17,402	19,774	21,965	24,586	28,041	32,549	44,569	22,644
1996	9,949	14,431	17,000	19,568	22,028	24,788	27,520	31,229	36,399	50,346	25,328
1997	6,695	12,997	16,759	19,703	22,556	25,335	28,562	32,587	38,498	54,196	25,789
1998	4,941	9,675	13,413	16,534	19,342	22,280	25,431	29,323	34,881	50,811	22,663
1999	9,196	13,486	16,288	18,663	21,501	24,131	27,426	31,728	37,399	53,045	25,287
2000	9,983	14,731	17,747	20,825	23,867	27,057	30,648	35,412	42,467	62,936	28,570
2001	11,079	15,724	18,984	21,820	24,934	28,110	32,030	37,215	44,564	64,189	29,865
2002	11,046	16,289	19,926	23,300	26,738	30,417	34,755	40,185	48,253	69,888	32,081
2003	9,417	15,957	20,268	24,555	28,540	32,557	36,758	43,241	50,263	74,546	33,611
2004	9,573	16,499	21,133	25,763	29,787	34,673	39,464	45,728	54,486	80,561	35,768
2005	9,499	16,158	21,823	26,287	30,595	35,396	40,614	47,399	57,242	84,293	36,933
2006	5,938	11,905	17,040	21,937	27,696	33,175	39,296	46,600	55,675	83,729	34,299
2007	5,620	11,935	17,618	23,077	28,224	34,251	39,924	47,518	58,111	87,114	35,345
2008	5,336	10,976	17,269	23,022	28,425	33,679	40,409	48,296	59,368	89,950	35,671
2009	5,767	12,586	17,788	23,730	29,643	35,004	41,464	48,894	59,033	88,026	36,191
2010	5,537	12,062	18,570	24,179	30,623	35,685	43,370	51,097	62,097	91,516	37,471
2011	5,981	13,183	19,076	25,332	31,705	37,383	44,785	53,513	65,191	94,831	39,093
2012	6,779	13,359	20,536	27,251	33,087	40,401	47,079	55,044	67,831	101,632	41,300
2013	6,466	13,256	20,837	28,887	34,611	40,771	48,396	58,105	70,010	102,011	42,340
2014	6,425	13,526	20,948	28,186	34,946	40,503	49,322	58,353	71,975	106,312	43,046

주: 1) 1982~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공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 도시 거주 2인 이상 가구 대상.

2003~2005년: 전국 단위 2인 이상 가구 대상.

2006년~최근: 전국 단위 1인 가구 포함.

나. 시장소득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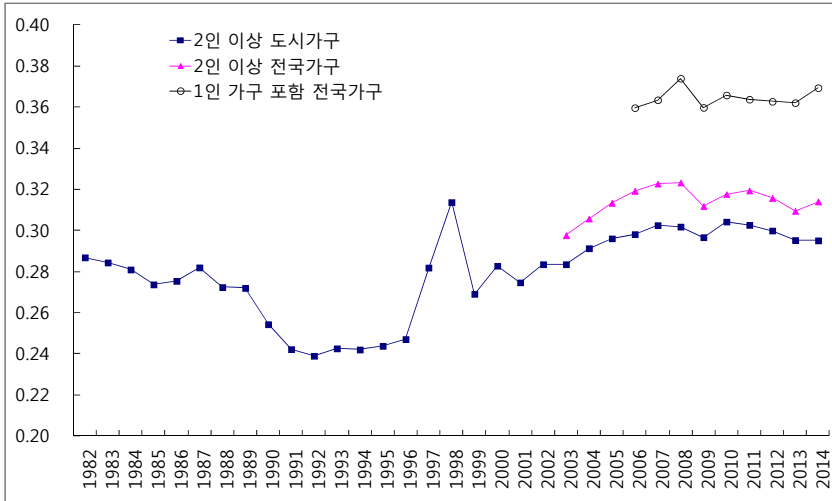
1982~2014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추정·분석한 결과, 가구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는 완만한 U-자형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그림 6-6). 1997년과 1998년은 외환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

로 가구 소득 분배 격차가 잠정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이다. 이 두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지니계수의 등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완만하게 지니계수 값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최근까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니계수의 상승 추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횡보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매우 미약하지만, 2인 이상 가구만으로 한정할 때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지니계수의 변화 방향이 상반된다. 상반된 모습은 단순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단독 가구(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가구 중에서 한계 가구가 해체·분리되면서 2개 이상의 저소득빈곤 가구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은 성명재(2016, p. 20, 제Ⅲ장 제1절 나항)가 잘 지적하고 있다. 상기의 2가지 가능성 가운데 전자의 경우에는 패널 자료 분석이나 반복 횡단면 자료 분석(repeated cross-sectional analysis)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분석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계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해체·분리를 경험하는 한계 가구들은 대체로 해체·분리 이후에 패널 자료에서 이탈(attrition)하면서 자료 단절(truncatio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6]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자료: 성명재. (2016).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에의 [그림 2] 중 일부를 발췌, 인용.

다. 소득 요소별 소득 불균등도 기여도 분석

가구 소득은 여러 가지 원천을 지닌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가구 소득의 불균등도는 각 소득 구성 요소의 분배 구조(불균등도)와 소득 요소별 점유 비중(또는 가중치)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소득세후 소득”으로 지칭)을 기준으로 할 때, 각종 소득 요소의 분포 구조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합산한 다음 소득세를 차감한 경우의 소득세후 소득의 불균등도에 이바지하는 각 소득 요소별 불균등 기여도가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다. <표 6-3>은 소득세후 소득의 소득 불균등도를 100이라고 표준화(standardization)하였을 때, 각 요소별 불균등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Shorrocks(1982)의 소득 요소별 불

균등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에서 보듯이 소득세후 소득의 불균등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두 요소의 불균등 기여도의 합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들 두 요소의 소득세후 소득에 대한 점유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불균등 기여도는 1990년대~2000년대 중반까지 대략 전체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상기 비중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 포괄 대상 범위가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1인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인 가구의 대다수는 노인·은퇴 가구이다. 노인·은퇴 가구의 시장소득은 상당히 낮다. 특히 그중에서도 근로소득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은퇴·노인 가구를 표본에 편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의 분포 및 시장소득(즉, 근로소득)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표본 추출 범위(또는 표본 포괄 대상 범위)의 변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소득의 불균등 기여도를 크게 확대시킨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둘째, 인구 고령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듯이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근로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노인·은퇴 가구가 급증하였다. 근로소득의 유무 차이가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표본 가구 포괄 범위가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인구·가구 분포의 연령 구성상 표본에 새롭게 편입되는 대상 가구 중 상당수가 노인·은퇴 가구로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구 분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은퇴 상태

에 있는 노인 인구가구의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근로소득의 소득 불균등 기여도의 확대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6년부터 대다수의 노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1인 가구가 표본 대상에 추가되면서 인구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시장소득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불균등 기여도가 축소되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인구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영업 부문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지만, 은퇴 가구의 경우 피고용자로서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 장수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기대수명이 빠르게 연장됨에 따라 노후 소비를 대비하기 위한 소득 활동과 저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가구 등에서도 창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이 노인 가구의 소득 상황을 예전보다 향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의 불균등 기여도가 낮아지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재 제공해 주기 어려우며 위의 명제는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주관적 짐작과 심증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동 문제는 본 연구의 연구 주제와 목적을 벗어나므로 추가적인 분석은 수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표 6-3〉에서 보듯이 일부 연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불균등 기여도가 100을 초과하기도 한다. 이는 다른 요소들의 불균등 기여도가 음(-)의 값을 가짐을 의미한다. 불균등 기여도가 음(-)이라는 것은 해당 소득 요소가 다른 소득 요소들에 더해짐으로써 소득세후 소득 전체

의 불균등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분포 구조가 변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소득 등) 등은 소득 불균등도를 소폭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소득 요소들은 특성상 유형자산을 임대하거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만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므로 분포가 편중된 이들 소득 요소는 전체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들 소득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 요소의 불균등 기여도 수준은 상당히 작게 추정되었다.

공적이전소득과 민간이전소득의 경우에도, 절대 수준은 매우 작지만, 소득세후 소득의 불균등도를 대체로 소폭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외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최근 수년간 불균등 기여도 값이 음(-)의 값을 가져 불균등도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득세후 소득의 소득 불균등도를 형성(또는 증가)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상대 소득 분배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소득의 불균등 기여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는 Shorrocks의 소득 요소별 분해의 구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Shorrocks의 소득 요소별 분해에서 소득 불균등 기여도의 방향은, 소득세후 소득과 소득 요소 간 공분산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전소득과 소득세후 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 관계, 즉 공분산의 부호가 양(+)으로만 나타나면 소득세후 소득 불균등도의 기여도는 양(+)으로 측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분산의 부호가 양(+)을 나타내더라도 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와 양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양(+)이라는 것과, 이전소득의 소득 불균등 기여도가 양(+)이라는 것은, 얼핏 모순처럼

럼 보이지만 양립이 가능하다. 소득 요소(합산 항목의 경우에만 해당됨)의 소득 재분배 효과의 부호는 소득 요소의 소득 탄력성의 값이 1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소득 불균등 기여도의 부호는 소득 탄력성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위치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소득을 합산할 경우 소득 불균등 기여도도 양(+)이면서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양(+)의 결과를 나타낸다. 만약 소득 요소(소득 합산 요소의 경우에만 국한)의 소득 탄력성이 1을 초과하면, 불균등 기여도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소득 요소 합산 후 소득의 불균등도는 오히려 확대되어 소득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다른 소득 요소와 달리 소득세는 차감(또는 공제) 항목이다. 공제 항목의 경우에는 (소득세 분포의) 소득 탄력성이 1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차감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소득세 후 소득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소득세의 불균등 기여도는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대체로 7~10.5%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3〉 소득세후 소득의 상대 소득 격차 기여도 비중(Shorrocks 분해)

(단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민간이전 소득	개인 소득세	계
1982	51.75	42.97	1.55	-0.02	1.37	9.14	0.19	2.01	-8.97	100
1983	54.40	39.08	1.78	-0.11	1.42	8.92	0.34	1.31	-7.14	100
1984	53.50	40.55	2.08	0.08	1.43	7.99	0.18	1.99	-7.81	100
1985	60.49	33.68	2.31	0.15	1.16	7.81	0.84	2.88	-9.32	100
1986	57.86	40.28	2.37	-0.06	1.67	5.94	0.57	0.60	-9.22	100
1987	45.42	48.38	1.65	-0.08	2.17	10.59	0.06	0.83	-9.02	100
1988	48.35	48.62	1.92	0.12	1.14	9.25	0.37	0.73	-10.51	100
1989	43.29	50.67	1.59	0.15	0.90	12.02	0.41	0.91	-9.93	100

18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민간이전 소득	개인 소득세	계
1990	48.08	47.03	1.82	-0.02	1.23	9.93	0.36	1.02	-9.46	100
1991	46.41	46.69	2.51	0.17	1.17	9.74	0.21	2.02	-8.92	100
1992	45.69	49.45	2.16	0.04	1.88	6.60	1.06	3.14	-10.03	100
1993	49.82	45.44	1.96	0.27	0.83	8.77	0.21	1.57	-8.88	100
1994	53.66	42.93	2.68	0.14	0.93	5.42	0.68	2.26	-8.70	100
1995	48.14	48.13	2.24	0.09	0.97	7.22	0.40	1.57	-8.75	100
1996	52.21	42.61	2.40	0.05	0.91	7.04	0.80	1.50	-7.53	100
1997	50.07	50.19	1.83	0.23	1.40	1.13	0.60	2.01	-7.46	100
1998	49.25	47.99	0.73	0.14	1.03	6.11	0.19	0.87	-6.33	100
1999	51.71	39.94	0.74	0.06	1.05	11.81	0.23	1.17	-6.71	100
2000	38.78	44.34	0.67	0.06	0.90	21.59	0.07	0.55	-6.96	100
2001	48.89	40.28	1.17	0.03	0.89	15.27	0.21	1.00	-7.73	100
2002	45.19	48.39	1.01	0.08	0.85	11.08	0.27	0.12	-7.00	100
2003	53.10	43.42	2.19	n.a.	0.62	7.11	0.21	0.89	-7.53	100
2004	47.99	46.48	2.00	n.a.	0.48	8.35	0.54	1.58	-7.42	100
2005	45.94	50.09	0.80	n.a.	0.66	8.36	0.95	1.34	-8.13	100
2006	51.63	44.92	1.38	n.a.	0.42	8.71	0.68	0.44	-8.19	100
2007	56.31	43.19	0.83	n.a.	0.49	6.56	0.69	0.90	-8.97	100
2008	63.42	38.86	0.89	n.a.	0.30	4.37	0.72	0.48	-9.03	100
2009	61.57	40.42	0.73	n.a.	0.45	4.05	0.06	0.70	-7.97	100
2010	61.37	38.33	0.68	n.a.	0.46	4.93	-0.22	2.02	-7.56	100
2011	65.22	34.60	1.04	n.a.	0.82	4.64	0.30	1.23	-7.85	100
2012	69.98	30.75	1.25	n.a.	0.48	3.22	0.33	2.72	-8.72	100
2013	67.81	31.70	0.69	n.a.	0.38	4.36	-0.07	3.48	-8.34	100
2014	66.75	35.40	0.34	n.a.	0.18	3.52	-0.23	2.80	-8.77	100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 2인 이상 도시 가구.

2003~2005년: 2인 이상 전국 가구.

2006~2014년: 1인 가구 포함 전국 가구.

3) 통계청 자료에서, 2003년부터 부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제공.

4) 개인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의 합.

2. 회귀분석을 통한 인구 고령화 영향 분석

회귀분석 방법은 단순최소제곱법(OLS)을 채택하였다. 추정 결과, 고려 대상 회귀식 모두에서 더빈왓슨 통계치가 2에 매우 근접한 값을 나타낸다. 회귀방정식의 오차항에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OLS 방법을 고수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경우 기간별로 자료 포괄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개의 기간더미(du1, du2)를 설정·사용하였다. [그림 6-6]에서 보듯이 명시적으로 자료 포괄 기간별 지니계수의 변화 모습이 확연히 구분된다. 즉, 2003~2005년 기간 또는 2006년 및 그 이후 기간의 경우 자료 포괄 범위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에서 각각 읍·면 지역까지 확대한 2인 이상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를 포함한 경우 등으로 확대되는데, [그림 6-6]은 각각의 포괄 대상 범위 차이에 따라 지니계수 곡선(또는 꺾적)의 수준(level) 또는 기울기(slope)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상기의 두 더미가 필요한 이유를 잘 묘사해 준다.

〈표 6-4〉는 4개의 회귀설정(regression specification)을 대상으로 OLS로 회귀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가운데 2개의 설정에서 du1(2003~2005년 더미)을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나머지 2개의 설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런데 du1을 포함한 경우 동 더미의 계수추정치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회귀설정상 동 더미를 설명변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6-4〉 회귀분석 결과

	REG1	REG2	REG3	REG4
상수	-47.163 (-2.096)**	-44.252 (-1.594)	-58.042 (-2.568)**	-54.952 (-1.959)*
시간추세	0.025 (2.126)**	0.022 (1.504)	0.031 (2.593)**	0.028 (1.868)*
du1			0.023 (1.720)*	0.020 (1.477)
du2	3.604 (5.172)***	5.393 (2.681)***	2.927 (3.756)***	4.515 (2.201)**
Age65	-1.775 (-0.704)	-3.028 (-0.394)	-3.894 (-1.429)	-4.920 (-0.647)
(Age65)2		16.568 (0.572)		14.454 (0.510)
Age2064	-1.957 (-2.314)**	3.443 (0.578)	-2.407 (-0.857)	1.915 (0.324)
(Age2064)2		-5.574 (-0.979)		-4.427 (-0.789)
ln(pgdp)	-0.071 (-1.051)	-0.008 (-0.093)	-0.062 (-0.963)	-0.013 (-0.156)
ln(pgdp) × du2	-0.222 (-5.156)***	-0.333 (-2.673)***	-0.178 (-3.675)***	-0.277 (-2.178)**
R2	0.940	0.944	0.946	0.949
더빈왓슨 통계치	1.839	2.001	2.132	2.245
추정 방법	OLS	OLS	OLS	OLS

주: 1) 1982~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표본수는 모든 경우 33개).

1982~2002년: 2인 이상 도시 가구.

2003~2005년: 전국 단위 2인 이상 가구.

2006~2014년: 1인 가구 포함 전국 단위 가구.

2) 주요 변수 설명

시간추세: 각 연도의 4자리 숫자를 사용.

du1: 2003~2005년 기간 동안 1, 나머지 기간은 0인 더미.

du2: 2006년부터 최근까지 1, 나머지 기간은 0인 더미.

Age65: 65세 이상 인구 비중(백분율 아님).

Age2064: 20~64세 인구 비중(백분율 아님).

pgdp: 1인당 실질GDP.

3) OLS(ordinary least squares): 단순최소제곱법.

4) () 안은 t-값을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그런데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통계학적 유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2003~2005년 기간은 그 이전 기간과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포괄 범위가 달라지고 피회귀변수로 사용되는 지니계수의 값도 구별된다. 따라서 계수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du_1 을 설명변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du_1 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회귀식 추정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du_1 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제1종 오류에 대한 것일 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2종 오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6]에 의하면 자료 포괄 범위를 2인 이상 도시 가구로 한정하는 경우와, 읍·면 지역까지 포괄한 1인 이상 전국 가구로 확대하는 경우 지니계수 값이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양자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구별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 6-6]에서 보듯이 양자 사이에는 차이의 절대 크기가 작고 변화 방향도 거의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간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통계적으로 충분히 기각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귀무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종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du_1 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표 6-4>의 REG1과 REG2는 설명변수의 설정에 있어 적절한 설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서 설명하였듯이, 통계학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du_1 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모형설정 오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6]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니계수의 상승 추이가 다소 주춤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du_2 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 유의미하게 추정된 것이 이를 반영해 준다. 다만 단순히 지니계수 곡선(꺾적)의 수준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곡선의 기울기도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기울기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자연대수를 취한 1인당 실질 GDP(변수명은 $pgdp$)를 대상으로 더미변수(du_2)를 곱한 형태의 설명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 모두에서 기울기 더미(slope dummy)의 계수가 유의수준 1%에서도 유의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그런데 1인당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ln(pgdp)$ 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회귀분석 시에는 시간추세(time trend)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시간추세가 소득변수 등을 대체하여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정작 소득변수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 추이와 시간추이가 비슷한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본 절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의 경우가 그런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회귀식상에서 실질 소득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선형영향(linear effect)이 시간추세와 유사한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표 6-4>에 추정된 결과를 보면 본 절의 회귀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인구 고령화 추세도 시간추이와 유사하게 진전되는 경향이 있다. 본 절에서는 고령자 인구 비중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고령자 인구 비중의 변화 추이는 선형에 가깝다. 왕성한 경제활동연령(20~64세)인구 비중의 경우에도 방향은 다르지만 선형의 형태와 유사하다.

바로 이런 점들로 인해 회귀분석 결과(표 6-4)에서 상기 변수들이 지니

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추세를 통해 미치는 영향과 상당 부분 충돌 또는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회귀식 추정 결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이나 노인 인구 비율 등을 매개체로 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종속변수(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고령화 등의 추세가 시간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추세가 고령화 효과를 대부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4〉의 회귀식 추정 결과에 대해 통계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어떠한 설정의 경우에도 추정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니계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결정요인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형을 모형을 단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명변수도 고령자 비율 등으로 국한함에 따라 상기의 결과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왜 그런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니계수 결정요인이 무수히 많지만 수량화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표본 수가 33개(1982~2014년의 연간 자료 기준)에 불과한데 지니계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뿐더러, 그나마 이용 가능한 정보도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회귀분석의 목적이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구조방정식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고령화에 의한 지니계수 영향을 전망하는 데 있는 만큼 고령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회귀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구조식 추정보다 예측전망에 초점을 맞춘 “단회귀”의 특성상 설명변수의 계수추정치

계적 유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이 있다.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구 소득 분배 구조, 즉 소득 불균등도(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회귀식 REG3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2개 회귀식은 du1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REG4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율의 제곱항을 설명변수에 포함한 상태에서 장기 예측을 하는 경우 먼 장래 시점의 예측 전망치가 터무니없이 크게 전망되는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REG4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의 제곱항의 계수가 14.454로 상당히 큰 양(+)의 값을 가진다. 이는 먼 장래 시점에 노인 인구 비율이 커질 때 지니계수 전망치를 누적적으로 크게 예측할 개연성을 높인다.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회귀식에서 종속변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REG4와 같이 노인 인구 비율의 제곱항을 포함하는 경우 지니계수 전망치가 지니계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REG4가 아닌 REG3을 지니계수 전망을 위한 회귀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구 고령화 분석을 위한 지니계수의 그룹별 요인 분해

본 항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구주 연령을 5세 단위로 분류하여 분할(partition)하고, 각 연령그룹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Yitzhaki 분해하였다. 요인 분해의 결과는 <표 6-5>(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와 <표 6-6>(1인 가구 포함 전 가구 기준)과 같다.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는 연령그룹 내 지니, 연령그룹 간 지니, 계층화도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추정 결과, 가장 비중이 큰 요소는 그룹내

지니이다. 본 항에서는 편의상 각 요소별 비중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표 6-5〉에서 보듯이 2인 이상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연령그룹 내 지니의 비중은 1982년 81.6%, 1990년 78.6%, 2000년 83.2%, 2010년 78.0%로 추정되었다. 대체로 2010년 이전 기간에는 80%를 중심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10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2014년 74.2%로 감소한 것이 이전 기간과 차이를 보인다.

연령그룹 간 지니의 비중은 1982년 20.7%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93년 27.0%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 반전하여 2002년 19.8%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33.3%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다.

계층화도는 분석 기간 동안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성상 계층화도를 계층의 중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나머지 항 또는 잔차항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본 항에서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 계층화도의 비중은 1990년대 말의 경제 위기 기간을 전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비중(절대값 기준)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2년 -2.3%에서 2000년 -2.6%, 2010년 -5.9%, 2014년 -7.5%로 비중이 증가(절대값)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분배 요소의 값의 절대 수준은 지니계수 자체의 등락에 따라 절대값이 바뀌었지만, 요소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놓고 보면, 연령그룹 내 지니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연령그룹 간 지니와 계층화도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그룹 내 지니 비중도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보면 그 정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6-5>의 가장 오른쪽 편의 3개 열(columns)은 1982년의 비중을 1로 표준화하였을 경우 이후 기간의 각 요소별 비중 값의 상대비를 나타낸다. 그 비중을 보면 연령그룹 내 지니 비중의 변화는 최대 10% 이내인 반면, 연령그룹 간 지니와 계층화도의 상대비는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표 6-6>의 경우에도, 분석 대상 기간만 짧아졌을 뿐, 지니계수의 분해 결과가 <표 6-5>와 대동소이하다. 분석 대상 기간(2006~2014년) 동안 지니계수는 0.38142 → 0.38589로 사실상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그룹 내 지니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감소 폭은 크지 않다. 반면에 연령그룹 간 지니는 0.13998 → 0.16756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다. 절대값은 크지 않지만 계층화도의 경우에도 변화율이 약 31%에 이를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Yitzhaki 지니계수 분해 결과를 보면, 그룹내지니의 변화는 미미한 반면 그룹 간 지니의 변화가 전체적인 지니계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요인별 변화 패턴이 크게 대비(contrasts)되는 현상은, [그림 6-7]을 보면 매우 극명하게 잘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인구 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연령대 내의 상대 소득 분배 격차(주로 연령그룹 내 지니로 설명됨)에도 변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령그룹 간 상대 소득 격차의 변화에 비해서는 변화가 매우 작은 편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각 연령대별 노동 공급 등의 비중 변화에 따라 연령그룹 간 소득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이하게 교차하면서 연령그룹 간 상대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상기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구 고령화가 향후 가구 소득 불균등에 미치

는 영향이 주로 그룹 내 상대 소득 격차(연령그룹 내 지니)의 변화로 인한 요인보다는, 연령그룹 간 상대 소득 격차(연령그룹 간 지니)의 변화로 인한 요인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소득 불균등도를 전망할 때, 각 연령그룹 내 지니의 변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각 연령별 가구의 비중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 불균등도의 변화 효과만 고려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향후 가구 소득 불균등도를 예측전망함에 있어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중 또는 연령별 인구 비중에 대한 예측 전망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연령대별 상대 소득 분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추정하기 쉽지 않다. 연령그룹 내 지니의 변화 기여도가 상당히 작게 나타난다는 점은 장래 소득 불균등도를 추정함에 있어 전망 방법을 용이하게 해 준다.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연령그룹 내 지니의 변화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하자. 이는 곧 여타 요인에 의한 편의가 작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연령그룹 간 지니의 변화, 즉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중 등의 변화 효과만을 고려하여 장래 소득 불균등도를 추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전망치의 편의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19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표 6-5〉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1(연령그룹 기준)

(단위: %, 배)

	지니계수 분해				요소별 비중				1982년 비중 대비 상대비 (1982=1)		
	그룹내 지니(A)	그룹간 지니(B)	계층화도 (C)	지니계수	A	B	C	계	A	B	C
1982	0.23422	0.05938	-0.00670	0.28691	81.6	20.7	-2.3	100	1	1	1
1983	0.22924	0.06189	-0.00673	0.28440	80.6	21.8	-2.4	100	0.99	1.05	1.01
1984	0.22219	0.06526	-0.00648	0.28097	79.1	23.2	-2.3	100	0.97	1.12	0.99
1985	0.21551	0.06548	-0.00725	0.27375	78.7	23.9	-2.6	100	0.96	1.16	1.13
1986	0.21731	0.06656	-0.00843	0.27544	78.9	24.2	-3.1	100	0.97	1.17	1.31
1987	0.22002	0.06915	-0.00721	0.28196	78.0	24.5	-2.6	100	0.96	1.18	1.10
1988	0.21843	0.06104	-0.00705	0.27242	80.2	22.4	-2.6	100	0.98	1.08	1.11
1989	0.21296	0.06674	-0.00770	0.27200	78.3	24.5	-2.8	100	0.96	1.19	1.21
1990	0.20000	0.06212	-0.00779	0.25433	78.6	24.4	-3.1	100	0.96	1.18	1.31
1991	0.18659	0.06340	-0.00775	0.24224	77.0	26.2	-3.2	100	0.94	1.26	1.37
1992	0.18850	0.05920	-0.00872	0.23897	78.9	24.8	-3.6	100	0.97	1.20	1.56
1993	0.18677	0.06540	-0.00958	0.24260	77.0	27.0	-3.9	100	0.94	1.30	1.69
1994	0.18849	0.06156	-0.00800	0.24205	77.9	25.4	-3.3	100	0.95	1.23	1.42
1995	0.19387	0.05696	-0.00705	0.24378	79.5	23.4	-2.9	100	0.97	1.13	1.24
1996	0.20200	0.05057	-0.00546	0.24711	81.7	20.5	-2.2	100	1.00	0.99	0.95
1997	0.22411	0.06735	-0.00957	0.28189	79.5	23.9	-3.4	100	0.97	1.15	1.45
1998	0.25415	0.06748	-0.00789	0.31374	81.0	21.5	-2.5	100	0.99	1.04	1.08
1999	0.21776	0.05943	-0.00804	0.26915	80.9	22.1	-3.0	100	0.99	1.07	1.28
2000	0.23533	0.05474	-0.00726	0.28281	83.2	19.4	-2.6	100	1.02	0.94	1.10
2001	0.22632	0.05560	-0.00722	0.27469	82.4	20.2	-2.6	100	1.01	0.98	1.13
2002	0.23498	0.05608	-0.00754	0.28352	82.9	19.8	-2.7	100	1.02	0.96	1.14
2003	0.23760	0.06510	-0.01049	0.29220	81.3	22.3	-3.6	100	1.00	1.08	1.54
2004	0.24617	0.06468	-0.01071	0.30014	82.0	21.5	-3.6	100	1.00	1.04	1.53
2005	0.25159	0.06814	-0.01208	0.30765	81.8	22.1	-3.9	100	1.00	1.07	1.68
2006	0.24800	0.07790	-0.01447	0.31143	79.6	25.0	-4.6	100	0.98	1.21	1.99
2007	0.25037	0.08014	-0.01555	0.31496	79.5	25.4	-4.9	100	0.97	1.23	2.11
2008	0.25352	0.07872	-0.01532	0.31693	80.0	24.8	-4.8	100	0.98	1.20	2.07
2009	0.24500	0.08364	-0.01761	0.31103	78.8	26.9	-5.7	100	0.96	1.30	2.42
2010	0.24646	0.08821	-0.01876	0.31591	78.0	27.9	-5.9	100	0.96	1.35	2.54
2011	0.24685	0.08869	-0.01754	0.31800	77.6	27.9	-5.5	100	0.95	1.35	2.36
2012	0.24196	0.08829	-0.01731	0.31294	77.3	28.2	-5.5	100	0.95	1.36	2.37
2013	0.23628	0.09392	-0.02136	0.30884	76.5	30.4	-6.9	100	0.94	1.47	2.96
2014	0.23062	0.10359	-0.02346	0.31075	74.2	33.3	-7.5	100	0.91	1.61	3.23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표 6-6〉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2(연령그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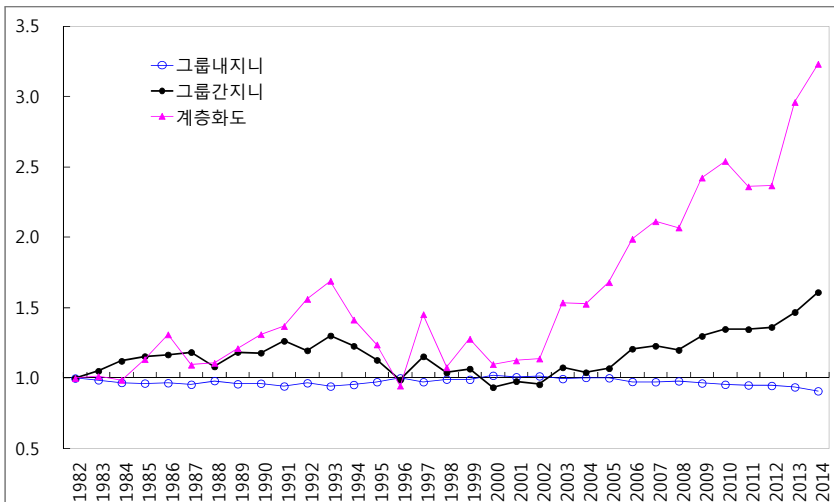
(단위: %, 배)

	지니계수 분해				요소별 비중				2006년 비중 대비 상대비 (2006=1)		
	그룹내 지니(A)	그룹간 지니(B)	계층화도 (C)	지니계수	A	B	C	계	A	B	C
2006	0.27551	0.13998	-0.03406	0.38142	72.2	36.7	-8.9	100	1	1	1
2007	0.28007	0.14204	-0.03547	0.38664	72.4	36.7	-9.2	100	1.00	1.00	1.03
2008	0.28864	0.14480	-0.03607	0.39737	72.6	36.4	-9.1	100	1.01	0.99	1.02
2009	0.27389	0.14514	-0.03799	0.38105	71.9	38.1	-10.0	100	1.00	1.04	1.12
2010	0.27584	0.14779	-0.03764	0.38599	71.5	38.3	-9.8	100	0.99	1.04	1.09
2011	0.27545	0.14432	-0.03616	0.38361	71.8	37.6	-9.4	100	0.99	1.03	1.06
2012	0.27146	0.14780	-0.03680	0.38246	71.0	38.6	-9.6	100	0.98	1.05	1.08
2013	0.26804	0.15453	-0.04059	0.38198	70.2	40.5	-10.6	100	0.97	1.10	1.19
2014	0.26343	0.16756	-0.04509	0.38589	68.3	43.4	-11.7	100	0.95	1.18	1.31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

[그림 6-7]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요소별 상대비 변화 추이(1982년=1)

(단위: 배)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4. 모의실험을 통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 분석

통계청의 2000~2045년의 가구주 연령별 추계가구 수 통계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로 가구주 연령별 가구 점유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2014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주 연령별 표본가중치의 합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표본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모의실험을 통해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2014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주 연령별 표본가중치와, 통계청 추계가구 통계로부터 추출한 가구주 연령별 가구 점유 비중은 차이가 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표본 추출을 통해 구성된 소비자 서베이 자료이므로 표본추출편의(sampling bias)가 존재한다.¹³⁾ 그러므로 동일한 2014년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표본가중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통계청 추계가구 통계로부터 추출한 연령대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표본가중치를 조정해 준 경우, 동일한 가구 소득 정보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지니계수의 값이 달라진다. 양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표본가중치를 조정하여 추정한 지니계수 값을, 본래의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에 일치시키도록 비례적으로 끝수조정(endpoint adjustment)해주었다.¹⁴⁾

통계청 추계가구 통계가 이용 가능한 시계(時界)가 2000~2045년이므로 모의실험도 동 기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 경우 2000~2014년 기간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니계수 영향을 사후적으로 검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45년까지는 향후 시점에 대한 인구 고령화 효과를 감안한 전망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망치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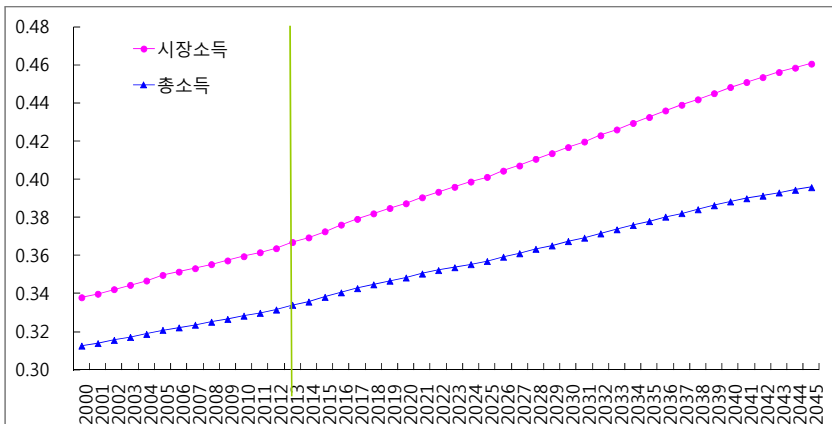
13) 물론 통계청에서 추계가구를 추정할 때 추정오차가 개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본추출편의가 양자 간 차이의 대부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이 과정을 흔히 끝수조정(endpoint adjustment)이라고 한다.

[그림 6-8]에서 보듯이, 모의실험 결과 2000~2014년 동안 각 가구의 시장총소득은 동일하지만 가구주 연령별 표본가중치만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연령그룹 내 지니는 동일하더라도 연령별 가중치 차이를 통해 지니계수 값이 변화하게 된다. 보듯이 연령이 높은 연령그룹일수록 지니계수 값이 더 큰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연령층의 표본가중치 값이 더 커지는 것으로부터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가 커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그림 6-8]에서 보듯이 가구주 연령별 가중치 변화를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인구 고령화는 시장소득과 총소득 모두에서 소득 불균등도(지니계수)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령대별 가구주의 비중이 매끄러운(smooth) 연속함수의 형태로 변하는 만큼 그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도 매끄러운 형태를 보이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6-8] 인구 고령화의 소득 불균등도 영향 모의실험 결과



- 주: 1) 2014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된 저자 추정치.
 2) 통계청의 추계가구 전망치(2000~2045년)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표본가중치를 조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
 3) 2014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추계상 통계상의 표본 추출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끝수조정(endpoint adjustment)을 통해 조정.

제4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 불균등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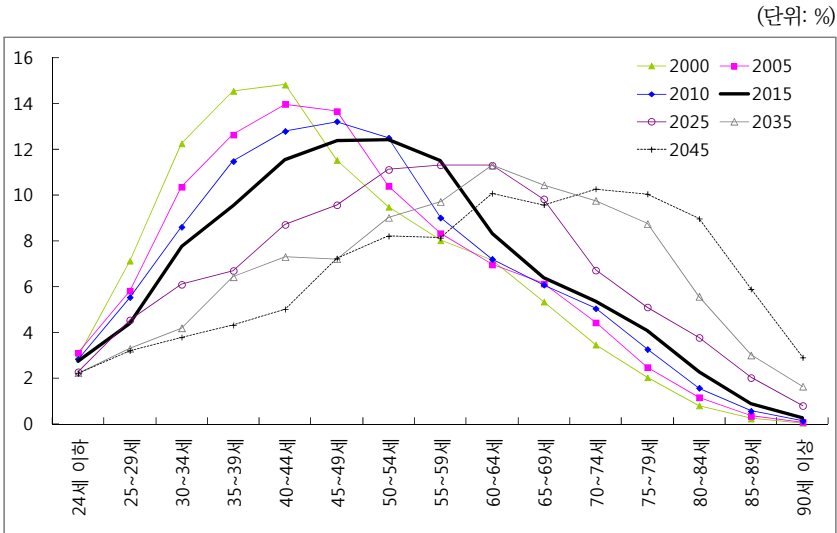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통계청 추계가구 또는 추계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회귀 분석과 모의실험을 통해 2045년을 시한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구 소득 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추계가구 통계를 2045년까지, 추계인구 통계를 2065년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기초로 인구 고령화 효과를 분석한다.

1.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전망

통계청에서는 2045년을 시한으로 가구주 연령별 추계가구 수 분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상기의 통계 정보를 5세 단위로 묶어 재분류하여 몇몇 연도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가구 비중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6-9]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구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중저연령 가구주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고연령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적으로 2000년과 2005년에는 가구주 연령이 40대 초반이었던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주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2025년에는 50대 후반~60대 초반, 2035년에는 60대 초반, 2045년에는 70대 후반으로 가구 비중 곡선의 점점이 우측이동 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에 따라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 곡선이 왼쪽으로 치우친 모습(skewed to the right)에서 점차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습(skewed to the left)으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9] 주요 가구주 연령대별 추계가구 수 비중 추이 및 전망



주: 통계청 추계가구 수 통계를 기준으로 저자가 작성한 그림.

2. 회귀분석을 통한 소득 불균등도 전망

본 항에서는 <표 6-4>의 회귀분석 결과 가운데 REG3을 기준으로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른 향후 지니계수를 전망하였다. 회귀분석의 특성상 33개 연도(1982~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매우 장기간의 미래 기간을 대상으로 표본외추정(extrapolation)를 통해 예측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 기간이 33개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기 때문에, 표본외추정의 대상 기간이 표본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예측오차가 매우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설명하였듯이, 회귀분석 시 종속변수인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등 정의역(domain)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회귀식의 우변, 즉 설명변수와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전망하는 경우

에는 예측전망치의 상·하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예측치가 전망될 수 있다. 특히 표본외추정의 시계(時界)가 멀어질수록 예측지니계수의 값이 0에 미달하거나 또는 1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보 양보하여 지니계수 전망치가 1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값이 0.7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비록 지니계수의 정의상, 기술적으로는 그런 수치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의미를 지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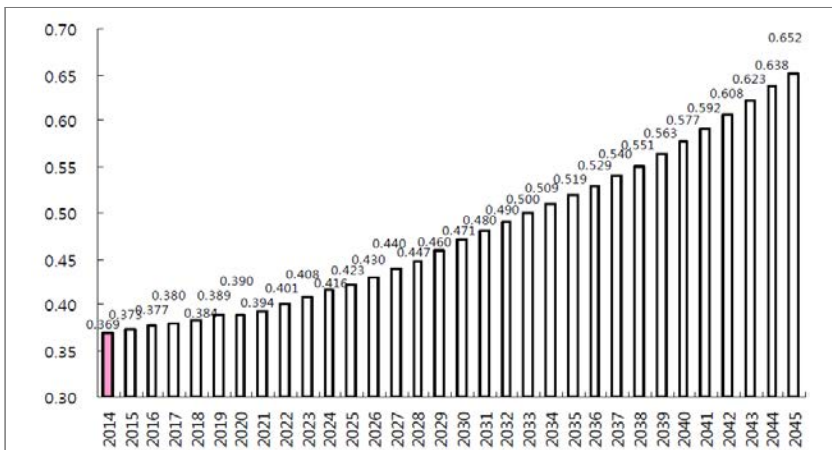
실제 회귀분석을 통해 지니계수를 예측해 보면, 표본 자료의 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표본외추정의 시계(時界)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니계수의 특성상 일정한 범위(지니계수 \in [0,1])의 치역이 존재한다는 점도 시계의 제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감안하여 예측 시한을 2045년으로 한정하였다. 예측 결과는 [그림 6-10]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회귀분석을 통한 지니계수 전망치를 보면, 2014년 현재 0.369였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시간이 경과하여 인구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 0.390, 2030년 0.471, 2040년 0.577, 2045년 0.6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상승 추세는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귀분석을 통한 1982~2014년의 선형회귀 결과가 표본외추정(extrapolation)을 통해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계열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회귀식 추정 결과에 바탕으로 두고 표본외추정을 하는 경우 회귀분석 대상 기간에 비해 표본외추정의 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표본외추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지니계수의 경우처럼 종속변수가 일정한 범위로 제약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귀식에서 종속변수

의 범위에 별도의 제약 조건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 표본외추정은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것은 선행연구(예: 성명재, 박기백, 2009 등)는 물론이고 이 연구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선형 관계가 장기적으로도 구조 변화 없이 선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그림 6-10]의 전망치는, 비교적 전망 시한이 짧은 202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이 지속적으로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정도의 정성적 의미만을 취하고 정량적 추정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0] 회귀분석을 이용한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망치



주: <표 6-4>의 회귀방정식 가운데 REG3을 기준으로 전망한 전망치.

3. 모의실험을 통한 소득 불균등도 전망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가구주 연령별 추계가구 수 전망치 통계로부터 추정된 연령별 가구 비중 예측치를 가계동향조사 자료(2014년 귀속분)의 가구주 연령별 표본가중치의 합과 일치하도록 가구별 표본가중치를 연령 대별로 각기 비례적으로 조정해 주고, 2045년을 시한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6-7>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젊은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고령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중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각종 소득의 지니계수는 일관되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2014년 0.369에서 2025년 0.401, 2035년 0.433, 2045년 0.461로, 향후 31년간(2014~2045년) 0.091 지니p 상승하며, 증가율은 24.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총소득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2014년 0.336에서 2025년 0.357, 2035년 0.378, 2045년 0.396으로 총 0.060지니p 상승, 증가율은 1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장소득보다는 총소득 지니계수의 상승 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각종 이전소득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저소득층은 대부분 고령자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총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 가구의 경우가 젊은 가구주 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가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총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이 점유하는 비중이 더 빨리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효과로서 연령별 가구

비중을 조정해 주는 경우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총소득 지니계수보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런 연유로 시장소득 지니계수 증가율이 총소득 지니계수 증가율보다 높게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하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2014~204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58%, 총소득 지니계수는 0.53%로 추정된다. 성명재, 박기백(2009)은 2008~2050년 기간을 대상으로 총소득의 변이제공계수(SCV; 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frac{\sigma^2}{\mu^2}$ 으로 정의됨)가 27.5% 증가(0.32291 → 0.41185, 성명재, 박기백, 2009, <표 4>)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들의 기하 평균 연간 증가율은 0.71%로 추정된다. 소득 불균등도 지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본항의 추정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연평균 증가율만으로 보면 선행연구보다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득 불균등도 증가 추이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관점에서 볼 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인구·가구 분포의 변화가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표 6-7> 인구 고령화의 소득 불균등도 영향 모의실험 결과

	시장소득	총소득
2000	0.33797	0.31258
2001	0.33982	0.31389
2002	0.34223	0.31558
2003	0.34449	0.31711
2004	0.34677	0.31875
2005	0.34972	0.32087

20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시장소득	총소득
2006	0.35144	0.32214
2007	0.35325	0.32356
2008	0.35537	0.32512
2009	0.35730	0.32659
2010	0.35953	0.32834
2011	0.36161	0.32981
2012	0.36373	0.33153
2013	0.36698	0.33401
2014	0.36942	0.33574
2015	0.37263	0.33818
2016	0.37613	0.34055
2017	0.37915	0.34277
2018	0.38205	0.34474
2019	0.38486	0.34669
2020	0.38734	0.34835
2021	0.39049	0.35044
2022	0.39341	0.35224
2023	0.39601	0.35374
2024	0.39874	0.35536
2025	0.40120	0.35702
2026	0.40448	0.35928
2027	0.40718	0.36110
2028	0.41069	0.36345
2029	0.41367	0.36520
2030	0.41686	0.36750
2031	0.41976	0.36928
2032	0.42304	0.37154
2033	0.42612	0.37365
2034	0.42955	0.37592
2035	0.43265	0.37799
2036	0.43611	0.38032
2037	0.43909	0.38216
2038	0.44194	0.38421
2039	0.44517	0.38632

	시장소득	총소득
2040	0.44840	0.38834
2041	0.45103	0.38995
2042	0.45361	0.39137
2043	0.45627	0.39301
2044	0.45857	0.39444
2045	0.46069	0.39580

- 주: 1) 2014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된 저자 추정치.
 2) 통계청의 추계가구 전망치(2000~2045년)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표본가중치를 조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
 3) 2014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추계가구 통계상의 표본 추출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끝수조정(endpoint adjustment)을 통해 조정.

제5절 소결

인구 고령화는 단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요약된다. 소득 분배적 관점에서는 고령 은퇴 가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은퇴 가구와 경제활동 가구 사이의 상대적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경제 전체의 상대 소득 분배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법론상 차이는 있지만, 회귀분석, 모의실험 등을 통해 예측한 바를 종합해 보면 인구 고령화가 가구 소득의 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구 소득 불균등도가 확대된 데에는 계층 이동성의 저하 현상과 산업 간·직종 간 격차 확대, 임금 격차 고착화, 기술 편향 발전 경향 등 매우 다양하게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득 불균등도가 확대되었지만,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 분포의 구조적 변화가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된 요인 중 하나임은 틀림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앞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향후에 인구 고령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소득 불균등도를 계속 확대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회귀분석이나 모의실험 등을 통해 추정·전망한 인구 고령화의 소득 불균등도 확대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추정·전망 결과는 정보 부족과 제약된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점을 노정하는 동시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본 장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소득 분배 효과 분석 시에 모의실험 시 가구주 연령대별 표본가중치의 변화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는 연령대별 가구주 비율(비중)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별 소득 분배 상태의 변화도 함께 초래한다. 본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비록 지니계수의 요인별 분해를 통해 연령그룹 내의 소득 불균등도(지니계수)의 변화가 두드러질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편익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효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전망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분석 자료의 정보가 보다 풍부해지고, 또한 보완 연구를 통해 분석 이론과 연구 방법론 등을 보완하여 정성적 측면에서의 인구 고령화 효과는 물론이고 정량적 측면에서 추정 편익(estimation error 또는 estimation bias)을 줄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7 장

가구 변화와 소비·유통

제1절 배경

제2절 일본 사례 분석

제3절 한국과 일본 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7

가구 변화와 소비·유통 <<

제1절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 가구는 1인 가구 및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4인 표준 가구의 감소 및 무자녀 부부 증가 등의 변화를 경험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미래 가구의 변화는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와 더불어 사회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개별 가구가 개인(들)로 구성된 생활자로서 서로 다른 욕구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니즈를 반영한 소포장, 소형 가전 제품이나 반조리·완전조리 형태 식품, 대여 서비스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이경아, 곽윤영, 2015). 베이비붐 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인터넷 접근 증가, 가치관의 변화로 향후 노인 가구의 소비 행태는 질병 예방 및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 상품, 원거리 손(자녀)에 대한 지출, 여가 및 학습 프로그램, IT 기반 기기에 대한 지출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기향, 2015).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가구가 가진 취약성으로 인해 이들 가구의 이동권이나 소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통 산업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새로운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기향, 2015). 이와 관련,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20~30년 앞서 유사한 인구 및 가구 변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 간 비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이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 사례 분석은 문헌 조사와 현장 관찰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를 우리보다 한발 앞서 경험한 일본의 정부 및 업계 관련 문헌 자료를 살펴본 후, 실제 일본의 유통 현장에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을 조사한다. 문헌 조사에서는 생활자나 소비자나 관련된 일본 중앙 정부의 관련 부처인 내무성, 총무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의 통계 자료나 심의회 및 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정책의 방향을 살펴본다. 현장 조사는 대표적인 유통 업체인 종합슈퍼, 편의점, 드럭스토어,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구 가구 변화에 실제 유통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관찰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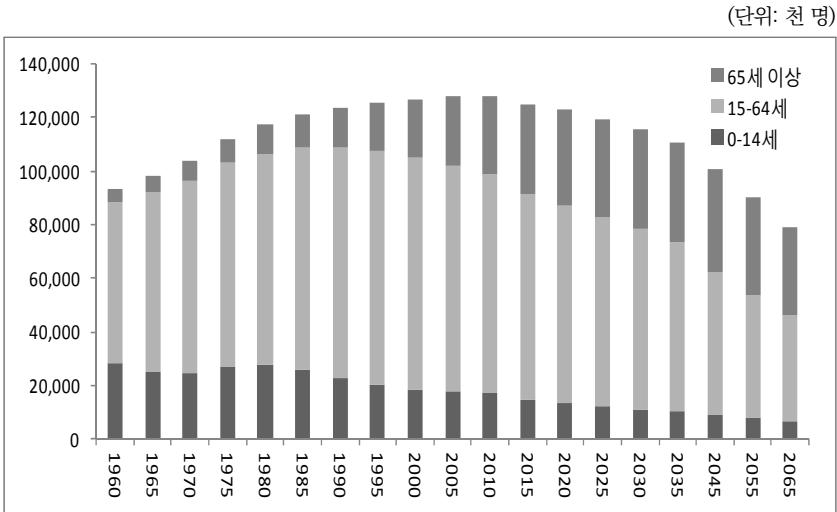
제2절 일본 사례 분석

1. 인구 및 가구 변화

가. 인구 변화

일본에서 국세조사 등의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크게, 국내 총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1인 가구 증가, 대도시 인구 집중 등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세대 구성원은 4인 표준 가구에서 점차 구성원 수가 줄어들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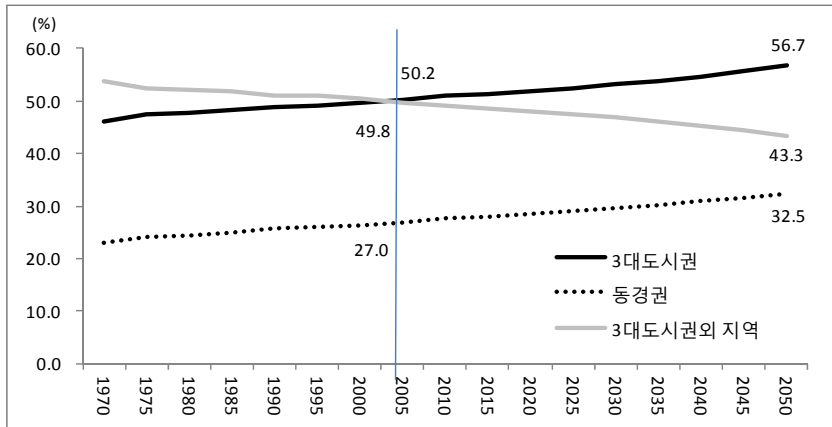
[그림 7-1] 일본 연령별 인구의 추이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 日本の将来推計人口.

거주 분포도 차원에서는 대도시 집중화가 계속되어 3대 도시권 중에서도 도쿄, 지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도쿄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각하다. 국토교통성에서 1970년부터 2050년까지 지역별 인구를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도쿄권의 인구와 3대 도시권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으나, 3대 도시권 이외의 지역은 반대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7-2] 3대 도시권 및 도쿄권의 인구 비율 추이와 전망



원자료: 総務省, 国勢調査報告.

자료: 国土交通省国土審議會政策部会長期展望委員会, (2011), 国土の長期展望 (2011. 2. 21.)

2014년 중장기 일본 경제의 과제를 검토하는 정부의 유식자회의인 「미래로의 선택」에서 저출산·고령화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제언을 발표했다(2014. 11. 14.). 동 위원회는 50년 후 일본의 경제사회 비전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년 간 활동한 경제재정 자문회의의 전문조사회이다. 상기 보고서에서, 50년 후 일본의 총인구는 8700만 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은 총인구의 4할을 넘으며, 현 지방 자치체의 4분의 1은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제까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 본 조사 발표가 일본 사회에 준 충격은 매우 컸다. 이 보고서의 결과가 공론화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회경제 문제의 근본은 인구 감소에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본 위원회는 50년 후의 일본의 미래상과 2020년까지 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재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장래는

매우 힘든 상태에 빠질 것이라 보고 미래로의 선택은 언젠가 장래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은 지금부터 행해야 하고, 이러한 선택에 의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해야 할 대응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표 7-1〉 2020년까지 해야 할 과제에 대한 공통 인식과 정책 내용

제언 종류	내용
메시지	미래는 선택 가능하다
키 콘셉트	미래를 인구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자
어프로치	인구, 경제, 지역사회를 둘러싼 과제를 통합적으로 풀자 디플레탈라이 시야에 들어온 현시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한 성장력 강화-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인재 육성과 다양성
수치 목표	저출산 대책-조기의 배증을 목표로(사회보장 전체의 형태 검토에 의한 재원 확보) 저연령대 인구-2020년대 초까지 감소를 멈추게 한다 인구 감소-2040년경에 감소 폭의 확대를 막고, 금세기 중에 인구 감소를 축소 성장률-50년 후에도 실질 GDP 성장률 1.5~2%대 유지
시간 축	2020년까지 점프스타트(저출산 대책의 배증-생산성의 비약적 향상) 지방창생을 일체적으로 추진, 정책 자세를 개혁/변혁으로

자료: 經濟財政諮問會議 専門調査会 「選択する未来」 委員会. (2014). 「未来への選択」- 人口急減・超高齢社会を超えて、日本発 成長・発展モデルを構築 -.

나. 가구(세대) 변화

일본에서는 가구(세대)를 독신 세대, 맞벌이 세대, 무직 세대 등 세대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거주자 수나 학생의 포함 여부, 조사 기관에 따라 세대의 정의가 다르다. 가계조사, 국제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노동력조사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대 정의는 〈표 7-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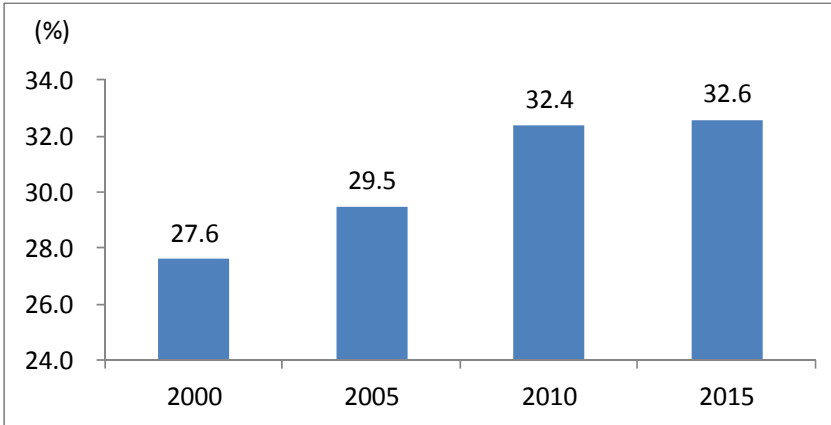
〈표 7-2〉 조사 기관별 세대의 정의

	독신 세대(1인 가구)	맞벌이 세대	무직 세대
가계조사	-세대 인원이 1명 -학생 불포함	-세대주가 근로자이면서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세대	-세대주가 무직
국세조사	-일반 세대 중 세대 인원이 1인인 세대 -학생 포함	-부부인 일반 세대 중 부부 모두 취업자인 세대	-부부 세대 중 부부 모두 무직자인 세대
전국소비실태조사	-한 집에 한 명이 생활하는 경우, 임차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 기숙사, 사택 등 독신 생활자 -학생 불포함	-세대주가 근로자로 그 배우자도 직장을 가진 세대 -단, 농림어업 수입 세대는 제외	-2인 이상의 세대 중 세대주가 무직인 세대
노동력조사	-한 집에 혼자 기거하는 자, 독신으로 한 칸을 빌려 생활하는 자, 혹은 사택, 기숙사, 하숙 등에 기거하는 독신자 한 명 한 명	-남편이 취업자이면서 배우자가 취업자인 세대	-남편이 완전실업자 혹은 비노동력 인구, 동시에 배우자가 완전실업자 혹은 비노동력 인구 세대

자료: 内閣部政策統括官. (2016. 10. 6.). 「經濟社会構造の變化の把握について—世帯構造の變化—」資料1.

2015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 세대 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세대별 인원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일반 세대 수는 1970년 3030만 세대에서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 2015년에는 5333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대 구성원의 수를 보면, 1970년 3.4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15년에는 2.33명이 되었는데, 이는 2인 가구나 1인 가구의 증가로 세대당 인원수는 줄고 총 세대수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인 가구의 비율은 27.6%에서 32.6%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림 7-3] 1인 가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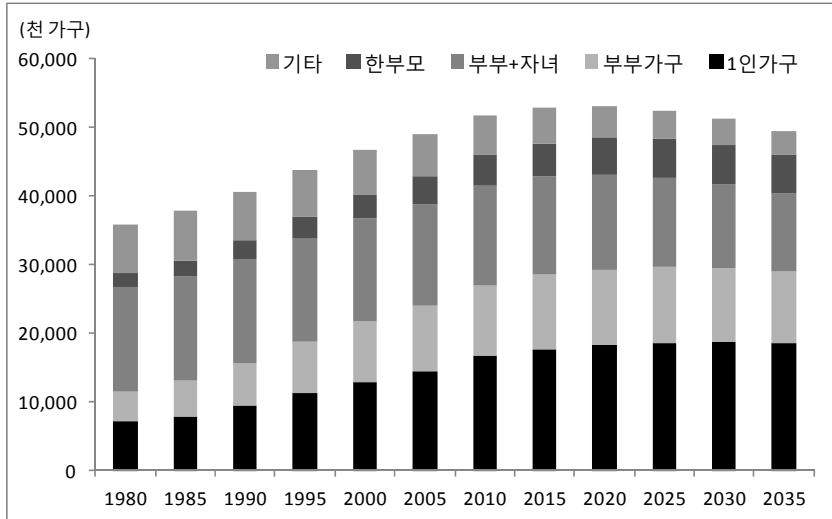


자료: 日本統計庁. (2016. 6. 29.). 2015年国勢調査.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3년 1월에 발표한 「일본 가구 장래추계(2010 - 2035)」에 의하면, 일본의 가구 변화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세대 총수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평균 세대 인원은 현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둘째, 1인 가구, 부부 세대, 편부모+자녀 세대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세대주의 고령화가 진전되어 65세 이상의 고령 세대가 증가할 것이며, 넷째, 고령 세대 중 증가하는 세대는 단독 고령 세대와 ‘고령 편부모+자녀 세대’가 될 것이다.

독신 세대는 총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 증가 등에 따라 2010년 32.4%에서 2035년에 3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세대의 경우, 독신 세대가 2010년의 498만 세대에서 2035년에는 762만 세대로 1.53배 늘어나고, ‘편부모+자녀’ 세대는 133만 세대에서 201만 세대로 1.52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림 7-4] 세대 구성의 장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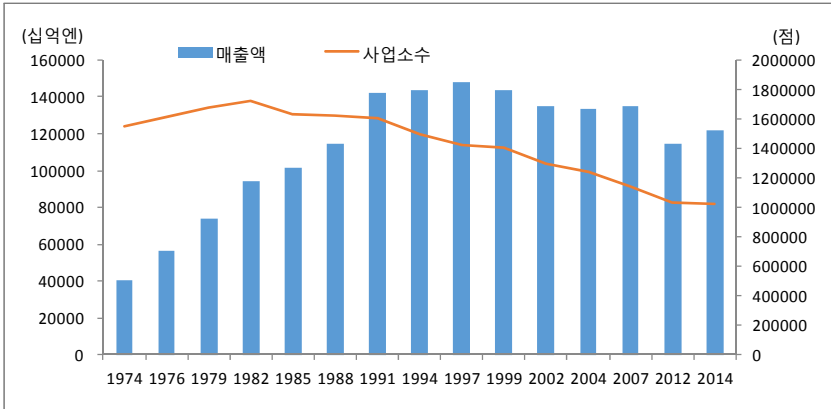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3). 日本の世帯数将来推計(全国).(2013년 1월 추계).

2. 가구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가. 세대 구성 변화와 소매업 시장 변동

일본 소매업의 시장 규모는 1996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소매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 이후 135조 엔에 머물고 있다. 개인 소비 전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화에 대한 판매액은 줄어들고 있다.

[그림 7-5] 일본 소매업 매출액 및 사업소 수



주: 2007년 이전과 이후는 연속된 조사가 아님.

자료: 総務省. (2012). 経済センサス.

経済産業省. (2014). 商業統計表.

이러한 전체적인 소매업 시장 판매액은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업체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매출액 추이를 유통 업체별로 보면, 드럭스토어나 편의점은 일관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업체 간의 차이는 인구나 세대 구성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經濟産業省, 2014).

드럭스토어나 홈센터의 업체 확대는 보건의료나 주거 지출액이 큰 고령자 세대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백화점이나 자동차 소매업의 시장이 저조한 배경에는 의류나 자동차 수요가 많은 30대 미만 세대의 소비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식음료 구입에서는 편의점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1인 가구(30~59세)의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전 등 기계 기구 소매업 시장의 축소는 비교적 지출이 높은 40~50대의 2인 이상 세대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에 크게 변동이 없는 슈퍼마켓은 주력 상품인 음식료품의 지출액이 세대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일본의 연령별 소비 지출 항목의 변화를 보면, 20~30대는 집값, 외식비, 의복비, 교통, 통신비 등의 비중이 높고, 40~50대는 교육 관련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은 식료품, 주거 유지 수선, 보건의료, 가사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經濟企画庁国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1991).

나. 고령자의 소비

(1) 고령자의 소비 성향 변화

현재의 고령자는 이전 고령자와는 달리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고령자는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한다.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소비 욕구는 억제하면서도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출하는 성향이 있어, 소비 수요가 다양할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고품질을 추구하는 측면마저 보인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으로는 개인차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출이 곤란해지거나, 움직임이 둔해지고, 위험을 회피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건강에 관한 항목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한편, 신체적인 체력 저하로 인해 사소한 일상생활 속의 집 안 고장 수리, 무거운 짐 정리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면서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일들이 늘어난다.

기존에 치매 환자에 대한 대응은 일반인과 격리된 공간의 생활을 상정했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에는 치매 환자가 일반인과

같은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 공동체 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함에 따라 유통 업체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를 배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로 당분을 줄이고 알코올 도수를 조정한 와인, 염분을 줄인 저염식 식품, 칼슘 강화, 저칼로리 식품, 부드러운 음식 등을 만들어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고령자의 칼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칼슘이나 칼슘 흡수를 배려한 비타민디를 더 보충하거나, 종래의 마가린에 비해 저지방, 저염분이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낮추는 리노르산 함유가 높은 홍화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노인 독신 가구 증가와 소비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독신 고령 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신 세대는 가족이나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부부 세대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시 즉시 1인 가구로 고립적이 된다.

노인 독신 가구의 지출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외식과 반조리 식품이다. 65세 이상 고령 독신 세대의 식품 지출 구성을 보면, 신선 제품 등 식소재 관련 지출이 적은 반면, 외식이나 조리된 반찬류의 구매 비중이 늘고 있다. 같은 고령 세대에서도 독신과 일반 세대는 차이가 난다.

구매 행동의 패턴도 달라지는데, 식품 슈퍼의 이용에 있어 고령 독신자가 중시하는 것은 거리와 가격이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격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독신 세대에서 그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독신자가 식품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거리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거리에서 장보기를 해

결하려는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독신 세대의 입장에서는 근거리 장보기가 매우 절박한 요망 사항인데, 물리적인 근거리뿐만 아니라 구매 거리를 가장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인터넷 구매에 대한 요구도 높다. 기혼 고령자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데 비해, 독신 고령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의 인센티브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3) 노노개호 세대 증가

개호자와 피개호자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를 노노개호 세대라고 하는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 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노노개호 비중도 25%로 높아 개호의 가족 의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노개호뿐만 아니라 ‘개호이직’도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고령 세대의 자녀 세대는 대부분 편도 1시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가 부모의 개호를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노노개호의 경우, 식사를 준비하는 측이나 개호를 받는 측이나 동일하여 소비 지출도 고령 세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개호 세대와 일반 고령 세대의 식품 지출 내역을 보면, 개호 세대에서는 신선 식품 등의 소재 지출이 적고 조리 식품이나 외식의 지출이 높는데, 이는 개호를 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장보기와 요리에 시간이 덜 걸리는 메뉴로 정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고령자를 위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제품 설계나 서비스에서 고령자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1991년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 설계 시 어떤 고려를 하는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고령자의 체력 저하, 이해력 저하, 시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經濟企画庁国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1991). 체력 저하에 맞추어, 고령자들이 구매자인 경우에는 운반하기 쉽게 경량화나 안전 설계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력 저하를 배려하여 최대한 제품의 기능을 간편하게 하고, 취급 설명서를 알기 쉽게 만들고 있다. 시력 저하에 맞추기 위해서는 문자를 대문자로 사용하고, 배색이나 조명에 주의를 하고 있다. 청력 저하에도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 설계는 상품뿐 아니라 상업 시설의 유통 업체에서도 그대로 응용되어 백화점이나 종합슈퍼 등의 간판이나 설명서 등에도 활용되었다.

〈표 7-3〉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 설계

신체적 저하 내용	구체적인 배려 사례
체력 저하	운반하기 쉽게 경량화, 안전 설계
이해력 저하	간편 조작, 취급 설명서를 알기 쉽게
시력 저하	문자는 대문자로, 배색 주의, 조명 고려
기억력 저하	조작 기능 단순화, 사용 순서에 맞는 설명
청력 저하	음량 고려
기타	가족의 이해를 도모

자료: 經濟企画庁国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1991). 高齢化と消費者問題: 今'何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

한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기능성, 안정성, 개인차의 대응, 개호하는 측의 편리성을 고려할 것, 의복 등의 디자인 색채를 밝게 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설명서에 대해서 고령자를 배려하는 기업은 “설명에 이미지를 붙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글자를 크게 한다”, “쉬운 문장을 쓴다”, “전문 용어 사용을 피한다”, “영어 등 외래어/영어의 약자를 피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즉, 1991년 당시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고령자를 위해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고령 소비자의 클레임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전문 상담 창구를 갖고 있는 기업이 50% 정도에 이르렀다. 클레임의 예를 들면, “구입한 상품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니 환불해 달라”, “취급 방법을 모르겠다”, “제품 배달이 늦다”, “자신에 맞는 제품이 아니다”, 상품의 기능 불량, 복잡한 다기능 부착, 부품 부족 등이다. 클레임 대상 제품을 조사해 본 결과, 취급 제품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이나 설명서 등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5) 고령화사회와 자동차 소비

고령화사회나 독신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양상은 유통업 이외 다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우, 도요타는 최근 2018년 일본 내 완성차 생산을 올해보다 5만 대 줄인다고 발표한 것이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었다(이혜미, 2017). 이는 고령화사회와 독신 가구 증가라는 현상이 맞물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동차의 신구매 수요보다 폐기 처분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한편, 젊은 층은 가치관의 변화로 개인의 소유보다는 필요할 때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개념이 늘

어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의 구매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재화에 대한 소비 패턴은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한 집당 한 개에서 가족 구성원별로 개별 수요로 나타났다. 이는 재화를 소유한다는 자산 개념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 소유보다는 렌트 내지는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이미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30대에서는 점차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층이 늘고 있다. 이러한 재화에 대한 공유의 개념은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의 변화, 사별, 이혼, 만혼, 비혼 등 혼인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일본 내각부의 세대 구조 변화 조사에 의하면(總務省統計局, 2014), 1인 가구의 소비액은 2인 이상의 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2인 이상의 세대와 독신 세대 간 세대주의 연령별 소비를 비교해 보면, 40대까지는 독신 세대가 소비액이 많고, 60세 이후에는 반대로 2인 이상 세대의 소비액이 크다. 각 지출 내역을 살펴 보면, 모든 연령 계층에서 2인 이상의 세대가 지출하는 교육 등 자녀 관련 비용이 독신 세대에 비해 크다. 2인 이상의 근로 세대로 한정해 보면, 맞벌이 부부의 소비는 외벌이 세대를 능가한다.

(1) 소비의 개별화

최근에는 소비의 개별화가 진전되고 있어 기존의 4인(부, 모, 2자녀)으

로 구성된 표준 가족의 개념의 가구나 집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 또는 개별화의 개념으로 소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더 이상 표준적인 가족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 가족에서도 가장의 잔업,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 등 가정 내에서 소비의 개별화 현상이 진작부터 감지되었으며, 주택 환경에서도 가정 내 1인 1실로 인해 생활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 집에 한 개씩 있던 가전제품이나 생활 제품도 가구당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별로 개별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고,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가족 내에서도 생활이나 정서를 더욱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 자동차, TV, 컴퓨터, 에어컨, 책상, 오디오, 욕실 등도 점차 구성원별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제조 회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판매 촉진 내지 광고도 개별 제품 생산에 맞추고 있으며, 기존의 화장품이나 치약, 칫솔, 신발, 의류 등도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남녀노소 각각의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개별 기업들은 더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개별 수요 시장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산요전기는 1984년에 It's 시리즈를 발매하였다. 이는 진학이나 취직으로 혼자 살게 된 독신자를 위해서 19아이템의 싱글 대상 가전 전용 브랜드이다(日本フクダ生命, 2005). 타이거 보온병도 싱글용 전기밥솥, 전기포트 등 6개 제품을 세트로 빔 시리즈를 발매했다. 메이커뿐 아니라 가전 양판점 고지마에서도 프레시(フレッシュレー) 시리즈, 릴랙스(ハッピーラックス) 시리즈의 판매 전략을 세웠다.

(2) 식문화의 변화(반조리 식품에서 개별식으로, 식생활의 개인화) ‘내식’(肉食, 나이쇼쿠)과 ‘반조리 식품’(中食, 나카쇼쿠)¹⁵⁾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 되고, 가정 내에서도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메뉴가 각각인 개별식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요시노야 같은 혼자 먹는 식당이 인기가 있는 반면, 패밀리 레스토랑은 점차 축소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독신 가구가 늘면서, 이전처럼 전 가족분의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던 식생활 패턴에서 점차 간단히 요리를 하는 식생활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반조리 식품이다. 반조리 식품(중식, 나카쇼쿠)이란 가정 내에서 조리한 것을 가정 내에서 먹는 내식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외식의 중간적 식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조어이다. 이러한 반조리 식품 시장의 확대는 고령자 증가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와 여성들의 취업과도 연관이 있다. 여성 취업자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바쁜 여성들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내식을 준비할 만큼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 만들기’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유통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의 장보는 시간은 하루에 15분 정도라고 할 만큼 짧아지고 있다. 무엇을 어디서 살 것인지보다는 단시간에 끝내는 것이 더 중요시되어, 역에서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 등의 쇼핑이 늘고 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온라인 구매도 늘어나 가격이나 품질보다는 편리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30대의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전업주부(외벌이) 가구는 줄어드

15) 日本フクダ生命 (2005) 자료로 재구성함.

는 반면, 맞벌이 가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소매업도 중요한 타깃층으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의 반조리 식품 시장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확대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와 일하는 여성의 증가로 식자재를 손질하지 않고, 단순한 조리법으로 요리가 가능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식품업체들이 HMR 시장에 뛰어들면서 제품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이규진, 박성준, 2017).

라. 가치관의 변화

최근의 소비 실태를 보면, 고도성장기와 달리 사고 싶은 재화가 많지 않다는 답변이 나온다. 반대로 가시화된 재화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소비 성향 또한 예전처럼 가족을 위해 본인의 소비를 억제하기보다는 본인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 취미로 배우는 일이나 미용, 콘서트 등 자기계발이나 자기만족, 자기 몸을 가꾸는 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 패턴이 다르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개호 용품, 개호식, 저칼로리 식품, 건강식품, 취미나 건강 유지 교실, 배우는 세미나나 여행, 만남의 장소 코너 등에 수요가 크다. 고소득자이나 쓸 시간이 없으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40대 남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조리식, 고서비스품이나 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미용, 여행, 미식 등에 관심이 많으며,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고령자와 달리 컴퓨터 이용에 익숙하나 낮 시간의 부재로 인터넷 쇼핑

에 의한 택배 수취의 어려움이 있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가구 유형이나 성별 및 연령별로 소비 성향이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확한 니즈 파악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소비 패턴과 달리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재화에 관한 소비는 줄고, 미용이나 여행, 체험 등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식문화도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있고 고급스러운 점포에는 과감히 고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음식도 대량보다는 소품종이면서 특색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소비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표 7-4〉 소비 가치관의 변화

종류	소비 성향 변화
재화	내구재 소비 감소
서비스	미용, 여행, 체험, 자기계발
음식	개성, 고급, 소품종 다양성

최근의 소비 동향의 하나로 선택적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이 독립함에 따라 본인의 이상이나 기호를 고려하여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국세조사에 따른 전국소비실태조사의 가구원 수별 소비 지출을 살펴보면, 식료와 광열비 등 기초적 지출이나 교육비 등은 단순히 가구원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별 차이가 없다. 주거비는 1인 가구에서 16.2%로 단연 높고, 2인 가구 7.6%, 3인 가구 6.4% 등으로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1인당 지출이 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 교양오락, 피복 및 신발, 미용 서비스 등의 선택적 지출 비율이 높고, 외식은 2인 가구, 3인 가구 등에서 높다. 따라서 소비 구조에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비나 교육비의 비율

은 줄고, 교양오락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적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フクダ生命, 2005).

3.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소비 영향과 유통 영향

가. 소매업의 현황과 과제¹⁶⁾

일본의 소비 시장은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유통 업체들은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해외 시장을 보면, 2008년 리먼 쇼크의 영향은 있지만 중국을 위시하여 아시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는 2008년에 글로벌서비스연구회를 개최하고, 산하 분과회인 소비재 유통워킹그룹에서는 소매업이 팽창하는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다.

일본의 소매업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 시 일본의 소비재 메이커(식료품, 일용 잡화, 어패럴)가 연계하여 동시에 진출하면 국내 소매업의 상권도 확대되고, 해외 판로도 대규모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소매업 정책을 보면, 신규 출점 시 소음 대책이나 환경 평가, 지역이나 고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배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토록 유도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기업 모델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유통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기업과 정부의 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한다. 최근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기존의 단순한 단품 상

16) 高橋直人.(2009). 小売業の現状と課題—小売り業界のフロンティア.의 내용을 재구성함.

품 수출에서 도시 인프라 수출까지 복수 기업에 의한 원세트 진출로 바뀌고 있어, 직접 진출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아시아 신흥시장에서는 외자계의 자본 규제, 프랜차이즈의 상법, 정령 규제 등 출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관민 협동이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이러한 각국의 제도적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도 현지 정부의 제도를 명확하게 숙지함과 동시에 현지 정부와의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진출한 자사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현지 경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얼마나 현지 소비자에게 이익인지를 기업 스스로가 상대국 정부와 소비자에 대해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만약, 상대국의 정책과 규제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정부의 통상외교정책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도 규제의 위법성과 비합리성 등을 현지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현지국 규제의 배경이나 취지, 도입 경위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 7-5〉 신흥경제국 서비스업의 GDP 비율과 경제 성장률

국가명	서비스업의 GDP 비율		GDP 경제 성장률 2000-2005
	1990년	2005년	
한국	50	56	3.7
대만	-	71	0.6
중국	31	40	10
타이	50	46	4.5
베트남	39	38	6.9
인도	41	54	8.5
터키	52	65	5
러시아	35	56	6
일본	58	68	1.7

자료: 高橋直人, (2009). 小売業の現状と課題—小売業界のフロンティア. 日本貿易会月報, 2009年6月号, No. 671.

나. 쇼핑 약자

일본에서 쇼핑 약자 내지 쇼핑 난민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매스컴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일본 총무성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와 사업자가 쇼핑 약자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쇼핑 약자 대책에 관한 실태조사’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쇼핑 약자의 기준과 실태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쇼핑 약자’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법령에서도 이 용어를 명확히 사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성이나 경제산업성에서 정하는 기준을 암묵적으로 쇼핑 약자로 간주한다.

2009년 경제산업성에서 쇼핑 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쇼핑 약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내각부가 실시한 ‘2010년 고령자의 주택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식 조사 결과’에서는 “일상적 쇼핑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였다. 이에 2014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4198만 명을 곱해서 쇼핑 약자는 약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 발표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쇼핑 약자 600만~700만 명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유식자 간담회인 ‘지역 생활 인프라를 지탱하는 유통형태연구회’에서 2010년 5월에 공표한 보고서에서는 ‘유통 기능 및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식료품 등 일상적 쇼핑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쇼핑 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2011년 5월에 공표한 '쇼핑 약자 응원 매뉴얼 버전 2.0'에서는 쇼핑 약자 맵을 작성함에 있어, 신선 식품(청과, 생선, 정육)을 취급하는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고령자의 평균 도보 가능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1인 혹은 2인 가구의 65세 이상을 쇼핑 약자로 간주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쇼핑 약자 및 쇼핑 난민 등의 포털 사이트에 있어서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식료품의 구입이나 음식에 불편이나 고충을 느끼는 자', 즉 쇼핑 난민, 쇼핑 약자, 쇼핑 곤란자 등을 쇼핑 약자로 보고 있다. 이에 덧붙여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는 국세조사 및 상업통계를 이용하여 자택에서 신선 식료품을 판매하는 점포까지의 직선 거리가 500미터 이상이면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인구를 쇼핑 약자로 보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10년 현재 전체 850만 명 쇼핑 약자 중 65세 이상은 약 38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00미터 이상, 65세 이상"이라는 쇼핑 약자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지방권에서는 8.0%가 증가한 데 비해, 도쿄권에서는 24.6%(3대 도시권 평균은 20.4%)로 지방권뿐만 아니라 도쿄권도 쇼핑 약자의 잠재군에 들어감을 지적했다.

〈표 7-6〉 신선품 점포까지 500미터 이상의 거주지 인구추계(2010년)

(단위: 만 명)

	500미터 이상				자동차 비소유자			
	인구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1	아이치	283.3	홋카이도	61.6	가나가와	58.2	홋카이도	24.8
2	홋카이도	238.5	아이치	56.9	오사카	53.3	오사카	22.8
3	지바	223.8	지바	50.2	홋카이도	52.2	가나가와	22.0
4	사이타마	215.9	효고	47.0	도쿄	50.6	효고	21.3
5	효고	195.4	사이타마	46.2	효고	46.2	지바	19.0
6	가나가와	182.4	이바라키	39.5	아이치	44.6	사이타마	17.8
7	이바라키	173.8	가나가와	37.4	사이타마	44.0	도쿄	17.2
8	오사카	151.8	시즈오카	35.3	지바	43.9	아이치	16.5
9	시즈오카	145.8	나가노	34.2	시즈오카	30.1	후쿠오카	14.6
10	후쿠오카	138.1	후쿠오카	34.2	히로시마	25.3	히로시마	12.0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食料品アクセス(買い物弱者・買い物難民等, www.maff.go.jp에서 2017. 10. 30. 인출.

각 지자체별로도 쇼핑 약자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예를 들어 나가노현의 경우에는 일상의 쇼핑에 불편함을 느끼는 자로 500미터 이내에 상점이 없고, 도보나 자전거로 쇼핑을 할 수 없으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이치현은 나가노현의 조건에 더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 때문에 아이치현의 쇼핑 약자의 추계는 다음과 같이 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표 7-7〉 아이치현의 쇼핑 약자 추계(2012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기관별 기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나가노현	아이치현
쇼핑 약자 수	310,807명	146,726명	88,351명	82,040명

주: 아이치현의 「소비쇼핑환경조사사업-쇼핑환경 및 쇼핑행동에 관한 앙케트조사결과보고서」(2013. 5.)에 기초한 자료로 충무성에서 작성.

자료: 日本総務省, (2017. 7. 19.). 買い物弱者対策に関する実態調査.

(2) 쇼핑 약자 발생 원인

쇼핑 약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리적 문제나 사회 구조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점포의 감소 등의 이유로 향후에도 쇼핑 약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의 진전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생활자(또는 가구 단위)가 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걷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져 쇼핑 약자가 늘어나게 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과소화 현상이 나타나 지역 상점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공공 교통 기관의 이용자 감소로 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쇼핑이 어려워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제산업성의 상업통계에 의하면, 음식료품 소매 사업소는 2007년에 약 39만 개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24만 개로 급감했다. 그중 신선 용품 소매업(야채, 과일 소매업, 생선 소매업 및 식육 소매업)의 사업소는 2007년 약 5만 7000개에서 2014년에는 약 3만 6000개로 약 40%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주택 지구 내 감소율이 높았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나 상업 점포의 감소 요인으로 향후에도 쇼핑 약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 및 지자체의 쇼핑 약자 대책

2010년 쇼핑 약자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후 쇼핑 약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후로도

2015년 내각부가 실시한 ‘국토 형성 계획의 추진에 관한 여론 조사’(2015년 8월 조사)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자택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시설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일용품,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 73.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개인 상점 등 소규모의 소매 점포, 편의점’이 69.6%로 나타나 생활 기반으로서 슈퍼나 편의점 등의 쇼핑 환경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

경제산업성이 2016년 4월에 발표한 ‘지방 공공 단체에 있어서 쇼핑 약자 지원 관련 제도 일람’을 보면, 쇼핑 약자의 지원 내용은 보조금, 조성금, 인적 지원, 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28도현 495시정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쇼핑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2017년 정부나 지자체의 ‘쇼핑 약자에 대한 대책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 7-8>과 같다. 정부의 경우, 쇼핑 약자 대책을 관장하는 명확한 소관 부서는 없지만, 각 관계 부서별로 추진되는 아래의 시책들이 궁극적으로 쇼핑 약자의 대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된다.

<표 7-8> 중앙 부처의 쇼핑 약자 관련 사업

정부 부서	쇼핑 약자 관련 사업
내각부	지방 재생 등
총무성	과소 대책, 지역 ICT 등
후생성	고령자 복지 등
농수산	식품 유통 등
경제산업성	유통 정책, 상업 진흥, 중소기업 진흥 등
국토교통성	물류 개선, 국토 계획, 지역 교통 확보 등

자료: 日本総務省. (2017. 7. 19.). 買い物弱者対策に関する実態調査.

경제산업성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과소화에 의해 생활 인프라가 약체화된 과제에 대한 사업(택배, 이동 판매,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과 연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經濟産業省, 2012:

地域生活インフラを支える流通のあり方研究会報告書, 2012. 5.).

지역 주체들의 연계에 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년 12월에는 사업자 등에 의한 대응의 선진 사례집과 그 사례를 정리한 ‘쇼핑 약자를 위한 매뉴얼(제1판)’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쇼핑 약자 지원 사업으로 지역 상업 활성화 사업비 보조금(쇼핑 약자 대책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12개의 사업을 채택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쇼핑 약자/푸드 디저트 문제 등의 현상 및 향후 대책의 형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쇼핑 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까지 상품을 배달한다’(택배, 쇼핑 대행, 배식), ‘근처에 점포를 만든다’(이동 판매, 매장 개설), ‘집에서 외출하기 쉽게 한다’(이동 수단의 제공), ‘커뮤니티를 형성한다’(회식), ‘물류를 개선·효율화한다’(콤팩트 시티, 물류 효율화)의 5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성은 2016년도 보조 사업에 있어서 ‘쇼핑 곤란자 대상 스타트업’(2017년 3월 공표)에서 쇼핑 약자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점포를 만든다’, ‘점포까지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상품을 배달한다’(택배) 내지 ‘이동 판매를 한다’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7-9〉 쇼핑 약자에 대한 관련 정부 대책

관련 부처	대응책의 내용
농림수산성	1. 점포를 만든다 2. 점포까지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3. 상품을 배달한다(택배) 4. 이동 판매를 한다
경제산업성	1. 집까지 상품을 배달한다(택배, 쇼핑 대행, 배식) 2. 근처에 점포를 만든다(이동 판매, 매장 개설) 3. 집에서 외출하기 쉽게 한다(이동 수단의 제공) 4. 커뮤니티를 형성한다(회식 등) 5. 물류의 개선/효율화(콤팩트 시티, 물류 효율화)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쇼핑 약자 대책 사업은 총 35개였고, 그 외 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복지, 지역 상업 진흥, 지역 교

통 확보,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쇼핑 약자 대책과 연관이 되는 사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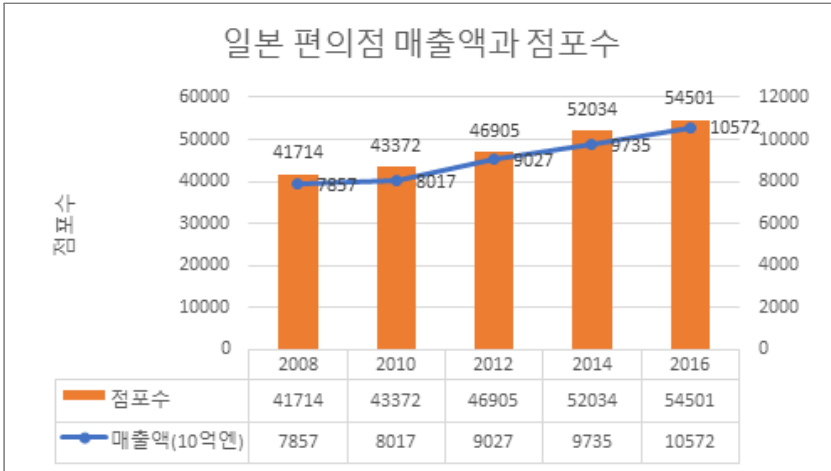
2017년 총무성의 쇼핑 약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떤 형태든 쇼핑 약자에 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 공공 단체는 87개 단체 중 43개 단체로 약 반수 정도였다.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쇼핑 약자 대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회답이 반 정도였다. 쇼핑 약자 대책의 추진 체계(연락 회의, 소관 부국 등)를 갖고 있는 지방 공공 단체는 87개 단체 중 22개 단체로 다른 관계 부서를 통합한 정부 전체의 연계 체계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4. 인구 및 가구 변화와 유통 업체 대응 전략

가. 편의점의 약진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산업성은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힘든 쇼핑 약자가 600만~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 소비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세대 이상 가족 구성원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로 교외에 있는 쇼핑몰에 가서 가족들이 같이 쇼핑을 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근처의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장을 보는 비중이 늘어났다. 지난해 편의점 매장 수는 우체국이나 주유소보다 월등히 많은 5만 1814개로 전국에 점조직처럼 퍼져 있고, 매출액 또한 10조 4232억 엔을 나타냈다.

[그림 7-6] 일본 편의점 매출액과 점포 수



자료: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www.jfa-fc.or.jp에서 2017. 9. 15. 인출.

한편, 인구의 도심 회귀, 행동반경이 좁은 고령자의 증가, 일하는 주부의 증가에 의해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상권도 점차 좁아졌다. 식료품 슈퍼나 편의점, 드럭스토어가 주택가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도심부에는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근거리 점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도심지 집중화는 상업 시설의 신규 출점도 한층 도심지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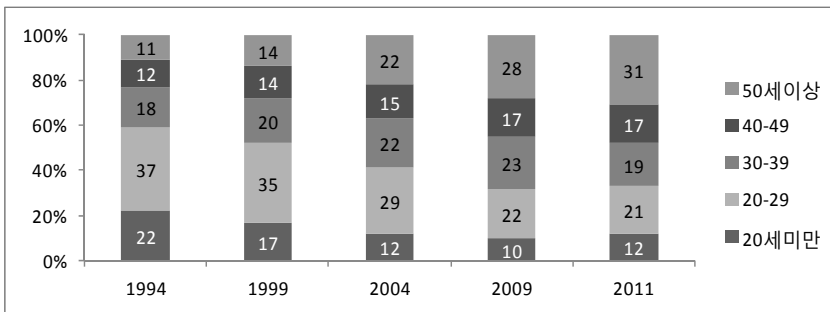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에서 편의점은 상품 판매의 상업 활동의 본연적 기능 외에 쇼핑 약자 지원, 고령자 및 치매 환자도우미 지원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요금 지불, 택배물 수령 및 예약, 버스/항공권/콘서트 표 구입, 우편 업무, 수납 대행, 로또 구매, 기타 주민표 수취 등 행정 기관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 기능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부대 기능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예로 로손은 2013년 10월에 ‘지역의 건강 거점-로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 건강을 제일 중시하는 점포-로손’을 사업 목표로 설

정하였다. 세부 전략으로 매일 먹는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미르 솔루션>과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셀프 메디케이션 서포트>의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미르 솔루션> 전략의 세부 항목으로는 맛있는 저당질, 야채 식단 등 10가지 테마를 기본으로 하는 상품 개발, 농업과의 연계, 소재와 가공 메이커와의 공동 개발을 세부 항목으로 추진하였다. <셀프 메디케이션>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건강지역 만들기,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기존 드라이 상품에서 슈퍼마켓의 주력 상품인 반찬(소자이)이나 커피점의 커피 등의 식료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편의점의 주 고객으로 젊은 독신 가구보다 고령자나 일하는 여성까지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7] 세븐일레븐의 내방객 연령 구성비



자료: 日本毎日新聞, (2014. 5. 13.). コンビニの客層変化.

로손은 2015년 4월 3일 사이타마현 카와구찌시에서 케어로손을 개점 하였다. 케어로손에서는 편의점의 표준적인 상품 외에 헬스케어에 관련된 성인 기저귀, 건강식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점포 내에 개호 상담창구 및 다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사롱공간을 만들었으며, 고령 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위해 인터넷 주문 상품에 대한 배송 서비스

스도 시작하였다.

고령화 대응 사례로는 세븐일레븐의 택배 서비스나 이동 판매 차량 시스템과 패밀리마트의 택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택배 서비스로 세븐라쿠라쿠탕배(세븐라쿠라쿠 오토도케빈)를 운영하고 있다. 점내에서 구입한 상품뿐 아니라 사전에 주문한 것조차 소형 전기자동차 [코무스]를 이용해 배달하고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에서는 일상적인 쇼핑이나 식사가 불편한 약자들을 위해 간단한 쇼핑이나 식생활을 서포트 하는 이동 판매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7-8] 세븐라쿠라쿠



[그림 7-9] 세븐안심배달; 이동 판매



<표 7-10> 고령자를 위한 편의점 택배 서비스

기업명	상품명	서비스 내역
세븐일레븐	세븐 미르	택배 서비스
로손	스마트 키친	정기 구매 서비스
패밀리마트	택배 쿡 123	택배 도시락 서비스

한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에서는 고령자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락 판매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는 것이다.

〈표 7-11〉 고령자와 1인 가구 고객을 위한 고급식

업체명	상품명	맛있는 소량 반찬 및 고급 식재
세븐일레븐	세븐프리미엄시리즈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고급식 소량 식재 판매, 간편 요리
패밀리마트	택배 쿡 123	고령자 전문 도시락 택배
로손	로손 100	편의점 이상의 신선 식품, 일본식 반찬

최근 세븐일레븐이 로손과는 다른 새로운 출점 전략을 펼치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17. 4.17).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최종적인 고객과의 접점은 사람이다. 편의점은 (1) 지리적인 편리성, (2) 필요한 상품을 바로 살 수 있는 편리성, (3) 청결감 등에서 다른 유통 업체보다 매력적이었으나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새로운 상품에 의한 쇼핑의 즐거움, 친절하게 대해 주는 점원으로 인한 안심 감동 등의 특색은 어느 편의점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어서 편의점별로 상품에 의한 차별화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내의 편의점 진출은 타 업체와는 다른 압도적 우위점을 갖고 있다. 특정 단지 내라는 지리적 편리성은 있으나, 단지 내라는 반경 안의 고객에 한정되어 과거에는 단지 내 출점은 꺼리는 편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븐일레븐은 고령자 독신 세대의 쇼핑 약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신규 출점지로서 단지 내 입점을 결정했다. 세븐일레븐은 단지 내 고령자를 위한 전지 교환, 식사 택배, 열쇠 분실 해결, 수도관 고장 수리, 대형 쓰레기 반출 등의 사소한 생활의 일상적인 일을 대행하게 된다.

[그림 7-10] 단지 내 편의점 서비스



자료: 日本經濟新聞. (2017. 4. 17). セブン、団地「守る」コンビニ100店・UR系と提携.

나. 드럭스토어의 성장

전체 소매업 매출액이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통 업체 중에서도 드럭스토어 업체는 계속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약국과 슈퍼마켓 결합 형태인 드럭스토어는 조제약과 일반 의약품과 화장품은 물론 일용품이나 식료품, 주류,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편의점보다 싸고, 매장은 편의점보다는 넓고 슈퍼보다는 작으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춘 개호 상품을 많이 구비하여 향후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럭스토어 업계 주요 5사의 2017년도 1/4분기 실적을 보면, 5사 모두 순이익이 동 기간 대비 과거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은 5사 모두 증가를 보였고, 각 사 모두 10~20개의 신규 점포의 출점 계획을 발표했다. 산드러그와 마쓰모토키요홀딩스는 약 30점포를 더 늘려 냉동 식품이나 일용 잡화 코너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식품의 가격대는 편의점보다 저렴하게 설정하고 화장품이나 조제약은 비교적 높은 마진율을 설정하여 총이익을 높이고 있다.

〈표 7-12〉 드럭스토어 5사의 경영 업적

(단위: 억 엔, %)

기업명	매출액	순이익
웰시아	1,670(9)	43(54)
	6,750(8)	150(4)
산드러그	1,380(6)	60(7)
	5,645(7)	248(7)
마쓰키요홀딩스	1,374(3)	57(10)
	5,600(5)	201(약간 증가)
스키홀딩스	1,125(5)	44(11)
	4,550(6)	157(5)
코코카라 에프	979(5)	25(79)
	3,900(3)	79(12)

자료: 日本經濟新聞 (2017. 8. 10.). 「ドラッグストア5社の4~6月・純利益最高・食品値引き奏功」*()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러한 드럭스토어의 약진은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세키약품의 경우를 보면, 세키약품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푸드 코너, 홈케어 코너, 뷰티 코너, 헬스 코너의 4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2013년 6월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중점 과제 중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건강정책의 목표도 기존의 단순한 평균수명 연장보다는 건강한 수명 연장으로 바뀌었다. ‘경제재정과 개혁 기본방침 2014’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도 공격부조적 성격보다는 각 주체에 의한 자조적인 셀프메디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생활자 중심의 드럭스토어의 존재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건강 증진에 관련된 헬스케어, 조제약과 일반약을 취급하는 드럭스토어는 다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슈퍼의 일상 식료품과 편의점의 일상 잡화도 취급하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도 경쟁력이 높다. 다만,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쇼핑 난민, 쇼핑 약자에의 대응, 타 소매업자의 경쟁 대응, 소비자에 대한 전문 지식 필요, 셀프메타케이션의 추진 등은 과제로 남을 것이다.

〈표 7-13〉 세키약품의 판매 제품

부문	제품 내용
푸드 부문	간단식(빵, 주먹밥), 반찬, 우유, 두부, 낫토, 다양한 개호식
홈케어 코너	일용 잡화, 개호 상품(기저귀)
뷰티 코너	잡화, 미용 다이어트 상품
헬스 코너	일반 약품, 조제 약품

다. 종합슈퍼의 고령자 및 1인 가구 증가 대응

이온은 편의점에 비해 절대적으로 넓은 매장 면적을 갖고 있어, 편의점과는 달리 상품 면뿐 아니라 이벤트 행사 실시 등 대규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점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온은 2025년까지 전국 100개에 시니어를 위한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日本經濟新聞, 2017. 8. 12.). 순회 버스의 운영을 통해 접근을 쉽게 할 뿐 아니라 지팡이나 노안경 등 시니어를 위한 상품 구색도 충실히 할 예정이다. 시니어를 타깃으로 할 대상 점포 수는 전체 슈퍼마켓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를 예상했다. 현재 도쿄의 가사이 점포를 위시하여 4개 점포에서 실험 운영 중이다. 2018년 2월 중에 12개 점포를 오픈하고 이후 연 10여 개 점포씩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표 7-14〉 이온 시니어 대상 점포의 서비스

	내용
이벤트	건강 체조 및 건강 상담
	취미 발표회 및 교류회
상품 면	저염 식품, 노안경, 지팡이, 여성용 가발, 개호 용품 등 진열품 수 및 매장 면적 확대
서비스	방문 케어 서비스
	순회 버스 운행
포인트	조기 내점 포인트 부여
	건강 포인트 및 워킹 포인트 부여

자료: 日本經濟新聞. (2017. 8. 12.). イオン、シニア向け100店.

이온은 매일 아침 7~9시 내점할 경우 포인트를 주고, 보행 수에 따른 포인트도 산정한다. 체조 교실이나 건강 식생활의 세미나, 취미 활동(짚이事)의 발표회 같은 행사도 거의 매일 실시한다. 행정이나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순회 버스 운행이나 건강 상담 코너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종합슈퍼마켓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온은 고령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새로운 경영 찬스를 모색하고 있다.

[그림 7-11] 시니어 중심 점포 이벤트 행사



자료: 日本經濟新聞. (2017. 8. 12.). イオン、シニア向け100店 巡回バスや習い事発表会 (大阪府茨木市).

제3절 한국과 일본 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한국과 일본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고독사, 워크 홀릭으로 인한 과로사, 도쿄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도시 일극 집중, 중앙 집권의 행정 관료 중심 사회 등 정도와 시간 차는 있지만 양국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서울 집중이 심각하다. 일본의 도쿄 수도권 집중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지만 서울 수도권은 2분의 1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기 이후 점차 서울, 부산, 대구 간의 격차가 벌어져 3대 대도시라기보다 서울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산이나 대구보다 서울에 인접한 인천 등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편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대도시 집중이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쿄와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의 3현으로의 인구 집중을 볼 수 있다.

고령화에서는 서양과 달리 일본의 고령화율이 매우 빠른 속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서 간 내지 남북 간의 거리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짧아서 인적 자원의 이동이나 물류비용 면에서 우월하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0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5000만 명에 비해 7000만 명이 더 많고, 비율로는 2.5배의 국내 소비 수요 시장이 있다. 보통 내수 시장으로 소비 시장이 충족되려면 최소한 7000만 명의 시장 규

모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의 시장이다. 1억 2000만 명을 가진 일본조차도 금후 30~50년 후에는 국내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로 국내 소비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지금부터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해외 진출의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특히 유통 산업의 해외 진출은, 일부 업종에 한해 1990년대 이후 시작하여 아직까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유통 업계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새로운 유통 업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후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불과 1980년대 까지도 백화점과 재래시장이라는 양극단의 두 형태밖에 유통 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은 상업 활동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백화점과 중소 상업이라는 상인들의 규모 차에 의한 갈등은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발생하여 규정된 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중소 간의 대립 갈등은 중소 상인의 법인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통 업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백화점, 양판점, 종합슈퍼, 전문점, 드럭스토어,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업 시설이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 업계가 전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유통 소매업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종합슈퍼의 이온그룹과 편의점의 세븐일레븐이 소매업의 혁신을 계속 주도하며 고령화나 대도시 인구 집중,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화점 전성시대로 백화점에서 일괄

적으로 대량 구입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 출신의 백화점들이 전문점과 양판점의 역할을 모두 대신하여 드럭스토어, 디스카운트스토어, DIY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전문점이나 양판점의 전개가 활발치 않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소비자들의 온라인 이용이 높고, IT 환경이 잘되어 있는 점에서 미래에는 온라인 시장의 전개와 잠재적 고객의 급증으로 이러한 부족한 업계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대신 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모든 분야의 일괄 구매가 가능한 곳으로 고급 브랜드의 최고급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이미지는 많이 희석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방문 외국인의 급증과 특히 폭발적인 구매 활동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백화점에서 다양한 상품에 대해 구색을 맞추어 놓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인구(고령화 등)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문은 미래 유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외국인의 방문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종합슈퍼와 편의점 외에도 일본에서는 드럭스토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화장품과 건강식품, 개호 식품, 일반 의약품, 약국 등을 합친 본격적인 드럭스토어의 전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판매 상품의 측면이 아닌 물류나 택배의 상황을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풍부한 젊은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스피디하고 신속 정확한 택배 배달의 서비스 시스템은 앞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택배 배달이 중요한 요인으로 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에 앞서갈 수 있는 한 요인이 되리라고 본다.

일본의 식료품 코너는 대가족의 해체로 인한 가구원 수의 감소나 1인 가구 증가, 일하는 바쁜 여성의 요인으로 종합슈퍼나 편의점을 막론하고

외식과 내식의 중간 영역인 증식(반조리 식품) 매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종교 관계 등 그룹 미팅이나 결혼식, 장례식, 입학식 등 집안 행사들이 많아 다수가 같이 모이는 일들이 많아 대량 식재료의 구매 기회가 많았으나, 이러한 풍조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대량 식재료 구매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진전으로 식재료도 소량화로 바뀌고 있고, 식재료도 내식에 필요한 것보다는 간편식이나 반조리품으로 바뀌고 있다. 방과 후 학원 수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고시원 생활, 가장들의 늦은 귀가 등 우리나라의 특이한 사정으로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느긋하게 가질 수 없는 것과,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간편식이나 메뉴의 개별화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와 가구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할 역할은 먼저 실태 파악이다. 일본의 경우, 1991년 ‘고령화와 소비화’라는 제목으로 경제기획청에서 고령자들의 소비 형태를 조사했다. 고령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고령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였다. 인구나 가구 전체의 거시적인 조사는 국세조사 등을 통해 통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령별로 나눈 소비자 내지 기업의 양측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소비 지출에 대한 항목뿐 아니라 직접 실생활에 필요한 장보기에 관한 배려이다. 보통 쇼핑 약자 또는 쇼핑 난민으로 불리는 것으로 고령자가 물리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인구나 가구의 변화에 따른 소비 시장이나 유통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보면, 처음에는 이 두 분야가 연관이 없이 따로따로 정책이 실시되었다. 어느 순간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쇼핑 약자에 대한 과제가 등장하고, 쇼핑 약자인 고령자가 원하는 시설이 주거지에 가

까운 상업 시설이라는 니즈가 밝혀지면서 유통과 고령자 대책이 함께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그 역할은 종합슈퍼보다는 본부 조직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서 점조직처럼 전국에 점포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의점이 일정 부분 떠맡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쇼핑 약자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본부 기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점포를 가진 편의점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고령자들에게 쇼핑 배달의 역할을 일임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실태조사와 택배 및 배달 서비스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집에 있는 고령자에게 식품을 배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능동적으로 고령자로 하여금 외출을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독사나 심리적인 외로움 불안감 등에서 벗어나고, 같이 시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점포라는 공간과 먹고 얘기하는 식도락의 시간을 가짐으로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해 택배나 이동 판매와 더불어 점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유통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인구 조사뿐 아니라 기업체와 생활자까지 포함된 다각도의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태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내각부, 총무성 등 관련 여러 중앙 부처 간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 나름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한 고령자나 독신 세대, 쇼핑 약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위에 정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본다.

제 8 장

가구 변화와 도시·농촌의 공간 구조 변화

제1절 미래 도시와 농촌의 가구 변화 특성 비교

제2절 가구의 변화가 도시·농촌의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미래의 도시·농촌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8

가구 변화와 도시·농촌의 << 공간 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훨씬 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덫'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안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총인구도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통계청(2017b)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가구 수는 2043년이 지나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가구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1인 또는 2인 가구의 분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및 가구 유형 변화 추세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향후 가구 변화 추세가 해당 지역의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가구 변화 추세에 따른 미래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는 이미 형성된 국토 공간 구조 특성과 패턴을 변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조 및 가구 유형 변화가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비수도권이나 농촌에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가구 수와 가구 유형의 변화는 주택 수요를 비롯한 토지 이용과 기반 시설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의 공동화 및 유희 시설 발생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개발 수요는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과잉 개발로 인해 미분양, 미입주 문제들이 현재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농업 부문의 개방화로 인해 농지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 단지의 노후화 문제는 향후 비수도권과 농촌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한편 도시 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다양한 개발 사례들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어 택지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들은 향후 국토 공간 구조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본 장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 변화 추세에 따라 지역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가구추계 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45년 시점까지 추계된 장래 가구 자료는 전국적인 차원의 자료이며 지역별 장래가구추계 자료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17b)에서 2045년까지 추계한 장래가구추계 자료와 통계청(2012)에서 2035년까지 추계한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하여 도시(洞)와 농촌(읍과 面),¹⁷⁾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¹⁸⁾를 추계하고, 이를

17)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17)는 2045년 시점까지이며, 시도별 가구추계(2012)는 2035년 시점까지이다. 따라서 사실상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식적인 장래가구추계 자료는 없다. 이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가구를 추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장래가구추계를 통한 공간 구조 변화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가구 변화 추세가 해당 지역의 공간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장래가구추계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2045년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 시기 동안 동, 읍, 면의 가구 통계 자료를 토대로 과거추세연장 보간법을 통해 2045년까지 5년 간격으로 가구 수를 추계하였다. 다양한 함수를 통해 미래 가구 수를 추계하는 보간법의 경우 어느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들이 있다. 필자는 보간법의 5가지 함수를 활

토대로 하여 2045년 시점까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가구 변화가 미래 해당 지역의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미래 도시와 농촌의 가구 변화 특성 비교

1. 총 가구 및 가구 증가율

통계청(2017b)의 장래가구추계¹⁹⁾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1901만 가구에서 2043년 2234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5년에는 22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가구 증가율을 보면 2015년 1.65%를 보이던 것이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2045년에는 가구 증가율이 -0.0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인구수는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가구 수는 1인 또는 2인 가구 분화로 인해서 2043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평균 가구원 수는 2015년 2.53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45년 2.1명까지 감소

용하여 가구 수를 각각 추제한 후,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결과를 채택하여 2045년 시점까지의 동, 읍, 면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로 활용하였다.

- 18) 통계청(2012)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장래가구추계는 2035년 시점까지이다. 따라서 2045년 시점까지의 가구를 추계하기 위하여 필자는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35년 시점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가구 비율을 산출한 후, 통계청의 2045년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맞추어 2040년과 2045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래 가구 수를 보간법을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45년 시점까지 가구추계 자료는 통계청이나 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추계 자료가 아니며, 연구 차원에서 필자가 추계한 것이다.
- 19) 장래가구추계에서 사용된 2015년 시점의 기준 가구 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수와는 차이가 있으며, 장래가구추계를 위해 사용한 기준 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연령별 가구 수(전수)에 혼인 상태별 분포(표본)를 반영하여 조정된 것이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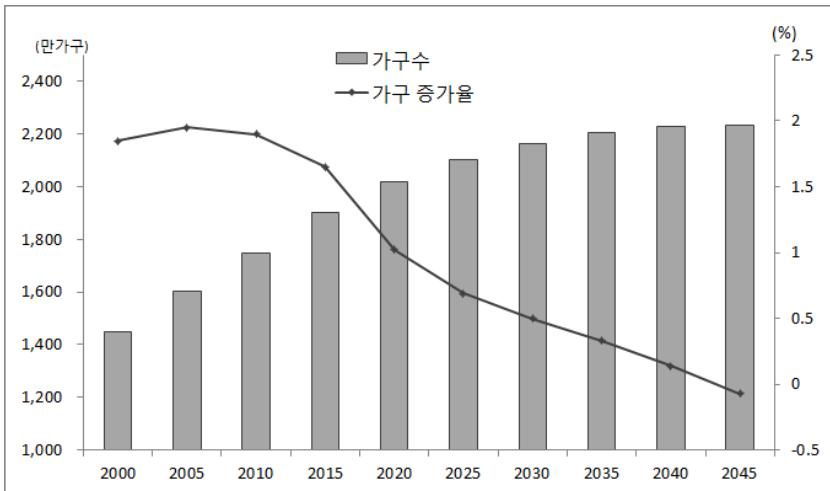
<표 8-1> 가구 증가율 및 평균 가구원 수, 2000~2045

(단위: 만 가구, %, 명)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일반 가구	가 구	1,450.7	1,603.9	1,749.5	1,901.3	2,017.4	2,101.4	2,164.1	2,206.7	2,230.6	2,231.8
	증가율	-	1.95	1.90	1.65	1.02	0.69	0.50	0.33	0.14	-0.07
평균 가구원 수		3.12	2.88	2.70	2.53	2.42	2.34	2.28	2.22	2.17	2.10

주: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임.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그림 8-1] 총 가구 및 가구 증가율, 2000~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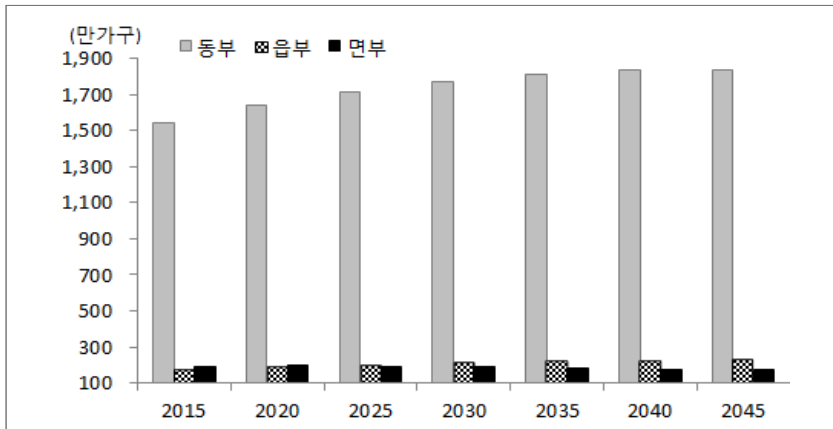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이러한 전국적 추세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미래 가구 변화 추세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²⁰⁾ 향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의 가구 추세

20)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래가구추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구간으로 하여, 필자가 2000~2015년 동안의 지역별 가구 변화 추이를 토대로

를 보면 도시에 살고 있는 가구가 전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1.0%→2045년 82.2%로 증가). 농촌의 경우 읍부의 가구 비중은 약간 증가하지만, 면부는 2015년 10.1%에서 2045년 7.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洞)부와 읍(邑)부의 가구 수는 2045년까지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면(面)부의 가구 수는 2020년 약 196만 가구를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 결과 면부의 경우 2015~2045년 동안 약 20만 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가구 감소 여파도 농촌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림 8-2] 동부읍부면부의 총 가구 수 변화, 2015~2045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동읍면의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보간법을 활용하여 추계한 것임.

(표 8-2) 동부읍부면부의 가구 수 변화 추세와 가구 수 증감(2015~20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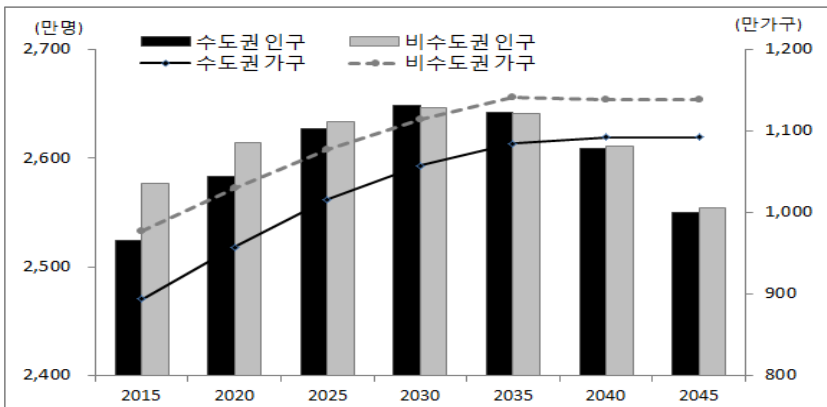
(단위 : 만 가구)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증감 수
동 부	1540.8	1638.2	1710.5	1768.0	1807.3	1831.4	1834.5	293.7
읍 부	168.7	183.6	197.5	207.8	216.3	2230.6	225.4	56.7
면 부	191.8	195.7	193.3	188.3	1832	1762.2	171.8	-19.9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동읍면의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한편 향후 3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가구 추세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45년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49.9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가구 비중은 48.9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 가구나 2인 부부 가구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모두 인구는 2035년부터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데 비해 가구의 감소 추세는 2040년 이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3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와 가구 수 변화, 2015~2045



자료: 통계청의 장래 인구, 가구 추계자료를 근간으로 2035년 시점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 변화를 산출하고 이를 보간법을 통해 2045년 시점까지 필자가 추계한 것임.

〈표 8-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 수 변화 추세와 가구 수 증가(2015~2045년)

(단위: 만 가구)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증가 수
수도권	908.5	972.0	1019.7	1053.9	1075.6	1092.6	1092.4	183.9
비수도권	992.8	1045.4	1081.7	1110.7	1131.2	1138.1	1139.3	146.5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동읍면의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2. 가구 유형과 가구원 수

통계청(2017b)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2045년 동안 가구 유형이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친족 가구 비중은 2015년 71.6%에서 2045년 62.4%로 감소된다. 또한 가구 유형도 2015년에는 부부+자녀 가구(32.3%), 1인 가구(27.2%), 부부 가구(15.5%) 순으로 나타났으나, 2045년에는 1인 가구(36.3%), 부부 가구(21.2%), 부부+자녀 가구(15.9%) 순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8-4〉 가구 유형별 가구의 변화, 2015~2045

(단위: 만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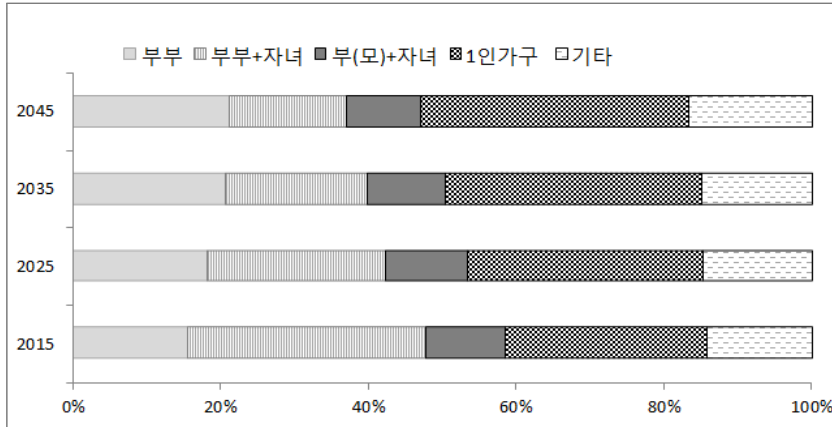
구분	2015	2025	2035	2045	연평균 변화	
계	1,901.3	2,101.4	2,206.7	2,231.8	11.0	
친족 가구	계	1,362.0	1,403.9	1,416.5	1,392.8	1.0
	부부	295.2	384.9	456.0	474.2	6.0
	부부+자녀	613.2	507.5	424.8	354.1	-8.6
	부+자녀	53.5	67.2	73.8	75.1	0.7
	모+자녀	151.7	163.1	160.5	150.6	0.0
	3세대 이상 ¹⁾	103.4	85.9	74.6	64.5	-1.3
	기타 ²⁾	145.0	195.3	226.7	274.3	4.3
1인 가구	518.0	670.1	763.5	809.8	9.7	
비친족 가구	21.4	27.4	26.8	29.1	0.3	

주: 1) 부부+미혼자녀+부(모), 3세대 이상 기타

2) 가구주+형제자매(기타 친인척), 1세대 기타, 부부+부(모),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2세대 기타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그림 8-4]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2015~2045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이에 따라 2015년 27.2%이던 1인 가구 비중이 2045년에는 36.3%로 증가하며, 2인 가구 비중도 26.1%에서 35%까지 증가하는 반면에 4인 가구는 18.8%에서 7.4%까지 감소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2.3%에서 15.9%로 절반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1인 가구 수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2045년 809만 8000가구로 증가하여, 2045년 시점이 되면 1인 가구가 가장 보편화된 가족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1인 가구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령층별로 보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을 선택하여 혼자 살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년의 경우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떨어져 살거나, 혹은 이혼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별로 인해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5년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보면 30대의 비중이 18.5%로 가장 높고, 20대 17.2%, 50대 16.7%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2045년 시점에서 1인 가구의 연령층을 보면 70대가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우 연령층별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여성의 경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2045년 1인 가구 가운데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여성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노령화될수록 홀로 사는 할머니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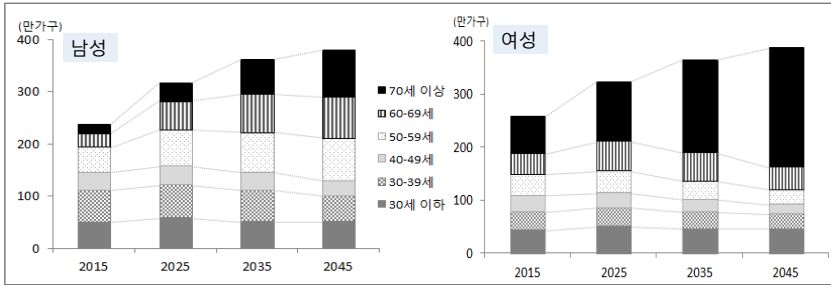
〈표 8-5〉 1인 가구의 연령층별 비중 변화, 2015~2045

(단위 : %)

	남성 가구 구성비				여성 가구 구성비			
	2015	2025	2035	2045	2015	2025	2035	2045
계	50.0	51.7	52.2	52.1	50.0	48.3	47.8	47.9
19세 이하	0.6	0.4	0.4	0.4	0.6	0.4	0.4	0.4
20~29세	9.4	8.5	6.5	6.0	7.8	7.1	5.6	5.3
30~39세	11.8	9.4	7.9	6.2	6.7	5.3	4.4	3.5
40~49세	10.5	9.7	9.1	8.5	5.9	4.2	3.0	2.2
50~59세	9.1	10.3	10.1	10.0	7.6	6.2	4.5	3.4
60~69세	5.0	8.2	9.7	9.7	7.8	8.5	7.0	5.2
70~79세	2.6	3.7	6.5	8.1	8.7	9.1	13.1	13.4
80세 이상	1.0	1.5	2.0	3.1	4.9	7.5	9.8	14.5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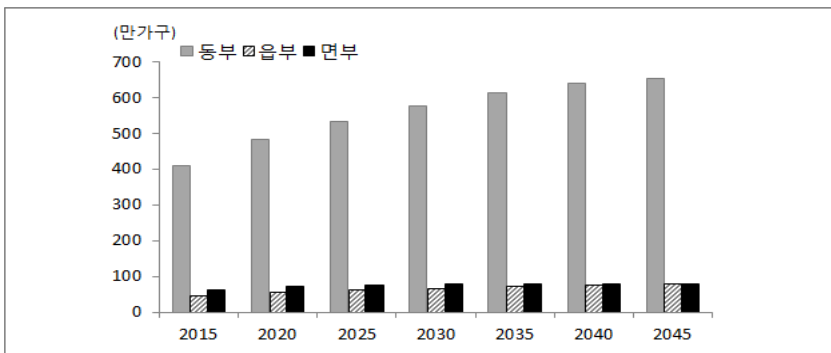
[그림 8-5] 성·연령별 1인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한편 1인 가구의 변화 추세를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지역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부와 읍부에서의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더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45년 시점에서 전국 1인 가구 가운데 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은 약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읍부의 1인 가구 증가 추세도 면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어 2045년 시점에는 읍부와 면부의 1인 가구 비중은 약 10%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6] 동부읍부면부별 1인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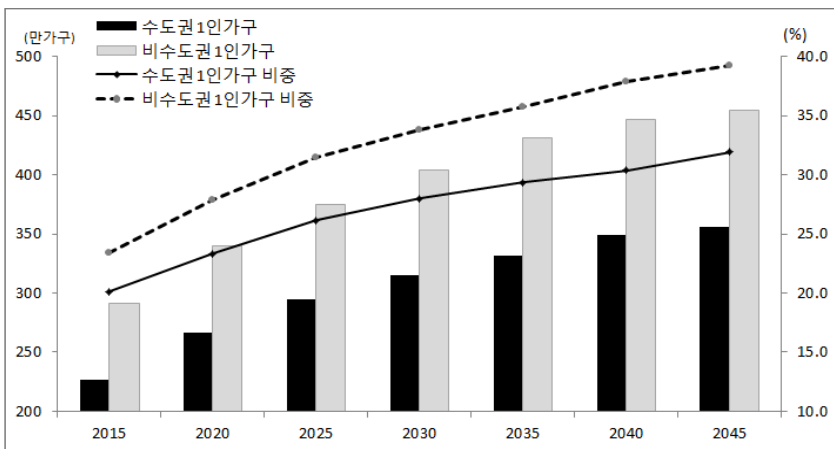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동·읍·면의 1인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한편 향후 3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1인 가구 추세를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15.3%에서 2045년 20.4%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도 2015년 11.9%에서 2045년 15.9%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약 4.5%포인트 더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2015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5가구 가운데 1가구(20.1%)가 1인 가구이던 것이 2045년에는 그 비율이 31.9%로 높아질 전망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 23.4%에서 2045년에는 39.2%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2045년 비수도권의 경우 10가구 가운데 약 4가구는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수도권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노인 독거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8-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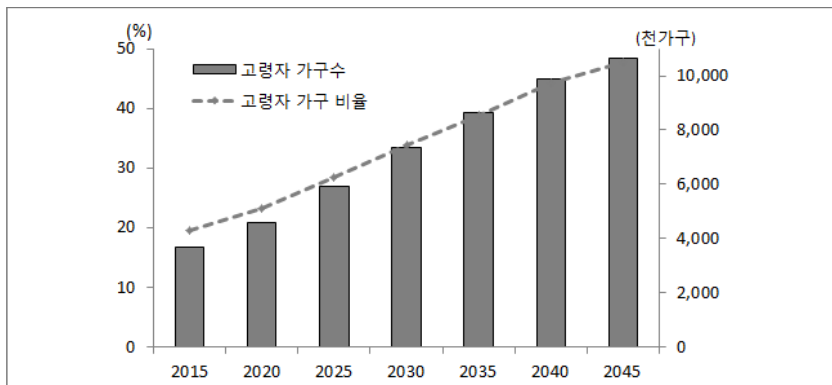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3. 고령 가구와 여성 가구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5년 366만 가구(19.3%)에서 2045년 1065만 가구(47.7%)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2045년에는 10가구 중 약 4.8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주가 될 것임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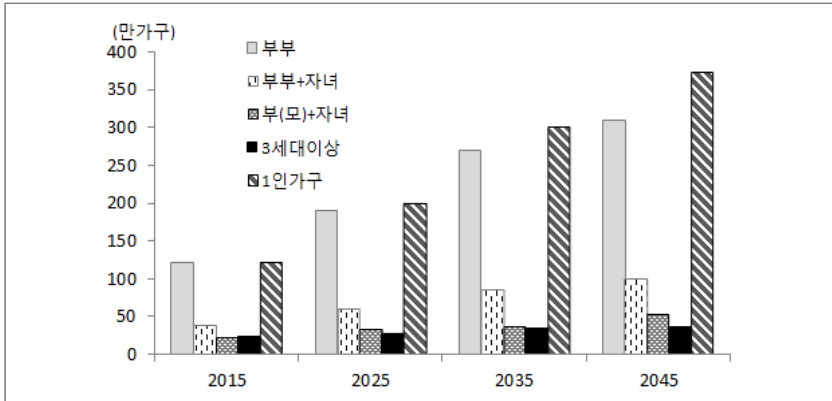
한편 204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가구 유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경우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2015년에 비해 3.1배 증가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부부 가구도 2015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15년 30.1%에서 2045년 12.4%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된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자녀의 비중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8] 고령자 가구 수 증가와 구성비 변화, 2015~2045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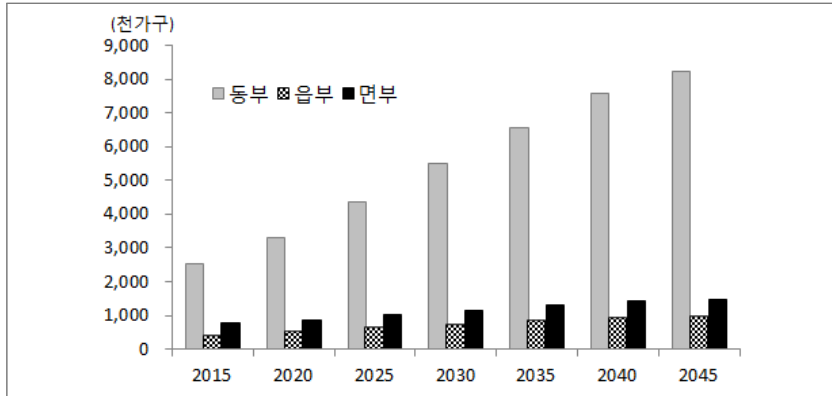
[그림 8-9] 고령자 가구의 가구 유형의 변화 2015~2045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한편 고령 가구의 변화 추세를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지역에서 고령 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부와 면부에서의 고령 가구 수 증가 추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면부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에 동부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면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은 20.8%로 전국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45년에는 그 비율이 13.9%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에 2045년이 되면 동부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2015년 69.2%에서 2045년 77.3%로 높아져서 전국 고령자 가구 10명 중 7.7명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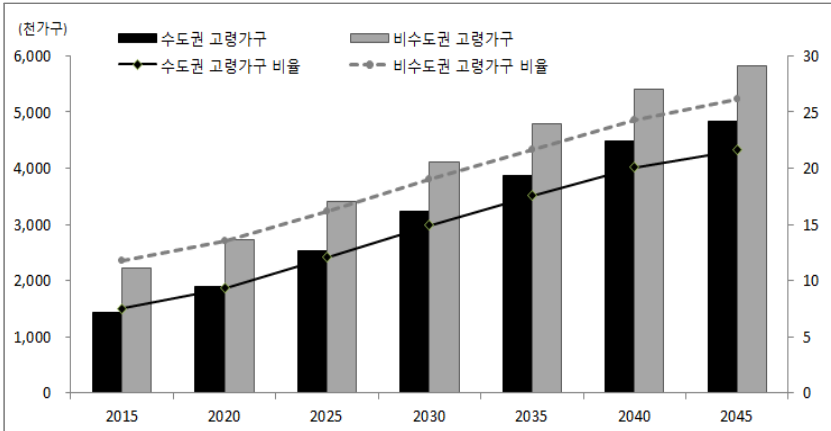
[그림 8-10] 동부·읍부·면부의 고령 가구의 변화 추세, 2015~2045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동·읍·면의 고령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한편 향후 3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고령자 가구 추세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고령 가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의 고령 가구 증가 추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45년 고령 가구 수는 2015년에 비해 3.4배 증가할 전망이다.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2.6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 고령 가구 전체의 39.1%가 수도권에 거주하던 것이 2045년에는 45.3%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비수도권 고령 가구 비중은 2015년 60.9%에서 2045년 54.7%로 낮아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2015년 수도권의 전체 가구 중 고령 가구 비율이 7.5%이던 것이 2045년이 되면 그 비율이 21.6%로 증가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5가구 중 1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에서도 고령 가구의 비중이 2015년 11.7%에서 2045년 26.1%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의 고령 가구 비중이 증가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 추세와 더불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 가구의 증가 추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림 8-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 가구와 고령 가구 비율 변화, 2015~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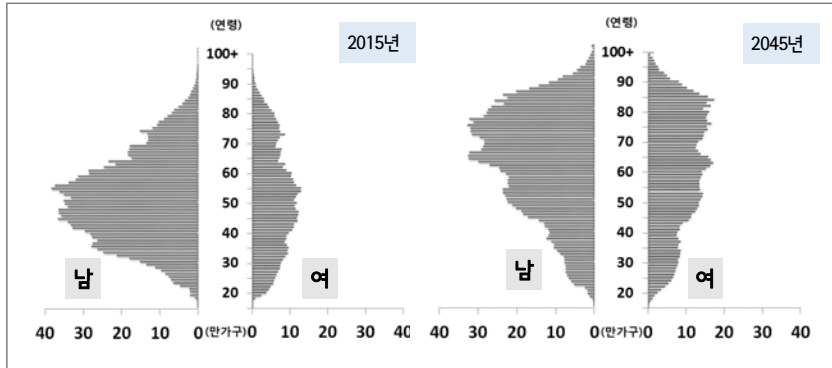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참조하고 2000~2015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한편 성별 가구주의 변화를 보면 2015년 남자 가구주가 70.6%, 여자 가구주가 29.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점차 미혼 가구 증가 및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에 의해 사별 가구가 늘면서 2045년까지 여자 가구주는 2015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2045년 여성 가구주 비율은 38.2%로 증가되는 반면에 남성 가구주 비율은 61.8%로 줄어들 전망이다(통계청, 2017b).

특히 가구주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비교해 보면 2015년 남자는 20대부터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급격히 커지면서 60대 초반의 가구주 비율이 87.4%로 가장 높은 반면에 여자는 20대 초반부터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80대 초반에 45.3%로 가장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45년에는 남자는 30~74세 연령층 가구주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20대 초반 및 75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자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가구주 비율이 증가하지만, 특히 고령층에서의 여성 가구주 비율 증가 폭이 상당히 커지게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7b).

[그림 8-12] 성연령별 가구주 변화, 2015, 2045년



자료: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45년 우리나라 가구 수, 가구 구조, 가구 유형의 변화를 요약한다면 인구수에 비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4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가구 수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증가되는 가구 수는 가구 유형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가구의 고령화, 여성 가구의 증가, 가구원 수의 감소를 대표적 변화라고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가구 수, 가구 구조, 가구 유형의 변화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구 수 증가는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1인 가구나 고령 가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농촌이나 비수도권에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의 성과 연령, 가구 유형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소비 생활 패턴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가구 구조와 가구 유형의 변화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여 어디에

서 거주하든지 최소한의 기초 생활 유지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가구의 변화가 도시농촌의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도시나 농촌의 공간 구조는 공간적으로 분화된 다양한 활동들의 토지 이용과 이들 간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교통망과 교통수단에 따라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공간 구조는 지역 내 주어진 입지에 대한 지불용의지대 곡선에 따른 토지 이용 패턴과 가로망, 그리고 경제활동 및 여가와 쇼핑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의 공간적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교통 흐름이 증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지구로의 집중화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의 인구 밀도가 높고 혼잡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지체 시간과 혼잡도로 인해 통행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며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 효과도 상당히 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밀도가 낮고 통행 수요가 감소되는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중교통 지향적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래 가구 변화 추세가 미래 도시와 농촌,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토지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변화, 주택 수요의 변화, 그리고 교통 및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도시 지역 및 주거 지역 면적 변화

우리나라 토지의 용도 지역 면적을 보면 2015년 말 전체 용도 지역 면적(10만 6061km²) 가운데 농림 지역이 4만 9326km²(46.51%), 관리 지역이 2만 7171km²(25.62%), 도시 지역이 1만 7614km²(16.61%),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1만 1950km²(11.27%)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면적의 16.6%를 차지하는 도시 지역 면적 가운데 녹지 지역 1만 2647km²(71.8%), 주거 지역 2620km²(14.9%), 공업 지역 1158km²(6.6%), 미지정 지역 860km²(4.9%), 상업 지역 329km²(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시 지역 면적의 71.8%가 녹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도시 지역에서 용도 지역 면적의 증감을 보면, 시가화 지역(주거 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면적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녹지 지역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5년 말 전체 국토 면적의 83.4%(8만 8448km²)를 차지하는 비도시 지역 면적 가운데 농림 지역이 46.5%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 지역은 26.5%를 차지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도 관리 지역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 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 지역 면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국립 공원), 농림 지역(농업 진흥 지역 및 보전 산지)의 일부가 관리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도시 지역 면적 가운데 일단 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면 도시 지역 또는 시가화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용도 지역별 면적을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도시 지역 면적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수도권의 도시 지역 면적은 4538km²인 데 비해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 면적은 1만 3075km²로 약 2.9배 더 높다. 그러나 도시 지역 면적 가운데 시가화 면적이 차지

하는 비율은 수도권이 28.8%로 비수도권(21.4%)에 비해 더 높아서 수도권의 경우 도시 지역 면적 가운데 녹지 지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말해 준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비도시 지역 면적이 수도권에 비해 10.7배나 더 넓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 지역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59.8%인 데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16.2%에 불과하다. 이는 가구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표 8-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용도 지역별 면적 비교, 2015년

(단위: km²)

구분	도시 지역						시가화/ 도시 지역 비율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전국	17613.6	2620.2	328.9	1157.8	12647.1	859.6	23.3
수도권	4538.1	987.1	109.7	209	3141.1	91.2	28.8
비수도권	13075.6	1633.1	219.3	948.8	9506	768.4	21.4

구분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비율
	(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전국	88447.7	27171.2	49326.4	11950.1	19.9
수도권	7584.6	3315.8	3838.7	430.1	59.8
비수도권	80863.1	23855.4	45487.7	11520.1	16.2

주: 시가화 면적은 주거 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면적을 합친 면적임.

자료: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한편 2045년까지 용도 지역별 면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소비 면적의 변화 추세를 전망해 보면 전반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밀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지역의 가구 밀도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15년 2002가구/km²에서 2045년 2407가구/km²로 가구 밀도가 약 20% 높아지

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759가구/km²에서 871가구/km²로 약 14.7%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들에 비해 더 조밀하게 살게 될 것임을 말해 준다. 특히 2045년 시점에서 수도권의 가구 밀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약 2.76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도권에서의 가구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 경우 수도권의 가구 밀도는 2045년 1만 1067가구/km²로 매우 높아지며, 비수도권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2045년 주거 지역 가구 밀도는 6976가구/km²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거 지역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당 밀도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들에 비해 약 1.59배 더 조밀한 주거 지역에서 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과 주거 지역의 가구 밀도 변화, 2015~2045

가구 밀도(가구/km ²)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도시 지역	수도권	2002.0	2247.0	2370.1	2407.3
	비수도권	759.3	827.2	865.1	871.3
주거 지역	수도권	9204.1	10330.6	10896.5	11067.3
	비수도권	6078.9	6623.1	6926.3	6976.2
시가지	수도권	6957.8	7809.4	8237.2	8366.3
	비수도권	3544.1	3861.4	4038.2	4067.3

한편 2045년까지 용도 지역별 면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가구당 소비하는 토지 면적의 변화 추세를 보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든지 간에 가구당 소비하는 토지 면적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소비하는 도시 지역 면적은 2045년 415m²인 데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당

소비하는 도시 지역 면적은 1148㎡로 약 2.8배 더 넓다. 또한 2045년 가구당 소비하는 주거 면적의 차이를 보면 수도권(90㎡/가구) 가구에 비해 비수도권(143㎡/가구) 가구가 약 1.6배 더 넓은 면적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거주하게 될 가구 수의 차이는 매우 미미한 데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당 소비하는 도시 지역 면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당 도시 지역 소비 면적에 비해 훨씬 더 넓게 나타나는 것은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 면적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넓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8-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토지 소비 면적 변화, 2015~2045년

가구당 소비 면적(㎡/가구)		2015	2025	2035	2045
도시 지역	수도권	500	445	422	415
	비수도권	1317	1209	1156	1148
주거 지역	수도권	109	97	92	90
	비수도권	165	151	144	143
시가지	수도권	144	128	121	120
	비수도권	282	259	248	246

주: 2045년까지 용도 지역의 면적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2045년까지 장래추계가구를 토대로 하여 산출함.

한편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가구당 토지 면적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는 농촌이라고 볼 수 있는 군(郡)부의 경우 도시 계획상 용도 지역으로 분류되는 도시 지역 면적 자체가 워낙 작으며, 따라서 주거 지역 면적도 상당히 작기 때문이다. 반면에 농촌의 경우 비도시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 면적이 훨씬 더 넓다. 전반적으로 2045년 시점까지 가구 변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도시 지역 면적에 대한 가구 밀도와 가구당 소비하는 주거 지역 면적의 변화를 보면 농촌의 가구 밀도가 도시의 가구 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의 도시 지역 면적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이다. 2045년 시점에서 농촌의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밀도는 1597가구/㎢인 데 비해 도시는 1213가구/㎢로 약 1.3배 농촌이 더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밀도를 비교해 보면 농촌은 1만 3746가구/㎢이지만 도시는 7869가구/㎢로 농촌이 약 1.75배 더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2045년 시점이 되면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에 비해 더 조밀한 주거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도시 지역이나 주거 지역 면적 자체는 매우 좁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넓은 비도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보다 쾌적한 전원적인 경관 속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표 8-9〉 도시와 농촌의 도시 지역·주거 지역의 가구 밀도 변화, 2015~2045년

가구 밀도(가구/㎢)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도시 지역	시부	1018.7	1130.8	1194.8	1212.8
	군부	1449.0	1571.2	1605.6	1596.9
주거 지역	시부	6609.6	7337.4	7752.7	7869.3
	군부	12472.4	13524.3	13820.8	13745.7
시가지	시부	4238.6	4705.3	4971.6	5046.4
	군부	7642.3	8286.9	8468.6	8422.6

한편 2045년까지 용도 지역 면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소비하는 토지 면적을 보면 가구 수는 증가할 것이므로 가구당 소비하는 토지 면적은 감소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도시 가구와 농촌의 경우 가구당 소비하는 토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당 소비하는 도시 지역 면적은 2045년 626㎡인 데 비해 도시의 가구당 소비하는 도시 지역 면적은 825㎡로 도시 가구가 더 넓은 면적

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45년 가구당 소비하는 주거 면적도 도시 가구(127㎡/가구)가 농촌 가구(73㎡/가구)에 비해 더 넓은 주거 지역 토지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45년 도시 가구 수가 농촌 가구 수에 비해 약 4.6배 많지만 주거 지역 면적은 약 8.1배나 더 넓기 때문이며,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약 1.7배 더 넓은 주거 면적을 소비하며 살게 될 것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토지 이용 계획 및 정책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표 8-10〉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토지 소비 면적의 변화, 2015~2045년

가구당 소비 면적(㎡/가구)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도시 지역	시부	982	884	837	825
	군부	690	636	623	626
주거 지역	시부	151	136	129	127
	군부	80	74	72	73
시가지	시부	236	213	201	198
	군부	131	121	118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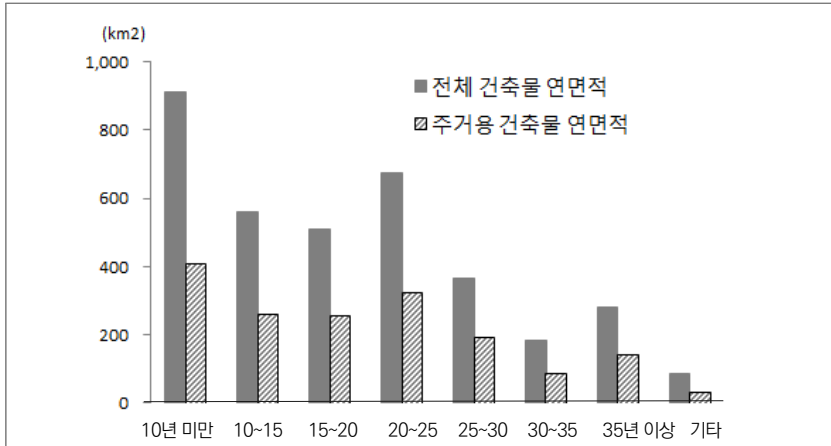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의 노후도 추세

2016년 말 건축물의 준공 시점별 경과 연수를 보면 건축물²¹⁾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건축물 동²²⁾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준공 후 35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자체는 작지만 건축물 동 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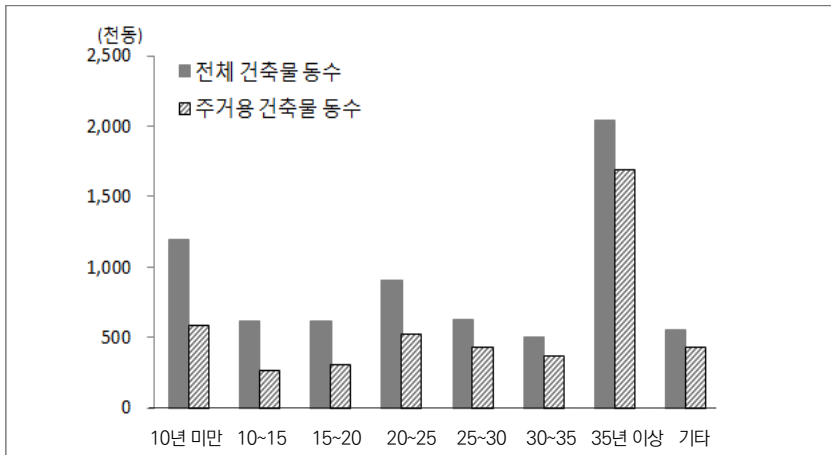
22)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1동 단위로 작성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 상업, 공업, 문교·사회, 기타 용도로 구분한다. 건축물의 각 용도별 연면적은 정확하게 산출되지만, 건축물 동의 경우 총별 대표 용도를 동별 용도로 간주하고 용도별 건축물의 동 수를 산정한다.

[그림 8-13] 전체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경과 연도별 분포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그림 8-14] 전체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동 수의 경과 연도별 분포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이는 단독 주택이나 저층 주택의 경우 건축물 동 수는 많지만 건축물 연면적 자체는 작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5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수가 상당히 많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준공 연도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16년 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체 건축물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물 동 수를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건축물 동 수를 갖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이 건축물 동 수는 훨씬 더 많으나 저층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비수도권에 연면적이 작은 단독 주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음을 말해 준다.

〈표 8-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교

(단위:km², 천 동, m², 동)

	전체 건축물		주거 건축물		가구당 전체 건축물		가구당 주거 건축물	
	연면적	동	연면적	동	연면적	동	연면적	동
수도권	1611.9	216	791.3	136	177.4	0.216	87.1	0.136
비수도권	1961.7	513	908.0	337	197.6	0.513	91.5	0.338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표 8-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교

연면적/동	전체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단독 주택	
	동 수 (천 동)	연면적 (km ²)	동 수 (천 동)	연면적 (km ²)	동 수 (천 동)	연면적 (km ²)
수도권	498.9	180.3	373.0	82.2	695.4	86.7
비수도권	2044.4	282.0	1684.5	147.8	2890.6	245.9

비중	전체 건축물		주거 건축물		단독 주택	
	동(%)	연면적(%)	동(%)	연면적(%)	동(%)	연면적(%)
수도권	19.6	39.0	18.1	35.7	56.1	11.0
비수도권	80.4	61.0	81.9	64.3	86.3	27.1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한편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약 254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80.4%가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단독 주택의 경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6.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경우 신축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경우 오래되고 낡은 단독 주택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약 35%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인 데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그 비율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노후화되었고 이들은 주로 단독 주택들임을 말해 준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노후 건축물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노후 건축물 동 수가 수도권에 비해 약 4.1배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30년 이상 된 단독 주택 동 수가 수도권에 비해 3.8배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당 30년 이상 된 단독 주택 연면적으로 비교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2.6배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에 노후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으며, 이는 향후 비수도권에서 건축물 소멸과 재건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표 8-1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당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교

가구당 건축물	전체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단독 주택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수도권	0.55	19.85	0.41	9.05	0.77	9.54
비수도권	2.06	28.41	1.70	14.89	2.91	24.77
비수도권/수도권	3.75	1.43	4.13	1.65	3.80	2.60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한편 도시(市)와 농촌(郡)의 노후 건축물 비중을 비교해 보면 농촌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도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군별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동 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만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후 주택 수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도시가 농촌에 비해 건축물 연면적이 훨씬 더 넓지만,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비중은 농촌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농촌의 노후 건축물(연면적 기준)이 비중은 17.8%인 데 비해 도시는 12.2%로 농촌의 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노후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농촌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도가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농촌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비중은 27.2%임). 이렇게 농촌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촌에 상당히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들이 많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가구당 노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보면 도시의 가구 수가 농촌에 비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도시의 가구당 노후 건축물 연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4〉 도시와 농촌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과 가구당 노후 건축물 비교

(단위: km²,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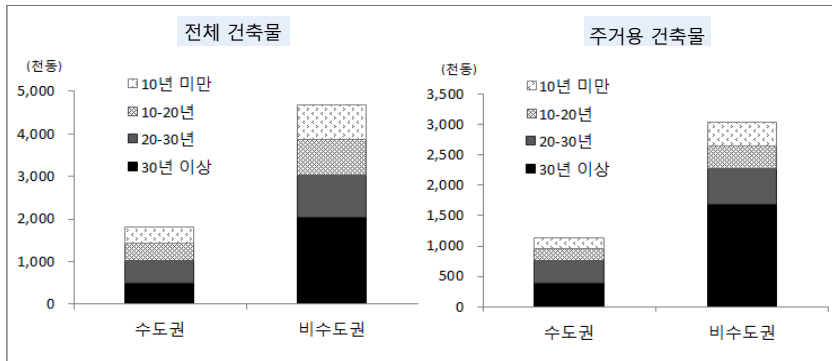
구분	건축물 연면적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연면적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	
	전체	주거	전체	주거용	전체	주거용
도시	3264.0	1581.9	399.6	192.6	12.2	12.2
농촌	353.5	137.1	62.8	37.3	17.8	27.2

가구당	가구당 건축물 연면적(m ²)		가구당 30년 이상 건축물 연면적(m ²)	
	전체	주거용	전체	주거
도시	211.83	102.66	25.93	12.50
농촌	98.07	38.05	17.41	10.36

주: 각 시군별 노후 건축물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의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경과 연수를 건축물 동 수로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건축물(동)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축물 비중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건축물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3.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주택의 55.5%는 이미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들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신축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10년 미만의 건축물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도 전체 건축물의 20%, 주거용 건축물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10년 미만 건축물 비중을 보면 전체 건축물의 17%,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의 13%만이 건축된 지 10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신축 주택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 동 수의 경과 연수별 분포



주: 10년 미만(2008~2016년), 10~20년 미만(1998~2007년), 20~30년 미만(1988~1997년), 30년 이상(~1987년)임.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표 8-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 동 수의 경과 연수별 분포

(단위: 천 동, %)

전체 건축물		30년 이상	20~30년	10~20년	10년 미만
수도권	동	498.861	538.443	407.935	360.369
	비중	27.6	29.8	22.6	20.0
비수도권	동	2044.356	997.695	820.709	831.414
	비중	43.6	21.3	17.5	17.7
주거용 건축물		30년 이상	20~30년	10~20년	10년 미만
수도권	동	372.968	371.522	197.509	181.766
	비중	33.2	33.1	17.6	16.2
비수도권	동	1684.481	574.508	376.576	401.737
	비중	55.5	18.9	12.4	13.2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한편 향후 30년 후인 2045년 시점에서 건축물의 멸실과 존치 수준을 전망해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 경과 연수에 따른 멸실률을 비교해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멸실률이 수도권의 경우 62%, 비수도권의 경우 71.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노후 건축물의 멸실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수도권에 그만큼 노후 불량한 단독 주택들이 많기 때문임을 시사해 준다.

〈표 8-1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동)의 경과 연수별 멸실률

(단위: %)

용도	지역	30년 이상	20~30년	10~20년	10년 미만
전체 건축물	수도권	53.86	29.41	11.17	5.56
	비수도권	55.97	22.54	14.53	6.96
주거용 건축물	수도권	62.19	30.40	5.43	1.98
	비수도권	71.59	18.12	7.21	3.08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표 8-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축물의 경과 연수별 멸실에 따른 존치 건축물 비교

(단위: 천 동, %)

건축물	수도권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존치율
		존치	1805.6	1086.6	579.6	
전체 건축물	멸실	← 718.9 → ← 507.0 → ← 312.2 →				
	비수도권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존치율
	존치	4694.2	2685.6	1419.9	625.1	13.3
	멸실	← 2008.6 → ← 1265.7 → ← 794.8 →				
주거 건축물	수도권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존치율
	존치	1123.8	590.8	278.1	105.1	9.4
	멸실	← 532.9 → ← 312.8 → ← 172.9 →				
	비수도권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존치율
	존치	3037.3	1322.9	575.1	163.4	5.4
	멸실	← 1714.4 → ← 747.7 → ← 411.7 →				

자료: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그러나 향후 30년 후인 2045년이 되면 현재 건축물의 경과 연수가 모두 30년이 지나게 되며, 이는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멸실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2016년도에 집계된 건축물 경과 연수에 따른 멸실률을 2045년 시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얼마나 건축물이 멸실되며 또 존치되는가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약 15%, 주거용 건축물의 9.4%만이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워낙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단독 주택 수가 많기 때문에 2045년 시점에서 존치될 주거용 건축물은 불과 5.4%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상태로 주택 수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향후 30년 동안 287만 동의 주택이 재건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신시가지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재건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노후 불량 주택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이 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빈집 발생 추세와 가구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전망

가. 빈집 발생 추세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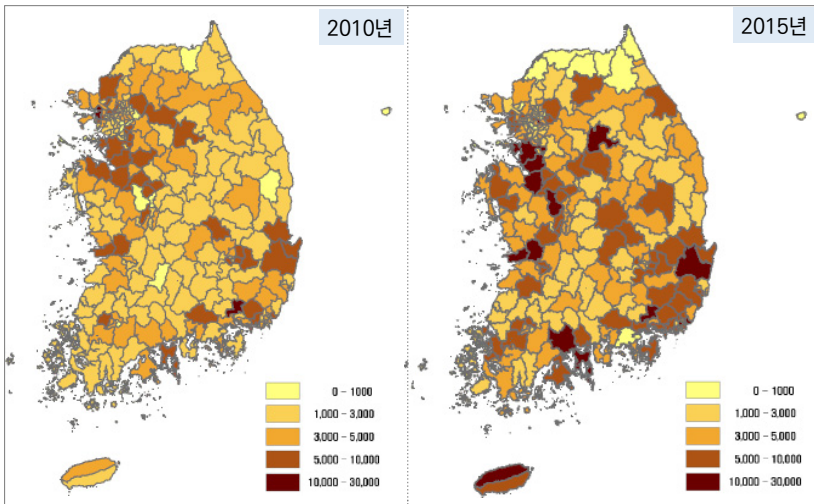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2015년 106만 9000호(총 주택 1636만 7000호의 6.5%)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00년 51만 3000호에 비해 약 2배, 2010년 81만 9000호보다 25만 호 증가한 것이다(통계청, 2015). 그뿐만 아니라 2015년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빈집 포함)은 총 주택 수의 43.8%인 716만 4000호에 달하여, 향후 빈집의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수는 경기도가 125만 2000호로 가장 많고 서울시, 부산시 순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0여 년 동안 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빈집 수가 증가하면서 농촌의 빈집 비율은 도시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동(洞)의 빈집 비율은 5.1%, 읍은 8.8%인 데 비해 면은 1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면부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빈집 비율보다 약 2배 이상 빈집 비율이 높음을 말해 준다. 이들 빈집 가운데 29.3%가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상당히 오래된 낡은 주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증감과 상관없이 빈집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주택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빈집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광역화로 인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도시들의 경우 워낙 주택 재고량이 많아 빈집 수(절대적 총량)가 많게 집계되는 반면에, 중소 도시나 농촌의 경우 빈집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빈집 수/총 주택 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전망한 주거 건축물의 경우 건축된 지 이미 30년이 지

난 주택들이 많으며, 그 가운데 약 30% 정도가 빈집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빈집 수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다. 도시보다 농촌의 주택 노후화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농촌 빈집 비율도 도시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도시와 농촌에서의 빈집 비율 격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5년 시점에서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비율이 16.3%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노후 주택 비율이 13.4%에 불과한 데 비해 전남의 경우 그 비율이 33.9%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빈집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2.8%인 데 비해 전남은 13.8%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빈집 수를 구·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경우 화성, 평택, 아산, 세종, 군산, 익산, 순천, 여수시 등에서 1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빈집에는 미분양, 미입주로 인해 비어 있는 주택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림 8-16] 구·시·군별 빈집 수의 분포 변화, 2010~2015



자료: 통계청. (20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나. 가구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 전망

주택 보급률은 일반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주택 수/일반 가구 수×100)로 정의된다. 주택 보급률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에 비하여 주택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특히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 주는 양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주택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00년에는 1147만 1000호, 2005년 1322만 3000호, 2010년에는 1474만 8000호, 2015년 주택 수(빈집 포함)는 1636만 7000호로 증가되었다. 특히 2010~2015년 동안 주택 공급이 161만 8000호(11.0%) 증가하였다. 이렇게 최근 주택 공급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주택난이 심각한 편이다. 또한 201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83.0호로 2010년 대비 19.2호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통계청, 2015).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가구당 주택 수를 산출해 보면 전국 차원에서 한 가구당 0.837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洞)부와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주택 수가 각각 0.806, 0.7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이나 동부의 경우 거주지로서의 선호도가 높아 살고자 하는 가구 수는 많은 데 비해 주택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아직 주택난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농촌의 경우 한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8〉 가구당 주택 수의 지역별 비교

	가구	주택	가구당 주택 수
전 국	19,560,603	16,367,006	0.837
동 부	15,842,155	12,770,134	0.806
읍 부	1,737,415	1,614,808	0.929
면 부	1,981,033	1,982,064	1.000
수도권	9,518,698	7,429,045	0.781
비수도권	10,041,905	8,937,961	0.890

자료: 통계청. (2015).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 8-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1995	2000	2005	2010	2015
전국	214.5	248.7	330.4	356.8	383
수도권	191.2	221.6	314.7	336.2	356.8
비수도권	233.9	272	345	376.8	4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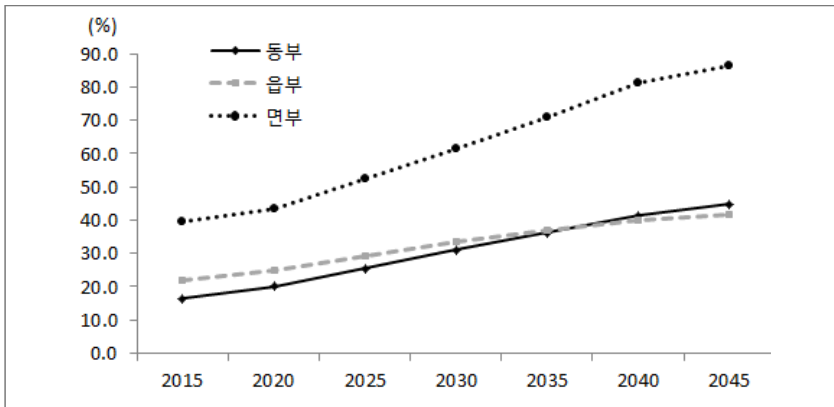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5).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우리나라의 경우 2043년까지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주택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2043년 시점까지 인구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또는 2인 가구로의 분화에 따라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가구가 증가하는 수준만큼 주택의 재고량도 증가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가구 수와 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 수급도 이러한 가구 변화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면부)에 거주하게 될 가구 특징을 보면 동부나 읍부에 비해 1인 가구(특히 독거노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의 경우 2015년 32.7%를 차지하던 1인 가구 비율은 2045년에는 46.2%를 차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농촌 가구의 경우 10가구 가운데 4.6가구는 1인 가구를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가구주의 변화를 보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의 경우 2015년 고령 가구 비율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45년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10가구당 8.6가구는 고령 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는 농촌 가구의 경우 독거노인 가구가 대부분이 될 것임을 말해 주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상당히 달라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그림 8-17] 도시와 농촌의 고령 가구 비중의 변화 추세, 2015~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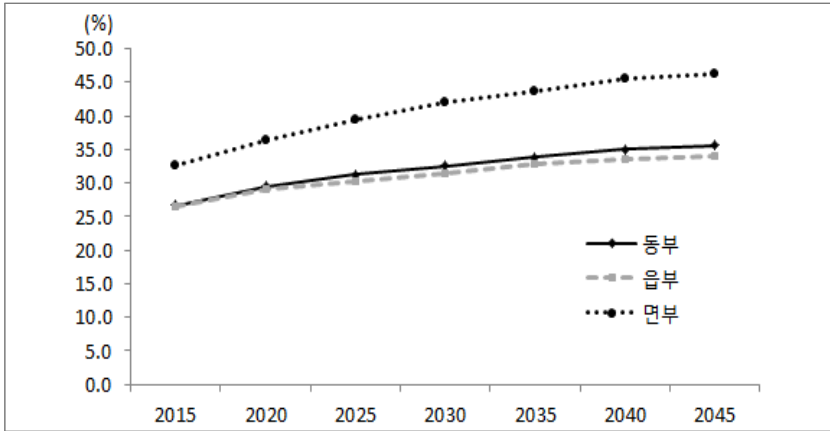
<표 8-20> 도시와 농촌의 고령 가구 비중 변화, 2015~2045

(단위: %)

가구 비중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65세 이상	동부	16.5	20.1	25.5	31.0	36.3	41.3	44.9
	읍부	21.7	24.8	29.2	33.5	36.8	39.9	41.6
	면부	39.7	43.6	52.3	61.6	70.9	81.4	86.2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동읍면의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그림 8-18] 도시와 농촌의 1인 가구 비중의 변화 추세, 2015~2045



<표 8-21> 도시와 농촌의 1인 가구 비중 변화, 2015~2045

(단위: %)

가구 비중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1인 가구	동부	26.6	29.4	31.2	32.5	33.9	35.0	35.6
	읍부	26.5	29.1	30.2	31.5	32.8	33.5	34.1
	면부	32.7	36.3	39.5	42.0	43.8	45.6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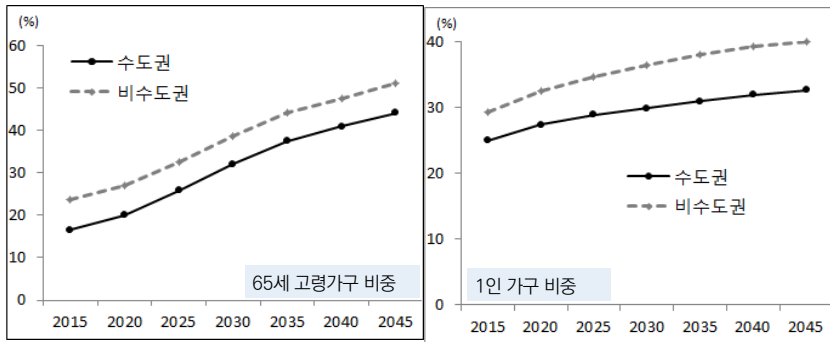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2000~2015년 동안 동·읍·면의 1인 가구 비율 변화를 토대로 보간법을 통해 필자가 추계한 것임.

특히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농촌의 독거노인 가구(호)는 42만 8000호로 2000년에 비해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비중도 도시의 5.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1.8%로 나타났다. 특히 읍보다는 면부의 독거노인 비중은 15.5%로 매우 높다.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를 증가와 1인 가구 증가가 2045년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노후화된 단독 주택이 대부분인 농촌의 주택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거의 멸실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30년 동안 면부의 가구 수는 약 172만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

망된다. 2020년을 정점으로 하여 면부의 가구 수는 감소되는 데 비해 1인 가구와 특히 고령 가구는 증가하게 된다. 1인 가구는 2015~2045년 동안 약 16만 7000가구가 증가하며, 고령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71만 8000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촌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얼마나 가구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말해 주며, 이는 곧 바로 1인 가구, 특히 독신 고령 가구에 부합되는 주택이 공급되어야만 하며, 이는 기존의 주택정책이 크게 변화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그림 8-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 가구와 1인 가구 비중 변화 추세, 2015~2045



<표 8-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 가구와 1인 가구 비중 변화, 2015~2045년

(단위: %)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65세 이상 가구 비중	수도권	16.6	20.1	25.9	32.1	37.5	41.0	44.2
	비수도권	23.6	27.0	32.7	38.8	44.1	47.6	51.2
1인 가구 비중	수도권	25.0	27.4	28.9	29.9	30.9	31.9	32.6
	비수도권	29.3	32.5	34.7	36.4	38.1	39.2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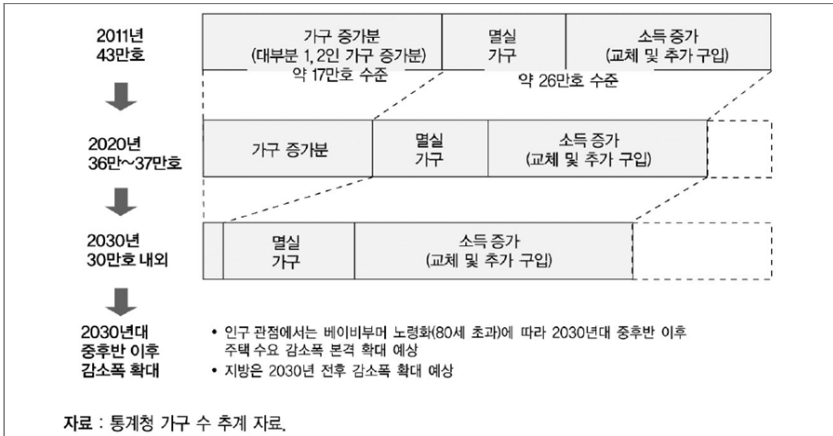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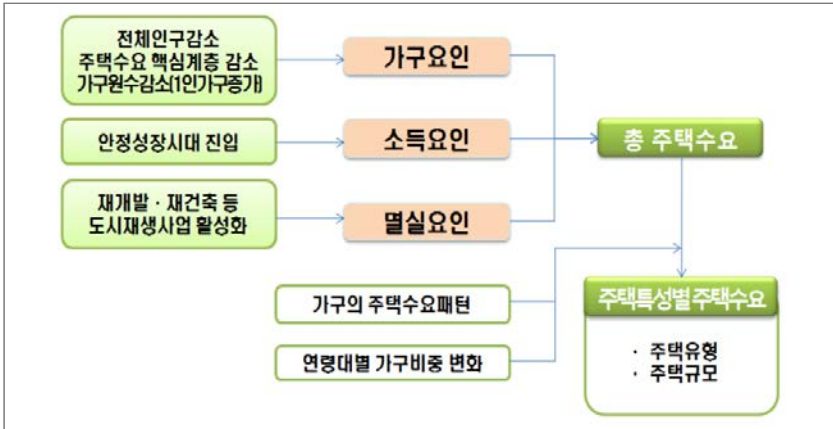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필자가 추계한 것임.

한편 수도권의 가구구조 변화는 비수도권보다는 다소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수도권은

25.0%인 반면, 비수도권은 29.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45년까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2045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0가구당 4가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 비중도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비해 약 7% 정도 낮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45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10가구당 4.4가구는 고령 가구가 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2가구 중 한 가구는 고령 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가구 구조가 소형화되어 감에 따라 주택 규모도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1인 가구의 비중과 노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소형 주택의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주택 수요 추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소득 증가율(혹은 경제 성장률) 가정, 주거 비용 증가율, 주택 면적으로 추정된 주택 수요를 ‘호’ 단위로 전환할 때의 기준, 주택 멸실률 가정을 토대로 하여 주택 수요를 추계한다(이수욱 등, 2011; 이홍일 등, 2011). 따라서 주택 수요 추계를 위해 설정한 가정에 따라서 주택 수요 추계 결과가 달라진다. 주택 수요는 특히 미래 불확실성이 내재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비관론(저성장)과 낙관론(안정 성장)으로 구분하고 장래 주택 수요를 추계한다(Swan, 1995). 또한 주택 멸실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와 호당 주거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연구자 및 기관마다 다른 주택 수요 추계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전성애, 형남원, 2012; 정부균, 최민섭, 2013). 일반적으로 t 연도의 주택 재고 호수 산정은 주택 재고 수 t = 주택 재고 수 $t-1$ + 신규 가구 증가분 $t-(t-1)$ + 주택 멸실분 $t-(t-1)$ 에 근거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로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추계한다(진미윤 등, 2013).

[그림 8-20] 주택 수요 추정 방법들



자료: 1) 이수욱, 박천규, 최윤경, 선우덕, 이범수, 김완중.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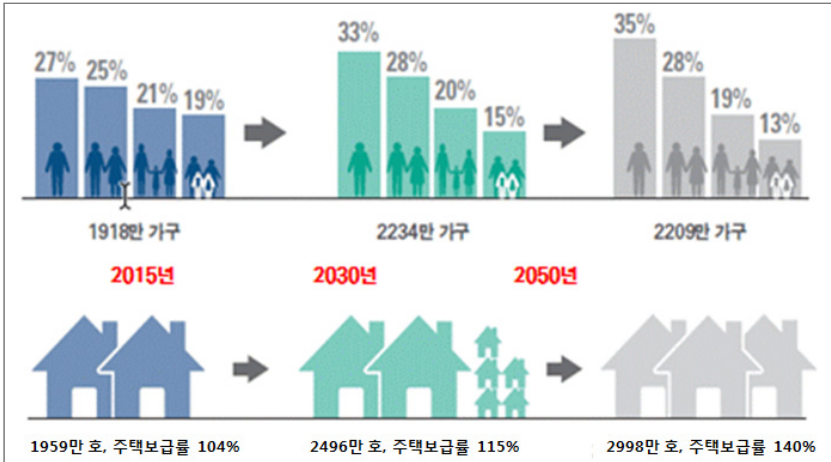
2) 이홍일, 박철한. (2011). 중장기 국내 주택시장 전망-수요 및 공급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주택 공급은 가구 수 증가와 멸실되는 주택 호수만큼 신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최소 요건을 고려하는 경우 2040년까지 주택 수요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주택 재고량을 10년 기간으로 나누어 추계하는 경우 2025년, 2035년, 2045년 기간 동안 가구 수 증가분과 주택 멸실분만큼은 최소한 필요할 것이다. 10년 기간별 가구 증가분

을 보면 2015~2025년간 200만 1000가구, 2025~2035년간은 105만 3000가구, 2035~2045년은 25만 1000가구이다. 2016년도 주택 멸실률을 보면 연면적으로 산출하면 0.422%, 건축물 동으로 환산하면 0.853%이다. 따라서 가구 증가분과 주택 멸실을 감안하여 현재 주택 보급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이 2015~2020년까지 매년 30만 3000호 수준, 2020~2030년간 매년 27만 호, 2030~2040년간 매년 20만 호 수준이 늘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 멸실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주택 재고량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1987년 이전에 건설되어 30년이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동은 전국적으로 205만 7000동(전체 주거 건축물 동의 4.5%)에 이른다. 2025년이 되면 30년이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동은 300만 3000동, 2035년이 되면 30년이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동은 357만 8000동에 이르게 된다. 2016년도에 집계된 주택 멸실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거용 건축물 멸실량을 보면 2015~2025년까지 주택 멸실 예상 동 수는 약 225만 호, 2025~2030년간은 약 106만 호, 2035~2045년간은 약 59만 호가 될 것이다. 물론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고 모두 멸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상시 주택으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공폐가로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2015년 1901만 2000가구 수는 2045년 2231만 7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장기 주택 수요 증가율은 2017년 2.2%에서 2025년 1.8%, 2035년 1.4%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수요 증가율은 거주 지역, 주택 규모와 주택 형태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이며, 주택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경우 주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8-21] 가구 수와 주택 보급률의 변화 추세, 2015~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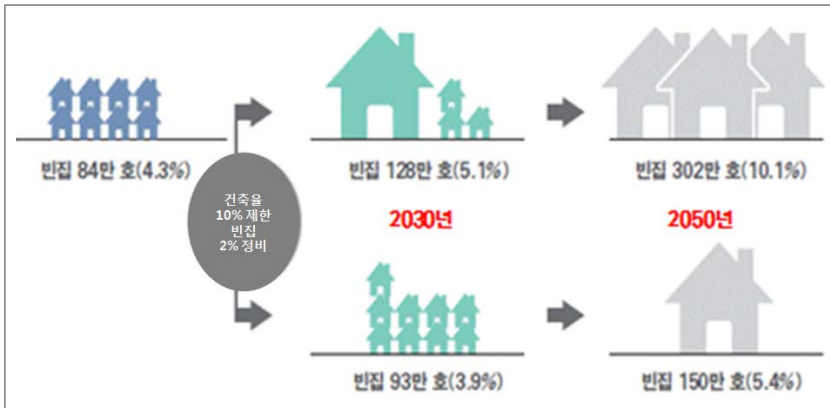
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a). 2016 국토에 날개를 달다 총권-國.愛.飛, 국토에 날개를 달다.

한국국토정보공사(2016b)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수는 2015년 1969만 채에서 2030년 2496만 채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98만 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택 보급률(가구 수/주택 수)은 2015년 104%에서 2050년 14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난이 심각하였던 수도권에서도 주택 보급률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2050년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47%, 경기도는 141%로 예측됨).

따라서 미래에는 주택 부족이 아니라 과잉 공급된 주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빈집들이다. 만일 현재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 빈집 수는 2030년에는 128만 채(빈집 비율 5.1%), 그리고 2050년에는 302만 채(빈집 비율 10.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만일 건축률을 10%로 제한하고 빈집 정비율을 2%로 유지하는 경우 2030년 빈집 수는 93만 채(빈집 비율은 3.9%), 2050년 빈집 수는 150만 채(빈집

비율은 5.4%)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림 8-22] 빈집 수의 변화 추세, 2030~2050



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a). 2016 국토에 날개를 달다 총권-國.愛.飛. 국토에 날개를 달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주택 공급 과잉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 증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2045년 1인 가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1인 가구에 맞는 주택 공급이 더욱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인 가구 및 저소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공급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빈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며, 통계청에서 집계되고 있는 빈집은 빈집 활용 및 정비 관점에서 볼 때 적실한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실한 방법론을 통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을 정비하거나 재활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4. 교통 및 공공 서비스 공급 문제

인구수는 감소되지만 1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증가되는 2045년 시점이 되면 지금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특히 인구는 감소되는 데 비해 고령 가구가 늘어나는 농촌의 경우 노인들의 의료, 복지,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읍이나 면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경우 기초 생활 서비스 및 각종 공공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지금도 농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인지되고 있는 교통 문제는 그 심각성이 한층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농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게 되는 병원, 시장, 은행, 우체국 등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불량하여 주민들이 겪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형수 등, 2016).

인구가 감소하지만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대부분이 농촌이나 지방 중소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 생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 중소 도시 및 농촌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근본 요인은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그리고 공폐가 발생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세수가 줄어들수록 그만큼 지자체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그 결과 복지 및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 대다수 지자체들의 경우 지방세 세수 감소로 인해 교통 부문으로의 투자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인프라 노후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

수혜 격차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이는 인구 이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구 구조 변화는 미래 교통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화 비율이 낮고 다양한 목적의 통행 수요들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래 교통 수요 부문에서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 가구의 고령화는 교통 수요 총량을 감소시키는 한편 자동차 등록 대수의 감소와 보다 질이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농촌의 경우 고령자 통행 수요 및 고령자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버스 운영의 경제성 저하 및 서비스 낙후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야기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도로 및 철도 시설 등 기간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와 시설 확충이 가능했지만 미래에는 통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교통 시설 이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김주영 등, 2016). 비수도권이나 농촌의 경우 승용차 통행이 어려운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도 가구 변화에 따른 적실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미래의 도시농촌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1. 토지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지금까지 토지는 특수한 재화라고 전제되어 왔고, 따라서 정부의 토지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토지에 대한 외부 경제 효과,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 위험, 토지 용도 전환에 따른 편익 등 토지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더더욱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토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메커니즘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개입하여 시행한 토지 규제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또 다른 역할이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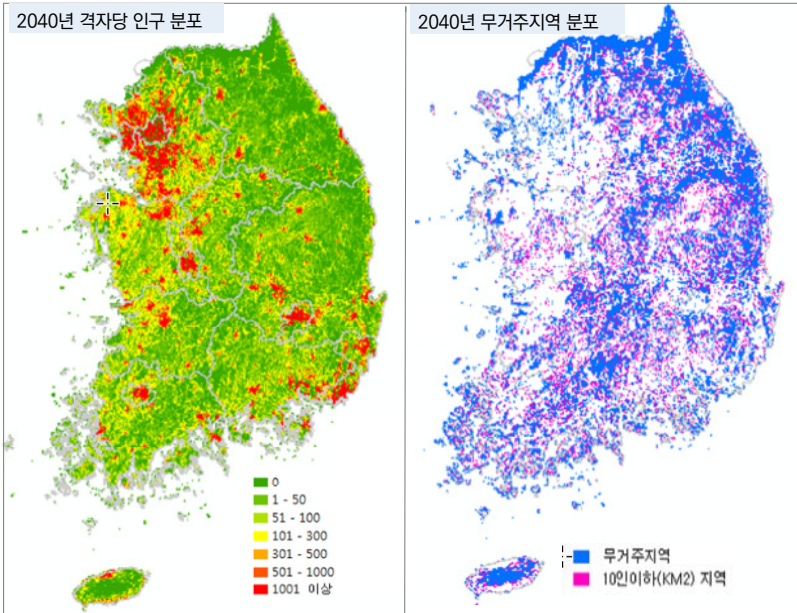
토지는 일단 용도를 고정시킬 경우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매우 제한적이며, 토지 이용 전환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토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최적의 활용인가를 전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일 장래에 보다 유효한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된 용도에 의해서 해당 토지가 이용되는 경우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 토지의 입장에서 보는 최적 용도와 전체 지구 또는 도시 입장에서 보는 최적 용도가 다를 수 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 최선의 용도로 토지가 이용되었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이 최선이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2031년부터 인구수는 점차 감소되는 데 비해 가구 수는 2043년까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5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 지역 용도의 토지 면적은 얼마나 증가되어야 하는가? 가구 수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토지 면적, 특히 도시 지역 면적이 증가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수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거 지역 면적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는 유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된 주거용 건축물의 동 수와 연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토지 잠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지역 용도의 토지 면적에 대한 추가 수요는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토지의 과잉 공급 및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 밀도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과 대도시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밀도는 매우 높은 데 비해 강원도를 비롯한 중산간 지역의 인구 밀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포 패턴은 2045년 시점에서는 더욱더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 2045년 사람이 살지 않는 무거주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40년 국토 공간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며, 인구 감소로 인한 악순환 구조가 진행되면서 2040년에는 인구 감소 지역의 대부분이 무거주화 지역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차미숙, 이원섭, 김선희, 임은선, 이영주, 윤영모, 등, 2015). 특히 이렇게 인구 밀도가 매우 낮거나 무거주 지역의 경우 적절한 생활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며,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투자도 어렵게 되어 생활 인프라 공급이 매우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23] 2040년 우리나라 인구 밀도 분포와 무거주 지역 분포



자료: 1) 국토연구원. (2014). 2차 미래국토포럼 발표 자료.
 2) 국토연구원. (2016).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방안 연구.

2045년 시점에서 지역 간 토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격차는 현재보다 훨씬 더 심화될 전망이다. 과밀 개발과 과소 개발의 토지 이용의 불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될 것이다. 어떤 지역은 1인당 토지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도 주어진 토지의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유휴지, 공지 등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어떤 지역은 1인당 토지 면적이 더 줄어들면서 토지의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더 높아지며, 토지 수요에 대한 개발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여전히 높은 개발 수요로 인해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토지 이용 문제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토지 수요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비수도권의 중소 도시 및 농촌의 토지 이용 문제는 매우 이질적이며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수요에 대한 개발 압력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과잉 공급된 토지에 대한 관리 문제는 소홀하였다. 향후 주거, 산업 등 도시 지역 용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기존에 공급된 시가지 지역의 토지들이 유희화되거나 방치될 것이다. 지역 간 토지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수도권 개발 수요에 초점을 둔 토지정책은 과잉 토지 공급으로 인해 더욱 낙후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민의 만족도, 주민의 행복과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45년 우리나라 국토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규범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이라는 패러다임하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 정주 여건 등 물적 기반 시설 공급만 아니라 문화, 여가,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질적인 측면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형평, 정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행복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45년 37%에 육박할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주거, 소비, 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 저성장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여가와 문화, 위락 생활은 더 중요해지고, 복지 수요, 건강, 행복, 웰빙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토지에 대한 인식과 수요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여가, 체육, 위락, 건강, 웰빙을 위한 토지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생활공간의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며, 상주적인 공간보다 일시적, 또는 임시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토지 공간에 대한 공유화 개념도 부각될 것이다. 이는 생활공간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가변형 토지 이용, 새로운 시설의 확충보다 기존 공간과 시설을 계절적, 시간적으로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단일 용도의 토지 이용을 특정 시점에 한하여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유연적 토지 이용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이용우, 손학기, 김선희, 김동한, 임상연, 윤영모 등, 2014). 특히 중소 도시나 농촌의 경우 복합적이고 유연적인 토지 이용(mix & flexible land use)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에 대한 인식의 폭부터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농업 생산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농촌의 토지 이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촌을 도시민에게도 쾌적한 전원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 문화나 건강 치유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 농업적 생산 기능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잘 직시하여 적실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농촌이 정주 공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휴양 공간으로서의 매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토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토의 황폐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45년 시점을 전망하면서 토지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토지는 주거 용지로서의 생활공간, 경제활동을 위한 생산 공간, 위락·휴양을 위한 자연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를 생산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비가시적, 비물질적이지만 토지의 자연환경적 가치를 지닌 자연 위락 공간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수요, 토지의 생산 공간에 더 초점을 두어 왔다면, 향후 토지 이용은 인구 감소, 삶의 터전인 생활공간과 위락, 휴양 공간으로서의 토지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이라는 토지 이용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현세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 보다는 미래 세대와 주변 생태계에 주는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구수와 인구 밀도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녹지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도시 농업, 커뮤니티 가드닝을 통한 생산적 토지 이용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생산 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다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Hollander et al., 2009; Oswalt, 2006; Schilling et al., 2008). 이미 선진국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축소 도시들의 경우 ‘버려진 것으로부터 기회를 창출하자(National Vacant Property Campaign)’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도시 재생 전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간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필요 없는 인프라를 제거하고 무엇보다도 과거 성장하였던 시기의 지역의 매력도와 지역의 인지에서 벗어나서 인구 감소-기후 변화 시대에 직면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유연적인 토지 이용 전략들을 구사해 나가고 있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해외 도시들의 경우 토지 이

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쇠퇴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축소 도시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인구, 건물, 토지 사용을 적게 하고 덜 개발하는 스마트 쇠퇴(smart decline), 인구 규모가 작으면서도 과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름답다(small and old is beautiful)라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토지 이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고용 성장을 유도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황폐해진 건물들을 철거하고, 축소 도시 미래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 해외 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여 토지가 유향화되고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 대다수의 중소 도시나 농촌을 대상으로 과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 수급 대응 및 정책

2043년까지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는 경우 가구의 증가 수준만큼 주택 재고 수준도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반 가구 위주의 주택 수요 충족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은 가장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1인 가구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고령 가구의 주택 수요를 반영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구 유형의 변화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 수급도 이러한 지역별 가구 유형 변화에 적실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들이며, 고령 가구의 대다수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 규모를 줄이려는 가구들

이므로 주택 시장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베이비 부머의 자녀인 에코 세대는 취업난, 결혼난, 주거난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재정적 여력도 적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주택 보유에 대한 의지도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 및 직장 통근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하우스 노마드족도 증가하는 등 향후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 요인들이 추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래 국토 이용 국민 조사(이용우 등, 2013)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즉, 주택을 자산 가치로 인식하는 데서 점차 거주 가치로서 인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즉, 2010년 거주 가치로 인식하는 비율이 35.7%였으나, 2013년에는 60.8%로 증가하였다. 또한 향후 세컨드하우스 소유 또는 임대 의향도 2013년에는 8.8%에 지나지 않지만 2040년에는 58.6%로 높아질 전망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향후 주택정책은 거시적·경제적 가치보다는 미시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가구 유형의 변화는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 소홀하게 간주되었던 부문들(예를 들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노인, 여성,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향후 노후 건축물(특히 노후 주거 건축물)과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 증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와 고령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 구조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주거 형태도 일반 가구와는 다를 것이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5년 빈집 가운데 29.3%가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상당히 오래된 낡은 주택이다. 따라서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약 30% 정도는 빈집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보다는 재건축이나 노후 불량 주택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실한 정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4월에 새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을 통한 노후 주택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도시 재생 사업을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과 연계하고,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필요한 주거 서비스 시설을 보충하여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노후 불량 주거지에 공동 주택을 신축하거나,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재건축하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헐고 다세대와 연립 주택 등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의 목표는 매년 100곳씩 총 500곳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적실한 수단이 미비하며,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모델이 구축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빈집을 정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빈집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빈집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빈집을 정비하여 주택, 공동 이용 시설로 재활용하거나 철거 후 주차장, 텃밭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집 자체만을 대상으로 정비·철거하는 정책보다는 빈집이 발생하는 근린 주민들이 빈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린 지구 특성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공공 개입이 필요한 근린 지구를 추출하고 이에 부합되는 맞춤형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빈집이 발생

한 근린 주거 환경들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빈집뿐만 아니라 근린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할 것이다(한수경, 이희연, 2017).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택정책 수립 시 1인 가구나 2인 가구 등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연령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5~49세 1인 가구인 경우 적합한 주거 형태로는 원룸, 고시원,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또한 50~64세의 경우 동일 집단의 코하우징 등이 적합한 주거 형태인데 이 연령대의 1인 가구 수는 2030년 후반 이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65세 이상인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에 적합한 형태인 노인 복지 주택과 노인 주택 단지는 정책적으로 지원 및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정부균, 최민섭, 2013).

무엇보다도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자가 보유한 노후 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으로 개조·임대할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고령자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보수 전문 인력·업체를 양성한다. 더 나아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와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인 가구를 연결해 주는 주거 공동체 제도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주거 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개인 소유보다는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징(share housing) 주거 문화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공동 부엌, 식당, 공동 거실이 함께 있는 공유 공간(커먼룸)에서는 공동 식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휴식, 신문이나 책 읽기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친구가 놀러 오거나 파티를 할 때에는

외부인도 사용 가능한 가변성이 높은 공간으로 공유 공간의 유연성을 확장하여 셰어하우스에 대한 주거 선호도를 높이도록 한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임대 주택과 사회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공공 실버주택’ 공급을 도입·확대한다.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빈집을 고령 친화적인 공동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여가와 어메니티 수요 증가로 인해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촌 마을의 농가를 별장으로 전환시키거나 농업과 리조트를 결합한 주거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농어촌의 지역 잠재 자산인 지역 오픈스페이스를 보전, 관리하고, 산지와 수변 공간 등을 여가 공간화하고, 어메니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산지, 섬, 수변 공간 등 지역 고유의 자연 생태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도 지속 가능한 농촌 경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노후 시설 활용 방안

가구 수는 증가하여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 수요와는 달리 적절한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1인 가구와 고령 가구 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 지원 등 각종 정책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민 센터나 문화 센터에서는 노년층과 1인 가구, 특히 여성 노년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 지원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대중 교통,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생활 인프라의 편의성도 낮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농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주 개발 사업들은 주로 하

드웨어 위주 사업들이었다. 즉, 농어촌의 경우도 가로 환경 정비나 도로 개설, 다목적 회관 건립, 시장 정비 등과 같은 시설물 설치 등이 추진되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특히 고령 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들이 거주하는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의해 마을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권 유지가 어려운 마을이 증가되고, 개별 마을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서비스 문제를 주변 마을과 네트워크화하는 마을 네트워크권을 형성한다(이소영, 2017). 특히 마을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 서비스의 집약화 및 주변 마을과 네트워크화하고 인구 취약 지역 마을 네트워크의 스마트 거점 마을을 육성하여 주변 마을의 생활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노후화 및 유희화 공간 및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실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의 라이프사이클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일례로 김제시에서 처음 도입한 그룹 홈(group home)은 경로당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경로당의 기능 및 장비를 보강하여 주간에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인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공동생활을 위한 그룹 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폐교를 활용하여 시니어 코하우징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농촌은 자녀들이 모두 떠나 노인 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일부 노인 계층만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노인의 거주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신의 거주지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낮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노인들은 오래 거주해 온 동네에 대한 애착도가 높으며, 이웃들과 맺어온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끈끈하다. 폐교를 활용한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양질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폐교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 다녔던 경험이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독립된 생활을 존중받으면서도 노년의 고독감과 혼자 사는 불편함을 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동체를 ‘이질적이고 낯선 공간’이 아닌 ‘친숙한 장소’에 만들어 줌으로써, 노인들은 삶의 단절 없이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노인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부양 방식이 아니라, 이웃이자 친구로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이들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부양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동네 주민들의 일상적 통행과 방문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에 마을 회관이나 보건소 등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서비스 시설이 함께 들어온다면 지역 커뮤니티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복지 공간(운동 시설, 노래 교실, 족욕탕, 찜질방 등) 및 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 전체가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코하우징 내에 노인용 공간과 일반 주민용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느낌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 노인과 지역 주민들의 통합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다. 고향을 찾는 젊은이들이 코하우징 공간에 자주 방문함으로써, 코하우징은 노인들의 고립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가장 확실한 사회적 연결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

한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안전과 소속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이희연, 한수경, 2014).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 가구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의 경우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가 상당히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소 요구치(임계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군부의 경우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임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촌 오지 마을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 서비스 시설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를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복합화하여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 서비스 시설을 통폐합하는 경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더 나아가 수요 부족으로 공공 서비스 시설의 과소 이용 및 유희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제 9 장

고령화, 가구 변화,
기술 개발 이슈

제1절 배경

제2절 노인 가구 증가 관련 기술 개발 사례

제3절 연구개발 정책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

제4절 소결

9

고령화, 가구 변화, << 기술 개발 이슈

제1절 배경

인구 고령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이나 면 단위 지역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훨씬 크다. 동·읍·면을 기준으로 볼 때 동 지역 고령 인구 비율은 11.4%로 고령화사회, 읍 지역은 14.8%로 고령사회, 면 지역은 28.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16b). 둘째, 고령 인구의 가족 구성이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 또는 고령자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많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1인 가구 혼인 상태 구성비는 2010년 미혼(44.9%), 사별(28.8%), 이혼(13.4%), 유배우(12.8%) 순이나, 2035년에는 저연령 인구 규모가 감소하여 미혼 가구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유배우, 이혼 및 사별 가구의 증가가 커서 미혼(33.8%), 사별(30.4%), 유배우(18.6%), 이혼(17.2%) 순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p. 32-33).

본인의 자발적 선택 여부와 무관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래에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정부의 고령화 정책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생활환경의 변화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업이나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 기반 구축과 관련한 사업의 구상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강은나, 이민홍(2016)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중년 1인 가구가 새롭

게 부각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년 1인 가구는 노년 세대와 궤적을 같이 하는데, 노년 1인 가구와 특성이 유사하며 위험이나 문제의 강도가 노년층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다. 중년 1인 가구의 소득 불안정, 고용 불안정, 건강 문제, 주거 불안정과 주거 환경의 열악함 등을 사전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지금 노인 1인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건강, 주거 문제 등을 답습할 것이라 예측한다(강은나, 이민홍, 2016, p. 54-55).

1인 가구의 고립을 지양하고 사회와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1인 가구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1인 가구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의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배우자를 통한 사회와의 연결 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1인 가구는 쉽게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014년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경제적 불안감(25.8%), 아플 때 간호 문제(25.6%), 심리적 불안감(21.7%)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경제적 문제를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 노년층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등(2012)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인 가구의 만성 질환율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 역시 건강하지 않은 편과 아주 안 좋은 비율이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인식 역시 1인 가구가 2인 이상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는 1인 가구 생활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보편적 현상이라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의존, 불안정성은 심리적 위축과

사회 활동의 축소를 가져와 노년기의 삶의 질 저하와 연계된다. 활동적 노년, 성공적 노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고령자를 의존적·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고 노인 집단에 대한 시혜·보호 위주로 실행되어 온 한계를 벗어나, 사회 참여, 생산력 유지/증진 등 삶의 욕구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도균 등(2016, p. 4, p. 18)은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체적 기능 유지나 환경 조성, 여가·취미 활동 등의 지원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2010)는 활동적 노후를 향후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신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 수준이 가치관, 기대하는 욕구 수준, 문화 등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노년층은 현 노인 세대들과 달리 새로운 취미 활동 모색, 적극적인 소비 활동, 여가 생활 중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활동적 노후에 대한 욕구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등, 2010, p. 26-27). 따라서 이러한 활동 욕구나 소비 행태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이삼식 등(2010)은 기존 노년층과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중 하나는 노후의 취미 생활, 자기계발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강한 선호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청장년기에 다양한 활동 경험을 누렸으며,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여가 활동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고 본다(이삼식 등, 2010, p. 392-39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p. 548).

제2절 노인 가구 증가 관련 기술 개발 사례

1. 기술 개발 유형

고령자를 위한 기술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 경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첫째, 급속한 기술 발전, 둘째,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고령화, 셋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수의 증가, 넷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돌봄 비용, 다섯째,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관심 증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확신을 강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을 바탕으로 급속한 기술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 “삶의 질을 위한 기술(Quality of Life Technologies)”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 용어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된 참신하고 지능적인 기술을 뜻한다. 따라서 삶의 질을 위한 기술은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인 것이다. “노인을 위한 기술”은 이러한 삶의 질을 위한 기술의 일부이다. 다만 노인을 위한 기술은 수명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 운동 기능, 인지 능력, 동기 부여 측면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고려하고, 노인 개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 기능, 자주성, 심리적 웰빙 등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이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기술은 또한 비공식적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활동

을 수월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기술도 포함한다.

Schulz와 동료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생활 영역을 ① 신체 및 정신 건강, ② 이동성, ③ 사회적 유대감, ④ 안전, ⑤ 일상생활 및 레저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Schulz et al., 2015). 각 영역이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유대감과 안전이 개선되면 개인의 건강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Schulz와 그 동료 연구자들이 쓴 논문에 의하면, 생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의 기능이나 방법은 ① 환경이나 개인의 모니터링 또는 측정, ② 문제나 욕구의 진단 또는 검사, ③ 확인된 문제나 욕구를 다루기 위한 치료 또는 개입 등으로 나누어진다(Schulz et al., 2015).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기술은 다섯 가지 생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 활용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은 기술을 활용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바꾸거나 그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건강 감시 프로그램, 돌보는 사람 등)에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낙상 사고나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을 미리 검토하거나 건강 상태의 부정적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만성 질환 관리, 자기 관리 및 의사 결정 지원, 일상생활 내 안전 관리를 위한 개입에도 활용될 수도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연구는 노인 건강의 유지, 개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원격 의료(telehealth), e-헬스(electronic health technologies), m-헬스(mobile health technologies) 등이 포함된다. 현재 집과 장기 요양 시설에서의 활동을 탐지하는 주변 감지 시스템(ambient sensing system), 신체 활동, 심박 수,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혈압, 혈액 산소 농도, 상처 치유 상황 등 복합적 생리 지표들을 측정하는 독립형 장치(freestanding device) 등 다양한 유형의 측정 도구와 모니터링 장치가 사용 가능하다.

현재 기술력으로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원격 행동 치료 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식습관 관리, 운동 독려, 약물 활용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 질환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웨어러블 센서, GPS 시스템, 드라이빙 모니터(driving monitor), 통신 장치를 통해 개인의 보행 능력, 위치, 사회적 고립 정도, 일상 생활 과업 수행의 정확성과 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은 Schulz와 그 동료 연구자들이 제안한 ‘라이프 도메인’에 따른 기술 적용 방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9-1) 주요 생활 영역에 따른 기술 적용

생활 영역 기술의 기능	신체 및 정신 건강	이동성	사회적 유대감	안전	일상생활 및 레저
모니터링, 측정	생리적 기능 (예: 심박동 수, 혈압), 정서, 건강 행동	보행의 속도 및 가변성, 이동 거리, 전정 기능, 운전 행동, 일일 체조	통신 장비 사용의 빈도 및 시간 (다른 사람과의 직접 소통 빈도 및 시간, 사회 활동 빈도 및 시간)	낙상의 빈도, 위치, 운전 능력	일상 과업 수행의 빈도, 정확도, 속도 (레저 활동의 빈도와 시간)
진단, 검사	임상 조건, 위험 상태	낙상 위험 (보행 능력, 적정 운동량)	사회적 고립, 사회적 통합	응급 상황, 길 잃음, 교통사고 상황	주요 인지 기능, 주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상태
치료, 개입	원격 행동 치료, 만성 질환 관리, 예방 및 건강 개입, 임상적 결정 지원	이동 안내, 위험 완화, 운동 격려 및 지지	컴퓨터 및 통신 기술 활용으로 향상된 사회적 통합 및 유대	비상 대응 체계, 전산화된 운전 보조 기능, 경보 시스템	과업 보조 또는 훈련, 오락,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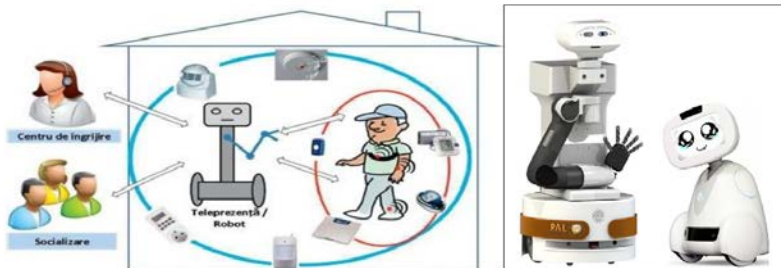
자료: Schulz, R. et al. (2015). Advancing the Aging and Technology Agenda in Gerontology, p. 727 참조하여 재구성.

2. 독립적 생활 지원 R&D 사례

가. EU의 CAMI 프로젝트

CAMI 프로젝트는 거주 공간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폴란드 등 5개 국가의 8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 프로젝트는 접촉, 소리, 몸짓을 통해 인간과 다각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여 일상 속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를 도우며 그들의 이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약 360만 유로의 예산을 바탕으로 2015년 6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3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로봇은 사용자들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노인들의 건강과 주택 내외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노인들의 명령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은 물론 노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들의 일상생활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격 조종 기술의 활용으로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나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이 로봇과 시스템을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9-1] CAMI 프로젝트 개념도와 로봇 디자인



자료: <http://www.camiproject.eu/info/>에서 2017. 9. 1. 인출.

나. iToilet 프로젝트

iToilet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ICT 센서가 장착된 변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고정되어 있는 크기와 형태의 변기를 이용할 때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ICT 센서를 활용하여 노인 개인의 키, 몸무게, 자세, 움직임에 맞추어 높이와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변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150만 유로의 예산으로 2016년 4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최종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한 후, 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의 7개 기관이 iToile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9-2] iToilet 활용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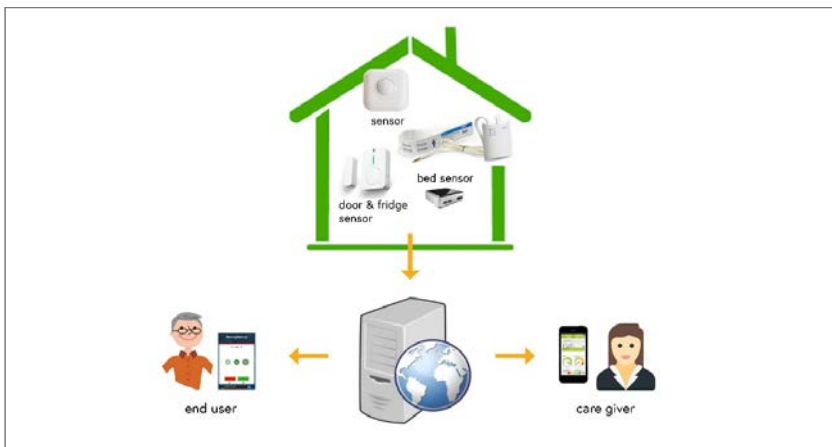
자료: <http://www.aat.tuwien.ac.at/itoilet/project.html>에서 2017. 9. 1. 인출.

3. 헬스케어를 위한 R&D 사례

가. Home4Dem 프로젝트

Home4Dem 프로젝트는 치매 노인들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ICT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을 목표로 한다. ICT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이 프로젝트는 30개월 동안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에서 약 540쌍의 치매 노인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개발 단계에 있는 플랫폼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이용자의 욕구가 플랫폼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이는 또한 최종적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프로젝트팀은 예상하고 있다. 160만 유로의 예산을 바탕으로 2015년 9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의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9-3] Home4Dem 프로젝트 개념도



자료: <http://home4dem.eu/>에서 2017. 9. 1. 인출.

나. ACTIVE@HOME 프로젝트

ACTIVE@HOME 프로젝트는 노인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조를 쌍방향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노인들이 집에서 낙상 사고를 겪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신체 활동 능력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춤과 태극권의 요소를 결합한 쌍방향 비디오 게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텔레비전 스크린과 웨어러블 모션 센서를 통해 그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ACTIVE@HOME 프로젝트의 계획이다. 250만 유로의 예산으로 2016년 5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스위스,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9-4] ACTIVE@HOME 쌍방향 비디오 게임 활용 예상도



자료: <http://www.active-at-home.com/>에서 2017. 9. 1. 인출.

다. CareInMovement(CiM) 프로젝트

유럽에서 노인의 수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CiM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즉, 진화하고 있는 ICT를 이용하여 노인 돌봄의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이 좀 더 수월하게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iM 프로젝트의 목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CiM 프로젝트는 가상모션코치(Virtual motion coach)와 가상임파워먼트코치(Virtual empowerment coach)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가상모션코치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상임파워먼트코치는 노인들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약 2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8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위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8개월 동안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림 9-5] CiM 프로젝트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화면



자료: <https://www.careinmovement.eu>에서 2017. 9. 1. 인출.

라. CoME 프로젝트

CoME 프로젝트는 노인 스스로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돌봄 서비스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 공식 간병인, 비공식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다르게 개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개인들의 조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스스로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다양한 게임을 활용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하여 경도 인지 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그림 9-6] CoME 프로젝트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화면



자료: <http://come-aal.eu>에서 2017. 9. 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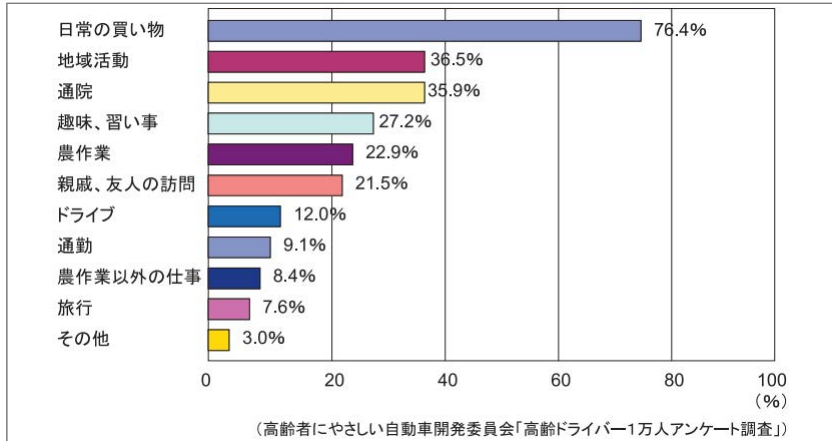
공식 간병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노인들이 설정한 건강 관리 목표와 실제 그들이 달성한 건강 관리 성과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성공적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비공식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노인의 건강 관련 정보와 전문 간병인이 제공한 의견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상황별로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요령을 알려준다. 2015년 12월에 시작된 CoME 프로젝트에는 약 24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의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4. 이동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R&D 사례

가. 안전한 이동 수단 개발

고령자의 자립 생활 지원은 우선 개개인의 자립 생활 능력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립 생활의 기본 요소이면서 고령자 내 수준 차이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동 능력이다. 자동차는 일상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한데, 교통망이 발달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을 중단할 시 사회생활의 범위가 크게 제약을 받고 외출에 장애 요인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고령자의 인식 능력 저하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은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를 대신할 정도로 이동성을 제공하는 수단은 없다. 아래 그림은 일본의 고령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어떤 목적에서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데,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의 구매나 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항목에서의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平瀬博人, 2012).

[그림 9-7] 고령 운전자의 이용 목적(복수 선택)



자료: 平瀬博人. (2012). “高齢者にやさしい自動車の実現に向けて”. p. 11.

나. 고령자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科学技術振興機構)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프로그램(戦略的イノベーション創出推進プログラム)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여 안전안심사회를 실현하는 자율 운전 지능 시스템(高齢者の自立を支援し安全安心社会を実現する自律運転知能システム)’도 고령자의 이동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안전한 교통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안전한 이동을 목표로 하여, 그 수단으로 자율 운전 지능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어 개입을 실시하는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확립한다. 이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센서 기술, 위험 예지 판단 기술, 위험 회피 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함께, 시스템의 실증실험을 통해 효과 평가, 사회적 수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를 백업하고, 사고를 회피하는 자율 운전 지능을 가진 자동차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를 목표로 한다(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p. 20).

고령 운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식 기능 저하 등에 따른 사고 비중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제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이동 지원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기 실현·사회 도입을 제일의 목표로 한다. 기반 기술의 주축은 예방 안전 기술과 함께 1) 고정밀 도로 환경 센싱 기술(화상, 레이더, GPS), 2) 디지털 데이터(지도 데이터, 주변 영상 데이터), 3) 자율 운전 지능화 기술(주변 인식, 지식 데이터베이스, 리스크 가능성 예측), 4) 고령 운전자 진단 기술(드라이버 모델, 드라이버 수용성), 운전 조작계 HMI 최적화 기술 등이 제시된다. 이 과제는 위와 같은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신뢰성·효율성이 높은 작동 영역에서, 고령자에 의한 위험 회피가 어렵다고 판정될 때 자율 운전 지능에 의한 강제 개입 제어를 실시하는 것이다. 활용 용도로서는 지역의 고령자의 이동성 지원을 위한 안전 자동차를 당면 목표로 하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작 범위의 확장과 고기능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p. 22).

5. 고령자의 사회 참여 및 안전한 노동을 위한 R&D 사례

가. 유럽의 ANIMATE & PALETTEv2 프로젝트

ANIMATE 프로젝트는 은퇴한 노인이나 은퇴에 임박한 고령 노동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직장 생활을 위한 멘토를 구할 수 있고, 젊은 인력이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경륜 있는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

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4월부터 약 21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국, 스페인, 스위스의 5개 기관에 의해 3년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3개 국어로 서비스가 가능한 “ANIMATE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9-8] ANIMATE 플랫폼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s://animate.hi-iberia.es:4550/en-gb/>에서 2017. 9. 1. 인출.

PALETTEv2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활발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그들이 이용하기 쉬운 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노인들에게 유급 노동, 자원 봉사, 회사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노인들이 최신 기술의 활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시킬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모양이나 내용이 자주 바뀌면 노인들이 적응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PALETTEv2 프로젝트는 최대한 단순하게 플랫폼을 구성하고 큰 변화는 지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 200만 유로의 예산으로 2016년 4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스

위스, 루마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의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 일본의 고령자 클라우드 노동 시스템

일본에서는 JST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경험·지식·기능을 사회의 추진력으로 하기 위한 ICT 기반 ‘고령자 클라우드’의 연구개발(高齢者の経験・知識・技能を社会の推進力とするためのICT基盤「高齢者クラウド」の研究開発)’을 추진하고 있다(서지영, 정기철, 이완정, 엄수홍, 박현정, 2016a). 고령자 클라우드 기반은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사회생활에서 커뮤니티 참여로’, ‘커뮤니티 참여에서 취업·창업으로’와 같이, 가정에 머물러 있기 쉬운 고령자에게 사회 참여를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고령자 자신의 노동력 제공 외에도, 고령자의 자립도 향상에 의한 개호 부담 절감, 고령자 커뮤니티의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고령자가 긴 인생을 통해 축적한 암묵적 경험·지식·기능을 ICT를 통해 가시화·외부화하여 사회에 순환시켜, 고령자의 사회 참여에 의한 건강 증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의 양립을 목표로 하기 위한 ICT 기반 고령자 클라우드를 구축한다(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p. 24).

초고령사회에서 많은 고령층은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고령자는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활력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 과제에서는 건강한 고령자들이 활용하는 장소를 ICT를 활용하여 창출하는 혁신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고령자를 노동 자원으로 파악했을 때, 시간적·공간적 제약, 경험·능력의 불균일성, 취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균일하고 다양성이 풍부한

노동 자원을 노동력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로서, 이 과정은 ICT를 활용한 모자이크형 취업을 제안한다. 모자이크형 취업을 통해 다수의 고령자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원격에서, 스킬을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1인분의 노동력을 제공한다(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p. 25).

다. 일본의 경로화(輕労化) 슈트

이 연구 테마의 네 번째 과제는 ‘고령사회에서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경로화(輕労化) 기술 연구개발과 평가 시스템 구축(高齢社会での社会参加支援のための輕労化技術の研究開発と評価システムの構築)’이다. 고령자의 과도한 부담·피로를 제거하여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로화 기술을 고령자에게 적용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가 가능한 풍부한 고령사회를 실현한다. 이 과제에서는 사람의 손에 의한 작업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작업을 지원하는 3S 어시스트를 제안하며, 농업을 위한 근력 보조 슈트와 설계·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보조 기술에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로화 툴 기반 기술로서 새롭게 제안하는 3S 어시스트 개념의 기반에 노동 지원 도구로서 ‘3S 농업 스마트 슈트’를 개발한다(研究開發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p. 27).

경로화 기술은 최근 로봇 제어 장치의 발전으로 다양한 모델이 개발·실용화되었다. 그러나 착용감에 위화감을 갖고 있거나 복잡한 기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고 높은 가격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과제에서 다루는 경로화 기술은 1) Secure: 안전한 어시스트, 2) Sustainable: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도록 어시스트, 3) Subliminal: 친화성이 높고 사람의 감각을 둔하게 하지 않

으며 자연스러운 어시스트의 3S 어시스트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실시한다(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p. 27).

[그림 9-9] 3S 어시스트의 개념에 따른 경로화 기술



자료: 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研究開発テーマ「高齢社会を豊かにする科学・技術・システムの創成」”. p. 28.

이 과제에서 개발하는 스마트 슈트는 허리의 3차원 운동, 굴신·비틀기, 무릎의 굴신을 보조하여 등·허리·다리의 근육 부담을 20~4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비의 제어 방법으로는 안전한 보조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Semi-active Assist 장비에 유연하고 탄성이 있는 재질을 보조력으로 이용하고, 모터로 보조력을 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션 기반 보조 기술, 모션 센서에 의해 근육 활동을 추정하는 등 다양한 작업 동작 패턴에 최적의 보조력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p. 28).

라. 고령자 산재 발생 예방을 위한 R&D

Continental AG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독일의 기업이다. 최근 이

회사 직원들의 연령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2005년에는 50세 이상의 직원이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었지만, 그 비중이 점차 늘어 2020년에는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 내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근 이 회사는 고령 노동자들도 지속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모든 작업장에 인체공학 전담팀을 배치하여 산업 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심리적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인체공학 전담팀들은 위험 요인에 대한 데이터와 인체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육체적 작업량과 위험 요인 노출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장을 재설계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담팀은 특히 근골격계 장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인구학적 데이터와 작업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것을 분석하여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작업 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 비해 2016년에 이 기업 노동자들이 겪는 신체적 과부하와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Contitneal AG 기업의 전 작업장에 인체공학 전담팀이 정규 조직으로 배치되어 지속적으로 산재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제3절 연구개발 정책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

1. 국내 동향 분석

서지영, 정기철, 이완정 등(2016a)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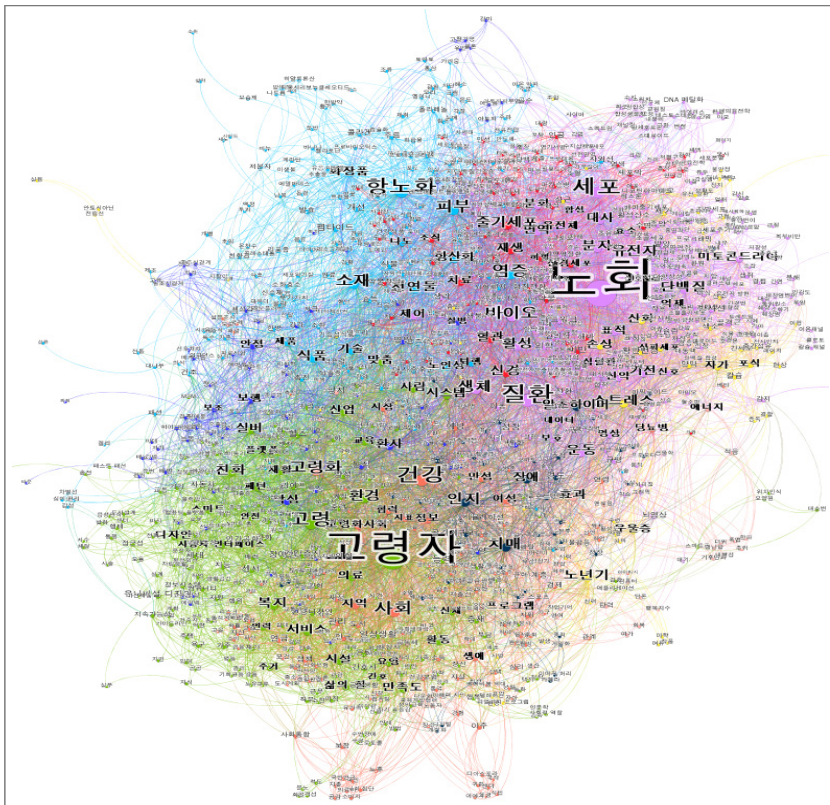
(2011년 442개, 2012년 592개, 2013년 593개, 2014년 664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고령화 관련 R&D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기존 국가 연구개발 사업 분류 체계에 따른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1~2014년까지 추진된 고령화 관련 R&D 사업이 [그림 9-10]과 같이 “노화”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서지영 등, 2016a, pp. 50-52). 즉, 인적 관점에서 고령자에 초점을 두는 R&D 경향과 기능적 관점에서 노화 자체에 초점을 두는 R&D 경향 등 2개의 큰 흐름에 따라 국가 R&D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서지영 등, 2016a, pp. 50-52).

우선 “고령자”가 중심으로 된 네트워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에서부터 복지, 삶의 질, 산업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 ‘만성’, ‘치매’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목적의 연구개발 사업과 ‘고령화’, ‘사회’, ‘복지’, ‘서비스’, ‘삶의 질’ 등의 키워드가 연결된 고령자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연구, 고령 친화 산업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서지영 등, 2016a, pp. 89-91). “노화”가 중심이 된 네트워크에서는 ‘세포’, ‘염증’, ‘질환’, ‘바이오’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노화나 고령자 질환의 원인 파악 및 치료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지영 등, 2016a, p. 86).

이러한 생리의학적 연구 외에 고령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도 추진되고 있는데, 동 성과는 향후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시, 소비자로서의 고령자를 이해하거나 고령자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커뮤니티 구축과 운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자연공학 연구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향후 이들의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서지영

등, 2016a, p. 86). 한편, R&D 현황과 관련하여 고령 친화 산업의 영역도 나타나는데, 주로 ‘항노화’, ‘피부’, ‘화장품’, ‘식품’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 연구들이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이 외에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주거/주택 산업,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생활 편의 기기 산업들은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의 산업 활성화 방안,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서지영 등, 2016a, p.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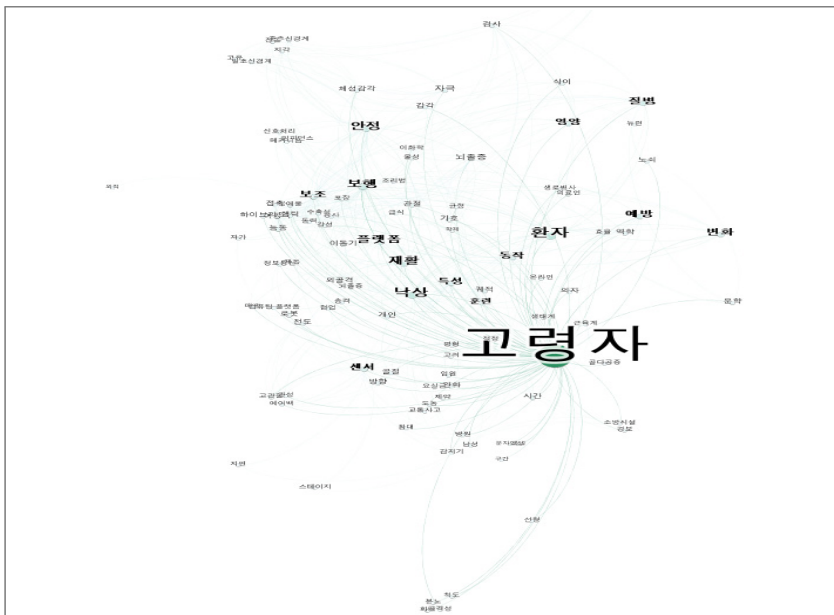
[그림 9-10] 고령화 관련 전체 R&D 네트워크



자료: 서지영 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75.

고령화 관련 R&D 사업의 네트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통해 재활, 항노화, 일상생활 편의 증진, 노년기 질환 억제 및 치료, 줄기세포, 고령화 사회·경제, 인지 장애, 조기 진단, 운동 기능 장애, 노년기 생활, 기전 연구(세포), 기전 연구(생체·생리), 고령 친화 산업, 인구 구조 변화, 유전체 등 16개의 하위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서지영 등, 2016a, p. 55). 그중에서 “재활”, “일상생활 편의 증진” 네트워크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재활” 네트워크의 경우, 고령자의 신체적 활동을 복구하는 재활 목적의 연구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고령자, 낙상, 재활, 플랫폼, 보행, 보조 등의 핵심어가 탐색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ICT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고령자 재활에 있어서 센서, 컴퓨팅, 로봇 등이 연구개발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지영 등, 2016a,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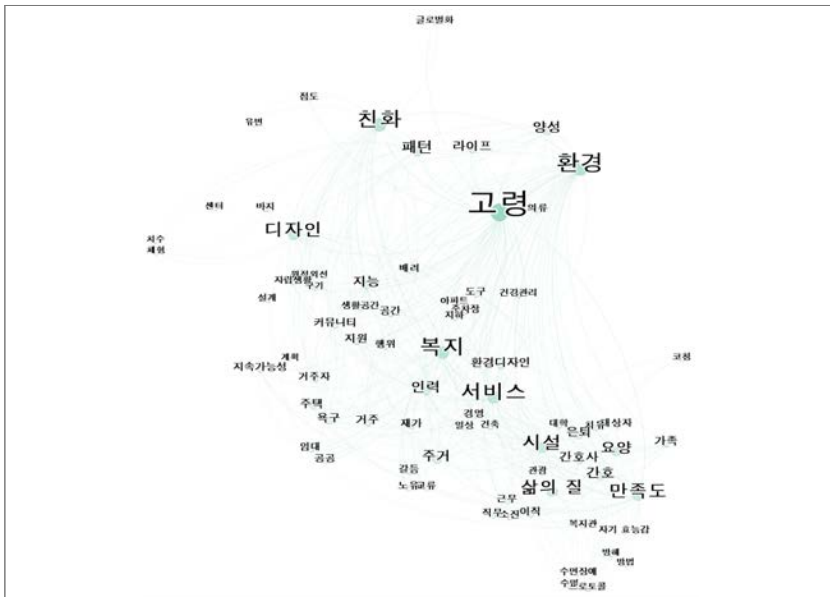
[그림 9-11] “재활” 연구개발 사업 하위 네트워크 맵



자료: 서지영 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56.

“일상생활 편의 증진” 네트워크의 경우, 복지 서비스 및 요양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네트워크 등 2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분류된다. 복지 서비스 및 요양과 관련된 하위 네트워크는 고령·환경이라는 일반적인 핵심어 이외에 ‘복지’, ‘서비스’, ‘시설’, ‘삶의 질’, ‘요양’ 등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관련되어 복지 서비스 및 요양 시설과 관련된 연구 이외에, 삶의 공간인 주거와 생활공간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차원의 고령자 지원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음을 하위 네트워크의 왼쪽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과 관련하여 요양의 객체인 고령자 이외에 요양 서비스의 주체인 가족 및 간호사에 관한 연구도 근무·직무·이직·소진 등의 핵심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지영 등, 2016a, p. 59).

[그림 9-12] “일상생활 편의 증진(요양)” 연구개발 사업 하위 네트워크 맵



자료: 서지영 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60.

“일상생활 편의 증진” 네트워크의 경우, 스마트 기기와 관련해서는 ICT의 발전에 따라 고령화와 ICT를 융합한 연구 경향이 확인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이동성·접근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스마트, 자동차,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간공학 등의 핵심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행동” 및 “생활”이라는 핵심어를 매개로 고령자 일상생활 관련 연구가 에너지 관련 연구, 즉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네트워크의 오른쪽). 이에 에너지, 기후 변화, 폭염, 더위, 한파, 추위 등의 핵심어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에너지 문제 및 기후 변화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고령자가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 계층으로 고려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서지영 등, 2016a, pp. 60-61).

“노년기 생활” 네트워크의 경우 위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관련되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이 복지 서비스 및 스마트 기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네트워크인 반면, 노년기 생활은 고령자의 사회관계성, 여가 관련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이다. 이에 노년기 핵심어를 중심으로 부부, 관계, 자녀 등 관계와 관련된 핵심어와 프로그램, 스포츠, 여가, 강좌, 텔레비전 등 여가 프로그램 관련 핵심어가 분포되어 있다. 다만, 복지 서비스 및 요양에 초점을 둔 일상생활 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노년기의 관계 및 여가에 대한 연구개발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지영 등, 2016a, pp. 61-62).

고령자 질병과 관련해서는 치매, 알츠하이머 등 정신 질환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에 인지, 치매, 알츠하이머를 핵심어로 인지 장애와 관련된 하위 네트워크가 별도로 구

성된다. 특이한 점은 인지 장애의 병리적 연구 이외에 인지 장애 고령자의 신체적 활동과 생활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의 왼쪽 하단). 또한 스마트 기기, 가상 현실, 게임화 등의 핵심어를 통해 인지 장애 고령자의 치료 및 재활에 ICT를 융합한 연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지영 등, 2016a, p. 65).

[그림 9-13] “인지 장애” 연구개발 사업 하위 네트워크 맵



자료: 서지영 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65.

2. 해외 동향 고찰

가. 일본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는 2011년 발표한 “장수사회에 기여하는 학술 커뮤니티 구축(持続可能な長寿社会に資する学術コミュニティの構築)”을 통해 고령화 관련 연구 과제와 정책 과제를 총망라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더하여 고령화 과제의 전체적인 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고령사회 대응 학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고령화·장수화 관련 과제 일람 - 장수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술 로드맵(이하 “고령화 과제 일람”)”은 고령사회에서 수행되어야 할 R&D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일람은 일본 정부가 실제로 추진한 국가 계획은 아니지만, 일본의 고령화 관련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정부에 제안한 R&D 로드맵으로, 일본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R&D 주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서지영, 정기철, 박현정, 2016b, p. 64).

고령화 과제 일람은 일본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발표한 미래에 관한 각종 제언, 고령화·장수화 관련 연구 논문·서적, 문부과학성의 미래 기술 연표, 경제산업성의 기술 전략 맵 등 각종 로드맵에서 고령화·장수화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과제를 전부 취합한 후, 일본학술회의의 회원을 비롯한 고령자·고령사회에 관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다. 총 185개의 과제(소항목)의 유사성·관련성을 토대로 분류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국민, 지역, 국가(사회)의 3개의 틀에서 19개 영역, 34개의 중항목을 분류했다. 일본학술회의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제시한 ‘장수사회에 기여하는 학술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그중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연관된 R&D 과제를 따로 모아 보면 <표 9-2>와 같다(서지영 등,

2016b, p. 65).

〈표 9-2〉 일본 “고령화 과제 일람” 중 주체에 따른 과제 목록 - 지역

영역	중항목	소항목
주택	고령자용 주택의 방향성	75. 주택의 고성능화/유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76. 고령자용 주택 정비, 주택 메뉴의 확충과 정책 정비
		77. 고령기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 구축
		78. 주택의 장수명화 기술 개발
		79. 저소득 고령자용 임대 주택의 방향성 검토
주거 환경, 마을 만들기	초고령사회의 주거 환경의 방향성	80. 지방 도시의 고령사회 대응 마을 만들기 검토, 실시
		81. 자산 관리/활용과 공적 제도 지원의 방향성 연구
		82. 분양 아파트 슬럼화와 구분 소유권 및 관리 방법 연구
		83. 특수 집락 거주자의 생활 지원 방향성 검토
		84. 다세대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 공간(Community Spot) 연구와 정비
		85. 자연환경과 주거 환경의 조화를 위한 연구
이동/교통	초고령사회의 이동/교통 체계의 방향성	86. 고령자의 시각/청각/신체 기능을 배려한 환경 정비와 기술 개발
		87. 고령자 배려 교통안전 시스템 검토, 정비
		88. 공공 공간의 배리어 프리화 검토, 정비
		89. 지역별 Personal Mobility(전동 휠체어,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정비
		90. 장애 고령자의 운전 진단/서포트(운전 오류에 의한 사고 방지), 운전면허 제도, 대체 수단의 검토, 정비
		91. 노화로 인한 운전 곤란자를 위한 운전 조작 지원 시스템 개발
		92. 장애 고령자의 사회생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고성능, 이동/보행 지원 기기/시스템 기술 개발
93. 고령자의 외출 지원 방안의 검토, 정비		
ICT	ICT/기기 개발, Gerontechnology, 복지공학의 발전	94. 커뮤니케이션 기기에 의한 네트워크 만들기
		95. 도시, 지방의 정보 격차 시정을 위한 검토, 정비
		96. ICT 활용 취로 지원 연구
		97. 콘텐츠와 미디어의 유비쿼터스화
		98. ICT 배리어 프리화(고령자를 배려한 콘텐츠 개발)
		99. IT 정보 검색 기술의 개발과 향상
		100.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 간호, 생활 관련 기기 개발, 이용 촉진을 위한 검토, 정비
		101. 고령자 낙상 방지와 충격 흡수 기술의 개발
		102. 원격 의료, 간호 시스템의 개발과 네트워크화

영역	중항목	소항목
생활 지원	고령자에 대한 생활 지원 방향성	103.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생활 지원 서비스의 방향성 연구
		104. 가사 대행/생활 지원 로봇의 개발, 보급
		105. 기존의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한 고령자 생활 지원
		106. 고령자의 낙상 방지 등의 안전을 배려한 주택 개발
		107. 고령자의 가정 내외 사고 방지
		108. 생활종합보장 민간 보험의 방향성 연구
모니터링/치안/방재	고령자의 안심 확보	109. 지역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110. 지역 포괄적 시큐리티 시스템 구축
		111. 재해 약자의 구제 지원 시스템 개발, 보급
	고령자 학대 방지/권리 옹호	112. 성년후견 제도, 권리 옹호 사업, 지자체 법률 서포트 강화
		113. 고령자가 피해자가 되는 범죄를 방지하는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self-neglect, 고독사 방지	114. self-neglect 방지, 은둔형 고령자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와 대책 구축
115. 고독사 방지에 대한 검토와 대책 구축		
116. 가정 내 고립자의 발견과 지원		
인간관계/삶의 보람, 취로/사회 참여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 세대 간 연대 강화, 고령기의 인식처/활동 할 수 있는 장소의 확대 (가족/지역 사회 연대 약화/무연사회화)	117.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118. formal/informal Care의 방향성과 확충 방안
		119. 지역 주민의 사회 공헌 활동의 체제 정비와 그 추진
		120. Social Biz., Community Biz. 확충을 위한 정비
		121. “새로운 공공”의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122. 테크놀로지에 의한 직장 환경의 개선, 고령 취로자 배려형 직장 환경 연구
		123. 장수 시대의 평생학습의 방향성 검토 및 개발
	고령자의 경험/스킬의 계승	124. 다세대 공생, 인적 문화 교류 추진
		125. 지역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육성
		126. 숙련자의 기술 계승 시스템 개발
		127. 고령자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활용하는 방안
		128. 산학관민에 의한 협동 사업 방향성, 추진

주: 일본학술회의 제언 [지속적인 장수사회에 공헌할 학술 커뮤니티 구축(2011년 4월 20일)](pp. 25-29)에서 발췌한 것을 닛세이 기초연구소에서 편집.
 자료: 日本學術會議. (2011); 前田 展弘. (2012)에서 재인용.

또한 도쿄대 IRT연구기구(東京大学IRT研究機構)에서는 고령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데, IRT연구기구가 제시하는 고령사회의 지원 기술로는 1)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심각화에 대한 노동 지원, 고령자 비율 증가에 따른 삶의 보람의 상실이나 사회보장 비용 증가에 대한 건강한 삶의 보람(健康生きがい) 지원, 3) 세대 구성의 변화에 따른 개호·가사 부담의 증대에 대한 가사·개호 지원의 3가지 분야가 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개인과 가정에 부담을 가중하여 고령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저해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로는 위 3가지 지원 기술 중에서 건강한 삶의 보람 지원과 가사·개호 지원이 해당된다.²³⁾

[그림 9-14] 고령사회 지원 기술의 3개 분야와 세부 기능

	Labor support	Healthy lifestyle support	Household and care support
Industry	Primary Industry	Healthy seniors	Meals
	Secondary Industry	Persons requiring support	Laundry
	Tertiary Industry	Persons requiring care; levels I to III	Cleaning and tidying up
	(Agriculture) Plowing/cutting grass/gathering crops (Forestry) Movement over uneven land/afforestation/ branch cutting (Fisheries) Fishing, nets, aquaculture, processing (Mining) Excavation, transport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internal and external fittings (Manufacturing) Transport, parts sorting, processing/ assembly, inspections, packaging *Excluding so-called "manipulation-type" industrial robots Collection/transport (office buildings, etc.) Product management Cleaning (offices/commercial facilities/hospitals/ outdoors) Garbage collection (household, office, factories, shops, industrial waste, intermediate processing plants, incinerators, landfill sites) Maintenance (roads, equipment and facilities, bridges, tunnels, railways, aircraft, overhead lines, levies) Security/crime prevention (buildings, commercial facilities) Reception/inducement (commercial shops/facilities) Medical (tests)	Maintenance of physical functions/illness prevention Interaction support Illness diagnosis support Basic movements support for persons with slight limitations to limb movement; e.g., rheumatism or arthritis Support for persons with forgetfulness Walking support (difficult to walk with complete independence, but can walk with support) Support in moving/going outside Eating support Bathing Support in elimination of bodily wastes Picking up objects Communication support Body movement support	Cooking Cooking frozen and retort foods Setting and clearing the table Washing dishes Laundry Drying and bringing in laundry Ironing Folding laundry Putting away laundry Vacuuming Wiping and washing Sweeping (inside and outside) Weeding Tidying rooms / Making beds Throwing away garbage Child care: Long-term care Holding individuals for meals, changing, and rolling over in bed Moving to and getting on and off of toilets, wheelchairs, and beds Bathing Putting on and taking off clothes, giving sponge baths Watching over seniors Changing diapers

자료: 松本潔 外, (2013). 高齢社会におけるロボットによる生活支援技術. 東京大学IRT研究機構. p. 2.

23) 이하 도쿄대 IRT연구기구에서 수행하는 생활 지원 기술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松本潔 外, “高齢社会におけるロボットによる生活支援技術” (http://www.irt.i.u-tokyo.ac.jp/outline/about_irt.pdf) 참조.

그 외, 비질환 고령자와 노쇠한 고령자의 건강 관리/증진이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科学技術振興機構)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프로그램(戰略的イノベーション創出推進プログラム) 중 라이프사이언스 영역에서 영양 및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건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재흥전략(新たな成長戦略 「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이 제시한 전략 시장 창조 플랜 중 하나로는 국민의 건강수명의 연장(国民の「健康寿命」の延伸)이 포함되어 있다(서지영 등, 2016a, p. 84).

나. EU

EU는 고령화를 실버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고령화를 위기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지영 등, 2016a, p. 85). 최근 EU의 고령화 R&D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서지영 등, 2016a, p. 85). 우선, EIP on AHA²⁴⁾에서 고령화 R&D에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령화 R&D 지원 자금이 증가하였고 회원국들의 공동 프로그램²⁵⁾이 확산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고령화 R&D 주제가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와 '에이징 웰(Ageing Well)'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 등 기존의 주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각 프로그램별 주요 주제는 기존의 일반적인 보건

24)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기구를 의미한다.

25) 공동 프로그램에는 AAL JP(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JPI MYBL(The Joint Programming Initiative, "More Years, Better Lives"), JPND(The EU Joint Programme-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등이 있다.

의료 시스템 개발, 고령 관련 기술 등에서 다양한 고령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보다 개인화된 의약품, 영양 시스템 및 ICT 기반 솔루션 개발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 FP 7 이후 도출된 연구 성과들이 실제 시장 확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R&D를 지원하고 회원국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서지영 등, 2016a, p. 85).

3. 향후 추진 방향

여기에서는 미래 사회에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이와 연관되어 부상하고 있는 기술(emerging technology)들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우리나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도출한 후, 고령자 1인 단독 가구 또는 고령자 부부 단독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 사회 변화 전망의 종합적 전망 및 ‘고령화’와 관련한 미래 전망 자료 분석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동향 분석 자료 DB인 shapingtomorrow.com을 활용하여, 주요 칼럼, 기사, 아티클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foresight’, ‘disruptive technology’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술 동향 및 각국의 정책 자료들인데, 그중에서 2016년과 2017년(4월까지) 발간된 17개의 보고서를 핵심 자료로서 채택하였고, 원문 전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²⁶⁾ 본 연구에서 적

26) 1. OECD. (2016). OECD Horizon Scan of Megatrends and Technology Trends in the Context of Future Research Policy.
 2. UN. (2016).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Emerging Futures.
 3. EU. (2016). Global Trends to 2030: Can the EU meet the challenges ahead?
 4. UN FAO. (2017).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 Trends and Challenges

용한 분석 방법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서 관련 보고서 전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들의 언어적 표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일반적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서 형태소를 추출하여 원문을 중심으로 핵심어를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고, 핵심어에 대한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핵심어 간 행렬을 구성하는데, 행렬은 문장 혹은 문단 단위나 전체 문헌 단위에서의 핵심어 동시 출현 빈도를 통해 구성하였다. 이러한 핵심어와 행렬을 중심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인 Gephi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가시화하였다.

우선 전반적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된다.

-
5.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6. World Economic Forum. (2016).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7. World Bank. (2016). Economic and Social Inclus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8. 미국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9. 미국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10. 영국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2017). Technology and Innovation Futures 2017.
 11. 영국 Innovate UK. (2017). Innovate UK Delivery Plan 2016/17.
 12. 독일 BDI. (2016). Germany's Prosperity Rests on Innovation: Theses on German industrial policy.
 13. 싱가포르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 (2016). Cybersecurity: Emerging Issues, Trends, Technologies and Threats in 2015 and Beyond.
 14. Intel Security. (2016). McAfee Labs Threats Report.
 15. The Geneva Association. (2016). Harnessing Technology to Narrow the Insurance Protection Gap.
 16. Perry World House. (2017). Global Shifts: Urbanization, Migration, and Demography.
 17. Accenture. (2016). Accenture Technology Vision 2016-People First: The Primacy of People in a Digital Age.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미래 사회 전망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령자들이 1인 가구에서 생활하더라도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둘째, 혼자 사는 생활이더라도 사회·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으며, 넓은 범위의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 셋째,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질환 보유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 주제는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노년기 질환 극복’으로, 이 분야는 기존 보건의료 R&D의 진단·치료 영역이었다. 향후에는 노년기 질환 및 치매 등에 관련한 신약 개발, 진단 기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편안한 요양 환경’으로, 재가 및 시설 요양에 관련한 케어 서비스 질 향상과 수발자 노동 경감 및 수발 환경 개선, 케어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이 제시된다. 셋째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로, 노쇠한 고령자와 활동이 가능한 고령자의 건강 관리/건강 증진 등을 실시하고, 고령자에게 맞는 의복, 주택 리모델링, 식품 개발 등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는 ‘생애 주기 라이프디자인(또는 second life)’으로, 노년기의 자아·자존감 확보 및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활동 기회 확대가 해당된다.

〈표 9-3〉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 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연구개발 내용(예)
질환 극복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진단 기기, 약물
		만성 질환	진단 기기, 약물
		감염병	진단 기기, 약물
	뇌 기능 장애	노화 기전	세포 노화
		노화 억제	화장품, 노화 억제 물질 개발
		인지 기능(기전)	뇌 작용 원리, 치매/알츠하이머 기전
		인지 기능 향상	고령자 뇌 기능 향상
	보건 서비스 접근권 강화	동네 건강 증진 시설 구축 1차 의료 강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편안한 요양 환경	케어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ADL 지원(이동, 배설, 식품 등)
		의료	간병, 의료, 간호
	케어 환경	전문 인력	케어 서비스 전문 인력
		전문 시설	요양 시설, 보호 시설 등
		공급 체계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등
		보호	시설의 배회 방지 장치, 요양 시설 개선
		전문 인력	시설 요양 서비스 전문 인력
독립적 생활	건강 관리/ 증진(예방)	보건 서비스 접근권 강화	동네 건강 증진 시설 구축 1차 의료 강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개인 신체 건강 관리	스마트 개인 의료 기기 건강식품, 안마기, 근력 저하 예방 기기
		재활	재활 보조 기기, 정형
	생활 편의 제고	일상생활 지원	IADL 지원(청소, 집안일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 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삶	교육	교육 콘텐츠	노후 설계
			재교육 진학
		교육 인프라	지역 교육 서비스
			기관/회사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연구개발 내용(예)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삶 (계속)	경제활동	취업	정보 제공/컨설팅 정책/제도	
		창업/창직	정보 제공/컨설팅 정책/제도	
		노동권 보호	교육, 컨설팅 정책/제도 물리적 인프라	
	여가 활동	문화 활동	콘텐츠 인프라	
		학습 활동	콘텐츠 인프라	
	사회 참여	사회적 관계	가족, 세대, 다문화	
		자원봉사	콘텐츠 인프라	
		지역사회 문제 참여	콘텐츠	
	커뮤니티 조성	주거 지역 공간 디자인	가족 관계	
		이동성 증대	고령 친화적 이동 수단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	사회 안전 /사회 신뢰	재난	예방-회복
			교통사고	예방-회복
치안			예방-회복	
보안			물리적 보안 사이버 보안	
자살			자살 예방	
폭력/학대			사회적 폭력/학대 예방	
교통		취약성 보완	운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장치 개발	
		교통 인프라(물리적)	도로 부속물 훈련/(재)교육 시설	
		교통 인프라(제도적)	법규	
환경		이상 기온	폭염 피해 저감 폭한 피해 저감	
		대기오염	다중 이용 시설	
		기타 환경오염		
소득 보장	보험/연금	사회보험 사보험		
	자산 관리	부동산 동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연구개발 내용(예)	
R&D 인프라	지식 기반 구축	데이터 구축	일반적 고령자 관련 데이터 특정 상황에서의 고령자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	
		연구 방법론	연구 프로세스 연구 시스템	연구 프로세스 설계 융합 연구 플랫폼, 리빙랩 등
	기술 산업화	시장		공공 구매 표준/인증
			기술 산업화 물리적 인프라	실증 사용성/효용성
		기술 산업화 지식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마케팅	수출 지원 제품 정보 제공

자료: 서지영 등. (2016b). 고령친화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고령친화 R&D 분류체계. pp. 76-78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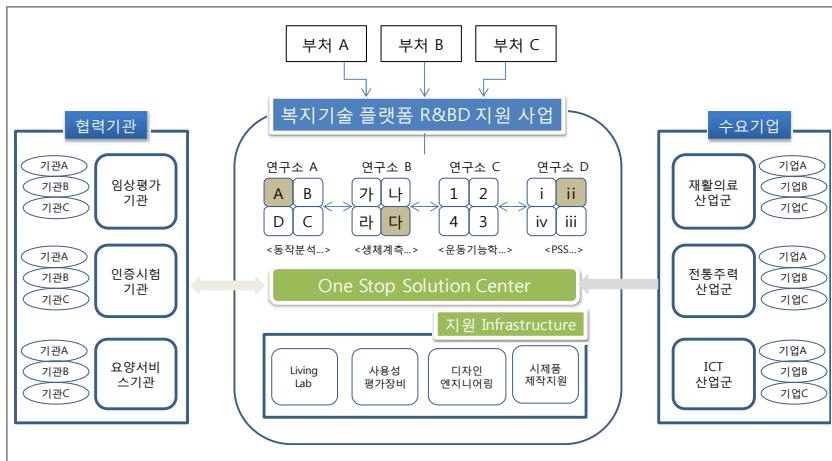
제4절 소결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의 목적을 고령자 개인, 고령 가구 및 고령 가구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볼 때, 현행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삶의 질 향상의 니즈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건너뛰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급급한 점이다. 이는 고령자를 기술 사용자로만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데, 고령자의 삶에 기술이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기술 개발 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고령자 즉 사용자 니즈에 대한 해석이나, 니즈 충족도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은 앞으로 더 필요한 연구라 하겠다(서지영 등, 2016a, p. 82; Sixsmith, 2013, p. 17).

둘째, 다양한 학문 분야가 서로 협업하는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도가 부족하다.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포착하고, 그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고안해 내는 일은 ‘공학적’ 지식이나 ‘의학적’ 지식 등의 단일 학문적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R&D 사업이 성장해 오면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한 연구의 융합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융합을 실행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 내에서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융합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간 분야별 융합도 있지만,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사업까지의 단계별 벽을 허무는 융합적 사고 또한 필요하다. 연구개발 단계, 학문 분야 간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서지영 등, 2016a).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융합 연구개발 플랫폼 형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림 9-16] 융합 연구개발 플랫폼 구조



자료: 서지영. (2014).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

위의 그림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다양한 성격의 행위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품 개발에는 개

발자뿐만 아니라, 임상 관련 기관도 있고, 인증 시험 기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기업도 하나의 산업군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분야의 행위자들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 그룹도 동작 분석에서부터 의학 관련 연구자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융합적 네트워크 속에서 사용자의 수요를 제품에 반영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해결 방안이라 생각되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산업-사용자 네트워크 구축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노인도 운전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차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35도·부·현지사가 참가하는 ‘고령자 친화적 자동차 개발 추진 지사 연합(高齢者にやさしい自動車開発推進知事連合)’을 설립하였고, 산하에 자동차공학 등의 전문가, 고령자·여성 단체 대표, 자동차 회사 등으로 구성된 ‘고령자 친화적 자동차 개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의 상황이나, 사고로 이어질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검토하였다. 또한 고령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불만·요구 사항, 자동차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운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이나 자동차 사용 실태에 적합한 차량의 검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잘못 밟는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 등 ‘지원 기능’과, 2) 고령자의 자동차 이용 실태에 맞추어 작은 반경의 회전 등의 기능을 갖춘 운전하기 쉬운 경차보다 작은 근거리용 2인승 소형차의 ‘차량 규격’을 고령자 친화적 자동차 개념으로 결정했다(平瀬博人, 2012, pp. 11-12).

이러한 2인승 소형차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 ‘환경대

응차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실증실험(環境対応車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に関する実証実験)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福岡県朝倉市)에서 사회실증실험이 실시되었다. 고령자에게 실험 차량을 대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형차 이용 의향과 교통 혼잡하에서의 문제점과, 미리 설정한 경로를 주행하여 다른 차량에서 본 소형차의 인상, 피시인성 등을 파악했다. 사회실증 결과 2인승 소형차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작은 반경의 회전과 주차가 쉽다는 이유로 60% 이상의 고령자가 2인승 소형차를 향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한편으로는 교통이 혼잡할 때 차량이 작아 다른 차량에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인성을 높일 필요와, 차량 이동 간 측풍에 따른 동요나 추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교통 혼잡 속에서도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동력 성능과 주행 안정성의 필요성이 식별되었다(平瀬博人, 2012, pp. 12-13).

[그림 9-17] 사회실증실험 풍경



자료: 平瀬博人. (2012). 高齢者にやさしい自動車の実現に向けて. p. 13.

또한 많은 고령자는 신체·운동 기능의 지속적인 쇠퇴와 뇌혈관 장애에 따른 마비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다.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조자 없이 전동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은 전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이동 능력이 더욱 제한된 요보호자(要介護者)의 경우는 가정이나 요양 시설 내 약간의 이동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정의 경우 주택 내 문지방과 같은 장애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고령자들이 각각 다른 수준의 제약하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이러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배경에는 저비용의 ‘삶의 질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개호 부담의 경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큰 정책 이슈이다.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 건강한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허약 고령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개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기기와 서비스·시스템을 제공하여, 기기와 서비스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도모한다.

2. 실증 사업 추진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도 최대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사회적으로 확보하고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이동 수단으로서 전동 휠체어 등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장애인이 활용하는 데 고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개인의 이동성(personal mobility)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적십자사 구마모토 건강관리

센터를 대표로 하여, 구마모토현, 구마모토대학, 혼다기술연구소, 개호보협사업소 등이 연구팀을 이루어 2010~2013년 ‘전동 카트를 활용한 고령자 모빌리티 확대실증 사업(電動カートを活用した高齢者モビリティ拡大実証事業)’을 실시했다(永田千鶴, 松本佳代, 2014, p. 53).

[그림 9-18] 전동 카트를 이용한 고령자 모빌리티 실증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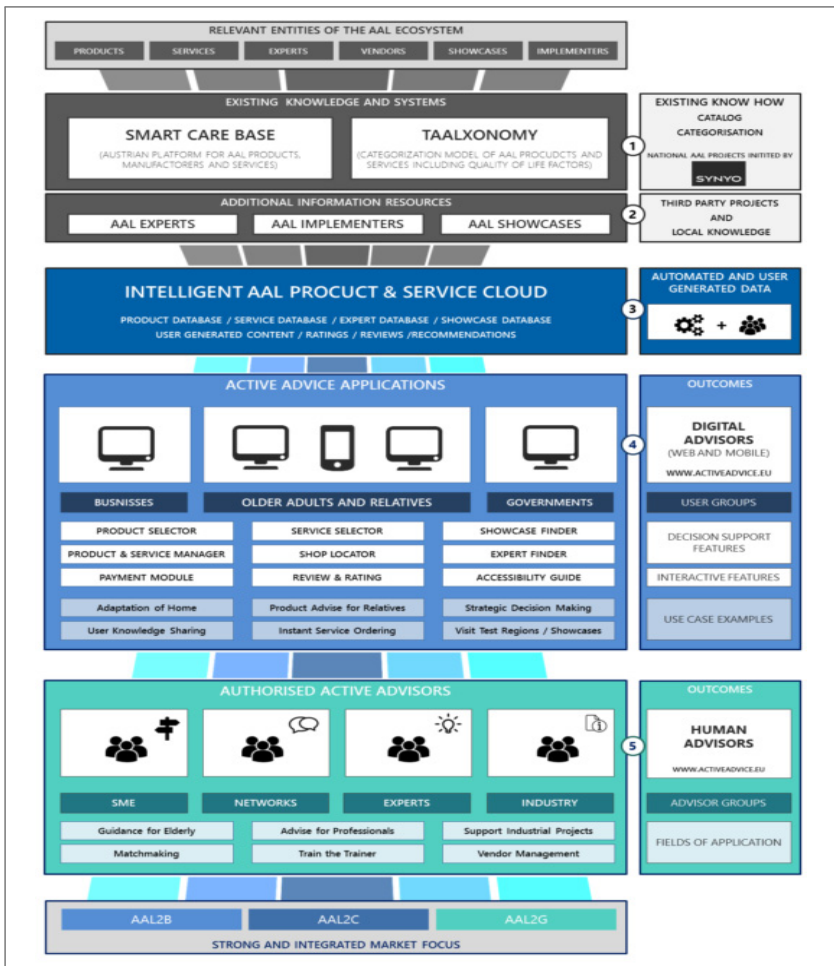
자료: 日本赤十字社熊本健康管理センター. (2014). “電動カートを活用した高齢者モビリティ拡大実証事業 報告書” p. 141.

3. ICT 인프라 구축

ActiveAdvice 프로젝트는 노인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인터넷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기업, 정부,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ICT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ICT 환경은 노인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국내외 서비스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이용자 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의 6개 조직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약 130만 유로의 예산으로 2014년 4월에 시작된 후, 그 결과물인 인터넷 홈페이지(www.activeadvice.eu)가 완성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그림 9-19] ActiveAdvice 프로젝트 개념도



자료: Active Advice 홈페이지. <http://project.activeadvice.eu/project-overview/>

제10장

미래 가구 변동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

제1절 필요성

제2절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국내외 사례

제3절 미래 가구 변동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 과제

10

미래 가구 변동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

제1절 필요성

장래 가구의 변화에 대해 전망한 결과, 가구 규모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3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는 데 반해 가구 규모가 더 늦게까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구당 가구원 수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즉,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소비 패턴, 주택 수요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가족생활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1인 가구 등의 증가는 건강이나 안전 등에 있어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가족이 없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립 시 소외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구 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은 가구의 고령화 추세, 즉 1인 가구나 부부 가구 중에서도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들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인으로만 구성된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이동성과 인지 능력 등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요컨대, 저출산 또는 무자녀, 이혼, 사별, 자녀 세대들의 도시로의 이주, 가치관 변화 등의 시대적인 상황 변화로 인하여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이들 노인이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80세 이상 후기 고령화되면 가구의 취약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구 변화에 따라 돌봄, 이동성 보장, 소비 생활 유지 등을 위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며, 젊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세대 간 교류가 줄어들어 과거와 같이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지원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고령사회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미래에 재정적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지 서비스 확대만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가구 등 취약 가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본인들이 살아와 익숙하고 근거리로 인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원은 노인과 정서적인 연계를 가지지 못한 지역 기관에 의한 돌봄 제공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세대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파트너십 구축 형태는 지역사회 내 유용한 자원의 종류와 기능 또는 능력(capacity),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향(가치관) 및 욕구, 지방 정부 등 공식 기관의 능력과 의지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가구의 변화에 대응한 파트너십은 획일적이라기보다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은 다양한 주체들, 즉, 주민, 민간단체, 기업, 협동조합, 노동 단체, 복지 기관, 지자체 등에 의해 자생적으로 혹은 의도된 기획에 따라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외국 사례와 국내 일부 사례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가구 변화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국내외 사례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다양한 자원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미래 가구 변화에 따른 가구의 고령화 등 가구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다. 우선, 고령 가구가 오래 생활한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살며 상부상조하며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W.co(워커스 컬렉티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택배를 통한 공동 구매, 건강·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돌봄을 포함한 고령자 재택 및 복지 시설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김영란, 2013). ‘W.co(워커스 컬렉티브)’는 생활자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활 기술, 문화, 경험을 살리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지역 활동(Community Work)의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가형 복지 사례가 될 수 있다(김영란, 2013). 이와 유사하게 지방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들이 그간 생활해 온 “삶의 터전”에 기반하여 의료, 간호, 예방, 생활 지원의 4가지 시스템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재정, 2016). 구체적으로 원스톱 종합 상담 지원(개별 상담, 각종 신청 접수, 고령자 고립 방지 대책, 가족 부양자 교실, 치매 지원 등), 고령자 권리 옹호(성년후견 제도, 학대 방지, 일상생활 자립 지원 등), 간호 예방 매니지먼트(케어 플랜 작성, 경증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재정, 2016).

독일은 2004년에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가족 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가족을 위한 지역 연대 프로그램을 창립하였고, 현재 지역 연대에는 600개 이상의 기업, 교회, 조합, 행정 기관 등이 참여해 있다.²⁷⁾ 지역 연대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가

27) Bündnis für Familie in Schwerte 홈페이지 www.familienbuendnis-schwerte.de/index.html

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가족정책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삼식, 이지혜, 2014, p. 43). 한편, 증가하는 노인 가구에 대비하여 이들의 고립을 예방하고 세대 간 통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 피팅겐시의 노인공동생활가정협회(Freie Altenarbeit Göttingen)는 2008년부터 상담 서비스, 세대 간 만남의 장 마련, 세대 통합형 도움망 형성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로 고령자 아이 돌봄 봉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젊은 세대는 고령 세대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박은정, 2014, p. 13).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는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곤란한 노인 단독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캐나다 연방 정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 회사, 지역 의료기관, 민간 및 비영리 주택 사업자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채경, 2014, p. 11). 이들은 ILBC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BC Program)을 통해 돌봄 주택을 관리하며, 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24시간의 전문 돌봄 서비스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건강, 영양, 안전 등 부분적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자들에게 제공되며, 기존 가정 방문 지원 서비스로는 더 이상 자가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전채경, 2014, p. 11). 돌봄 주택은 숙박, 식사, 청소, 세탁, 여가 활동 기회, 이발 및 미용, 이동 수단, 의료 및 24시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채경, 2014, p. 11).

2. 국내 사례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육아 공동체인 ‘온마을엄마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마을엄마품’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출퇴근 시간대, 방과 후 보육 종료 시간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 등에 같은 마을 혹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 엄마(어르신)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일하는 여성의 집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 주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육아 문제를 품앗이 형태로 해결하여 마을 육아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²⁸⁾

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되어 있는 안전한 시설(주민 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마을 회관 등)의 유휴 공간과,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경력 단절 보육 교사, 은퇴 교사, 자원봉사, 지역 주민 협의체,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보건복지부, 2017). 현재 전국 10개의 시·군·구의 프로그램이 선발되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 예로 충남 보령시는 민간 빌딩의 장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아동에게 일시 및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중에는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현장 학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 돌봄 놀이터’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기존의 지역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

28) 온마을 엄마품 홈페이지. <http://www.onpoom.com>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2017. 9. 26. 인출).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한편, 울진군에서는 2011년부터 주민들 간 자생적인 조직으로서 ‘늘푸른봉사회’가 형성되어 10개 읍·면에 조직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독거노인 가정을 돌아보고 집 청소, 빨래, 반찬 제공 등 노인들이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집을 수리해 주기도 하는데, 집 수리에 돈이 많이 들면 지역사회 내 다른 자원과 연계해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큰 집에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말벗이 되어 대화를 해 주고 있다. 이 조직은 38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 1회 정도는 조직을 짜서 노인 독거 가구 등을 순회하며, 회원 개별적으로는 각자가 상황에 따라 연중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상을 찾고, 정보를 검색하여 대상을 찾기도 한다. 회원들이 직접 지원하거나 다른 지역사회 자원(공공 기관 포함)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계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모으고 후원을 받고 있다.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가구 변화와 관련한 외국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한 사례 고찰 결과, 이들은 가구가 직면한 문제나 지역의 특수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십 대상 주체는 민간단체, 지역사회의 단체, 비영리 법인, 자원봉사자, 노인 클럽, 자치회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 복지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 욕구 충족, 의료 네트워크 구축, 고립 방지, 일상생활 자립 지원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다. 아울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식화된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조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요자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생이나 접근성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외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소규모 서비스를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확장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김영란, 201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자원의 파트너십 구축은 그 사례가 많지 않고, 일부 사례의 경우에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사업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기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미진하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자생적인 조직들의 경우에도 봉사 측면이 강조되고 있을 뿐, 불규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집 청소, 빨래, 공동 식사, 건강 체조 등의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거두기 곤란한 실정이다.

제3절 미래 가구 변동에 대응한 파트너십 구축 과제

1. 파트너십 구축 방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를 전망한 결과, 출산율 회복 수준에 관계없이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0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로만 구성된 가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후기 고령 인구의 경우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이 약화되어 이동과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생필품 구매, 기본 생활 관련 서비스 이용 등이 어려워져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독거 노인의 경우 이동과 활동의 제약으로 고립되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소외감 등 정서적인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파트너십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동성과 활동성이 낮은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특히 후기 고령 인구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관련 재화와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적 및 정서적 고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 등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들이 경제적 비용, 생활 편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집단을 이루고 식생활, 취침, 문화·여가 등을 함께하는 공동체 성격의 거주 형태가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각자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거주 형태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기 마련이다. 즉, 요양이나 보호 등의 목적이 뚜렷한 ‘노인 시설’과 달리,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거주에서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 패턴, 습관, 인식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노인들 간 갈등 등이 유발되기 쉽다. 따라서 향후 파트너십은 집단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

로 복지, 문화·여가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집단 내에서도 각자가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정서적인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향후 노동력 부족 등과 맞물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맞벌이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가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경제활동 등에 참여하는 여성 인구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경력 단절 대신 결혼 또는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영향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결국 미래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가정 양립은 적정 수준의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돌봄 인력도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 등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 서비스를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자녀 양육 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의 재정 사업 형태만으로 육아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파트너십은 종래 가구 내에서 여성들이 전담하였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역할을 남성은 물론 직장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참여하여 분담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균형' 실천에 중점을 두고 구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가족 연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 양육 가정들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은 대인 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시간 배분, 성 평등적 가족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표적인 가구 형태인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부+미혼자녀' 가구, '모+미혼자녀' 가구, '조부(모)+미혼손자

녀' 가구 등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편부나 편모 및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부와 모가 함께 양육하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은 자녀 양육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 변화를 보면 출산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망률이 낮을수록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특히 후기 노인으로 구성되는 가구들)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출산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과제와 노인 가구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제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각 세대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파트너십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대 간 파트너십 구축의 장점들은 파리연대의 세대 통합 주거 모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서울시 복지재단, 2014). 이 모델은 젊은 세대에게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 노인 가구에게는 경제적 수입과 더불어 안전 문제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서울시 복지재단, 2014). 세대 간 파트너십은 청년 세대-노인 세대 간뿐만 아니라 여가-놀이 연대를 위한 아동 세대-노인 세대 간 파트너십 구축, 노노케어, 노년기 적응 지원 등을 위한 전기 고령 세대-후기 고령 세대 간 파트너십 구축, 상호 의사소통 활성화와 직업 경험 전수 등을 위한 청년 세대-중장년 세대 간 파트너십 구축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여건

가.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

대체적으로 파트너십은 비공식적이면서 개별화된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 내 관련된 자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미래에 가구들이 소규모로 더욱 세분화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가구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절차 등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가구 변화에 따른 돌봄 등에 대한 수요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비정기화해지고, 욕구 수준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 체계와 문화 및 인식 등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 확산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자생적으로 구축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의 중요성, 구축 방법 등을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하는 것이 미래 시민 육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파트너십 구축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구축에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혜자로서도 파트너십의 활동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생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용이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한 행·재정 지원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목적의 파트너십 구축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최대한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파트너십의 구축 및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거점 공간 마련, 다양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구축, 정보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등에서 파트너십 구축 관련 전문 인력을 훈련 및 양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나. 파트너십 영역의 확대

미래에 가구의 변화는 다양화, 소규모화, 고령화 등 취약성이 증가하는 등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가구 및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적합하도록 파트너십 구축의 목적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들이 종래 돌봄 등의 복지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파트너십 구축은 돌봄 등 복지 영역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영역으로서 건강 관리, 주거, 금융, 소비 활동, 노동, 평생교육, 여가, 문화, 안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 고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실제 우리보다 고령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돌봄 이외의 영역까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어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자원의 발굴 및 역량 제고

파트너십 구축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 내에 어떠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실제 이들 자원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파트너십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자원들로는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은 물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동체 조직, 직능 단체, NPO, NGO, 봉사 단체 등 모두 가능하다. 파트너십이 돌봄 등을 포함한 복지 영역은 물론 건강 관리, 주거, 금융, 소비 활동, 노동, 평생교육, 여가, 문화, 안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 가능한 자원의 종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지역 상황에 비추어 보아, 한 지역 내에 필요한 영역들 모두에서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환언하면, 일부 영역들만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각 영역에서도 파트너십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원은 극히 한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들을 발굴하여 다양화하고, 이들 다양한 자원이 스스로 조직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해당 자원 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원, 해당 자원을 둘러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관련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은 조직 등의 측면에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자원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조직 등을 갖춘 대규모 조직들이 파트너십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들이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크기와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성과 영세성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면, 자원이나 조직이 가구(가족)와 관련하여 어떤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관심도가 높은 자원들은 스스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을 명료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획·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역사회 자원들의 역할 의식은 파트너십 구축 방향 설정,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자원들의 범위 설정, 필요 서비스 등 개발 및 고도화, 효율적인 전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된다. 요컨대,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의 관심도와 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고, 적합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공공 기관의 역할 강화

파트너십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주체(자원)들이 파트너십을 스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전까지는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중간 지원 조직 구축 등도 포함된다. 즉,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여건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며, 이러한 노력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마. 통합적 접근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구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십은 개념상 공급자이든 수요자이든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집단 간의 연대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에서 배경으로는 문화, 관습, 신분(지위) 등을 포괄하며, 특성으로는 인구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것들까지 포괄한다. 대표적인 인구학적인 특성으로는 성과 연령을 들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득 계층 등을 들 수 있다.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주체(자원)나 수혜자(대상)는 지역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문화 및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체와 수혜자를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 등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파트너십 구축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 간에 상호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 이는 미래에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세대들이 스스로를 시설이나 집에 고립되거나 서비스 수혜자로서만 간주하는 대신 지역사회 내 주체자로 참여하여 이웃들을 지원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식과 역할을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파트너십은 보다 지역 통합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혜자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융통성 있고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상호 작용을 최대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인구학적인 특성으로서 성과 연령의 예를 들어보자. 파트너십을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축할 경우,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육아와

가사 등에 대한 부담이 적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파트너십을 서로 다른 세대(연령 계층) 간의 소통과 이해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축할 경우, 가구의 취약성 해소 등 당초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파트너십을 성 분리적이고 세대 분리적으로 구축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 변화에 역행하여 고립과 갈등 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각종 사회정책에서 ‘연대’ 등을 통한 연령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크너십 구축은 지역 통합적, 성 통합적, 연령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4 부

결론부

제 11 장

결론

제1절 미래 가구 변화 전망의 함의

제2절 가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향후 정책 방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인 현상은 그 자체적으로 미래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기본적인 터전으로서 가족 내지 가구라는 단위(unit)를 매개로 여러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구 자체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가족 내지 가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예측되었고, 그에 따라 미래 대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추계 등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가구의 변화 모습을 전망하고, 그러한 변화가 여러 사회 영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우선 미래 가구 변화 전망의 함의를 제시하고, 이어서 그러한 미래 가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화하며, 그리고 끝으로 미래 가구 변화의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한다.

제1절 미래 가구 변화 전망의 함의

이 연구에서 시도한 것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수준과 가족 변화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장래 가구를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자체의

변화 못지않게 가구의 변화 역시 부양 부담 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래에는 가구 구조가 보다 세분화될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특성들로는 가구의 소규모화(가구원 수 1~2인)가 더욱 가속화되는 데에다가 그러한 가구들의 고령화(가구의 연령)도 가속화되어 결과적으로 가구(가족)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의 가구(가족) 변화가 과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학적 시나리오들에 의거해서만 이루어질 것인가? 실제 미래에 가구는 인구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변화할 것이다. 미래는 이 외에도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컴퓨팅, 바이오기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전기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 진보에 의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가족 변화도 주도할 것인가?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가구추계를 통한 계량화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가족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일반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생명 연장 기술 발전을 통해 기대수명을 증가시켜 삶을 계획하는 방식, 케어에 대한 필요성, 세대 관계 등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로, 국내 사회과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줄 수 있는 한국의 가구의 장래 변동은 유럽이나 북미 선진 지역의 “황금시대” 시나리오나 “지속 가능 성장”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중심적 과학기술 혁신의 채택 속도에 따라, “기본 회귀” 또는 “파국적 혁신사회” 시나리오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요컨대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경제적 안정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상의 양극화, 곧 빈부 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사회 전체는 제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를 원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실업이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이 증대하여, 젊은 연령층의 남녀들은 혼인을 늦추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때로는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직장 내 성 평등 중 많은 부분이 실현되고 젊은이들이 1인 가구를 형성하거나 결혼을 한 후에도 높은 이혼율로 한부모 가족 가구는 양산될 수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건강 및 의료 테크놀로지의 혜택으로 기대수명의 신장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신장도 확인해지는 모습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절 가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서 가구의 소규모화 및 고령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미래 가구 변화는 사회·경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여섯 가지 영역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복지 욕구, 가구 소득 불평등, 소비 행태, 지역 간 형평성, 기술 발전 및 지역사회 역할을 포함하였다. 이들 중 복지 욕구, 가구 소득 불평등, 소비 행태, 지역 간 형평성 등은 가구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들로 간주할 수 있다. 기술 발전 및 지역사회 역할은 그 자체적으로 가구 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나지만, 그 특성으로서는 가구 변화의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네 가지 영역들, 즉 복지 욕구, 가구 소득 불평등, 소비 행태, 지역 간 형평성 등의 각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가구 변화의 영향력을 직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미래 가구 변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노인 1인 가구, 특히 중후기 고령 인구로 구성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의 소규모화와 가구의 고령화가 동반하여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구의 소규모화 및 고령화는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의 고령화는 사회 전체적인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가구의 증가는 시장소득이 낮아지는 은퇴 가구 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이들 가구는 저소득층의 주류 가구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소득 불균등도 확대에는 계층 이동성의 저하 현상, 산업 및 직종 간 격차 확대, 임금 격차 고착화, 기술 편향 발전 경향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 요인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도 확대의 주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 및 가구 변화는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와 더불어 사회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개인들로 구성된 생활자로서 가구 또는 가족의 변화가 소비 또는 유통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자는 이전 고령자와는 달리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 등의 특성을 보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측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균 수명 상승에 따른 후기 고령 인구 혹은 이들이 포함된 가구의 증가는 신체적 노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혼자 처리하기 힘든 일들이 증가하고, 쇼핑 약자의 빠른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혹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의 개별화와 식생활의 개인화 등 가구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소비 성향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비수도권이나 농촌에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도시에서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이며, 농촌에서는 1인 가구나 고령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고 빈집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농촌의 경우 인구 밀도가 매우 낮거나 무거주 지역이 많아 민간이나 공공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 인프라 공급이 매우 열악해질 것이며, 이에 미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들의 경우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3절 향후 정책 방안

미래 가구 변화에 따른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 욕구의 증가에 대한 정책 방안들이다. 성별 접근으로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남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및 지자체에 연계된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요리 교실, 텃밭 교실 등)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미한 치매를 앓고 있는 남성 노인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남성 노인들 간 노노(老老)케어를 통해 우울감이나 고독사를 방지한다. 여성 노인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입으로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경로당과 종교 시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간 제공을 활성화하여 교류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무연고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 돌봄을 하기 위하여 전담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도농별 접근으로서는 도시의 경우 세대가 공존하는 돌봄 커뮤니티(예를 들어, 한 건물 내에 1층은 어린

이집과 복지관, 2층은 독거노인 거주, 3층은 방과 후 학교, 4층은 북 카페나 인터넷 카페 등)를 형성하고, 농산어촌의 경우 방문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은 효과가 한계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로 국내 소비 시장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고령 가구의 증가로 인한 쇼핑약자의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량 구매 증가, 인구의 도심 회귀 및 행동반경이 좁은 고령 가구의 증가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소형화, 점조직화 등을 통한 유통업 체계의 고령 친화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 소형화/점조직화된 유통 체계가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택배물 수령 및 예약, 버스/항공권/콘서트 표 구입, 행정 기관 서비스 제공 등 다른 생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 등에서 고립된 고령 가구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1인 가구나 고령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는 농촌에 훨씬 더 심각해지는 반면, 인구 감소 등으로 민간이나 공공의 투자가 약화되어 생활 인프라 공급이 매우 열악해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도시와 농촌의 가구 구조와 가구 유형의 변화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어디에서 거주하든지 최소한의 기초 생활 유지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미래 고령자 그리고 노인 가구의 욕구는 현재의 이들 가구의 욕구와는 상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이들 가구의 라이프스타일 및 생활환경의 변화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업이나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 기반 구축과 관련한 사업의 구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기술(technology)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 지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는 일상생활, 헬스케어, 이동권 보장, 사회 참여 및 안전한 노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연구 및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노인 1인 가구의 생활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이들을 의존적·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고 노인 집단에 대한 시혜·보호 위주로 정책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을 위한 기술(Quality of Life Technologies)”을 활용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로 파생되는 각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는 미래 가구의 변화, 즉 가구의 분화, 소규모화, 고령화 등에 따라 욕구도 보다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보다 높아져 공공의 노력만으로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지역사회-개별 가구 등 여러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행·재정 지원 법제화, 전문 인력 훈련 및 양성, 장애 요인 제거, 거점 공간 마련, 다양

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구축, 정보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미래 가구의 욕구는 다양화될 것이므로, 파트너십 구축 대상 영역을 복지, 건강 관리, 주거, 금융, 소비 활동, 노동, 평생교육, 여가, 문화, 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파트너십 구축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파트너십은 지역 통합적, 연령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3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7-56.
- 고가영. (2014). 1인 가구 증가-소비지형도 바꾼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th, 2014. 18. pp. 2-16
-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민범식.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 국토교통부. (2017).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 국토연구원. (2014). 2차 미래국토포럼 발표자료.
- 국토연구원.(2016). 국토종합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기향. (2015). 노인도 디지털화-신소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주목하라. 보건산업 동향, 2015년 7월호, 2-5.
- 김도균, 유보배. (2016). 新노년층, 신세대인가 신빈곤층인가, 이슈&진단, No. 240. pp.1-25, 경기연구원.
- 김수정. (2013). 한국사회 맞벌이화 이행에서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맞벌이와 홀벌이가구 비교. 가족과 문화, 제25집 4호, 34-59.
- 김영란. (2013). 노인 1인가구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주영, 박지형, 오재학, 조중석. (2016), 미래 교통수요의 변화 예측. 한국교통연구원.
- 김준영. (2016). 일본의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양극화의 진전. 2016년 11월호 고용이슈, 95-118.
- 김찬호. (20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7-19

- 김형석. (2002). 가구주유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권 1호, 65-90.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걱정 보호인구 추계.
-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 전략. (김정환 역). 와이즈베리. (원서출판 2014).
- 박은정. (2014). (독일)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간 소통 프로젝트: 괴팅겐시 사례.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today, 2014. 5, vol.14, 13.
- 박현우, 나진. (2015). 1인 가구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외식업 서비스 방향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3), 2015. 7, 697-704.
- 보건복지부. (2017).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봅니다. 2017. 07. 27. 보도자료.
- 서울시 복지재단. (2014). 프랑스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서지영. (2014).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
- 서지영, 정기철, 이완정, 엄수홍, 박현정.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서지영, 정기철, 박현정. (2016b). 고령친화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고령친화 R&D 분류체계. 보건복지부.
- 성명재, 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성명재. (2015).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215-236.
- 성명재. (2016).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22(1), 1-79.
- 성명재. (2017).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10(2), 111-154.
- 성주인, 엄진영, 박유진, 정규형. (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주인, 채중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농정포커스, 제 2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에릭 클라이넨버그. (2013). -1인가구 시대를 읽어라-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

- 다. (안진이 역). 서울 : 더퀘스트 (원서출판 2012)
- 염지혜. (2016a).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도시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6(1), 157-200.
- 염지혜. (2016b). 한국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교의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9(3), 285-317.
- 염지혜, 전미애. (2016). 한국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가 자녀로부터의 지원 제공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1), 151-172.
- 오아름. (2017.08.12.). [하이빔] 어느 자동차 세일즈맨의 눈물. AutoTimes.
- 오치아이 에미코. (2012).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경아, 곽윤영. (2015). 1인 가구 소비행태와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1-144.
- 이규진, 박성준. (2017.04.17.). '뜨는' 가정간편식(HMR), 식품업계 지도 바꾼다. 아주경제.
- 이삼식, 오상훈, 이상돈, 구성열, 최효진. (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정경희 등. (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 (2015).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17). 인구활력지역 자생발전 과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新지역발전방안. 제27회 지방자치실천포럼 자료.
- 이수욱, 박천규, 최윤경, 선우덕, 이범수, 김완중.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용우, 손학기, 김선희, 김동한, 임상연, 윤영모, 임지영, 강은진, 박정호. (201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와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재정. (2016). 지역 중심의 노인돌봄체계 구축운영 방안. 부산복지 ISSUE REPORT, 통권 제15호.
- 이혜미. (2017.08.08.). 인구감소·젊은층 외면…도요타, 내년 디시장 판매량 계획 7만대 줄여」. 헤럴드경제.
- 이흥일, 박철한. (2011). 중장기 국내 주택시장 전망-수요 및 공급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희연, 한수경. (2014).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하나. 국토연구원.
- 전성애, 형남원. (2012).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의 예측. 국토계획, 47(3), 191-208
- 전영자. (2000). 가족의 변화와 가족학의 과제.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9(2), 2000. 6, 177-187
- 전채경. (2014).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이슈 today, 2014. 5. vol.14, 11.
-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진.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부균, 최민섭. (2013). 가구유형별 구분에 의한 주택수요 예측. 부동산학회지, 19(1), 133-147.
- 진미윤, 최지웅. (2013). 중장기(2013~2030) 주택수요 전망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2013-41).
- 차미숙, 이원섭, 김선희, 임은선, 이영주, 윤영모, 이지원, 박재희, 이양원, 김기웅. (2015). 미래 국토발전전략 수립방안 연구(국토교통부 정책과제).

- 최재현, 윤현위. (2012).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3호, 359-374.
- 통계청. 1982~2014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2007). 한국 장래가구추계 2005-2030. 2017.11.12. 보도자료.
- 통계청. (20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0~2035.
- 통계청. (2016a).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 12. 8. 보도자료.
- 통계청. (2016b).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 9. 7. 보도자료.
- 통계청. (2017a).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4. 13. 보도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a). 2016 국토에 날개를 달다 총권-國.愛.飛. 국토에 날개를 달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b). 2016 국토에 날개를 달다 ①-대한민국 2050 미래 향해.
- 한수경, 이희연. (2017). 맞춤형 빈집 활용을 위한 근린주거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 14-27.
- 한정미, 이용호. (2013).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경제연구원. 산업경제분석*, 2013. 6월호, 22-31.
- Accenture. (2016). *Accenture Technology Vision 2016-People First: The Primacy of People in a Digital Age.*
- Anderson, M. (1983). *What is New about the Modern Family : An Historical perspectives.* Occasional Paper 31. London: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
- BDI. (2016). *Germany's Prosperity Rests on Innovation: Theses on German industrial policy.*
- Beck, U. & Beck-Gernsheim, E. (1989).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am Main.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Bellamy V. & Beaumel, C. (2017). *Bilan démographique 2016. A nouveau en baisse, la fécondité atteint 1.93 enfant par femme en 2016*. Insee Première n° 1630.

Burch, J., Kenneth W. Wachter, & John, B. (1987).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New York: Clarendon Press.

Cherlin, A. (2012). Goode's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A Reconsideration at Fifty Yea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4), 577-607.

EU. (2016). *Global Trends to 2030: Can the EU meet the challenges ahead?*

Eurobaromètre. (2006).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archives/eb/eb66/eb66_en.htm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Goldberger, A. S. (1991). *A Course in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2017). *Technology and Innovation Futures 2017*.

Guptara, P. (2017). *A Response to WEF/ Davos and to Jeremy Rifkin*. Relational Thinking Blog (<http://relationalthinking.net>, 2017. 9.10일 검색).

Hajnal, J. (1965). European Marriage Patterns in Perspective. 101-43 in D. Glass, D. Eversley (eds), *Population in History*, Chicago: Aldine.

Hajnal, J. (1982). Two kinds of Preindustrial Household Formation Syste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8, 449-494.

- Hartman, M. S. (2004). *The Household and the Making of History: A Subversive View of the Western Pas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eyer-Zlotni, Jürgen H. P., & Uwe Warner. (2008). *Private Household Concepts and their Operationaliza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cial Surveys*. GESIS - Abteilung ZUMA (Zentrum für Umfragen, Methoden und Analysen).
- Hollander, J. B., Pallagst, K. & Popper, F. J. (2009). Planning Shrinking Cities, *Progress in Planning*, 72(4), 223-232.
- Innovate UK. (2017). *Innovate UK Delivery Plan 2016/17*.
- Intel Security. (2016). *McAfee Labs Threats Report*.
- Keil, S. (Hg.) (2010). *Familie - Wissenschaft - Politik. Ein Kompendium der Familienpolitik, Wissenschaftlicher Beirat für Familienfragen beim BMFSFJ*. http://www.ffp.de/tl_files/dokumente/2010/familie_wissenschaft_politik.pdf zuletzt abgerufen am 4.8.2017
- Kertzer, D. I. & Barbagli, M. (2002). *The History of the European Family: Family Life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1789-191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ertzer, D. I. (1991). Household History and Sociological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1), 155-179.
- Laslett, P. (1965). *The World We Have Lost*, London: Methuye.
- Laslett, P. (1972). *Introduction: The history of the Family*, in pp 1-90 P. Laslett and R. Wall (eds.)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pp. 1-9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 Bras Hervé. (1993). Marianne et les lapins. *L'obsession démographique*. Paris : Seuil, 284 p.
- Lee, Y. S. (2008). Th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to Regional Economy, *Journal of Korean Planner Association*, 43(7), 7-16

- Lerman, R.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151-156.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tablier Marie-Thérèse and Wall, K. (2017). *Changing lone parenthood patterns: new challenges for policy and research*. chapter in Laura Bernardi and Dimitri Mortelmans (eds). *Lone parenthood in the life course*. Springer (Life course research and social policies) (forthcoming October 2017).
- Li, N., Lee, R., & Gerland, P. (2013). Extending the Lee-Carter method to model the rotation of age pattern of mortality decline for long-term projections. *Demography*, 50(6), 2037-2051.
- Limbach, J. & Willutzki, S. (2002). *Die Entwicklung des Familienrechts seit 1949*. In: Nave-Herz, Rosemarie (Hg.): *Kontinuität und Wandel der Familie in Deutschland*. Stuttgart, 7-44
- March, C. & Arber, S. (1992). *Families and Households : Divisions and Change*.
- Mason, A., & Racelis, R. (1992). A comparison of four methods for projecting household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8, 509-527.
- May, J. F. (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Mayer, K-U. (1987). *Lebenslaufforschung*. In: Voges, Wolfgang (Hg.). *Methoden der Biographie- und Lebenslaufforschung*. Opladen, 51-73
- Myrskylä, M., Kohler, H-P & Billari, F. C.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 (7256), 741-743.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 (2016). *Cybersecurity: Emerging Issues, Trends, Technologies and Threats in 2015 and Beyond*.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Projections, Policy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A Synthesis Report*, International Policy Programmes.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OECD Horizon Scan of Megatrends and Technology Trends in the Context of Future Research Policy*.
- Oswalt, P.(ed.) (2006). *Shrinking Cities: Volume 1 International Research*, Ostfildern-Ruit: Hatje Cantz Verlag.
- Perry World House. (2017). *Global Shifts: Urbanization, Migration, and Demography*.
- Peuckert, R. (2012). Familienformen im sozialen Wandel. 8. Aufl. Wiesbaden.
- Pinchbeck, I. (1930). *Women Worker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Reprint. London: Taylor & Francis Ltd.
- Pison. G. (2017). Tous les pays du monde 2017. *Population and Sociétés*, INED, n° 547.
- Podder, N. (1994), A Profile of International Inequality, *Journal of Income Distribution*, 300-314.
- Pyatt, G. (1976).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The Economic Journal*, 86(342), 243-255.
- Rifkin, J. (201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New

- York: Griffin. (안진환 번역, 제3차 산업혁명, 민음사, 2012년)
- Rifkin, J. (2017).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Misfires With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me*. Huffington Post Blog, <https://www.huffingtonpost.com/jeremy-rifkin>에서 2017. 10. 25. 인출.
- Schilling, J. and Logan, J. (2008). Greening the Rust Belt: A Green Infrastructure Model for Right Sizing America's Shrinking C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4(4), 451-466.
- Schneider, N. F. (1994). Familie und private Lebensführung in West- und Ostdeutschland.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s Familienlebens 1970-1992. Stuttgart.
- Schulz, R., Walh, H. W., Matthews, J. T., De vito Dabbs, A., Beach, S. R. & Czaja, S. J. (2015). Advancing the Aging and Technology Agenda in Gerontology, in: *The Gerontologist*, Vol. 55, No. 5, 724-734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 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원서 출판 2016).
- Shorrocks, A.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1), 193-211.
- Shorrocks, A. F. (1984). 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s. *Econometrica*, 52(6), 1369-1385.
- Silber, J. (1989). Factor Components, Population Subgroups and the Computation of the Gini Index of Inequa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1), 107-115.
- Sixsmith, A. *Technology and the Challenge of Aging*, in: Sixsmith, A. et al. (Ed.) (2013). *Technologies for Active Aging*. Springer
- Spicer, K., Diamond, I., & Ni Bhrolchain, M. (1992).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British households. *International Journal of*

- Forecasting*, 8, 529-539.
- Swan, C. (1995). Demography and the demand for housing: a reinterpretation of the Mankiw-Weil demand variabl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5, 41-58.
- Sweet, J. A. and Bumpass, L. L. (1990),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a Census Monograph Series), Washington D.C.: U.S. Bureau of Census.
- The Geneva Association. (2016). *Harnessing Technology to Narrow the Insurance Protection Gap*.
- Tilly, L., & Scott, J. W. (1987). *Women, Work, and Family*, London, UK: Routledge.
- UN FAO. (2017).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 Trends and Challenges*.
- United Nations. (2015).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3*, Washington, D.C.: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16).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Emerging Futures*.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1-59.
- Van den Berghe, P. (1979). *Human Family Systems: An Evolutionary View*. New York: Elsevier North Holland, Inc.
- Verdon, M. (1998). *Rethinking Households: An Atomistic Perspective on European Living Arrangements* (Routledge Research in Gender and Society) London, UK: Routledge.
- Wall, R. (1995).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Household Systems in Europe*, pp 19-52 in EvertVan Imhoff, Anton Kuijsten, Pieter

- Hooimeijer, and Leo J.G. van Wissen (eds.) *Household Demography and Household Modeling* (The Springer Series on Demographic Methods and Population Analysis), New York: Plenum Press.
- World Bank. (2016). *Economic and Social Inclus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 World Economic Forum. (2016).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 Wrigley, E. A. (1997).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the Family. *The Family*, 106 (2), 71-85.
- Yitzhaki, S. & Lerman, R. I. (1991).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3), 313-329.
- Yitzhaki, S. (1994). Economic Distance and Overlapping of Distribu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61, 147-159.
- Zeng, Y., Land, K. C., Gu, D. & Wang, Z. (2013). *Household and Living Arrangement Projections at the Subnational Level: An Extended Cohort-Component Approach*.
- 經濟企画庁国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1991). 高齢化と消費者問題 : 今'何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
- 經濟産業省. (2012. 5). 流通業の国際展開の現状と今後の対応について.第3回 産業構造審議会流通部会審議用参考資料.
- 經濟産業省. (2012. 5). 地域生活インフラを支える流通のあり方研究会報告書.
- 經濟産業省. (2014). 商業統計表(1974~2007).
- 総務省. 国勢調査報告.
- 經濟財政諮問会議 専門調査会「選択する未来」委員会. (2014). 「未来への選択」 - 人口急減・超高齢社会を超えて、日本発 成長・発展モデルを構築 -.
- 高橋直人. (2009). 小売業の現状と課題—小売業界のフロンティア. 日本貿易 会月報, 2009. 6. No. 671

- 高橋直人. 小売業の現状と課題—小売り業界のフロンティア.
 国内外経済の動向. (2005). 国勢調査からみた世帯構造の変化高橋直人. (2012)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3). 日本の世帯数将来推計(全国).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日本の将来推計人口.
 国土交通省. (2016). 過疎地域等条件不利地域における集落の現状把握調査の
 概要.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145902.pdf>) .
 国土交通省国土審議会政策部会長期展望委員会. (2011). 国土の長期展望.
 内閣府. (2003). 男女共同参画白書 (平成15年度版). 国立印刷局.
 内閣府. (2015). 平成27年版・少子化社会対策白書 全体版 (PDF形式) . 内閣府.
 内閣府. (2016). 平成28年版・少子化社会対策白書 全体版 (PDF形式) . 内閣府.
 内閣部政策統括官. (2016 . 10. 6.) 「経済社会構造の変化の把握について—世帯構造の変化—」資料1 .
 松本潔 外. (2013). 高齢社会におけるロボットによる生活支援技術. 東京大学
 IRT研究機構.
 研究開発テーマ中間評価用資料. (2013). 研究開発テーマ「高齢社会を豊かに
 する科学・技術・システムの創成」.
 日本フクダ生命. (2005) . 一人暮らしの基本道具: It's 시리즈 발매. 単独世帯
 の増加と個別化する消費, AD Studies Vol.12.
 日本経済新聞. (2017. 4. 17).セブン、団地「守る」コンビニ100店・UR系と提携.
 日本経済新聞. (2017. 8. 10). ドラッグストア5社の4~6月・純利益最高・食
 品値引き奏功.
 日本経済新聞. (2017. 8. 12) イオン、シニア向け100店・巡回バスや習い事発
 表会 (大阪府茨木市).
 日本毎日新聞. (2014. 5. 13.) コンビニの客層変化.
 日本赤十字社熊本健康管理センター. (2014). 電動カートを活用した高齢者モ
 ビリティ拡大実証事業 報告書.
 日本総務省. (2017. 7. 19.). 買い物弱者対策に関する実態調査.
 日本統計庁. (2016. 6. 29.). 2015年国勢調査.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17). 特集・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

<http://www.go-online.go.jp/tokushu/syaho/naze/syushi.htm>

2017. 6. 13일 인출.

津谷 典子. (2016). 젠더·家族關係の変容. 佐藤龍三郎·金子隆一

(編). *ポスト人口転換期の日本*. 原書房, pp.135-158.

総務省. (2012). *經濟センサス*.

総務省統計局. (2014). *全国消費実態調査*.

通省国土審議会政策部会長期展望委員会. (2011. 2. 21). *国土の長期展望*.

平瀬博人. (2012). “高齢者にやさしい自動車の実現に向けて”.

厚生労働省. (2006). *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雇用均等, 児童家庭局. (2004). *少子化への対応を推進する国民会*

議 (第6回) における配布資料について. 厚生労働省

(<http://www.mhlw.go.jp/houdou/2004/09/h0903-4.html>)

2017. 5.11. 인출

<http://project.activeadvice.eu/project-overview/>

www.familienbuendnis-schwerte.de/index.html

<http://www.onpoom.com>

<https://animate.hi-iberia.es:4550/en-gb/>

<http://www.camiproject.eu/info/>

<http://www.aat.tuwien.ac.at/itoilet/project.html>

<http://home4dem.eu/>

<http://www.active-at-home.com/>

<https://www.careinmovement.eu>

<http://come-aal.eu>

www.jfa-fc.or.jp

1. 외국의 가족정책 사례

가. 일본의 가족정책 사례

(1) 인구 및 가구 변화

전후 1947~1949년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출산율은 급속한 감소세로 돌아섰고, 1974년까지 약 20년간 일본의 출산율은 거의 대체수준을 유지했다.²⁹⁾ 1975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1989년의 1.57명이라는 최저 수준에 도달하면서 1990년 일본은 1.57 쇼크에 빠졌다. 1990년대 들어서는 출산율이 1.4명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2005년에는 1.26명이라는 역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후 출산율은 다소 회복되었고, 2015년에는 1.45명으로 출산율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처럼 출생의 대부분이 혼인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출산율은 ① 15~49세 여성의 유배우율(배우자가 있는 인구 비율)의 변화(여성의 결혼 연령 패턴 변화), ②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기혼 여성 출산력의 변화)라는 두 가지 직접적(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주로 여성의 만혼화 및 미혼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출산 정점 연령이었던 25~29세 여성

29) 1966년 '병오년'은 여아 출생에 대한 미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의 미혼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약 20%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2005년 59%, 2015년에는 61%에 달했다.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5년 8%가 채 안 되었지만 2015년에는 35%로 여성의 3명 중 1명 이상이 미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화는 남성 사이에서도(오히려 여성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5~29세 남성의 미혼율은 1975년 48%에서 2015년 73%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동안 30~34세 남성의 미혼율은 14%에서 47%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남녀의 미혼율이 증가한 결과, 생애미혼율³⁰⁾도 197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상승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남녀 모두 50세 시점의 미혼율이 약 1~2%였으나, 1970년대 들어 생애미혼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5년 생애미혼율은 여성 14%, 남성 23%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의 전통이었던 누구나 결혼하는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자신의 가정과 아이를 갖지 않는 중장년층이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부부) 출산율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지속 기간별로 본 50세 미만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기대 자녀 수, 이상 자녀 수를 비교하여 보면, 결혼 지속 기간에 관계없이(결혼 20년 이상인 여성조차도) 이상 자녀 수가 실제 자녀 수나 기대 자녀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자녀 수와 이상 자녀 수 간의 차이는 결혼 후 5~9년 된 여성의 경우 약 0.7~0.8명, 결혼 후 10~19년 된 여성의 경우 약 0.5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출산·육아 비용에 따른 것이라면, 기혼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 0.5~0.8명의 '잠재 수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가족정책(저출산 대책)이 낳고 싶은 만큼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여성과 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출산·육아를 둘러싼 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0) 50세 시점의 미혼율을 의미함.

한편, 일본의 출산율 변동은 취업, 특히 여성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정년퇴직이 시작되는 50대 후반까지 계속 9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여성은 25~34세에 크게 떨어지고 30대 중반 이상에서 상승세로 돌아선다. 그 결과,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그래프는 25~54세를 윗변으로 하는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는 반면, 여성은 25~34세를 밑변으로 하는 'M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을 그만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25~29세와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만혼화 및 미혼화와 강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성의 근로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15~49세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여성 고용자의 대부분은 가정 밖에서 임금을 받고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여성의 경제력 증가와 동시에, 특히 기혼 여성에게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일본의 가족정책 변화

장기간 지속되는 인구대체수준 이하로의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1.57 쇼크'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부터 가족정책으로서 '저출산 대책'을 시작하였다. 저출산 대책의 시기는 (1) 초기 저출산 대책(1995~2004년), (2) 차세대 육성 지원으로서의 저출산 대책(2005~2009년), (3) 저출산 대책의 강화 및 확대(2006~2012년), (4) 어린이·육아의 포괄적 지원으로 저출산 대책 전환(2010~2016년)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의 '1.57 쇼크'로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4년 12월 문부, 후생, 노동, 건설부 장관³¹⁾의 합의로 '향후 육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침에 대해(엔젤 플랜)'가 수립되었다. 엔젤 플랜에서는 육아를 부부나 가정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직장과 지역사회(커뮤니티)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향후 10년간 대응해야 하는 정책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중점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 여성의 취업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보육 대책 등 5개년 사업'을 수립하여 보육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하였다. 동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미혼율 상승, 일과 육아의 양립 곤란, 육아 부담 증대 등이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중점 추진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 실시 계획에 대해(신 엔젤 플랜)'라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신 엔젤 플랜'에서는 기존의 육아 지원과 함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교육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나아가 직장과 지역사회(커뮤니티)의 환경 정비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엔젤 플랜'과 '신 엔젤 플랜'을 통해 보육 서비스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도시를 중심으로 보육 시설 대기 아동 수 증가가 사회 문제화되었다. 이로 인해 2002~2004년 3년간 '대기 아동 제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 여성의 빠른 증가로 인해(津谷, 2016) 대도시권의 보육 서비스 부족 상황은 최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재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그 배경

31) 취업과 육아 지원과 관련된 4개 부처를 대표하는 부처임.

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저하를 지적하고, 차세대를 짊어질 아이를 육성하는 가정을 사회 전체가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차세대 육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존 대책의 중심을 이루었던 보육 서비스,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일과 육아 양립 지원에 더해 남성을 포함한 근로 방식 재검토, 지역사회 육아 지원,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차세대 지원, 어린이의 사회성 향상 및 자립 촉진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시책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 플러스 원’을 수립하였다(內閣府, 2003). 한편,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고, 동법에 기초하여 ‘저출산사회대책회의’가 설치되고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이 결정되었다(내각부, 2015). 이처럼 일본 정부가 저출산 정책 대응을 서두른 배경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厚生労働省雇用均等, 児童家庭局, 2004).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04년 12월 ‘저출산사회대책대강에 기초한 구체적 실시 계획(어린이·육아 응원 플랜)’이 결정되었는데, 기존의 저출산 대책(‘엔젤 플랜’과 ‘신 엔젤 플랜’)은 보육 서비스로 대표되는 육아 지원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목표가 설정된 반면, ‘어린이·육아 응원 플랜’에서는 젊은 층의 자립과 근로 방식 재검토 등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 따라 시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책 전개를 장려했다. 이 응원 플랜의 정책 목표는 처음으로 지방 공공 단체의 행동 계획과 직접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厚生労働省, 2006).

이러한 노력에도 출산율은 감소하여 2005년에는 1.26명이라는 사상 최저 수준을 그리고 인구의 자연 증가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어린이·육아 응원 플랜’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저출산 대책은 보다 긴급성이 커졌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2006년 6월 ‘신 저출산 대책에 대해’를 채택하여(内閣府, 2015), 저출산 대책이 ‘시간과의 싸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어린이·육아 응원 플랜’의 추진과 더불어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육아 지원, 근로 방식 개혁, 사회의식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제창했다(内閣府, 2006). 그럼에도 장래 인구 변화에 대한 어두운 결과가 전망되자, 추가적인 정책적 대응이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이 수립되었고(内閣府, 2015),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 라이프 밸런스) 헌장’과 기업, 근로자, 국가, 지방 공공 단체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일과 가정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이 수립되었다.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결혼 및 출산·육아에 관한 국민의 희망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근로 방식 재검토에 의한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 라이프 밸런스) 실현’과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 지원 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한편, 2008년 2월 후생노동성은 원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어린이의 육성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하기 위한 ‘신·대기 아동 제로 작전’을 발표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저출산 현상이 멈추지 않자 2010년대 일본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부모와 가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어린이를 소중히 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전에도 육아의 사회적 뒷받침이 저출산 대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었지만, 2010년대에는 어린이·육아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포괄적 대응이 저출산 대책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에 2010년 1월 새로운 ‘저출산사회대책대강(어린이·육아 비전)’이 수립되었는데, 동 대강에서는 기존 ‘저출산 대책’에서 ‘어린이·육아 지원’으로 정책의 관점을 바꾸고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의 추구를 강조하였다. 2012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완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사회보장·세제 일체 개혁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세수 증가분을 모두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17). 이 개혁으로 공적 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비용의 주요 재원인 소비세 수입의 사용처는 기존의 고령자를 위한 세 가지 사업(기초연금, 노인 의료, 돌봄)에 저출산 대책을 추가한 네 가지 사업(연금, 의료, 돌봄, 저출산 대책)으로 확대되었다(内閣府, 2016). 한편, 취업 여성의 증가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대기 아동 문제가 지속되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서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희망이 이루어지고 육아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어린이와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호 도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기의 학교 교육·보육 및 지역의 어린이·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보육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도시 지역의 대기 아동 해소와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보육

기능 유지 등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内閣府, 2015, pp. 50-59). 2015년 10월 실시된 정부(아베 내각)의 중심 거시경제정책인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응'의 3개 핵심 축 중 하나인 '꿈을 키우는 육아 지원(신·두 번째 화살)'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대기 아동해소의 가속화를 꾀하기 위해 '어린이·육아지원법'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인구의 초고령화와 감소는 도쿄 등 대도시권보다도 지방에서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国土交通省, 2016), 지방에서는 과소화로 인해 지역사회(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 취락'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인구의 도쿄 집중 현상을 바로잡고 지방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어 일본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창생'이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30년간 일본의 출산율은 크게 떨어졌고 인구의 초고령화(노년 인구 비율의 급상승)가 계속되면서 2010년대 들어 인구는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출범한 제3차 아베 내각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섰고, 젊은이, 고령자, 여성, 남성, 장애인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누구나 사회, 가정, 지역, 직장에서 각각의 능력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인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응의 핵심 축으로서 2015년 9월 일본 정부는 '신·세 개의 화살'을 제시했다. '신·세 개의 화살' 중 두 번째 화살이 '꿈을 키우는 육아 지원'으로 그 목표는 '희망 출산율 1.8'의 실현이다. '희망 출산율 1.8'은 젊은 남녀가 갖고 있는 결혼이나 자녀 수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출산율의 수준이다. '희망 출산율 1.8'의 달성을 위해 7개의 긴급 대책³²⁾이

제시되었다.

이런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서인지 200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합계출산율(TFR)이 1.45가 되었다. 이로 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201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약 1.4로 초저수준임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20년 가까이 걸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최근의 저출산 진행 속도 완화와 출산율의 근소한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가족정책적 대응의 성공 사례로 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시책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는) 그 정책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노력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지속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나. 프랑스의 가족정책 사례

(1) 인구 및 가구 변화

프랑스의 출산율은 1950~1960년 베이비붐 현상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1993년에는 1.66명에 도달하였다. 이후 1994년부터는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9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Bellamy & Beaumel, 2017). 이상 자녀 수도 2.6명으로 높은 편

32) 긴급 대책은 ①결혼·육아 희망 실현의 기초가 되는 젊은이들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 ②결혼,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는 각 단계의 부담·고민·불안을 단절 없이 해소하기 위한 지원 확충, ③출산·육아의 현장인 지역 실정에 맞는 근로 방식 개혁 추진, ④출산 후, 육아 중에도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내실화, ⑤육아를 가족이 뒷받침하는 3세대 동거 및 근접 거주가 용이한 환경 조성, ⑥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저해하는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제약의 극복, ⑦육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 및 아동 등에 대한 배려·대책의 강화가 해당된다.

인데, 프랑스에서는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 2.5%로 낮은 수준이며(Eurobaromètre, 2006), 1명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도 5.5%로 나타난다. 실제 무자녀 여성의 비율이 유럽 국가 중 가장 낮는데, 여성의 11.7%만이 출산하지 않고 가임 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의 자연 증가는 0.4% 수준으로 나타난다. 반면, EU 28개국의 평균 자연 증가율은 0.0%에 불과하다(Pison, 2017).

결혼은 더 이상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 법적인 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하는 대신 PACS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과 혼외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아의 57%는 혼외 출생아로 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대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최소 1명의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족의 평균 자녀 수는 1990년 2.06명에서 2013년 1.93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가족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가족정책의 지향성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대가족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한부모 가족은 지난 40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90년 이래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별거와 이혼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2000년대 중반 이래로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번갈아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 가족”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가족을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함을 의미한다(Letablier & Wall, 2017). 한부모 가족은 가족의 삶의 궤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한부모 가족의 증가로 재결합 가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삶의 궤도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가족 형성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 성 역할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이는 여성의 인격권(personal rights) 획득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사회 내 성 역할의 변화에 기인한다.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특히 25~49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일인생계부양모델이 이인생계부양모델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가족정책에서 주요한 도전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돌봄의 탈가족화와 이용 가능한 보육 서비스로 인해 자녀 돌봄은 가족에게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는 돌봄과 가사 활동이 가족 내 남성과 여성 간 동일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가사나 육아에 대한 역할이 감소되어 왔다 할지라도, 가족 내에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공유는 가족정책에서 큰 도전이 되어 왔다.

끝으로 가족 그리고 가족의 삶의 방식의 다양성은 부모의 파트너십 관계(혼인 상태인지 혹은 아닌지 등)에 관계없이 아동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적 기관에 의해 잘 고려되어져 왔다. 그러나 가족의 생활 방식 이상으로 빈곤과 박탈의 위험이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비록 빈곤율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지 않으나, 아동과 청년층에서의 그 증가는 가족정책 시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정의에 관한 이슈가 정책 어젠다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 가족정책 변화

프랑스에서 가족이 정책 어젠다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정 시기부터이다. 당시에는 근로자 가구 내 여성과 아동의 빈곤에 대한 이슈와 1870년 독일과의 전쟁 후 군 인력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한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다.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보호는 주 정부의 사회적 의무이자 도덕이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확충되고, 가족정책이 건강 보험이나 노년보험 등과 같이 사회보장 시스템의 분야로서 포함되었다.³³⁾ 당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생아 수 증가라는 인구학적 목표가 가족 정책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가족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첫째아에 대한 수당은 없었지만 이후 자녀의 출산 순위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증가하였고, 가족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가족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출산율 상승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목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과 같은 단체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다. 이들 단체는 대가족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대가족의 빈곤 감소, 영유아 사망률 감소, 성 역할 분업 유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Le Bras, 1993).

한편, 가톨릭교의 영향으로 인해 남성 근로자들이 가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 보조 등의 제도가 실시되었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대가족과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일부 고용주들은 여성 근로자들을 유지하거나 남녀 근로자 유치 차원에서 보육 시설을 설치하였다. 임금 보조가 급여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추가 임금은 점점 더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요구도 발생하였다.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1982년 이래 실업률과 빈곤이 증가하면서 취약 가족이 가족정책의 새로운 대상이 되었다. 일부 가족 수당이 소득에 따른 차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혜택들이 취약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예로 한부모 수당 등)되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

33) 가족정책은 수당, 가족과 아동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가족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면서 남성생계부양모델에서 이중생계부양모델로의 변화가 왔고,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가족정책의 새로운 목표이자 우선적인 어젠다가 되었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더 많은 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였고, 부모와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보육 정책이 설계되었다. 1988년에는 지역의 가족 연대와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증가하고자 하였다. 노르딕 국가는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프랑스는 가족금고를 통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다양성, 즉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 시설을 다양화하였다.

1990년대 이래 정부에서는 가족정책을 재구조화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시초는 고용주에 의한 것으로 재원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가 컸는데,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주의 기여분이 삭감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성 휴가를 도입하여 남성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더 많이 주었고, 돌봄과 관련, 변화하는 부모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육과 관련한 수당을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Paje)”로 패키지화하였다. Paje는 부모의 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패키지화를 통해 정책의 주요 대상은 대가족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이동하였고, 일-가정 양립 이슈가 강조되었다. 여기에 더해 EU의 권고에 따라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결이 강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공공 지출의 증가를 고려하여 가족정책이 각종 수당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액을 삭감하였고, 가족계수를 통해 고소득 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한편, 저소득 가족에 대해서는 일부 가족 수당의 금액을 상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저·중소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족정책에서 새로운 변화, 즉 보편성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휴가 제도와 금전적 보상에서의 변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현재 프랑스 가족정책의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목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19세기 “인구 감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을 제고는 명시적인 목표가 되었고, 이는 가족 연합(family unions)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비록 최근에는 이러한 것이 가족정책의 목표에서 덜 명확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가족 수당에는 이러한 목표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수당은 첫째아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둘째아부터 지급되며, 그 금액은 자녀의 출산 순위에 따라 증가한다. 가족계수를 통해 대가족일수록 조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목표는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약화되고 대신 자녀가 있는 여성이 추가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출산을 제고라는 목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여성 혹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출산을 제고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비용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가족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양육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수직적 보상 대신 자녀가 있는 가족과 자녀가 없는 혹은 적은 가족 간의 수평적 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 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수와 출산 순위에 따라 증가하고, 소득세는 가족계수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소득 감소 위험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공 지출에 대한 재정적 제약은 수직적 재분배와 사회적 정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이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빈곤에 취약하다. 이에 빈곤에 대한 정치적 논쟁도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2개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과 부모기(parenthood)에 대한 지원이다. 프랑스 가족정책은 원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었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197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정책이 더 중립적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의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였다. 이는 경제 성장, 공공 기금의 개선을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양성평등이라는 압력하에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족 수당 패키지는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양립’이라는 목표가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 특히 여성에게 자녀를 돌보거나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가족정책에서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여성주의 기관이나 일부 노동조합들에 의해 신랄한 비평을 받았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조합들과 가족 내 노동의 성 분업을 지지하는 정당에 반대하였다. 두 번째는 부모기(parenthood)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는 증가하는 가족 해체와 가족-삶의 불일치로 인해 부모 혹은 부모기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등장하면서 논의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가족정책의 목표가 3개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양육 비용에 대한 보상, 둘째, 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목표가 수평적 분배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빈곤에 대한 위협을 감소하는 것으로 수직적 분배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 독일의 가족정책 사례

(1) 인구 및 가구 변화

통일 전 서독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생활양식의 다원화”로 해석되는 발전이 시작되었다. 사회의 일반적 근대화와 개인화라는 과정을 통해 사회 규범의 구속력이나 이웃과 친척에 의한 규범 준수의 통제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변화는 사회 규범의 축소 외에도 여성의 높아진 교육과 근로 활동 참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이라는 두 개념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양식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반면, 동독의 가족은 “사회주의 가족”을 정착시키려는 정권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모성 완전 고용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보육 시스템이 일찍이 도입되었고, 양육은 공공의 사안으로 정의되었다.

동서독 모두에서 1950년대 이래 가족의 발전은 변화와 불변성의 공존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불변적인 부분은 서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오늘날 부모의 역할에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주요 역할은 여성이 대부분 맡고 남성은 부양자로서 가족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불변성 외에 가족의 성격과 형태, 그리고 가족과 사회 간 관계에 영향을 끼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의 쇠퇴이다. 이는 서독보다 동독에서 더 먼저 나타났다. 결혼은 사회적으로 심도 깊게 제어되는 제도로서의 이전 성격을 크게 잃어버렸고, 의무와 특권이 연계된 개별적 형성 가능성을 지닌 파트너십으로 변모하였다. 결혼은 규율적 틀이었지만 이제 그 경

계가 더 유연하고 광범위해졌다. 과거에는 엄청난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비혼인 동거, 독신 부모, 비혼인 성생활 등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또 다른 가족의 변화는 파트너 간 관계와 부모-자녀 간의 관계이다. 이들 관계는 위계 구조, 의존성, 명령, 순종에서 평등, 동반자적 기반의 성질로 변화하였다. 가족의 내적 구조는 “명령 공동체로부터 협상 공동체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Beck & Beck-Gernsheim, 1989). 이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바탕으로 설립된 가족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는 대체로 사라지고, 오늘날 의사 결정은 더 이상 “가족 대표”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자녀들의 의사 결정 과정 참여도 일반적이 되었다.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전형적 생애 단계는 수십 년 전에는 대부분 자명한 구성 요소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선택 사항일 뿐이다. 생애 단계에서 그 발생 빈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확연히 늦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순서 또한 이전에는 엄격히 규범화되었지만 이제 약간의 제도적 성격을 띠 뿐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독일과 유럽 대부분 국가의 가족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가족 구조 및 가족 발전의 규칙성에 대한 근본적 해체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도 이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2) 가족정책의 기본 원칙

가족은 독일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규정과 원칙이 존재한다. 독일에서 가족법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사회 존재의 보장”과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라는 보편적 사회정책적 목표로부터 도출된다. 가족을

자치적 제도로서 보호하고, 가족의 과제를 자체적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래 가족법은 “가족 구성원의 보다 많은 자기 책임, 국가의 보다 적은 후견”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이상적인 형태의 가족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책임감 있는 시민의 사명이 부각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반적 가족 모델을 강요하는 것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입법자들은 이전의 가족 모델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Limbach & Willutzki, 2002, p. 18).

가구 혹은 가족의 다변화로 독일에서는 생애 이력형(Lebenslauf) 지원을 점차 늘려 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핵심은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기존 방식과 같이 ‘출생’과 같은 특정 상황에 지원하지 않고, 명확하게 정의 가능한 생활양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생애 맞춤형 지원은 생애 동안 일어나는 상황의 단계, 전환점, 그리고 변화무쌍한 수요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직된 가족 형태를 다루는 대신, 가족정책을 가족 발전의 역동성에 맞추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은 생애 이력형 정책이 나이를 따라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전개를 다룰 뿐 아니라, 사회 구조 측면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생애 이력을 “내생적(endogen) 인과관계”(Mayer, 1987, p. 60)로 이해하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즉, 생애 단계 후기에서의 활동, 역량, 사회적 참여는 초기 단계에서 습득한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노년 여성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여성을 이른 시기에 공적 영역이나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구에 대한 지원은 “연계 생애 관점(linked-lives perspective)”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다른 이유로 그들의 생애 계획을 가족과 연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삶의 결정

은 개별이 아닌 함께 취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상호 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젠더 관점을 통해서는 결혼 및 파트너십에서 공동으로 내린 삶의 결정이 가지는 위험 또한 공평하게 설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가족정책이 잘 시행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결단적이고 집중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정과 직업이 보다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 교회, 이해 단체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들도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민하여 가족이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가족정책은 개별 조치가 대부분 계량 가능한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의도했던 가족정책의 결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시간적 지연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지니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3) 가족정책 변화

통일 전 1950년대와 1960년대 서독의 정치 노선의 초점은 남성과 여성 간에 전통적 노동 분업이 지배하는 “혼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당시의 부부 균등 과세(Ehegattensplitting)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제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얻는 세금 혜택은 혼인한 국민들로 비혼인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서독 가족정책에서 변화가 있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혼인 및 이혼 법의 포괄 개혁, 그리고 아동 및 아동 복리에 대한 초점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첫째 자녀부터 자녀 수당이 지급되고, 혼인 가족 자녀와 비

혼인 가족 자녀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혼인법, 성명권, 이혼법, 입양법, 친자법에서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지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상 모델이 참조되었다. 가족 상담 센터 및 임신부 갈등 상담 시설의 확장에 대해서는 감정적, 정치적, 사회적 논쟁도 동반되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은 촉진되었는데, 가족과 파트너십 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여성 근로 활동의 증가에 대응이였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1961년 장벽 구축 전까지 전문 자격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지속적으로 탈출하였고, 이로 인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여성의 전일제 고용이 촉진되었고, 여성들이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결혼을 보호 대상으로 다루었던 서독과는 대조적으로, 동독에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여성 억압의 극복을 최전방에 내세웠다. 남녀평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동독의 가족정책은 혼인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았고, 미혼 부모와 한부모에게도 지원되었다. 즉, 혼인과 출생이 정책상 분리된 것이다(Schneider, 1994; Peuckert, 2012, p. 8). 1965년에는 가족법이 채택되었다. 파트너십과 가족은 가족법에서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었고, “사회주의 생활 방식”을 위한 가장 근본적 형태로 선언되었다. 일하는 여성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보육 기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녀평등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여성의 근로 활동이 양성평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성이 취득한 전문 자격, 그리고 직업적 지위가 양성평등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동독에서 출산율과 결혼 비율의 감소,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다. 그로 인해 가족법전에 규정된 이상적 가족인 “2~3명의 자녀를 둔 작은 가족”을 지원

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했다. (가급적 이른 나이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대출을 지원하거나 출생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여성과 모성의 전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 휴직 관련 규정이나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 조약을 통해 기존에 서독에서 유효했던 가족정책을 거의 전적으로 동독으로 옮겼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독의 가족정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명확한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을 지향했다 (Keil, 2010, p. 63). 이를 반영하듯, 동독 가족정책에서는 출산 보조금, 자녀 수당, 세금 감면, 아동 관련 휴가, 연금 보험에서의 보육 성과 인정, 보육 시설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치였다. 반면, 서독 정부는 가족의 형성을 위해 혼인을 “바람직하며 보호되어야 할 제도”로 보았으며, 3 단계로 분류한 여성의 근로 활동 모델³⁴⁾을 장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독의 경우, 통일로 가족정책에서 상당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는데, 특히 인프라,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 그러했다. 1998년 7월 1일에는 친자법 개혁 법안이 채택되었는데 이혼 후 공동 육아가 원칙으로 천명되었고 이는 비혼 부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98년 “선택의 자유에 대한 판결”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수용한 중요한 단계로 국가는 독립적이고 자기 책임 있는 형태로 가족 공동체를 존중하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거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독일 가족정책의 가장 최근 단계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 지원 보장 원칙, 그리고 가족정책 목표, 토대, 시행 기관, 조치들을 가능한 한 모순 없게 조화시키는 원칙이 더욱 중

34) 교육 단계 및 출산 전 높은 근로 활동 기간, 근로 활동이 없거나 시간제 근로의 가족 단계, 자녀 독립 후 근로 복귀 단계

요하게 여겨졌으며, 주간 보육 시설의 확충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더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어린 자녀에 대한 외부 보육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면서, 15개월 미만 영아의 보육 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늘어났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법적 변화는 2007년 도입된 연방 부모 수당 및 부모 휴직법(BEEG)으로 이를 통해 부모 수당과 시간제 근로를 결합하여 부모 휴직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의 일환으로, “육아 휴가(Erziehungsurlaub)”라는 용어는 모든 연방법 규정에서 “부모 휴직(Elternzeit)”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가사로 보내는 시간에 마치 여가 시간과 같은 명칭이 부여되는 것을 막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현 연방 정부의 연정 협약은 기존의 가족정책 조치들이 지향하는 목표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예: 부모 수당과 보육 시설 비용에 대한 공공 지원). ‘부모 수당 Plus’ 외에 보육 시설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전일 보육 시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주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던 가족정책이 인프라 및 휴직 정책에 중점을 둔 가족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 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가. 주요 조사 결과

〈부표 1〉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사례 수 (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	45.0	46.0	7.0	100.0	(100)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0	37.0	55.0	100.0	(100)

〈부표 2〉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에 대한 인식(중복 응답)

기술적 동인의 항목	전체(%)
계(명)	100.0(100명)
빅데이터, 자동 처리 능력의 확산	81.0
인공지능(AI)	79.0
사물인터넷(IoT) 또는 기계학습	72.0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66.0
첨단 제조업, 3D 프린팅	37.0
첨단 재료 공학, 바이오 테크	32.0
클라우드 소싱(소비자와 대중이 참여하는 쌍방향 개방 기업경영)	24.0
공유경제	18.0
신생 에너지 기술	16.0

42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부표 3〉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인구학적 동인에 대한 인식(중복 응답)

사회적 동인의 항목	전체
계(명)	100.0(100)
일자리의 성격 변화	77.0
인구 구조의 고령화	58.0
노동 유연화	44.0
저출산	39.0
기대수명의 신장	39.0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 통합(예: EU)의 추이	36.0
소비 생활의 중요성 증대	27.0
높은 수준의 도시 거주 인구	27.0
경제력 및 교육의 신장을 포함한 여성의 지위 향상	22.0
온난화, 자연 자원의 낭비에 대한 배려	21.0
사생활 존중	11.0
혼인 연령 상승	8.0
남북 대치 또는 남북 통일	7.0
중간 소득층의 지속적 증가	6.0

〈부표 4〉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직업 분야에서 소득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직업/일자리 (한국고용직업분류)	매우 낮아질 것이다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	대체로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계	(명)
1)경영 관련직	-	36.0	47.0	17.0	100.0	(100)
2)금융 및 보험 관련직	11.0	58.0	24.0	7.0	100.0	(100)
3)교육(교수, 교사) 및 연구 관련직	1.0	50.0	44.0	5.0	100.0	(100)
4)법률 관련직	12.0	63.0	21.0	4.0	100.0	(100)
5)보건 및 의료 관련직	5.0	52.0	34.0	9.0	100.0	(100)
6)사회복지 관련직	4.0	29.0	64.0	3.0	100.0	(100)
7)문화, 예술, 디자인 관련직	2.0	10.0	69.0	19.0	100.0	(100)
8)운송 관련직	38.0	53.0	8.0	1.0	100.0	(100)
9)영업 및 판매직	37.0	51.0	11.0	1.0	100.0	(100)
10)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14.0	34.0	49.0	3.0	100.0	(100)
11)여행 및 숙박 관련 종사자	15.0	37.0	45.0	3.0	100.0	(100)
12)음식 서비스 관련직	6.0	51.0	41.0	2.0	100.0	(100)
13)건설 관련직 - 건축 관련 기술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12.0	70.0	18.0	-	100.0	(100)
14)기계 관련직 - 기계 공학 기술자, 기계 관련 조립원 등	6.0	51.0	37.0	6.0	100.0	(100)
15)정보통신 관련직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등	1.0	6.0	55.0	38.0	100.0	(100)

42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부표 5〉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직업 분야에서 성 평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인식

직업/일자리 (한국고용직업분류)	매우 낮아질 것이다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	대체로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계	(명)
1)경영 관련직	-	11.0	78.0	11.0	100.0	(100)
2)금융 및 보험 관련직	-	13.0	73.0	14.0	100.0	(100)
3)교육(교수, 교사) 및 연구 관 련직	-	8.0	68.0	24.0	100.0	(100)
4)법률 관련직	-	10.0	72.0	18.0	100.0	(100)
5)보건 및 의료 관련직	-	9.0	68.0	23.0	100.0	(100)
6)사회복지 관련직	-	13.0	66.0	21.0	100.0	(100)
7)문화, 예술, 디자인 관련직	-	6.0	70.0	24.0	100.0	(100)
8)운송 관련직	4.0	29.0	59.0	8.0	100.0	(100)
9)영업 및 판매직	3.0	23.0	66.0	8.0	100.0	(100)
10)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5.0	24.0	66.0	5.0	100.0	(100)
11)여행 및 숙박 관련 종사자	1.0	17.0	70.0	12.0	100.0	(100)
12)음식 서비스 관련직	1.0	18.0	67.0	14.0	100.0	(100)
13)건설 관련직 - 건축 관련 기술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5.0	26.0	62.0	7.0	100.0	(100)
14)기계 관련직 - 기계 공학 기술자, 기계 관련 조립원 등	4.0	18.0	66.0	12.0	100.0	(100)
15)정보통신 관련직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등	9.0	64.0	27.0	-	100.0	(100)

〈부표 6〉 제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 가구/가족 변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 한다	계	(명)
1)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이 감소하고 초혼 연령의 상승은 멈출 것이다.	18.0	71.0	10.0	1.0	100.0	(100)
2)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혁신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결국 1인 가구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1.0	13.0	65.0	21.0	100.0	(100)
3)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의 양극화 심화로 핵가족이 붕괴될 것이다.	3.0	33.0	51.0	13.0	100.0	(100)
4)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의료 기술의 혁신으로 기대수명은 상승하나, 기대수명의 남녀 간 격차는 지속되어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3.0	43.0	42.0	12.0	100.0	(100)
5)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빈곤을 악화시키지 않아 한 부모 가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17.0	75.0	7.0	1.0	100.0	(100)
6)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직장 내 경쟁 심화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 가족 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2.0	30.0	60.0	8.0	100.0	(100)
7)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가정 양립 가능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무자녀 부부가 감소할 것이다.	9.0	72.0	18.0	1.0	100.0	(100)
8)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부족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여 확대 가족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0	61.0	23.0	4.0	100.0	(100)
9)제4차 산업혁명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16.0	49.0	30.0	5.0	100.0	(100)
10)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풍요로움을 가져와 핵가족 이외의 특수 가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핵가족 표준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12.0	63.0	20.0	5.0	100.0	(100)

나. 조사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리서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4차 산업혁명이 향후 가족 및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8월

㈜ 한국리서치

-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 문의처 :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1부 신승철 연구원 ☎ 02-3014-0794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연결·초지능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는 기술혁명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무인 자동화,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의 기술적 동인이 모든 영역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과 사회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SQL.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대학 교수
- ② 연구소 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Q1-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④ 매우 그렇다
- ③ 약간 그렇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Q1-2. 귀하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④ 매우 그렇다
- ③ 약간 그렇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Q2-1. 지금으로부터 30년 내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한다면, 귀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기술적 동인(main drivers)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모든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 ② 빅 데이터, 자료 처리 능력의 혁신
- ③ 신생에너지 기술
- ④ 사물인터넷(IoT) 또는 기계학습
- ⑤ 공유경제
- ⑥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곧 소비자와 대중이 참여하는 쌍방향 개방 기업 경영
- ⑦ 인공지능(AI)
- ⑧ 첨단 제조업, 3D 프린팅
- ⑨ 첨단 재료 공학, 바이오테크

Q2-2. 지금으로부터 30년 내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한다면, 귀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사회적/인구학적 동인(main drivers)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모든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일자리의 성격 변화
- ② 노동 유연화
- ③ 중간 소득층의 지속적 증가
- ④ 온난화, 자연 자원의 낭비에 대한 배려
- ⑤ 남북대치 또는 남북통일
- ⑥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통합(예: EU)의 추이
- ⑦ 소비생활의 중요성 증대
- ⑧ 사생활 존중
- ⑨ 저출산
- ⑩ 혼인연령 상승
- ⑪ 기대수명 신장
- ⑫ 인구구조의 고령화
- ⑬ 경제력 및 교육수준을 포함한 여성 지위 성장
- ⑭ 높은 수준의 도시거주 인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Q3-1.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귀하는 다음 종류의 직업 분야에서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직업/일자리 (한국고용직업분류)	매우 높아질 것이다	대체로 높아질 것이다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1) 경영 관련직	④	③	②	①
2) 금융 및 보험 관련직	④	③	②	①
3) 교육(교수, 교사) 및 연구 관련직	④	③	②	①
4) 법률 관련직	④	③	②	①
5) 보건 및 의료 관련직	④	③	②	①
6) 사회복지 관련직	④	③	②	①
7) 문화, 예술, 디자인 관련직	④	③	②	①
8) 운송 관련직	④	③	②	①
9) 영업 및 판매직	④	③	②	①
10)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④	③	②	①
11) 여행 및 숙박 관련 종사자	④	③	②	①
12) 음식 서비스 관련직	④	③	②	①
13) 건설 관련직 - 건축 관련 기술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④	③	②	①
14) 기계 관련직 - 기계 공학 기술자, 기계 관련 조립원 등	④	③	②	①
15) 정보통신 관련직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	④	③	②	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Q3-2.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귀하는 다음 종류의 직업 분야에서 직장 내 성 평등(gender equality)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직업/일자리 (한국고용직업분류)	매우 높아질 것이다	대체로 높아질 것이다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1) 경영 관련직	④	③	②	①
2) 금융 및 보험 관련직	④	③	②	①
3) 교육(교수, 교사) 및 연구 관련직	④	③	②	①
4) 법률 관련직	④	③	②	①
5) 보건 및 의료 관련직	④	③	②	①
6) 사회복지 관련직	④	③	②	①
7) 문화, 예술, 디자인 관련직	④	③	②	①
8) 운송 관련직	④	③	②	①
9) 영업 및 판매직	④	③	②	①
10)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④	③	②	①
11) 여행 및 숙박 관련 종사자	④	③	②	①
12) 음식 서비스 관련직	④	③	②	①
13) 건설 관련직 - 건축 관련 기술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④	③	②	①
14) 기계 관련직 - 기계 공학 기술자, 기계 관련 조립원 등	④	③	②	①
15) 정보통신 관련직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	④	③	②	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Q4. 아래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생활방식 및 가족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일부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이 감소하고 초혼 연령의 상승은 멈출 것이다.	④	③	②	①
2)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혁신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결국 1인 가구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④	③	②	①
3)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의 양극화 심화로 핵가족이 붕괴될 것이다.	④	③	②	①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의료 기술의 혁신으로 기대수명은 상승하나, 기대수명의 남녀 간 격차는 지속되어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④	③	②	①
5)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빈곤을 악화시키지 않아 한부모 가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④	③	②	①
6)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직장 내 경쟁 심화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 가족 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④	③	②	①
7)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가정 양립 가능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무자녀 부부가 감소할 것이다.	④	③	②	①
8)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부족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층이 증가하여 확대 가족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④	③	②	①
9) 4차 산업혁명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④	③	②	①
10)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풍요로움을 가져와 핵가족 이외의 특수가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핵가족 표준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④	③	②	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족 및 사회변화에 관한 전문가 조사

Q5. 귀하는 몇 세입니까?

만 ()세

Q6.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사회복지학
- ② 사회학
- ③ 행정학
- ④ 경제학
- ⑤ 경영학
- ⑥ 정치외교학
- ⑦ 정책학
- ⑧ 아동학
- ⑨ 가족학
- ⑩ 철학
- ⑪ 인류학
- ⑫ 교육학
- ⑬ 의학
- ⑭ 기타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